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일 반 회 계
□ 지 역 균 형 발 전 특별회계
□ 소재부품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책 임 운 영 기 관 특별회계
□ 우 편 사 업 특별회계
□ 우 체 국 예 금 특별회계
□ 우 체 국 보 험 특별회계
□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 원자력(원자력연구개발계정) 기 금
□ 정 보 통 신 진 흥 기 금
□ 방 송 통 신 발 전 기 금

2025. 8.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전 문 위 원 임 명 현

목 차

Ⅰ.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개요 ····· 1
1. 총 괄 ····· 1
2. 일반회계 ····· 6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
4. 소재부품경쟁력강화특별회계 ····· 11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3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4
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 16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 18
9. 우편사업특별회계 ····· 20
1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22
1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24
12. 과학기술진흥기금 ····· 26
13.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 30
14. 방송통신발전기금 ····· 33
15. 정보통신진흥기금 ····· 37
16. 예비비 결산 ····· 40
17. 재무제표 ····· 41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검토의견 ····· 47

1. 총괄 ····· 47

【총괄】 ····· 49

(1) 총괄: 출연(연) 연구원 처우 개선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 49

(2) 총괄: 정부지분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규정한 현행 법령 개정 방향 검토 및 대학의 기술료 사용내역 모니터링 필요 ····· 57

(3)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 연구과제의 조기 협약 체결을 위한 집행관리 노력 필요 ·· 67

(4)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마련 필요 ····· 75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복리후생제도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 필요 ····· 86

2. 대변인실 소관 ····· 103

【일반회계】 ····· 105

(1)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7041-401): 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외신기자 대상 행사·홍보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105

3. 운영지원과 소관 ····· 111

【일반회계】 ····· 113

(1) 과징금(56-565):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수납 실적의 연례적 저조 부적정 ·· 113

(2) 기타잡수입(69-691):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기관장 등 전세 관사 대금의 세입 편성 필요 ····· 119

4. 정책기획관 소관 ····· 123

【일반회계】 ····· 125

(1) 총액대상 인건비(7001-100): 법령 및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한 청년인턴 인건비 집행 필요 ····· 12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7036-505): 연례적으로 연도말 과도한 정보보호 자산 취득 집행 부적정 ····· 131

(3)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7031-401): 정책연구 용역의 조속한 추진 필요 ····· 136

5. 국제협력관 소관 ····· 141

【일반회계】 ····· 143

(1) 국가간협력기반조성(4731-402): 해외 공동연구 사업의 조속한 협약 체결 필요 등 ·· 143

(2)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1946-501): ODA 사업 분류 및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159

(3)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ODA)(4734-305): 슈퍼컴퓨터 도입 지연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 부적절 ····· 168

【정보통신진흥기금】 ····· 174

(4) 해외IT지원센터운영(2137-303):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의 조기 지급 필요 및 기관 운영 인건비에서 수당 등 집행 필요 ····· 174

【방송통신발전기금】 ····· 184

(5)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1232-301): 글로벌 ICT 포털(GIP) 운영 사업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 필요 ····· 184

6. 비상안전기획관 소관 ····· 189

【일반회계】 ····· 191

(1)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7035-301): 법령을 준수한 국회 예산 확정 이후에 다음연도 계약 체결 필요 ····· 191

7.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 ····· 197

【일반회계】 ····· 199

(1) 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R&D)(1139-437): 예산편성시 계획했던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변경에 주의할 필요 ····· 199

(2) 원천기술 국제협력개발사업(R&D)(1139-438): 연구개발과제의 비용 분담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협약 미체결 ····· 204

(3)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1159-425): 구축형 R&D사업을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연구형 R&D 사업으로 편성 … 213

(4)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1138-401):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절 ····· 217

(5)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1138-417): 중단과제 관리 미흡 및 과도하게 낮은 성과목표치 설정 부적절 ····· 221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1640-300):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229

8.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소관 ····· 235

【일반회계】 ····· 237

(1)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R&D)(1139-423):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를 위한 장비 도입 계획 점검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협의 필요 ····· 237

(2) 민군기술협력(R&D)(1158-442):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체 적극 활용 필요 ····· 245
(3)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R&D)(1235-411): 방사광가속기 관리·운영의 거버넌스 체계 정비 필요 ····· 252

9. 연구성과혁신관 소관 ····· 261

【일반회계】 ····· 263

(1) 출연연 총괄: 출연연의 승인된 한시조직에 대한 경상운영비 확보 필요 등 … 263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 지원(2241-436): 연구동환경개선사업 건축비 실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 ····· 268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설 지원(2241-437): 연구1동 증축사업과 수도권통합센터 건설사업 관련 행정절차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73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 지원(2241-439): 자원동 환경개선 사업 건축비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280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설 지원(2241-445): 예산 이월 및 재이월 최소화 위해 연구동 환경개선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도록 관리할 필요 ····· 28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89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시설 지원(R&D)(2241-402・406): 제주 지질자원 연구를 위한 제주 지역조직 추진 필요 ····· 289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4): 차세대 태양광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검토 필요 ····· 297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4): 태양광기업공동활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확보 필요 ····· 3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18

(9)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4632-402):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또는 적정성 재검토 실시 필요 ····· 318

10.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 325

【일반회계】 ····· 327

(1) 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402): 시정명령 건수가 많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및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검토 필요 ····· 327

(2)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01):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 337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25): 수시배정으로 인한 집행부진 시정 필요 ····· 3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44

(4)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1831-40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필요 ····· 344

11. 성과평가정책국 소관 ····· 349

【일반회계】 ····· 351

(1)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R&D) (1037-401):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 관련 지침 미준수 및 나눔장비이전사업 집행 부진 ····· 351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R&D) (1039-401): 위원 제척사유 확대와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 단축방안 마련을 통한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필요 ····· 361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소관 ····· 369

【일반회계】 ····· 371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1033-402):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 371

13.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소관 ····· 381

【일반회계】 ····· 383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7034-301): 연례적으로 과소편성되는 국내여비 예산 규모 현실화 및 연차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383

14. 정보통신정책관 소관 ····· 39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95

(1) 디지털역량강화교육(1945-301):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 증액 등 개선책 마련 필요 ····· 395

(2)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2033-300): 사업관리 강화 및 수행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403

15. 인공지능기반정책관・디지털융합촉진과 소관 ····· 411

【일반회계】 ····· 413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601-359):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4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17

(2)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2601-403)·AI기반 뇌발달 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2601-405): 사업출연금 예산을 이용한 사업수행기관 경상비 지출 행위 재발 방지 필요 ····· 417

【정보통신진흥기금】 ····· 422

(3)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2601-303):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적기 추진 필요 등 ····· 422

16.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 431

【일반회계】 ····· 433

(1)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2233-339): 사업의 조기종료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설계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 ····· 433

【정보통신진흥기금】 ····· 437

(2)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2232-325): 성과지표 개선 필요 ····· 437
(3) 소프트웨어인재키움사업(2232-327):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 443

17.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 447

【일반회계】 ····· 449

(1)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2132-328): 다부처 공동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체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449
(2)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2132-353):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의 조속한 추진 필요 ····· 456
(3)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2137-310): 중장기적인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의 출연금 교부 근거 마련 등 ····· 463

(4) AI반도체 실증지원(2063-311):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 필요 ·· 482
(5)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2603-310): 예산상 명확하게 편성 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사업 추진 필요 ····· 490
(6)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설계)(2603-314): 연구개발 수행에 팹리스 기업 등 참여 확대 필요 ····· 497
(7)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2603-306): 성인지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선정 부적정 ····· 503

【소재부품 장비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 507

(8)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2137-301):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의 과제 재기획시 사업화 성격 강화 필요 ····· 507

【정보통신진흥기금】 ····· 518

(9)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7602-304):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이 동일한 과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 518
(10)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2033-310): 물품 구매 계약의 조속한 체결 필요 · 523
(11)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2137-311): 지침을 위반한 자산의 미등록 및 정산 보고서상 자산 누락 부적정 ····· 528
(12) ICT연구개발전담기관인건비(7176-104): 경상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 수당 등 편성·집행 필요 ····· 534
(13)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7176-204): 규정을 준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필요 등 ····· 539
(1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7602-303):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시 정확한 규모 행사 예산의 편성 필요 ····· 551

【방송통신발전기금】 ····· 557

(15) 가산금(58-581): 가산금 세입 편성 및 미수납금 방지 방안 필요 ····· 557
(16) ICT창의기업육성(1139-303): 해외 진출 사업의 특정 기업 중복 지원 지양 필요 등 ····· 564
(17) 기금관리비(7276-200): 기본경비 성격의 국외업무여비 이관·조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 ····· 570

18.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관 ····· 579

【일반회계】 ····· 581

(1)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필요 등 ····· 581

【방송통신발전기금】 ····· 588

(2)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2032-310): 실수요 위주 장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588

19. 통신정책관 소관 ····· 593

【방송통신발전기금】 ····· 595

(1)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2431-407):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보화 사업 포함 필요 ····· 595
(2)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431-302):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602

20. 방송진흥정책관 소관 ····· 607

【방송통신발전기금】 ····· 609

(1)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1131-308):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의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 등 ····· 609

21. 전파정책국 · 국립전파연구원 ·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 615

【일반회계】 ····· 617

(1)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2535-309): 자기적합확인 적용 기자재 대상 사후관리 강화 검토 필요 ····· 617

【방송통신발전기금】 ····· 623

(2)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구축(정보화)(2532-302): 실증 사업의 실질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 보완 필요 ····· 623

22. 우정사업본부 소관 ····· 629

【우편사업·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특별회계 공통】 ····· 631

(1)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편성 필요 ····· 631

【우편사업특별회계】 ····· 638

(2) 특별회계전입금(91-912) : 특별회계전입금 세입예산 및 회계 간 전출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638

(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811-881)·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집행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 추계 필요 ····· 644

(4)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650

(5) 일부 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 문제 개선 필요 ····· 658

Ⅰ.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개요

1. 총 괄

가. 2024회계연도 세입 및 수입 결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12조 9,06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조 8,769억 원임. 이 가운데 12조 8,405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7% 수준임. 불납결손액 2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61억 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조 7,709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 2,557억 원임. 수납액은 5조 2,51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42억 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 및 수입 결산 총괄(총계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총 계(I+II)	156,774	181,326	180,920	2	403	99.8
예 산(I)	129,065	128,769	128,405	2	361	99.7
o 일반회계	3,768	3,575	3,514	2	59	98.3
o 특별회계	125,297	125,194	124,891	-	302	99.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	169	169	-	-	99.9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380	374	372	-	2	99.4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395	406	405	-	1	99.7
- 우편사업특별회계	54,396	48,562	48,286	-	276	99.4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9,408	66,774	66,751	-	22	100.0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616	8,909	8,908	-	-	100.0
기 금(II)	27,709	50,315	50,273	-	42	99.9
o 과학기술진흥기금	1,888	1,846	1,843	-	3	99.8
o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135	2,135	2,135	-	-	100.0
o 방송통신발전기금	9,888	21,147	21,114	-	33	99.8
o 정보통신진흥기금	13,797	25,187	25,181	-	6	100.0

나. 2024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결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예산현액은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기준으로 24조 8,022억 원이며, 집행액은 23조 2,155억 원으로 93.6%를 집행하였음. 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3.8%이며, 기금의 경우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은 91.9%임.

<2024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결산 총괄(총계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총계(Ⅰ+Ⅱ)	250,201	248,022	232,155	725	12,985	93.6
예 산(I)	222,492	220,311	206,687	725	12,900	93.8
o 일반회계	81,955	79,226	78,743	92	391	99.4
o 특별회계	140,537	141,085	127,944	633	12,508	90.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31	7,433	7,269	12	153	97.8
- 소재부품경쟁력강화특별회계	3,560	3,560	3,517	-	43	98.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72	3,872	3,807	-	65	98.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79	479	479	-	-	100.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380	388	350	14	24	90.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395	395	371	7	17	93.9
- 우편사업특별회계	54,396	54,851	47,130	528	7,194	85.9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9,408	59,487	56,134	68	3,285	94.4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616	10,620	8,887	5	1,728	83.7
기 금(II)	27,709	27,711	25,468	-	86	91.9
o 과학기술진흥기금	1,888	1,888	1,843	-	34	97.6
o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135	2,135	2,135	-	1	100.0
o 방송통신발전기금	9,888	9,890	9,786	-	14	98.9
o 정보통신진흥기금	13,797	13,798	11,704	-	37	84.8

다.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재정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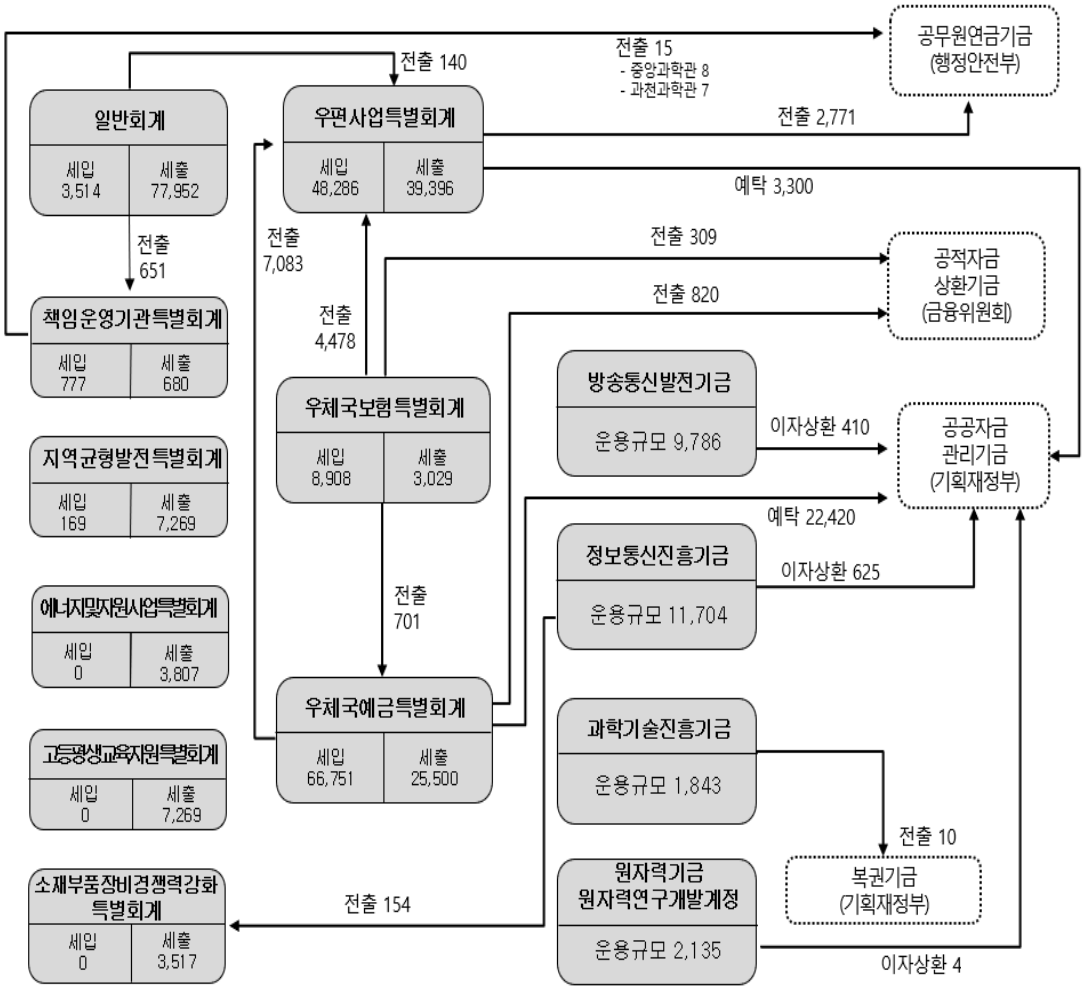
○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 및 기금간 재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651억 원, 우편사업특별회계로 140억 원 전출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5억 원 전출되었음.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4,478억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701억 원, 공적자금상관기금으로 309억 원 전출되었음.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7,083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820억 원 전출되었음.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771억 원 전출되었음.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154억 원 전출되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25억 원 이자상환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10억 원 이자상환하였음.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에 10억 원을 전출하였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단위 : 억 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일반회계

가. 세입 결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767억 80백만 원, 징수결정액은 3,574억 52백만 원임. 실제 수납액은 3,513억 62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3%이며, 불납결손액은 179백만 원, 미수납액은 59억 11백만 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76,780	357,452	351,362	179	5,911	98.3
재산수입 (토지대여료, 이자수입 등)	5,341	14,594	14,571	-	24	99.8
경상이전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	107,987	87,728	82,553	109	5,065	94.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등)	263,452	255,130	254,238	70	822	99.7

○ 주요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전파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부과하는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2,542억 15백만 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밖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939억 84백만 원 등이 수납됨.

주요 수납내역	
-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허가 등 수수료 등	2,542억 15백만 원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및 발생이자 등	939억 84백만 원
- 과태료, 과징금, 징계부가금, 가산금 등	29억 80백만 원
- 토지 및 기타관유물 대여료	1억 59백만 원
- 기타잡수입 등	23백만 원

○ 주요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 과징금 등이 43억 77백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억 96백만 원,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 8억 22백만 원임.

주요 미수납내역	
- 과태료, 가산금 및 벌금 및 과료 등	43억 77백만 원
-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억 96백만 원
-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허가 등 수수료	8억 22백만 원
- 기타(변상금 및 위약금, 관유물대여료 등)	17백만 원

○ 불납결손 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및 과료, 과태료 등이 86백만 원, 전파사용료 70백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20백만 원이 결손 처리되었으며,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었음.

불납결손 내역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등	86백만 원
- 전파사용료	70백만 원
- 사업비 집행잔액	20백만 원
- 위약금	3백만 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2억 52백만 원, 2023년 220억 66백만 원, 2024년 59억 11백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

<최근 3년(2022년～2024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2022년	326,677	378,247	372,917	5,252	78	98.6
2023년	330,367	399,890	377,757	22,066	67	94.5
2024년	376,780	357,452	351,362	5,911	179	98.3

나. 세출 결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조 1,955억 12백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87억 55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9,225억 98백만 원임. 이 중 7조 8,742억 70백만 원을 집행하고, 92억 3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1억 5백만 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8,195,512	38,755	68,342	-	1,576 △1,576	△380,015	7,922,598	7,874,270	9,203	39,105

(1) 이체·이용·전용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예산 집행과정에서 3,800억 15백만 원을 이체하였고, 15억 76백만 원을 전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이 체	이 용	전 용
2024년도	-380,015	-	± 1,576

주요 이체 내역

-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른 재원 마련 380,015백만 원

주요 전용 내역

- 국내여비 부족액 261백만 원
- 국외업무여비 부족액 600백만 원
- 일용임금 부족액 307백만 원

(2) 다음연도 이월액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중 계약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설계비·공사비 등 미지급금 66억 60백만 원, 기본경비 20억 67백만 원(일반회계 기본경비 예산총액 16,424백만 원의 12.6%) 등 92억 3백만 원을 이월하였음.

※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내에서 이월 가능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02억 53백만 원, 징수 결정액은 169억 33백만 원임. 실제 수납액은 과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에 따른 169억 23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임.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10,253	16,933	16,923	-	10	99.9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431억 10백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33억 7백만 원임. 이 중 7,268억 51백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87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2억 69백만 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743,110	197	743,307	726,851	1,187	15,269

4. 소재부품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소재부품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소재부품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	-	-	-	-	-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소재부품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560억 42백만 원으로, 이 중 3,517억 원을 집행하고, 43억 42백만 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재부품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356,042	-	356,042	351,700	-	4,342

○ 나노·소재기술개발,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미래소재 디스커버리지원 등의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인건비 등 집행잔액임.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	-	-	-	-	-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871억 95백만 원으로, 이 중 3,807억 12백만 원을 집행하고, 64억 83백만 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387,195	-	387,195	380,712	-	6,483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등의 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연구개발 인건비 집행잔액 등임.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	-	-	-	-	-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78억 90백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47,890	-	47,890	47,890	-	-

○ 디지털기술선도 핵심인재양성(R&D) 사업의 연구개발 연구활동비 등으로 집행하였음.

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는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입 예산액은 379억 73백만 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373억 84백만 원이며, 이 중 371억 69백만 원이 수납되고, 2억 15백만 원은 미수납되었음.

○ 세입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336억 93백만 원)이 차지하고 있음. 그 밖에 입장료 등 자체수입(13억 11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8억 39백만 원),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이익 자본계정 전입(11억 32백만 원) 등으로 구성됨.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37,973	37,384	37,169	-	215	99.4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출 예산액은 379억 73백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88억 12백만 원 중 350억 48백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80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4백만 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손익계정	31,066	14	31,080	29,032	368	1,680
자본계정	6,907	826	7,733	6,016	1,012	705
합 계	**37,973**	**839**	**38,812**	**35,048**	**1,380**	**2,384**

○ 주요 집행내역은 과학전시사업(106억 14백만 원), 과학교육사업(35억 56백만 원), 인건비 및 경상비(89억 38백만 원), 시설관리사업(87억 44백만 원), 복합과학체험랜드 건립사업(10억 53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10억 10백만 원), 당기순이익 등 내부거래(11억 32백만 원)이며, 이를 계정별로 구분하면 손익계정에서 290억 32백만 원, 자본계정에서 60억 16백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세입 예산액은 394억 62백만 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405억 88백만 원이며, 이 중 404억 80백만 원이 수납되고, 1억 9백만 원은 미수납되었음.

○ 세입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314억 58백만 원)이 차지하고 있음. 그 밖에 주차·매표 등 책임운영기관 사업 수입(39억 85백만 원), 토지 및 건물대여료(7억 48백만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26억 75백만 원) 등으로 구성됨.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39,462	40,588	40,480	-	109	99.7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세출 예산액은 394억 65백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0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5억 27백만 원 중 371억 32백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5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25백만 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손익계정	30,220	3	30,225	28,745	2	1,473
자본계정	9,245	57	9,302	8,387	663	252
합 계	**39,465**	**60**	**39,527**	**37,132**	**665**	**1,725**

○ 주요 집행내역은 창의전시관운영(84억 33백만 원), 과학교육문화(36억 44백만 원), 시설관리(102억 92백만 원), 어린이과학관운영(27억 23백만 원), 인건비 및 경상비(95억 96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7억 15만원), 당기순이익 등 내부거래(15억 1백만 원) 등이며, 이를 계정별로 구분하면 손익계정에서 287억 45백만 원, 자본계정에서 83억 87백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9.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징수하여 전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5조 4,396억 17백만 원이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4조 8,562억 46백만 원이며, 이 중 4조 8,285억 91백만 원을 수납하고 276억 28백만 원은 미수납, 27백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음.

○ 우편물 취급 등에 따른 수입 2조 9,517억 61백만 원과 정부내부거래(타회계전입금, 감가상각비) 수입 1조 6,821억 94백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함. 그 밖에 재산수입(토지·건물대여료 및 매각대 등) 915억 59백만 원,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이월액으로 983억 27백만 원 등이 수납되었음.

○ 체납자 재력부족, 납기 미도래 등에 따라 변상금, 연체가산금, 우편사업수입 등 251억 86백만 원, 토지·건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 24억 42백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으며, 시효완성 및 청산종결에 따라 27백만 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5,439,617	4,856,246	4,828,591	27,628	27	99.4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조 4,396억 17백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54억 74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4,850억 91백만 원 중 4조 7,129억 57백만 원을 지출하였음. 527억 75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93억 58백만 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5,439,617	45,474	5,485,091	4,712,957	52,775	719,358

○ 이월액은 주로 우체국 계속 공사,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계약체결 지연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

1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우체국예금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서민생활금융 지원 등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5조 9,408억 27백만 원이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6조 6,773억 87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6조 6,751억 20백만 원을 수납하였고, 22억 35백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 금융사업 수입이 3조 4,409억 39백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이월액 1조 775억 84백만 원, 정부내부거래(타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회수 등) 수입 2조 734억 11백만 원 등이 수납되었음.

○ 체납자 재력부족 등으로 22억 35백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5,940,827	6,677,387	6,675,120	2,235	31	100.0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조 9,408억 27백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8억 62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9,486억 89백만 원 중 5조 6,133억 98백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60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85억 31백만 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5,940,827	7,862	5,948,689	5,613,398	6,760	328,531

○ 이월액은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계속 및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지급이자 등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발생하였음.

1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국영보험으로서 도시서민 및 농·어촌 주민에게 저렴하고 간편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설치되었음.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조 615억 90백만 원이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8,908억 77백만 원이며 이 중 8,908억 46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30백만 원 미수납됨.

○ 부가보험료 수입이 8,906억 20백만 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2억 26백만 원이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1,061,590	890,877	890,846	30	-	100.0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조 615억 90백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3억 83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619억 73백만 원 중 8,886억 79백만 원을 집행하였음. 5억 36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27억 57백만 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061,590	383	1,061,973	888,679	536	172,757

○ 이월액은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임.

12. 과학기술진흥기금

가. 일반현황

○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과기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음.

○ 과기진흥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으로는 정부의 출연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복권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국가사업의 기술료 등이 있음.

과기진흥기금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과학기술 수행 또는 성과 실용화 지원을 위한 출연·투자 또는 융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됨.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2024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1,842억 70백만 원으로 계획액 1,887억 91백만 원의 97.6% 수준임. 조달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기술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52억 24백만 원, 복권기금 전입금 등 정부내부

수입이 1,250억 55백만 원, 여유자금회수액이 539억 91백만 원임. 계획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회수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4회계연도에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기초연구진흥 등 과기진흥기금 주요 사업비로 925억 3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운영비로 6억 95백만 원을 집행하였음. 정부내부지출은 복권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10억 46백만 원을 지출하였음. 여유자금운용으로 지출된 899억 95백만 원은 차년도 사업비 사용을 위하여 금융자산으로 예치한 금액임.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 원, %)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7,875	5,224	66.3
	정부내부수입	125,055	125,055	100.0
	여유자금회수	55,861	53,991	96.7
	합 계	**188,791**	**184,270**	**97.6**
기금의 운용	사업비	92,534	92,534	100.0
	기금운영비	695	695	100.0
	정부내부지출	4,458	1,046	23.5
	여유자금운용	91,104	89,995	98.8
	합 계	**188,791**	**184,270**	**97.6**

다. 재무상태

○ 2024년도 말 기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총 자산은 1,153억 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7억 94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 원)

과 목		금 액		
		2024년(A)	2023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61,803	26,216	35,587
	투 자 자 산	53,500	44,294	9,206
	합 계	115,303	70,509	44,794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	-	-
	(1) 유동부채	-	-	-
	(2) 장기차입부채	-	-	-
	< 순 자 산 >	115,303	70,509	44,794
	(1) 기본순자산	491,087	491,087	-
	(2) 적립금 및 잉여금	△375,783	△420,577	44,794
	합 계	115,303	70,509	44,794

○ 2024년말 기준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618억 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5억 87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비교적 장기간 보유할 목적인 투자자산은 53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부채는 없으며, 2024년도 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순자산 총액은 1,153억 3백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및 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함.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가. 일반현황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원자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997년에 설치[1]되었으며, 관리운용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 기금의 조성재원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법정부담금 및 기타경상이전 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 부과 및 징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납부의무자: 한국수력원자력(주)
- 부담금의 산정기준(「원자력진흥법」 제13조제2항)

  = 전전년도*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발전량(kWh) ×1.2원/kWh

  *「원자력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전년도에서 전전년도 발전량으로 산정기준 변경

○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에너지안보 및 미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1)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757, 서상기의원 대표발의)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명칭이 원자력기금으로 변경되고,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포괄 승계됨.

나. 자금조달 및 운용

○ 2024회계연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조달액은 2,135억 37백만 원으로 계획액 2,134억 98백만 원 대비 100.0% 수준임. 조달내역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량에 따른 부담금 수입액이 2,083억 74백만 원, 기타재산이자수입이 9억 65백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이 27억 27백만 원, 여유자금 회수액이 14억 70백만 원임. 계획 대비 수입이 증가한 것은 기타재산이자수입과 여유자금 회수액의 증가 때문임.

○ 2024회계연도에는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 등 연구개발사업비에 1,710억 40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420억 79백만 원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자산에 예치하여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 원)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212,924	212,066	99.6%
	여유자금회수	574	1,470	256.1%
	합 계	213,498	213,537	100.0%
기금의 운용	사업비	166,544	166,544	100.0%
	기금운영비	4,496	4,496	100.0%
	정부내부지출	480	417	87.0%
	여유자금운용	41,978	42,079	100.2%
	합 계	213,498	213,537	100.0%

다. 재무상태

○ 2024년도 말 기준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총자산은 423억 85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억 5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유동자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채는 121억 42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당기말 순자산 총액은 302억 4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억 64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 원)

과 목		금 액		
		2024년(A)	2023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42,385	1,480	40,905
	투 자 자 산	-	-	-
	합 계	**42,385**	**1,480**	40,905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12,142	12,100	41
	(1) 유동부채	12,142	100	12,041
	(2) 비유동부채	-	12,000	△12,000
	< 순 자 산 >	30,244	△10,620	40,864
	(1) 기본순자산	-	-	-
	(2) 적립금 및 잉여금	30,244	△10,620	40,864
	(3) 순자산조정	-	-	-
	합 계	**42,385**	**1,480**	40,905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방송통신발전기금

가. 일반현황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분담금,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방송통신인력의 양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며, 동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리의 주된 사무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나. 자금조달 및 운용

○ 2024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9,786억 18백만 원으로 계획 대비 102억 8백만 원(△1.0%) 감소하였음. 이는 법정부담금 등 자체수입 감소에 기인함.

○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업자 분담금 등 자체수입이 6,165억 23백만 원, 정부내부수입이 3,433억 9백만 원, 여유자금회수가 187억 86백만 원임.

○ 2024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9,786억 18백만 원임. 세부적으로는 사업비 지출 9,000억 39백만 원, 기금운영비 41억 68백만 원, 정부내부지출 410억 35백만 원, 여유자금운용액 333억 76백만 원임.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 원)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626,731	616,523	98.4%
	정부내부수입	343,309	343,309	100.0%
	여유자금회수	18,786	18,786	100.0%
	합 계	**988,826**	**978,618**	**99.0%**
기금의 운용	사업비	901,203	900,039	99.9%
	기금운영비	4,219	4,168	98.8%
	정부내부지출	41,035	41,035	100.0%
	여유자금운용	42,369	33,376	78.8%
	합 계	**988,826**	**978,618**	**99.0%**

다. 재무상태

○ 2024년말 기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자산은 4,886억 2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7억 15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투자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

○ 2024년말 기준 부채는 1조 9,051억 11백만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발생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92억 원 증가하였음. 2024년말 순자산총액은 △1조 4,164억 88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4억 86백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기재정운영결과(△1,734억 83백만 원) 등에 따른 것임.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과 목		금 액		
		2024년도(A)	2023년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64,426	51,641	12,785
	투 자 자 산	326,100	291,100	35,000
	일 반 유 형 자 산	94,983	96,161	△1,178
	무 형 자 산	1,019	572	447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095	3,434	△1,339
	합 계	**488,623**	**442,908**	**45,715**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1,905,111	1,685,911	219,200
	(1) 유동부채	252,357	352,998	△100,640
	(2) 장기차입부채	1,652,666	1,309,357	343,309
	(3) 기타비유동부채	88	23,556	△23,468
	< 순 자 산 >	△1,416,488	△1,243,002	△173,486
	(1) 기본순자산	-	-	-
	(2) 적립금 및 잉여금	△1,443,408	△1,269,925	△173,483
	(3) 순자산조정	26,920	26,923	△3
	합 계	**488,623**	**442,908**	**45,715**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2024회계연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예수 등에 따라 기금예수금 800억 원을 증액하고, 법정분담금 375억 92백만 원, 여유자금회수 3,062억 56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28억 81백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운용 2,667억 29백만 원 감액하였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계획액	증감내역		계획현액
		증액	감액	
□ 방송통신국가표준화체계구축및활성화	536	11	11	536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38,154	2,881	-	41,035
□ 통화금융기관예치	114,147	-	114,147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94,951	-	152,582	42,369
지 출 합 계	**347,788**	**2,892**	**266,740**	**83,940**
□ 법정부담금	609,171	-	37,592	571,579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9,770	-	119,770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05,272	-	186,486	18,786
□ 기금 예수금	263,309	80,000	-	343,309
수 입 합 계	**1,197,522**	**80,000**	**343,848**	**933,674**

15. 정보통신진흥기금

가. 일반현황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되었음.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정보통신인력의 양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2015년까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 법률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나. 자금조달 및 운용

○ 2024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1조 1,703억 88백만 원으로 계획 대비 2,093억 50백만 원(△15.2%) 감소하였음. 이는 공자기금 예수규모 감소 등에 기인함.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주파수할당대가 및 융자대여금 회수 등이 6,070억 68백만 원, 정부내부수입이 4,500억, 여유자금회수가 1,133억 20백만 원임.

○ 2024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1조 1,703억 88백만 원임. 세부적으로는 사업비 지출 9,508억 92백만 원, 기금운영비 221억 17백만 원, 특별회계전출금(소부장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등 정부내부지출이 779억 30백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액 93억 25백만 원, 여유자금운용액 1,101억 24백만 원임.

<2024회계연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 원)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600,192	607,068	101.1%
	정부내부수입	602,702	450,000	74.7%
	차입금	-	-	-
	여유자금회수	176,844	113,320	64.1%
	합 계	**1,379,738**	**1,170,388**	**84.8%**
기금의 운용	사업비	951,077	950,892	99.9%
	기금운영비	22,117	22,117	100.0%
	정부내부지출	81,395	77,930	95.7%
	차입금 이자상환	9,326	9,325	99.9%
	여유자금운용	315,823	110,124	34.9%
	합 계	**1,379,738**	**1,170,388**	**84.8%**

다. 재무상태

○ 2024년말 기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자산은 2,096억 19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5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투자자산 증가에 주로 기인함.

○ 2024년말 기준 부채는 3조 1,938억 73백만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발생 등으로 전년도 대비 3,002억 31백만 원 증가하였음. 2024년말 순자산총액은 △2조 9,842억 5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3억 76백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2,973억 76백만 원)에 따른 것임.

<2024회계연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정상태>

(단위: 백만 원)

과 목		금 액		
		2024년도(A)	2023년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150,906	168,348	△17,442
	투 자 자 산	55,834	34,455	21,379
	일 반 유 형 자산	14	16	△2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865	3,945	△1,080
	합 계	**209,619**	**206,764**	**2,855**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3,193,873	2,893,641	300,231
	(1) 유동부채	314,128	435,213	△121,085
	(2) 장기차입부채	2,879,638	2,429,638	450,000
	(3) 기타비유동부채	107	28,791	△28,684
	< 순 자 산 >	△2,984,253	△2,686,877	△297,376
	(1) 기본순자산	1,941,487	1,941,487	-
	(2) 적립금 및 잉여금	△4,925,740	△4,628,364	△297,376
	(3) 순자산조정	-	-	-
	합 계	**209,619**	**206,764**	**2,855**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16. 예비비 결산

가. 2024년 예비비 편성 현황

○ 2024년 일반회계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조직개편 소요 경비 등 예비비 683억 42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83억 94백만 원(기존 예산액 38억원 제외)을 집행하고, 1억 41백만 원을 불용하였음.

- 예비비 중 498억 7백만원은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800*	-	68,342	-	-	△49,807	22,335	22,194		141
우주항공청 행정지원	-	-	66,518	-	-	△49,807	16,711	16,711	-	-
AI 서울 정상회의·AI 글로벌 포럼 지원	3,800*	-	950	-	-	-	4,750	4,750	-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	-	874	-	-	-	874	733	-	141

* (2033-371)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

17. 재무제표

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 정부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프로그램별 원가계산 및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상태표는 기업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며,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임.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원가를 계산해서 얼마의 원가로 얼마의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함. 다만,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양(+)으로 표시되는 반면, 재정운영표에는 재정운영결과 손실이 양(+)으로 표시된다는 점이 상이함.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한해 동안 변동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함.

나.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19조 2,846억 23백만 원, 부채는 8조 8,179억 33백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4,666억 90백만 원으로 나타남.

○ 기말 자산은 전기 대비 6,946억 88백만 원(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대여금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 8,781억 53백만 원 증가, 토지 및 건물 등의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480억 98백만 원 증가 등에 기인함.

○ 기말 부채는 전기 대비 1조 1,0347억 25백만 원(14.3%) 증가하였는데,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1,885억 13백만 원 증가, 장기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7,673억 17백만 원 증가 등에 기인함.

○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4,087억 37백만 원(3.8%)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4년도말 기준 (A)	2023년도말 기준 (B)	증 감	
			금액(C=A-B)	C/B
자산합계(a)	**19,284,623**	**18,589,935**	**694,688**	**3.7 %**
1. 유동자산	3,754,048	4,260,775	(506,727)	(11.9 %)
2. 투자자산	3,070,402	2,192,249	878,153	40.1 %
3. 일반유형자산	12,345,048	11,996,950	348,098	2.9 %
4. 사회기반시설	-	-	-	-
5. 무형자산	89,540	116,816	(27,276)	(23.3 %)
6. 기타비유동자산	25,585	23,144	2,441	10.5 %
부채합계(b)	**8,817,933**	**7,714,508**	**1,103,425**	**14.3 %**
Ⅰ. 유동부채	3,133,527	2,945,014	188,513	6.4 %
Ⅱ. 장기차입부채	4,603,950	3,836,633	767,317	20.0 %
Ⅲ. 장기충당부채	150,918	139,502	11,416	8.2 %
Ⅳ. 기타비유동부채	929,539	793,359	136,180	17.2 %
순자산(a-b)	**10,466,690**	**10,875,427**	**(408,737)**	**(3.8 %)**

(2) 재정운영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0조 2,797억 23백만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임.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액 (C=A-B)	비 율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11,661,841	12,825,070	(1,163,229)	(9.1 %)
Ⅱ. 관리운영비	691,383	695,532	(4,149)	(0.6 %)
Ⅲ. 비배분비용	276,546	316,866	(40,320)	(12.7 %)
Ⅳ. 비배분수익	1,727,034	1,846,512	(119,478)	(6.5 %)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0,902,737	11,990,956	(1,088,219)	(9.1 %)
Ⅵ. 비교환수익 등	623,014	591,590	31,424	5.3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0,279,723**	**11,399,366**	**(1,119,643)**	**(9.8 %)**

○ 프로그램 순원가는 전기 대비 1조 1,632억 29백만 원(9.1%)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연비가 전기 대비 1조 3,916억 15백만 원 감소한 것과 프로그램 수익이 전기 대비 1조 1,206억 36백만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관리운영비는 전기 대비 41억 49백만 원(0.6%) 감소하였는데, 이는 복리후생비의 18억 64백만 원 감소 및 기타 관리운영비의 137억 50백만 원 감소 등에 기인함.

○ 그 외 비배분비용이 전기 대비 403억 20백만 원(12.7%) 감소, 비배분수익이 전기 대비 1,194억 78백만 원(6.5%) 감소, 비교환수익 등이 314억 24백만 원(5.3%) 증가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에 따르면, 기말순자산은 10조 4,666억 90백만 원으로 전년도 기말순자산 10조 8,754억 27백만 원 대비 4,087억 37백만 원(3.8%)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 (C=A-B)	비 율 (C/B)
Ⅰ. 기초순자산	10,875,427	11,723,554	(848,127)	(7.2 %)
Ⅱ. 재정운영결과	10,279,723	11,399,366	(1,119,643)	(9.8 %)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9,847,346	10,543,056	(695,710)	(6.6 %)
Ⅳ. 조정항목	23,640	8,183	15,457	188.9 %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0,466,690**	**10,875,427**	**(408,737)**	**(3.8 %)**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검토의견

총 괄

.....

.....

【 종괄 】

(1) 총괄: 출연(연) 연구원 처우 개선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출연(연) 연구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직무발명보상금 개요

○ 직무발명제도란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2)]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고, 사용자에게는 안정적인 권리승계를 통해 발명성과를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용자등은 특허 등 R&D에 대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업원등은 특허등[3)]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4)]을 계약,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

2)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4) 특허권, 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등록권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은 출원 및 등록보상금, 처분 및 실시보상금, 출원유보 보상금 등으로 구분됨.

출원보상금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출원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된 직무발명이 심사를 통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처분보상금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양도, 처분 등)에 근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실시보상금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제품으로 생산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출원유보 보상금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나 기업의 영업비밀로 활용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 2017년부터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5]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종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전부 기타소득의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과세관청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과세하고 소송에서는 비과세대상으로 번복되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해왔음.

---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이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이 퇴직 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대신[6] 일정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17~'18년에는 300만원, '19~'23년에는 500만원이었다가 '24년부터는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7]

---

6)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

7)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출연(연) 연구원의 처우개선 수단 및 창업 인센티브로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구기관[8]에서는 발명자(연구자)가 기관 내규에 따라 발명 완성을 통지하면 각 기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기관별로 확보한 예산[기술료 수입 또는 연구개발비(간접비)]의 범위에서 연구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비과세 한도(현행 연간 700만원)를 초과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45%의 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금액과 4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연구 의욕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8) NST 소관 23개 출연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이 약칭하여 서술함.

연번	약칭	기관명	연번	약칭	기관명
1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	식품연	한국식품연구원
2	녹색연	녹색기술연구소	14	김치연	세계김치연구소
3	기초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	지자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생명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	기계연	한국기계연구원
5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	에너지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한의학연	한국한의학연구원	18	전기연	한국전기연구원
7	생기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	화학연	한국화학연구원
8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	독성연	국가독성과학연구소 (구 안전성평가연구소)
9	국보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0	건설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	원자력연	한국원자력연구원
11	철도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	재료연	한국재료연구원
12	표준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3	핵융합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특히 4대 보험료의 상승은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인건비 규모의 증가로 오히려 연구활동비 등 연구에 필요한 직접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최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4년에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667억 6,400만원 중 비과세 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총합은 582억 5,500만원(87%)임.

<최근 3년간 출연(연)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현황>

기관명	전체 보상금 지급액 계 (백만원)			700만원 이상 지급액 계 (백만원)			700만원 이상 지급액 비중 (%)		
	'22	'23	'24	'22	'23	'24	'22	'23	'24
KIST	4,200	3,223	3,173	3,475	2,532	2,690	83	79	85
기초연	236	275	160	140	234	71	59	85	44
생명연	1,514	1,522	2,558	1,146	1,168	2,329	76	77	91
KISTI	4	2	2	-	-	-	-	-	-
한의학연	327	159	354	242	116	293	74	73	83
생기원	5,229	4,818	3,739	4,138	3,822	2,890	79	79	77
ETRI	23,579	27,622	32,199	21,360	25,409	29,838	91	92	93
국보연	344	321	680	136	83	478	40	26	70
건설연	1,836	1,706	1,906	1,355	1,130	1,333	74	66	70
철도연	18	17	15	-	-	-	-	-	-
표준연	1,426	894	1,020	1,247	758	890	87	85	87
식품연	653	728	615	459	508	393	70	70	64
김치연	117	141	115	43	75	8	37	53	7

지자연	859	916	945	679	729	796	79	80	84
기계연	2,725	2,889	3,400	2,221	2,297	2,816	82	80	83
에너지연	3,309	2,413	4,206	2,500	1,712	3,570	76	71	85
전기연	4,473	3,467	3,860	4,001	2,867	3,285	89	83	85
화학연	3,292	2,525	2,427	2,789	1,984	1,933	85	79	80
독성연	19	75	151	-	26	101	-	35	67
원자력연	1,279	1,172	1,854	958	825	1,600	75	70	86
재료연	2,307	2,816	3,066	2,047	2,398	2,669	89	85	87
핵융합연	289	190	319	217	171	272	75	90	85
소계	**58,035**	**57,891**	**66,764**	**49,153**	**48,844**	**58,255**	**85**	**84**	**87**

※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이 없는 녹색연은 제외함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 또한 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출연(연) 연구원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원은 매년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9)]

○ 이처럼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비과세 한도의 상향이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효용과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출연(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던 '23년 이전에는 실행인건비[10)]

9) 700만원 이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 도	2022	2023	2024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인원 (명)	7,801	7,674	7,578
700만원 이상 지급 인원 (명)	1,730	1,691	1,559
비율 (%)	22.2	22.0	20.6

1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정규직 급여 지

인상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공무원 임금인상률 및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인상률이 다소 경직적으로 결정되어왔음.

-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24년 이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으나, 출연(연) 연구원의 연봉 인상률은 여전히 최저임금 및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하회하는 편임.

- 이에 따라 출연(연) 연구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출연(연)으로부터 이직하는 인원이 연평균 160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11)]

<최근 4년간 출연(연) 연봉 등 인상률 현황>

전년 대비 인상률 (%)	2022	2023	2024	2025
최저임금	5.05	5.0	2.5	1.7
공무원임금	1.4	1.7	2.5	3.0
출연(연) 연구원 평균연봉*	0.86	1.91	2.49	1.63**

* 출연(연) 평균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수치이며,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는 제외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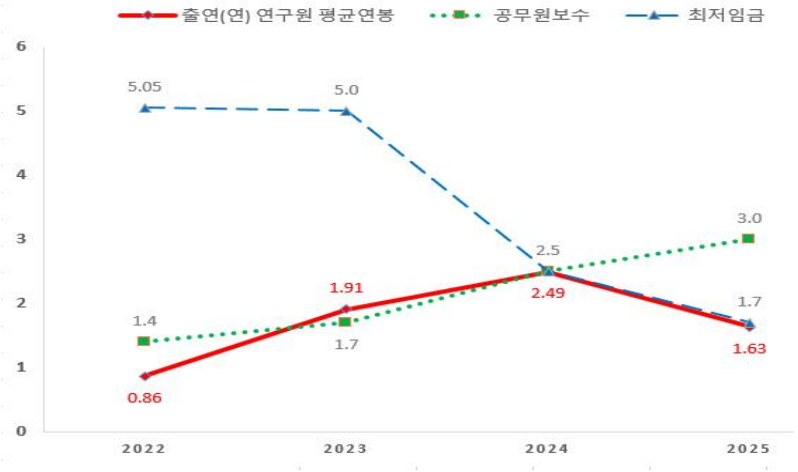
** 2025년의 경우 일부 출연(연)은 연봉계약 실시 전 연중 중도퇴직자 등의 사유로 인해 전년 대비 평균연봉 일시적 하락 발생하기도 함.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출의 상한으로서의 인건비 항목을 말함.

11) NST 소관 23개 정출(연)에서 정년 및 징계를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 수로 추산한 이직자 수는 ('21년) 170명, ('22년) 184명, ('23년) 143명, ('24년) 166명이며, '25년은 6월 기준 95명임.

<출연(연) 연봉 등 인상률 비교>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 및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도이자 비교적 낮은 연봉 인상률을 대신하여 처우 개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보상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은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하거나 비과세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 촉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총괄: 정부지분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규정한 현행 법령 개정 방향 검토 및 대학의 기술료 사용내역 모니터링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 현실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부지분기술료 사용비율 관련「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정부지분기술료 사용 금액 및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상 용도별 사용비율의 준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기술료 및 정부지분기술료 개요

○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하는 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12]이 아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함)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함.

12)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는 총 1,224억 1,700만원이며, 그 중 정부지분 기술료는 1,126억 1,300만원으로 92.0%에 해당함.

○ 현행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13]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용도별 사용비율 기준을 정하고 있음.

사용 용도	사용비율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100분의 60[14] 이상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100분의 15 이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100분의 10 이상
연구개발 재투자	그 외
기관운영경비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 202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나) 검토의견

□ 정부지분기술료의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비중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방향 검토 필요

○ 현행 법령은 재량이 아닌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기관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는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비율 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2개 연구기관(녹색연 제외) 중 총 17개 기관(72.7%)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준으로는 정부지분기술료의 4%만이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고 있음.

<2024년 정부지분기술료의 용도별 사용금액 및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제1호 (60% 이상*)	제2호 (15% 이상)		제3호 (10%이상)	제4호		소계
	참여 연구원 보상금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성과활용 기여 직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타	
KIST	3,184(50)	955(15)	318(5)	637(10)	955(15)	318(5)	6,367
기초연	105(50)	21(10)	11(5)	21(10)	52(25)	-(-)	210
생명연	654(50)	131(10)	65(5)	131(10)	324(25)	4(0)	1,309
KISTI	542(50)	222(20)	217(20)	104(10)	-(-)	-(-)	1,085
한의학연	288(54)	24(5)	48(9)	48(9)	-(-)	123(23)	531

기관명	제1호 (60% 이상*)	제2호 (15% 이상)		제3호 (10%이상)	제4호		소계
	참여 연구원 보상금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성과활용 기여 직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타	
생기원	2,770(55)	481(10)	286(6)	481(10)	477(10)	512(10)	5,007
ETRI	28,838(50)	7,926(14)	3,887(7)	867(2)	14,711(26)	1,441(2)	57,670
국보연	683(50)	200(15)	162(11)	67(5)	200(15)	54(4)	1,366
건설연	1,580(69)	305(13)	163(7)	60(3)	165(7)	21(1)	2,294
철도연	1,129(60)	188(10)	94(5)	12(1)	458(24)	0(0)	1,881
표준연	643(51)	188(15)	63(5)	127(10)	206(16)	39(3)	1,266
식품연	613(55)	246(22)	155(14)	19(2)	20(2)	57(5)	1,110
김치연	116(50)	23(10)	12(5)	23(10)	46(20)	12(5)	232
지자연	945(54)	122(7)	150(9)	-(-)	-(-)	529(30)	1,746
기계연	2,460(56)	441(10)	572(13)	425(10)	366(8)	149(3)	4,413
에너지연	3,051(50)	605(10)	325(5)	586(10)	1,510(25)	-(-)	6,077
전기연	3,347(70)	479(10)	454(9)	45(1)	243(5)	226(5)	4,794
화학연	2,459(50)	492(10)	243(5)	-(-)	1,723(35)	-(-)	4,917
독성연	112(50)	22(10)	11(5)	2(1)	75(33)	2(1)	224
원자력연	1,773(50)	354(10)	177(5)	354(10)	531(15)	355(10)	3,544
재료연	3,170(56)	428(8)	437(8)	506(9)	790(14)	328(6)	5,659
핵융합연	456(50)	91(10)	46(5)	88(10)	231(25)	-(-)	912
전체	58,918(52)	13,944(12)	7,896(7)	**4,603(4)**	23,083(20)	4,170(4)	112,614

* 시행령 제41조 개정('24.12.31.)으로 참여연구원 보상금 비중(개정前: 50%이상) 징수 준수
** 실제 집행액 기준 작성 시 집행 시점 차이로 혁신법 비율과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마다 재정 상황, 기술료 수입 규모 및 사업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 기준이 준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임.

○ 한편,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로 마련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료의 일정 비율이 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및 해당 기관이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자로서 ①연구개발성과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사람과 ②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하는 개념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 범위>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해당 기술이전에 통**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력이 있는 자 2)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3)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

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4)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6)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7)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8)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다만, 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 통해 **성과 배분을 받은 연구원은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자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타 기관 및 해당 개인과 별도의 관련 중개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상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 다만, ‘21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술료의 10% 이상을 성과 활용 기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던 내용이 삭제된 바 있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	개정後 (`22.1.1. 시행)
3. 보상금 지급 기준 ○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기여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률 또는 차등지급**할 수 있음	3. 보상금 지급 기준 ○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기여자로 선정된 자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률 또는 차등지급**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 최근 3년간 국회에서 정부지분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규정한 현행 법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15]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 '24년 말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개정되었으나, '참여 연구원 보상금 비율'만 50%에서 60%로 상향되었을 뿐 '성과활용 기여 직원 보상금 비율(10%)'은 조정되지 않았음.

15) 최근 3년간 국회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67-269p,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예결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총괄) 시행령 상 보상금 사용 비율에 대한 개선을 고려할 필요
- 49-58p,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과방위), (출연연 총괄)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에 관한 현행 법령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455-458p,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예결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기술료 집행 법정비율 타당성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개정이유를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음.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하위 지침과도 괴리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법령의 현실 정합성이 제고되도록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해 보임.

- 특히, TLO와 같은 전담조직이 기술이전·사업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담조직에 대한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보상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이전에 실패할 경우 연구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 현실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부지분기술료 사용비율 관련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정부지분기술료 사용 금액 및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령 준수 여부 관리 필요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해서는 출연(연) 등과 같이 용도별 사용비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짐.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대학의 용도별 정부지분기술료 사용 금액 및 비율에 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을 어떤 구조로 결정하는지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4항[16]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대학은 교육부 소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

○ 법령이 준수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출연(연)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기술료 사용 결과와 보상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정부지분기술료 사용 금액 및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상 용도별 사용비율의 준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 연구과제의 조기 협약 체결을 위한 집행관리 노력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공고, 선정, 협약 체결 등의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사업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제공동연구사업은 국내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8개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예산(계획액) 517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등으로 교부하고 있음.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공동연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계획)
	예산액(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당초)	추경(변경)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 사업	6,809	6,809	6,809	-	11,586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7,792	7,792	7,792	-	16,670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계획)
	예산액(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	추경 (변경)			
기후기술국제협력 촉진	460	460	460	-	460
원자력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6,930	6,930	6,930	-	7,415
원자력국제공동 연구지원사업	11,750	11,750	11,750	-	9,870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2,930	2,930	2,930	-	6,460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3,750	3,750	3,750	-	3,825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	11,304	11,304	11,304	-	3,385
합 계	51,725	51,725	51,725	-	59,67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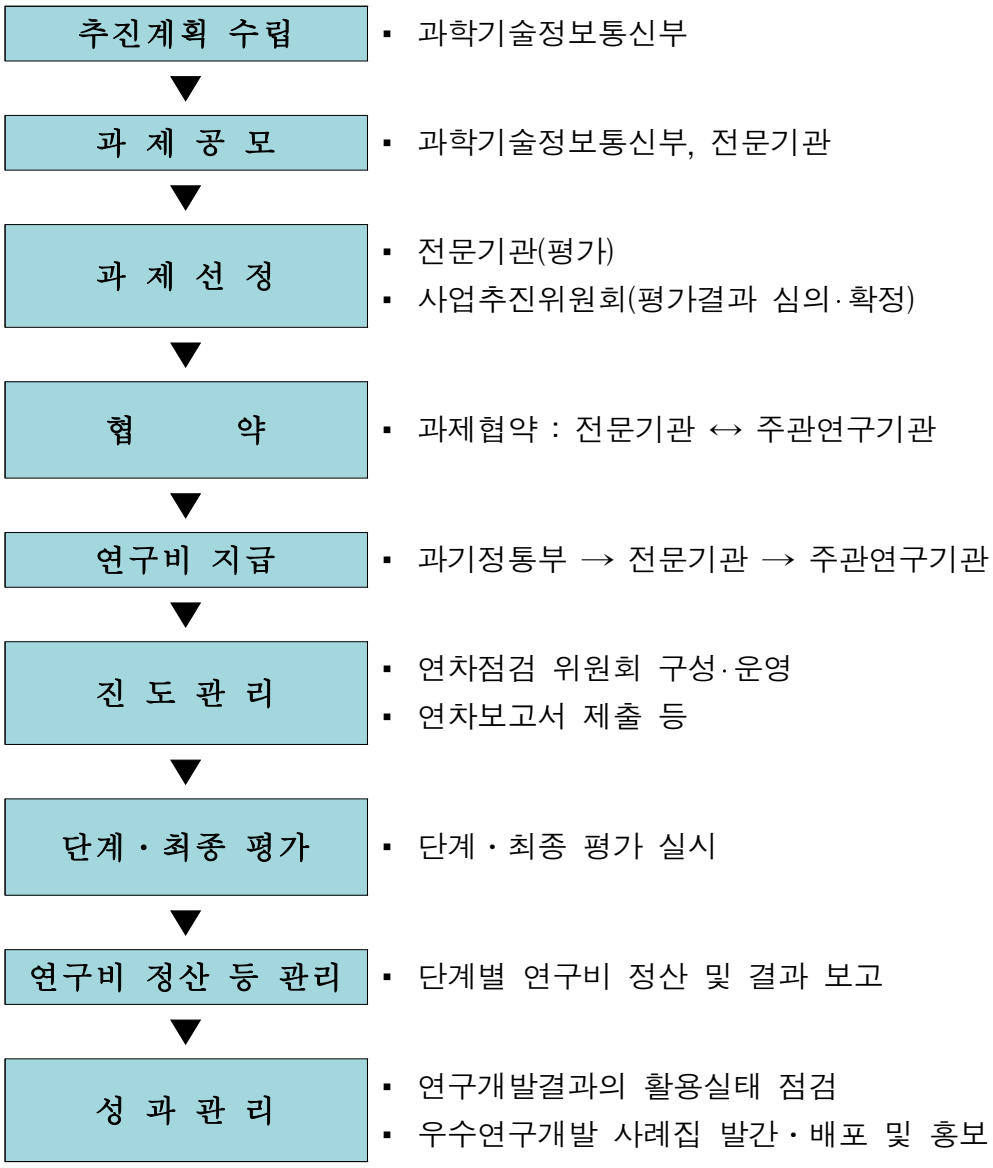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전문기관[17]인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기획평가원 등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수행 절차를 살펴보면, 전문기관(예: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기획평가원 등)을 통해 과제 공모 및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사업 집행이 가능해짐.

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연구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공동연구사업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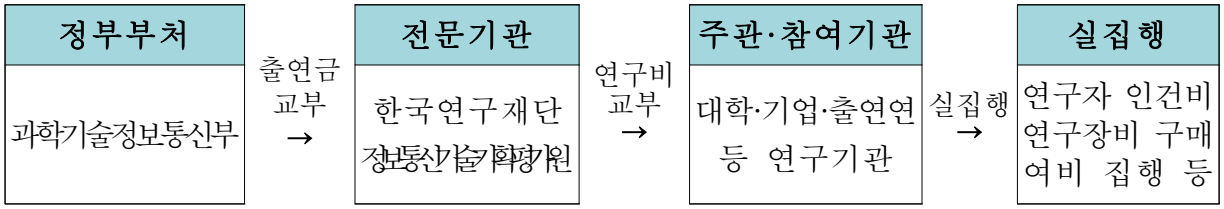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나) 검토의견

□ 신규 연구과제의 조기 협약 체결을 위한 집행관리 노력 필요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집행 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편성된 연구개발 출연금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등에게 교부되며, 이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비가 교부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인건비 지급, 연구장비 구입 등 실제 연구비의 집행은 협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임.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집행 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따라서, 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는 협약 체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2024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 협약 체결이 4/4분기 이후에 발생한 신규 연구과제가 다수 있어, 연내 연구비의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

<2024년도 신규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과제 중 4/4분기 협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연구과제명	협약 체결일	연구 기간	정부 연구비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 운영	2024. 10. 8.	2024~2028	500
	생체 모방 양자 수소트로닉스로 구현된 영상 처리用 全하드웨어 인공 신경망	2024. 10. 4.	2024~2026	139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한 무전원 지향 하이 밴드위스 센서(HBS) 시스템 개발	2024. 10. 4.	2024~2026	139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2024. 10. 8.	2024~2029	500
	차세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용 양자 반도체 센서 원천기술 국제공동개발	2024. 10. 31.	2024~2026	139
	플라즈몬-엑시톤-폴라리톤 상호작용 제어를 통한 초장수명 청색 OLED 원천 기술 개발	2024. 10. 4.	2024~2026	139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양자광학기반 이산-연속변수 하이브리드 양자정보처리 국제공동연구실	2024. 11. 12.	2024~2028	200
	K-퀀텀 국제협력본부	2024. 11. 12.	2024~2028	180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통신과 센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2024. 10. 24.	2024~2027	230
	Si/IGZO 모놀리식 3D 집적 기반 다기능 AI 가속기 구현	2024. 10. 24.	2024~2028	150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국산 30MeV 사이클로트론 활성화 국제공동연구	2024. 11. 11.	2024~2028	200
	차세대 SMR 구조기기의 비탄성 변형 물성 DB 및 평가기술 공동연구	2024. 11. 8.	2024~2028	200

자료: NTIS(https://www.nti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2024년도 신규로 추진된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중 ‘생체 모방 양자 수소트로닉스로 구현된 영상 처리用 全하드웨어 인공 신경망’, ‘통신과 센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연구과제 등 12개 연구과제가 4/4분기(10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어, 연내에 연구비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사업의 ‘양자광학기반 이산-연속 변수 하이브리드 양자정보처리 국제공동연구실’ 등은 11월 이후에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 연내에 연구비가 실집행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말인 4/4분기 이후에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연구비의 연내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부족하여 실제 연구비 예산 편성의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협약 체결 시점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해외 대학·연구소 등 해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특성상 과제 공모 및 선정,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 간 협의, 전문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협약 체결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공고일자 현황>

사업명	분야	사업공고일자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	이차전지 국제공동연구	2024. 2. 8. ~ 3. 12.
	한 - 미국립과학재단 (nsf) 반도체 공동연구	2024. 2. 21. ~ 4. 29.
	한-EU 반도체 공동연구	2024. 2. 28. ~ 4. 29.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국제공동연구 자유형	2024. 4. 3. ~ 5. 31.
	반도체 R&D협력센터	2024. 6. 3. ~ 7. 3.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거점 및 국제공동연구실 관련	2024. 9. 5. ~ 10. 4.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한-아·태 원자력 공동연구	2024. 8. 12. ~ 9. 4.

자료: NTIS(https://www.nti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중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거점 및 국제공동연구실)' 과제는 2024. 9. 5.에 사업이 공고되는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특성상 전반에서 사업공고 시점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 간의 협의 절차와 해외 전문가의 평가 참여 등이 필요한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특성상,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공고, 선정, 협약 체결 등의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사업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마련 필요

○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자체수입 대비 지출 규모 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장기적 진단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19]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 분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임.

○ 두 기금의 자체수입은 주로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업자 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주파수할당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징수하여 방발기금에 45%, 정진기금에 55%를 배분하고,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사업자 별로 각각 징수하며 전액 방발기금으로 귀속됨.

---

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정부담금 종류 및 법적근거>

부담금명	법적근거	
주파수 할당대가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방송사업자 분담금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고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파수할당대가는 통신망의 이용 등 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음에 따른 대가로, 주파수 할당 시 총 할당대가의 1/4을 일시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기간 동안 매년 균등분할납부하는 방식임.

<주파수할당대가 부과기준 및 징수체계>

산정기준		부과율	
가격경쟁 할당대가(경매)		일시납부금	총 할당대가의 1/4
		분할납부금	일시납을 제외한 나머지를 할당일 기준 차년도부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분할납부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전년도 평균에서 1% 차감한 이자율 적용
정부산정 할당대가 (①+②)	①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일시납부금	예상매출액 기준 총 할당대가의 1/2
		분할납부금	일시납을 제외한 나머지를 할당일 기준 차년도부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분할납부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전년도 평균에서 1% 차감한 이자율 적용
	②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납부금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 (이동통신:1.6%, 주파수공용통신:2%)

정부산정할당대가 (동일·유사 용도 주파수의 과거 경매사례 고려하여 산정한 경우)	가격경쟁 할당대가(경매)와 동일방식으로 일시납부금, 분할납부금,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 납부
5G 특화망	할당일 이전에 일시 납부 (단위 대역폭당 단가×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대역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분담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로부터 각각 분담금을 징수하며,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방송사업자 분담금 >

징수주체	사업자	산정기준	부과율	징수율(%)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100분의6 범위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징수율	매출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분의6 범위내에서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징수율	1.5	
	위성방송사업자			1.5	
	IPTV사업자			1.5	
	홈쇼핑PP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	100분의15 범위내에서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징수율	TV	13
				데이터	1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2015년부터 10년간 연도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정진기금은 2022년(1조 9,942억원), 방발기금은 2021년(1조 4,530억 원)이 최대규모로, 2024년까지 지속 하락하였음.

<최근 10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연도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재산(이자)수입	51	33	27	36	70	72	27	53	134	154
	법정부담금	3,931	7,151	4,460	9,354	6,210	5,918	9,988	5,566	5,595	5,143
	-주파수할당대가	3,931	7,151	4,460	9,354	6,210	5,918	9,988	5,566	5,595	5,143
	기타경상이전수입	464	453	399	408	321	507	752	629	894	534
	융자원금회수	416	355	538	600	568	382	450	358	320	240
	여유자금회수	2,238	342	948	727	5,530	1,085	1,073	2,486	2,021	1,133
	차입금	-	-	-	-	-	-	-	-	2,500	-
	내부거래수입	509	506	1,527	1,003	32	6,771	5,385	10,850	3,258	4,500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1,958	-	-
	-공자기금예수	-	-	-	-	-	4,261	5,385	8,892	3,258	4,500
	-공자기금예탁 원금회수및이차입	509	506	1,527	1,003	32	2,510	-	-	-	-
운용규모합계(수입=지출)		7,609	8,840	7,899	12,128	12,731	14,735	17,675	19,942	14,722	11,704
지출	사업비	6,564	6,188	5,965	6,384	8,899	13,298	14,641	17,322	12,739	9,509
	-경상지출	5,964	5,458	5,565	6,034	8,579	13,082	14,385	17,158	12,614	9,509
	-융자지출	600	730	400	350	320	216	256	164	125	-
	기금운영비	203	204	206	211	247	239	243	209	216	221
	여유자금운용	342	948	728	5,533	1,085	1,073	2,487	2,025	1,133	1,101
	차입금 이자상환	-	-	-	-	-	-	-	-	-	93
	내부거래지출	500	1,500	1,000	-	2,500	125	304	386	634	780
	-소부장전출	-	-	-	-	-	104	194	155	176	154
	-공자기금예탁	500	1,500	1,000	-	2,500	-	-	-	-	-
	-공자기금예수 원금 및 이자상환	-	-	-	-	-	21	110	231	458	62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10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연도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재산(이자)수입	86	100	43	36	73	71	24	47	100	101
	법정부담금	5,091	7,577	5,467	9,520	6,873	6,629	9,986	6,480	6,443	5,784
	-방송사분담금	1,874	1,727	1,818	1,867	1,792	1,787	1,814	1,926	1,866	1,576
	-주파수할당대가	3,217	5,850	3,649	7,653	5,081	4,842	8,172	4,554	4,577	4,208
	기타경상이전수입	154	357	285	364	282	347	498	640	367	280
	융자원금회수	351	280	166	43	-	-	-	-	-	-
	여유자금회수	2,870	1,743	2,528	908	4,163	476	1,195	1,908	1,676	188
	내부거래수입	1,055	1,412	1,018	1,003	1,038	5,586	2,827	5,092	3,101	3,433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	-	-
	-공자기금예수	-	-	-	-	-	2,074	2,827	5,092	3,101	3,433
	-공자기금예탁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55	1,412	1,018	1,003	1,038	3,512	-	-	-	-
운용규모합계(수입=지출)		9,607	11,469	9,507	11,874	12,429	13,109	14,530	14,167	11,687	9,786
지출	사업비	7,831	7,904	7,562	6,671	8,410	11,860	12,517	12,310	11,192	9,000
	-경상지출	7,831	7,904	7,562	6,671	8,410	11,860	12,517	12,310	11,192	9,000
	-융자지출	-	-	-	-	-	-	-	-	-	-
	기금운영비	33	37	37	40	43	44	44	42	43	42
	여유자금운용	1,743	2,528	908	4,163	476	1,195	1,910	1,682	188	334
	내부거래지출	-	1,000	1,000	1,000	3,500	10	59	133	264	410
	-공자기금예탁	-	1,000	1,000	1,000	3,500	-	-	-	-	-
	-공자기금예수 원금 및 이자상환	-	-	-	-	-	10	59	133	264	41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용규모의 하락은 자체수입의 축소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정진기금 및 방발기금의 주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으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업자 분담금으로 구성됨.

-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비교적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자체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파수할당대가는 납부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신규할당이 이루어지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연도별 수입 변동이 크게 나타남.[20]

- 2018년에는 5G 주파수의 신규할당(2018년부터 2028년까지), 2021년에는 3G와 LTE 주파수의 재할당(2021년부터 2026년까지)으로 해당연도 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진기금 약 5,500억 원, 방발기금 약 4,000억 원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10년간 정진기금의 법정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파수	393,135	715,051	445,999	935,403	621,030	591,793	998,822	556,608	559,474	514,3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10년간 방발기금의 법정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파수	321,656	585,042	364,908	765,330	508,116	484,194	817,218	455,407	457,751	420,809
분담금	187,448	172,682	181,757	186,681	179,204	178,706	181,414	192,639	186,580	157,560
합계	509,104	757,724	546,665	952,011	687,320	662,900	998,632	648,046	644,331	578,36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주파수 할당 시 총 대가의 25%를 일시납하고, 나머지는 할당 다음연도부터 이용기간 종료연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납부하며 할당대가는 방발기금(45%)과 정진기금(55%)의 재원으로 활용

○ 반면 2020년 이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임.

- 두 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바탕으로 2019년까지 차입 없이 운영되었으나, 2020년 이후 디지털뉴딜 정책 등의 추진으로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되었음.

<최근 10년간 기금 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진기금	6,564	6,188	5,965	6,384	8,899	13,298	14,641	17,322	12,739	9,509
방발기금	7,831	7,904	7,562	6,671	8,410	11,860	12,517	12,310	11,192	9,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진행하였고,

- 2019년 기준 공자기금 예탁잔액은 정진기금 2,500억원, 방발기금 3,500억원 규모로 여유자금이 있었으나, 202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급증하여 순차입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말 기준 정진기금은 4,500억 원, 방발기금은 3,433억 원의 차입이 있음.

<최근 10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잔액>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진기금	예탁잔액	500	1,500	1,000	-	2,500	△4,261	△5,385	△8,892	△3,258	△4,500
	이자수입	9	6	27	3	32	△11	△110	△231	△458	△625
방발기금	예탁잔액	1,400	1,000	1,000	1,000	3,500	△2,074	△2,827	△5,092	△3,101	△3,433
	이자수입	55	12	18	3	38	1	△59	△133	△264	△410

주: 예탁잔액이 없고 순차입(예수잔액)만 있게되는 경우 “△”를 통해 예수잔액을 표현하며, 이자수입은 공자기금 예탁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순차입금으로 인해 이자지출로 전환된 경우 “△”을 통해 이자지출을 표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2022년 5G 관련 통신사 의무이행점검 결과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22년 12월 KT와 LGU+, 2023년 5월 SKT의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였고, 할당 취소에 따라 2023년 계획하였던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고,[21)]

-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3년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음(이율 4.04%, 기간: 2023.11.23.~2026.11.22.).

○ 이에 따라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순자산은 2024년말 기준 각각 △2조 9,843억 원, △1조 4,165억 원으로 악화된 상황임.

21) 나아가 2024년 1월 신규사업자로 제4이동통신사(스테이지엑스)를 선정하였지만, 2024년 7월 서약서 위반, 필요사항 미이행 등으로 선정취소됨에 따라 예상되었던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이 무산되었음.

<최근 10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산	2,653	4,625	3,776	7,505	5,162	2,420	3,532	3,082	2,067	2,096
-유동자산	1,291	3,004	2,389	6,398	4,272	1,680	2,862	2,570	1,683	1,509
-투자자산	1,217	1,471	1,293	1,000	843	709	626	471	345	558
-일반유형자산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145	150	94	107	47	31	44	41	39	29
부채	7,005	9,660	7,737	10,519	8,073	10,023	17,299	24,760	28,936	31,939
-유동부채	3,055	5,457	5,008	6,277	5,291	3,955	6,065	5,486	4,352	3,142
-장기차입부채	-	-	-	-	-	4,261	9,646	18,538	24,296	28,796
-기타비유동부채	3,950	4,203	2,729	4,242	2,782	1,807	1,588	736	288	1
순자산	△4,352	△5,035	△3,961	△3,014	△2,911	△7,603	△13,767	△21,678	△26,869	△29,84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10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산	5,797	6,256	4,866	8,406	7,400	4,777	5,723	5,800	4,429	4,886
-유동자산	3,565	3,763	2,068	5,394	4,177	1,358	1,967	1,931	516	644
-투자자산	1,602	1,930	2,167	2,317	2,467	2,617	2,817	2,866	2,911	3,261
-일반유형자산	566	479	543	609	682	726	863	923	962	950
-무형자산	4	4	7	4	2	2	3	7	6	10
-기타비유동자산	60	80	81	82	72	74	73	73	34	21
부채	5,686	7,904	6,332	8,647	6,637	6,809	11,170	15,074	16,859	19,051
-유동부채	2,457	4,465	4,098	5,146	4,338	3,244	4,967	4,479	3,530	2,523
-장기차입부채	-	-	1	31	22	2,087	4,904	9,993	13,094	16,527
-기타비유동부채	3,229	3,439	2,233	3,470	2,277	1,478	1,299	602	235	1
순자산	111	△1,648	△1,466	△241	763	△2,032	△5,447	△9,274	△12,430	△14,16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기금사업비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 효율화를 시행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견임.

<최근 정진기금 및 방발기금의 사업비 절감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계획
정진기금	사업비	17,322	12,739	9,509	8,255
	전년대비증감	2,681(18.3%)	△4,583(△26.5%)	△3,230(△25.4%)	△1,254(△13.2%)
방발기금	사업비	12,310	11,192	9,000	7,279
	전년대비증감	△208(△1.7%)	△1,118(△9.1%)	△2,192(△19.6%)	△1,721(△19.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동 사안과 관련해, 두 기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존치평가결과[22]에서도 현재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과소하고, 재원구조에 대해 부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22) 기금존치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2026년도에 재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2023년도 기금존치평가 중 '재원구조의 적정성' 부분>

구분	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정진기금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바탕으로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71.34%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총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이 27.84%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중기가용자산은 과소한 상태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03.29%인 자본잠식 상태를 나타냄에 따라 가용자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방발기금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바탕으로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86.66%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총수입 대비 정부대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이 18.17%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중기가용자산은 과소한 상태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9.89%인 자본잠식 상태를 나타냄에 따라 가용자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3.5.

○ 이처럼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현재 자체수입 대비 지출의 규모가 큰 편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장기적 진단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23)]

- 참고로 2026년에는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2028년에는 5G 주파수의 재할당이 예정된 시기이며, 향후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도입시점과 관련해 재할당 기간이나 대가 산정에 따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3) 동 사안과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복리후생제도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동 사업의 예산 및 자체 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침을 준수하여 제복 착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 이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휴일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직원의 휴직·직위해제 시 과다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가) 기관 개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프로그램 및 해외한국어방송 제작지원,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파정보 개방·활용, 전자파 강도 측정 및 전자파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빛마루운영센터 운영 수익 등 자체 수익금과 정부로부터 받은 무선국검사수수료 등 위탁수입 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24년도 결산 기준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수입 1,109억 8,800만원, 기타사업수입 98억 2,300만원, 부대수입 30억 8,200만원을 합한 1,242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은 인건비 227억 2,800만원, 경상운영비 18억 8,900만원, 사업비 882억 3,100만원 등을 합한 1,242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입·지출 현황(2020~2024)>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정부지원수입	69,542	81,183	75,340	81,960	110,988
	기타사업수입	9,660	12,151	14,053	14,749	9,823
	부대수입	1,594	1,354	2,897	5,085	3,082
	출자금	-	-	-	-	-
	차입금	-	-	-	-	-
	기타	2,181	169	286	379	399
	수입합계	82,977	94,857	92,576	102,173	124,292
지출	인건비	18,769	19,440	20,083	21,767	22,728
	경상운영비	2,358	2,366	2,293	2,136	1,889
	사업비	53,255	60,534	61,132	66,293	88,231
	차입상환금	-	-	-	-	-
	기타	8,595	12,517	9,068	11,977	11,444
	지출합계	82,977	94,857	92,576	102,173	124,29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8.

나) 정부 사업 개요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관리기관운영비(7176-203) 사업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관리비(7276-200)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운영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해당 사업비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관리기관운영비(7176-203) 사업 계획액 6억 4,100만 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7276-200) 14억 4,700만 원이 민간 위탁으로 지급되었고, 이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관리비는 6억 1,900만 원이 실집행되었으며 2,200만 원이 불용되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관리비는 14억 900만 원이 실집행되었고, 3,800만 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기금관리기관 운영비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금관리기관운영비 (정보통신진흥기금)	641	641	641	-	641	-	641	619	22	641
기금관리비 (방송통신발전기금)	1,560	1,560	1,509	51	1,447	-	1,447	1,409	38	1,33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다) 검토의견

□ 지침을 준수한 직원 대상 근무복 지급 필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동 사업과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연례적으로 전 직원 대상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20~2024년도 동안 직원 근무복 구입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남·여 바람막이 점퍼+플리스 자켓 세트와 남·여 라운드넥 니트 502개를 구매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긴팔 셔츠 2종, 콤비 자켓 388개와 브이넥 가디건, 점퍼 142개를 구매하여, 연례적으로 전직원 대상 근무복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 근무복 구입 현황(2020-2024)>

(단위 : 개, 명, 백만 원)

연도	품목	수량	현원	계약금액
2020	남·여 바람막이 점퍼+플리스 자켓 세트	502	496.38	98
	남·여 라운드넥 니트	502		
2021	여름용 자켓	483	512.25	90
	린넨 소재 셔츠	483		
	반팔 카라 티셔츠	483		
2022	경량다운점퍼	530	525.75	104
	바람막이 자켓	530		
2023	집업 가디건	540	523	106
	플리스 조끼	540		
2024	긴팔 셔츠 2종	388	510.5	104
	콤비 자켓	388		
	브이넥 가디건	142		
	점퍼	142		

주: 현원은 2024년 4/4분기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소수점 자리는 기간제 직원이 포함되어 발생함.
자료: 나라장터, 알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24]에 따라 준용되는 기획

24)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p. 33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작성 세부지침을 포함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5]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26]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27]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청소,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예산을 통하여 연례적으로 지급한 것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동 사업의 예산 및 자체 자금 등이 지침 상 제복 착용이 불가

---

2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52
1-3. 피복비(210-03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청소 등) 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2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7) 제복 착용이 필요한 업무로 방호공무원, 산림보호·단속직원,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우정사업본부 직원, 검역공무원, 관제요원 등이 각 부처 고시로 정해져 있음.

피하게 요구되는 자 이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침에 부합하는 휴직·휴일·보수지급 규정 개정 필요

○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제1항[28]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지침 제42조제1항 및 제4항[29]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

28)「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29)「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①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②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국가공무원법」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안식휴가를 운영할 수 없으며, 휴직의 사유와 기간도 국가공무원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안식년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해당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내부 직원 대상으로 휴직·휴일·보수지급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첫째, 한국방송전파진흥원은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과 공직 선거일 등의 법정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내부 규정인 「복무규정」 제21조[30]에 따라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날 이외에 진흥원 창립기념일도

---

3.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30)「복무규정」
제21조(공휴일) 진흥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진흥원 창립기념일
3. 기타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휴일

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에 맞지 않는 휴일 규정이 있음.

○ 둘째, 국가공무원과 달리 국내 연수휴직 시와 휴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과도한 휴직 관련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31]에 따르면,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복무규정」 제18조제3항[3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1년 이상의 국내·외 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연수를 하고 있는 휴직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음.

---

31)「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2)「복무규정」
제18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1년 이상의 국내·외 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이 아닌 한 보수 지급이 가능한 휴직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체 연수 휴직 기간에 대해서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음.

○ 셋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2조제3항 및 제4항[3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휴직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제66조제4

33)「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③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3.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항[34]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휴직 제도 운영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등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으로 향후 노·사간에 협의를 거쳐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공무원 수준의 휴직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휴직·휴일·보수지급 제도 현황>

구분	국가공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 공휴일	◆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진흥원 창립기념일** ◆ 기타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휴일
연수휴직시 보수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 직무와 관련이 있는 1년 이상의 **국내**·외 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50%를 지급

34) 「단체협약」
제66조(조합원능력향상) **④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연수휴직 보수지급 기간	◆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체 휴직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
장기근속휴직	◆ 해당없음	◆ 1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 무급휴직 가능

자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맞추어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지 않는 휴직·휴일·보수지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 기준에 비해 금품비위, 형사사건 기소 등 직위해제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규정 개정 필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공무원 기준에 비해 금품비위, 성비위,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직위해제된 임직원에 대해서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35]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35)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비위,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위, 성비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권한을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다.

따라 직원 징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내 채용비위, 성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무원 수준의 임직원 징계조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내부 규정인 「인사 규정」 제32조제1항[36]에 따라 금품비위, 채용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보수 규정」 제19조[37]에 따라 직

---

⑥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인사 규정」
제32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직무관련 금품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5.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7) 「보수 규정」
제19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한다.

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연봉월액의 80%를,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38]에 따르면, 직무성적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사유)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 기소, 금품·성비위 등이 발생하여 수사·중인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호 사유)의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40%,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8)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금품비위, 성비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자의 보수 지급 기준 비교>

구분	규정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비위 등	
		3개월 이전	3개월 이후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수규정」 제19조	연봉월액 80%	연봉월액 5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그럼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금품비위, 성비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임직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봉월액 80%,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연봉월액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비해 2배 이상의 보수 비율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비위가 발생한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원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공무원 수준을 감안하여 직위해제 시 보수 지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공무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내부 임직원 중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거나 성비위·금품비위 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 보수 지급 수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대 변 인 실

소 관

문 의 처

6788-5225

【 일반회계 】

(1)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7041-401): 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외신 기자 대상 행사·홍보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신 기자 상대 행사·홍보 용역을 세목 조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TV, 라디오, 대중교통(KTX·지하철 전광판)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정책홍보 추진을 위해 트렌드 및 이슈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 내용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액 17억 4,600만 원 중 1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 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 제고	1,746	1,746	-	-	1,746	1,716	-	30	1,586
○ 오프라인 매체 운영	847	847	-	-	847	845	-	2	-
○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이슈 분석	126	126	-	-	126	124	-	2	-
○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633	633	-	-	610	610	-	23	-
○ 온라인 홍보 전문 인력 활용	140	140	-	-	140	137	-	3	159
○ 기타	-	-	-	-	-	-	-	-	1,427
□ 세출예산비목	1,746	1,746	-	38	1,746	1,716	-	30	1,586
○ 일반수용비 (210-01)	948	948	-	△38	910	906	-	4	830
○ 일반용역비 (210-14)	658	658	-	38	696	673	-	23	597
○ 상용임금 (110-03)	126	126	-	-	126	124	-	2	130
○ 고용부담금 (320-09)	14	14	-	-	14	13	-	1	2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연례적 세목 조정을 통한 외신 기자 상대 행사·홍보 용역 추진 부적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 조정하여 외신 기자 상대 행사·홍보 용역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000만 원과 3,800만 원[39]을 세목 조정하여 외신 기자 상대 행사·홍보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외신 기자 상대 행사·홍보 용역을 위한 연도별 세목 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세목 조정 전		금액	세목 조정 후		일반용역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7041-401)	210-01	10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7041-401)	210-14	2023년 과기정통부 외신기자단 대상 정책홍보 추진 용역 (1,000만 원)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7041-401)	210-01	38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7041-401)	210-14	2024년 과기정통부 외신 정책토론회 및 통번역 용역 (2.000만 원)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39) 2024년 과기정통부 외신 정책 정책토론회 및 통번역 용역(2.000만 원), 2024년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영문번역 용역 계약 대금 지출(1,000만 원)

- 세목 조정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부 항목의 집행이 외부 여건 변화(예: 법령 개정, 예산 부족 등)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동일 사업 내에서 다른 세목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산 변경 절차임. 따라서,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이러한 세목 조정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음.

<외신 기자 상대 토론회·간담회의 연도별 추진 현황>

연도	일시	장소	내용
2022	2022. 8. 11.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센터	○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신 대상 정책 토론회 ○ 우주·양자·AI 등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투자 계획을 소개 등
2023	2023. 7. 4.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센터	○ 장관 초청 외신기자 정책간담회 ○ 우주, 양자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 핵심 미래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투자 계획을 설명 등
2024	2024. 10. 2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 양자기술 분야 연구기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 프레스 투어 ○ 외신기자 정책간담회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2024년까지 매년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센터 등에서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우주, 양자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 핵심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행사를 연례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이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세목 조정보다는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 판단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례적으로 추진되어 예산 편성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신 기자 대상 행사·홍보 용역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을 조정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 향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40].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외신 홍보'라는 별도의 내역사업을 통해서 외신 기자 대상 행사·홍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운 영 지 원 과

소 관

문 의 처

6788-5225

【 일반회계 】

(1) 과징금(56-565):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수납 실적의 연례적 저조 부적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 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연구개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과징금(56-565) 세목은 「방송법」 제19조[41]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42]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 금지 의무

41)「방송법」
제19조(과징금 처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관련 사항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수납하고 있는 세목임.

○ 과징금의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8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7억 4,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36억 1,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목명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B)	징수 결정액 (C)	수납액 (D)	미수 납액	예산액
과징금	876	0	876	4,362	748	3,614	87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수납 실적의 연례적 저조 부적정

○ 동 세입은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금액의 비율인 수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과징금 세입의 연도별 수납 현황(2020~2024)>

(단위 : 백만 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022	1,022	1,022	2,685	920	90.1	**34.3**	1,765	-
2021	1,022	1,022	1,022	2,420	655	64.1	**27.0**	1,765	-
2022	697	697	697	3,043	877	125.8	**28.8**	2,167	-
2023	876	876	876	2,467	683	78.0	**27.7**	1,784	-
2024	876	876	876	4,362	748	85.4	**17.1**	3,61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징금 세입의 연도별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징수결정액 26억 8,500만 원 중 실제 수납된 금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34.3% 수준이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30억 4,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8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이 28.8%에 불과하였음. 또한, 2024년에도 징수결정

액 43억 6,2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7억 4,800만 원으로 수납률이 17.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과징금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주된 이유는, 미수납액 중 납기 미도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에게 부과된 사업비 환수액 및 제재부가금에 해당하는데, 해당 부분의 과징금이 체납자의 재력 부족, 폐업,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하여 2019년 1월 9일 과징금 징수결정이 된 ㈜○○○○○의 경우 5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재력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의 경우에는 과징금 1억 6,200만 원을 폐업 및 파산을 이유로 미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징금에서 미수납된 부분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43]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

4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 절차를 일시 중지 또는 유보하는 불납결손의 처분으로 이어져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음.

<미수납액 중 납기기간 미도래 이후의 미수납 사유>

(단위: 백만 원)

징수결정 일시	사유	징수 결정액	징수대상	미수납사유
2019. 1. 9	사업비 용도외 사용	507	㈜○○○○○	재력부족
2019. 3. 25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8	㈜△△△△△△△	폐업 (2018.6.28.) 및 해산간주 (2022.12.5.)
2019. 12. 5	사업비 용도외 사용	11	㈜▼▼▼▼	폐업 (2022.4.17.)
2019. 12. 5	사업비 용도외 사용	26	㈜▶▶▶▶▶▶▶▶	폐업 (2019.12.31.)
2020. 4. 9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375	㈜◈◈◈◈◈	재력부족
2020. 4. 9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10	㈜◍◍◍◍◍◍◍	폐업 (2024.9.30.)
2020. 4. 9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162	㈜▲▲▲▲	폐업 (2022.7.1.) 및 파산 (2019.9.25.) ※이시파산폐지
2020. 5. 22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375	주식회사 □□□	재력부족
2022. 7. 11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18	㈜●●●●	폐업 (2022.12.3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징금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해당 과징금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부적절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 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연구개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타잡수입(69-691):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기관장 등 전세 관사 대금의 세입 편성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여, 신규 관사 전세 계약 시 기존 관사에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직접 충당하지 않고, 이를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한 후, 전체 전세보증금 전액을 예산을 통해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기타잡수입(69-691) 세목은 물품 매각 대금, 과오납금 환입, 기타 수수료 및 보증금 환수액, 공적항공마일리지 판매금 등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입을 포괄하는 세목임.

○ 기타잡수입의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음.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목명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 납액	예산액
기타잡수입	28	0	28	23	23	-	2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기관장 등 전세 관사 대금의 세입 편성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제1·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세종시 거주를 위한 관사를 전세 계약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마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전세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를 신규 계약의 전세보증금 지급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는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말 기준 관사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거주지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장관 관사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계약된 제2차관 관사를 제외하고, 제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관사는 각각 2024년과 2023년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등 관사 보유 현황>

(단위: ㎡, 백만 원)

위치	거주 형태	거주자	거주기간	전용 면적	임차	
					전세 보증금	임차료
세종시	전세	장관	2019. 6. 20. ~ 2025. 6. 19.	84.73	270	-
세종시	전세	1차관	2024. 1. 2. ~ 2026. 3. 2.	95.62	350	-
세종시	전세	2차관	2019. 6. 20. ~ 2026. 7. 31.	84.99	330	-
세종시	전세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2023. 7. 4. ~ 2025. 7. 4.	99.98	28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관사의 전세보증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차관의 경우 2024년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원과 기존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3년도 기본경비 3,000만 원과 기존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합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음.

-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관사 계약 과정에서, 기존 관사의 전세 계약 종료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이를 직접 신규 관사 계약의 전세보증금 지급에 직접 활용하였으며, 전체 전세보증금 중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기본경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 관사 계약 시 전세보증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위치	거주 형태	거주자	거주기간	전용 면적	전세보증금 집행		
					해당연도 예산집행 (A)	기존 전세 보증금 (B)	합계 (A+B)
세종시	전세	1차관	2024. 1. 2. ~2026. 3. 2.	95.62	100 (기본경비)	250	350
세종시	전세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2023. 7. 4. ~2025. 7. 4.	99.98	30 (기본경비)	250	2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 제17조[44]의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여, 신규 관사 전세 계약 시 기존 관사에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직접 충당하지 않고, 이를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한 후, 전체 전세보증금 전액을 예산을 통해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4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 책 기 획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5

【 일반회계 】

(1) 총액대상 인건비(7001-100): 법령 및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한 청년인턴 인건비 집행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 및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인 청년인턴의 일용임금(110-04)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대상 인건비(110-01)를 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총액대상 인건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세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52억 300만 원 중 71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 8,000만 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총액대상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총액대상 인건비	76,757	76,757	-	△1,554	75,203	71,223	-	3,980	73,742
○ 총액대상 인건비	76,757	76,757	-	△1,554	75,203	71,223	-	3,980	73,742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세출예산비목	76,757	76,757	-	△1,554	75,203	71,223	-	3,980	73,742
○ 보수 (110-01)	74,879	74,879	-	△1,554	73,325	69,803	-	3,523	71,903
○ 기타직보수 (110-02)	1,300	1,300	-	-	1,300	1,060	-	239	1,279
○ 연가보상비 (110-05)	578	578	-	-	578	360	-	218	56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법령 및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한 청년인턴 인건비 집행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채용 추진계획 수립」(2022. 12. 8.) 및 부처별 채용목표 인원 배정(2023. 1.)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년인턴 채용절차에 착수한 후 7월부터 청년인턴을 채용·운영하였음. 해당 정책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 채용목표 인원은 청년인턴 2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청년인턴의 대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45] 따른 청년(19세~

45)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34세)이고 근무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이며 임금은 월 약 2백만 원(최저임금 수준) 정도임.

- 청년인턴의 업무는 개인의 전공 및 진로를 고려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언론동향 분석, 번역, 영상제작 등의 정책업무와 일선 현업업무 지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총액인건비(110-01)의 일부를 고용된 청년인턴 인건비(110-04)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음.

<2024년도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청년인턴 인건비 전용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날짜)	전용 재원		전용 대상		금액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0.25.)	총액대상 인건비 (7001-100)	110-01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00)	110-04	85,829
전용 (2024.11.20.)	총액대상 인건비 (7001-100)	110-01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00)	110-04	3,408
합계					89,23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액대상 인건비(110-01)를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일용임금(110-04)인 청년인턴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국가재정법」과 2023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첫째,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전용하여 「국가재정법」 상 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국가재정법」 제46조에[46] 따르면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 간의 유사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경비에서 2024년도 예산상

46)「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편성되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전용하여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었음.

○ 둘째, 2023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서는 총액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00) 사업에서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2024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의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따르면, 청년인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예산 전용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여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한 문제[47]가 있었음.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2025. 2. 25.)을 마련하여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부터는 청년인턴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청년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규정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액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00)	주의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채용 추진계획 수립(2022.12.8.) 및 부처별 채용목표 인원 배정(2023.1)에 따라 과기부는 예산안 편성 없이 2023년 7월부터 청년인턴을 채용·운용하였고, 과기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에서 39명을 채용하였음 ○ 2023년에는 기존 사업의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예산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의 전용, 세목·내역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청년인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청년인턴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4. 11.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 및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인 청년인턴의 일용임금(110-04)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대상 인건비(110-01)를 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7036-505): 연례적으로 연도말 과도한 정보보호 자산 취득 집행 부적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와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정보보호 자산취득비의 집행이 연도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사업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정보자원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활용 컨설팅 및 점검, 교육 등 역량 강화 활동,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 19억 3,200만 원 중 19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수준강화 내역사업 예산액 11억 200만 원 중에서 1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 원을 불용하였고, 보안관제시스템 강화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내역사업 예산액 8억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1,932	1,932	-	-	1,932	1,929	-	3	2,259
○ 정보보호 수준강화	1,102	1,102	-	-	1,102	1,099	-	3	1,429
○ 보안관제시스템 강화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830	830	-	-	830	830	-	-	830
□ 세출예산비목	1,932	1,932	-	-	1,932	1,929	-	3	2,259
○ 일반수용비 (210-01)	23	23	-	△9	14	14	-	-	23
○ 일반용역비 (210-14)	-	-	-	9	9	9	-	-	-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	-	2	2	-	-	2
○ 관리용역비 (210-15)	1,681	1,681	-	-	1,681	1,681	-	-	1,581
○ 자산취득비 (430-01)	226	226	-	-	226	226	-	-	65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연례적으로 연도말 과도한 정보보호 자산 취득 집행 부적정

○ 동 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백신 소프트웨어, 서버, 스위치, 웹방화벽, 스토리지 등의 자산을 자산취득비(430-01)로 구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도말인 12월에 대부분의 정보보호 관련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 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예산 신속집행 기조에 벗어나고 있음.

○ 또한,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사실상 다음연도에 필요한 자산이 구입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 사업 자산취득비의 12월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는 전체 집행액 6억 4,700만 원 중 12월에 4억 3,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비율은 67.4%이며, 2023회계연도는 전체 6억 1,900만 원 중 2억 7,500만 원이 12월에 집행되어 집행비율이 44.4%임.

- 2024년도는 전체 자산취득비 2억 2,600만 원이 전액 12월에 집행되어 집행비율은 100.0%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연도말(12월)에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사업의 연도별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	자산취득비 집행		
	전체 (A)	12월 (B)	집행비율 (B/A)
2022	647	436	67.4
2023	619	275	44.4
2024	226	226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기획재정부의「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8]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48)「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8.
3-1. 예산 신속집행 기조 유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배정 사업, 2023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를 전부 12월에 집행하여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 제3조[49]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정보보호 자산의 집행이 연도말(12월)에 집중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될 자산을 구입하는 결과가 되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와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정보보호 자산취득비의 집행이 연도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4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7031-401): 정책연구용역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분야 현안 조사·분석·연구 및 대내외 의견 수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연구 지원 사업과 2030 자문단 구성·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액 5억 3,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7억 9,400만 원 중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 지원 내역사업에 4억 7,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600만 원을 합한 7억 2,700만 원 중 5억 6,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4,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2030자문단 운영 내역사업은 6,7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538	538	256	-	794	629	140	24	510
○ 정책연구 지원	471	471	256	-	727	562	140	24	456
○ 2030 자문단 운영	67	67	-	-	67	67	-	-	54
□ 세출예산비목	538	538	256	-	794	629	140	24	510
○ 정책연구비 (260-02)	471	471	256	-	727	562	140	24	456
○ 일반수용비 (210-01)	67	67	-	-	67	67	-	-	5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정책연구용역의 조속한 추진 필요

○ 동 사업에서 과학기술·ICT 분야 현안을 신속하게 조사·분석·대응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정책 수립 및 기존정책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내역사업을 정책연구용역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일부는 연내 완료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어 향후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도 동 사업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중에서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공공SW사업 중 신기술 과업의 적정 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와 ‘인구·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연구’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추진되어 일부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음연도로 이월된 2024년도 추진 정책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24. 12. 26 ~ 2025. 6. 23.	37
공공SW사업 중 신기술 과업의 적정 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2024. 6. 24. ~ 2025. 2. 18.	40
인구·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연구	2024. 12. 11 ~ 2025. 6. 8	2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특히,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와 '인구·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거의 연내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는 정책연구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이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연례적 예산 이월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연구사업(7031-401)	주의
	지적사항	○ 2023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9억 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2억 3,600만원 중 9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집행률 74.1%), 차년도 이월액이 2억 5,600만원, 불용액이 6,400만원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3억 6,000만원, 2020년 1억 3,600만원, 2021년 8,700만원, 2022년 2억 9,400만원, 2023년 2억 5,600만원이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연구사업의 연례적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4. 11.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 제 협 력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5

【 일반회계 】

(1) 국가간협력기반조성(4731-402): 해외 공동연구 사업의 조속한 협약 체결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연구 내역사업의 다수 신규 과제 협약 체결이 4/4분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에 주관연구기관 및 해외 공동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은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임. 양자·다자 협력채널을 활용한 해외 공동연구, 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합의를 통한 연구자 간 장·단기 인력 교류 프로그램, 해외 연구개발 협력센터 운영, 한반도 협력,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액 239억 8,500만 원이 전액 한국연구재단에 출연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23,985	23,985	-	-	23,985	23,985	-	-	38,070
○ 공동연구	10,629	10,629	-	-	10,629	10,629	-	-	17,430
○ 인력교류	2,047	2,047	-	-	2,047	2,047	-	-	2,020
○ 협력센터	8,585	8,585	-	-	8,585	8,585	-	-	11,784
○ 협력활동	2,724	2,724	-	-	2,724	2,724	-	-	6,836
□ 세출예산비목	23,985	23,985	-	-	23,985	23,985	-	-	38,070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3,985	23,985	-	-	23,985	23,985	-	-	38,0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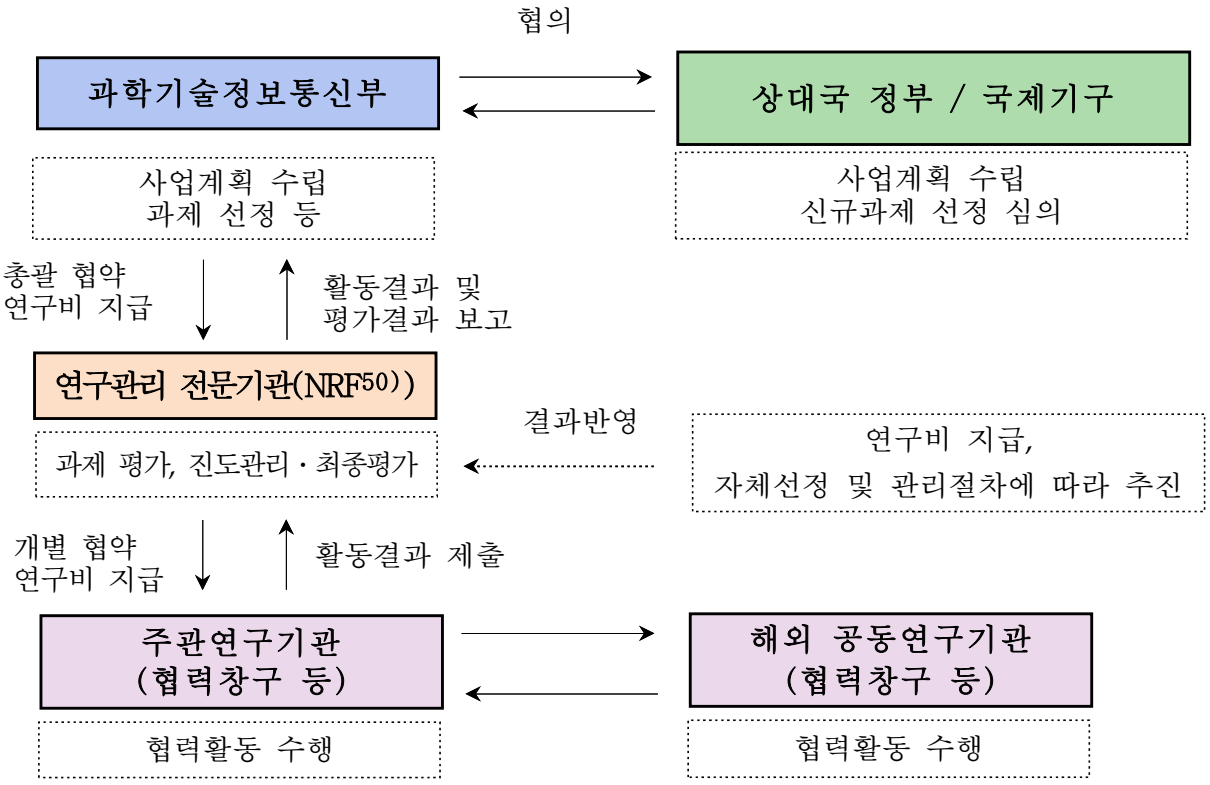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연구에 106억 2,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인력교류에 20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협력센터에 85억 8,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협력활동에 27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 해외 공동연구 사업의 조속한 협약 체결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동연구 사업은 정상, 장·차관 등 고위급 회담 합의에 따라 해외 상대국과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55개 신규 과제에 대한 협약이 체결됨.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수행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50) 한국연국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 동 내역사업 연구과제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대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NRF)이 사업을 공고함. 이후 주관연구기관 및 해외 공동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선정된 연구기관은 지원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됨.

○ 이러한 사업수행절차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해외 공동연구기관 등)이 실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협약 체결 이후로 볼 수 있는데, 동 내역사업의 경우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이 4분기에 체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연구개발비의 연내 실집행 기간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 2024년도 55개 신규 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을 살펴본 결과, 공동연구 내역사업의 경우 전체 과제 중 61.8%에 해당하는 34개 과제가 4분기(10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력교류, 협력센터, 협력활동 등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공동연구 내역사업의 경우 연내에 실제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동 내역사업의 경우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예산의 다수가 전문기관에서 주관연구기관 등에 교부된 연구비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34개 과제의 경우 3개월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가간협력기반조성 내역사업별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현황>

(단위: 개, %)

내역사업	신규 과제	협약 체결 시점		
		1~3분기(A) (9월말)	4분기(B) (10월 이후)	비율 [B/(A+B)]
공동연구	55	21	34	61.8
인력교류	64	62	2	3.1
협력센터	6	5	1	16.7
협력활동	17	17	0	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룩셈부르크와 추진한 2024년도 3개 신규과제의 경우에는 과제 협약일이 2024년 11월 29일로 나타나고 있어, 연내 집행 기간이 사실상 1개월(12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룩셈부르크 공동연구 2024년도 신규과제의 협약 현황>

(단위: 백만 원)

상대 국가	과제	과제협약일	정부투자 연구비
룩셈부르크	○ 퇴행성 뇌질환 모델에서 체내 면역 반응 분석	2024. 11. 29.	100
	○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광학적 양자 상전이의 모방	2024. 11. 29.	100
	○ 대규모 생의학 데이터를 통한 이상 징후 예측을 위한 심층 바이오마커 학습 모델	2024. 11. 29.	100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연구 내역사업의 다수 신규과제 협약 체결이 4/4분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에 주관연구기관 및 해외 공동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사업에서 행사 성격이 강한 ‘주한공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사업의 편성·집행 지양 필요

○ 주한공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주한공관 외교관 대상 정책설명회를 통합하여, 주한공관 외교관, 과학기술·외교 관계 정부기관, 글로벌 R&D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K-Science&Technology(S&T)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 1억 원이 책정됨.

-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 관련 글로벌 행사를 통하여 주한공관의 대사, 외교관, 실무자 등 대상으로 과학기술·ICT 주요정책 및 현안을 공유를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ICT 관련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4년도 K-Science&Technology(S&T) 글로벌의 세부 행사 내용>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09:00~17:20
장소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여의도) (그랜드볼룸, 지하 1층)
비용	1억 원
시간	**행사내용**
8:30 ~ 8:50	사전접견 및 환담
8:50 ~ 9:00	행사장 이동 및 착석
9:50 ~ 10:20	[개회식] -홍보영상 상영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
10:20 ~ 10:30	휴식 및 네트워킹
10:30 ~ 11:00	[세션1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방향]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 외교전략
11:00 ~ 11:10	휴식 및 네트워킹
11:10 ~ 12:25	[세션2 :국가간 과학 기술 협력 사례] -(EU 공사참사관)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영국 참사관)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미국 담당관) 한-미과학기술·ICT동맹강화 -(베트남 참사관) VKIST 설립·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스웨덴 참사관) 한-스웨덴 대학 간 연구 협력 강화
12:25 ~ 13:45	휴식 및 오찬
13:45 ~ 15:30	[세션3 : 2024 글로벌 R&D 성과 공유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말씀 -(과기정책국장) 글로벌 R&D 정책 및 성과관리 방안 소개 -(과기/산업/복지담당국장) 부처별 글로벌 R&D 정책방향 -(국내·외연구자) 2024년 글로벌 R&D 우수 성과 발표 -글로벌 R&D 유공자 표창 수여
15:30 ~ 15:40	휴식 및 네트워킹
15:40~17:20	[세션4 : Horizon Europe 참여 설명회] -(연구재단) HE 참여 설명회 -자유 네트워킹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년 주한 공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K-Science&Technology(S&T) 글로벌 포럼은 연구개발 사업임에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주한공관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글로벌 R&D 성과 공유를 위한 R&D 우수 사례 선정, 유공자 표창 수여 등 행사로 이루어져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사업 성격이 아닌 부처 주관 행사 사업에 해당함.

- K-Science&Technology(S&T) 글로벌 포럼은 2024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1일간 개최되었으며, 개회식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션 1 발제를 진행하였음.

- 이어진 세션 2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각국 주한공관 외교관들이 참여하여,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음.

- 또한, 세션 3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책국장 등이 부처별 글로벌 R&D 정책방향, 2024년 글로벌 R&D 우수 성과 등을 발표하였으며, 세션 4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우리나

라의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음.

○ 연구개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지침 상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연구개발 과제 지원, 연구기관 지원, 고급인력 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이 예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예산편성지침 상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예시 사업
과학기술 활 동	연구개발 (R&D)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연구개발 과제 지원 · 연구기관 지원 · 고급인력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관련한 단순 교육훈련·연수 활동 (고급인력 양성사업 제외)	· 이공계 장학사업 · 교육과정개발 · 강의·연수지원 · 초중등교육지원
	과학기술 서 비 스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 ‘주한공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사업은 주한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처 주관 행사 성격이 강하며,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 등으로 선정된 주관·참여기관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출연금의 집행 구조와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연구개발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가간 과학 기술 협력 사례, 2024 글로벌 R&D 성과 공유회 등에서 주로 주한공관의 외교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특정 연구개발 사례가 아닌 정책이나 행사(AI 서울 정상회의 등)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기술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제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및 기술교류회 등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51]에 따라, 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실제 행사 수행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5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제외하면 연구개발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개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연구개발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한공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연구과제 현황>

(단위: 백만 원)

연구과제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액
주한공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0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주관의 행사 사업인 주한공관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사업을 연구개발 사업인 동 사업에 편성·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향후 타 일반사업(사업출연금, 정부위탁사업 등)으로 편성·집행하거나 부처에서 직접 추진(기관운영경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일치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동 사업의 다수 연구과제는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정산 등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해당하여,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추진하는 경우 연구 수행 기관과 관리 기관이 동일하게 되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개선할 측면이 있음.

○ 동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개발과 전문기관이 일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3년 추진 과제인 '한-미주 협력기반조성(한미특별협력)' 등 총 22개 과제가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이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도에 동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연구과제 중에서는 'NCP 활동지원사업(7,000만원)'과 '2023년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사업(8,000만원)' 사업이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이 일치하는 경우(2013~2024년)>

(단위: 백만 원)

연구과제	총 연구기간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투자연구비
	시작일	종료일			
한-미주 협력기반조성(한미특별협력)	2013. 3. 31.	2017. 12.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216
전지구과학포럼(OECD GSF)의 현안분석 및 장기전략연구	2015. 4. 1.	2018. 1.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60
전지구과학포럼(OECD GSF)의 현안분석 및 장기전략연구	2015. 4. 1.	2019. 1.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기획연구	2017. 5. 17.	2017. 8. 17.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
EU 연구개발협력사업-NCP 활동지원사업(2019)	2017. 11. 1.	2020. 10.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70
2018년도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과기공동위 개최 지원	2018. 1. 1.	2018. 12.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100
2018년도 미주 및 구주지역 과기공동위 개최 지원	2018. 1. 1.	2018. 12.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177
연구관리 국제협력전문가 교육과정	2018. 6. 1.	2018. 12.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166
미국 대학원생 하계연수사업/미국 우수 대학원생 방문연구사업(EAPSI-Korea Alumni Network Conference)	2018. 6. 1.	2018. 12.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144
2018년도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사업	2018. 9. 1.	2019. 8.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100

연구과제	총 연구기간		전문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정부 투자 연구비
	시작일	종료일			
EU 연구개발협력사업-NCP 활동지원사업(2018)	2018. 11. 1.	2019. 10.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70
2019년 미주구주지역 과기공동위 개최지원	2019. 1. 1.	2019. 12.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
한-미 특별협력프로그램	2019. 1. 1.	2019. 12.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230
OECD 전지구과학포럼(GSF) 활동 참여 및 조사분석	2019. 2. 1.	2023. 1.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50
2019년도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사업	2019. 9. 1.	2020. 8.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90
2020년 국제과학기술센터 (ISTC) 지원사업	2019. 9. 1.	2020. 8.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90
EU 연구개발협력사업-NCP 활동지원사업(2020)	2020. 11. 1.	2022. 1.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70
NCP 활동지원	2022. 3. 1.	2023. 3. 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72
2022년 국제과학기술센터 (ISTC) 지원사업	2022. 9. 1.	2023. 5.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70
연구관리 국제협력전문가 과정	2022. 11. 1.	2022. 12. 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95
NCP 활동지원사업(2023)	2023. 3. 1.	2024. 2. 29.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70
2023년 국제과학기술센터 (ISTC) 지원사업	2023. 6. 1.	2024. 2. 29.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80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 동 사업과 같이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 및 정산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와 정산 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특히,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제의 중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 및 정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과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은 동일할 경우 공정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의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을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선정하거나 전문기관을 타 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이 일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과제의 성과평가와 정산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1946-501): ODA 사업 분류 및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 사업을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법령상 규정과 예산지침 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제 IT 협력프로젝트 운영 사업은 정보화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3년간 공동으로 IT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정보화 컨설팅, 역량 강화, 실증·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여 양국 간 정보화 촉진과 우리나라 I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에는 베트남, 카자흐스탄 2개국에 2차년도 공동협력과제 수행, 전문가 단기파견, 공동운영위원회 및 협력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액 9억 1,100만 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으로 교부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	911	911	-	-	911	911	-	-	911
○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	911	911	-	-	911	911	-	-	911
□ 세출예산비목	911	911	-	-	911	911	-	-	911
○ 사업출연금 (350-02)	911	911	-	-	911	911	-	-	9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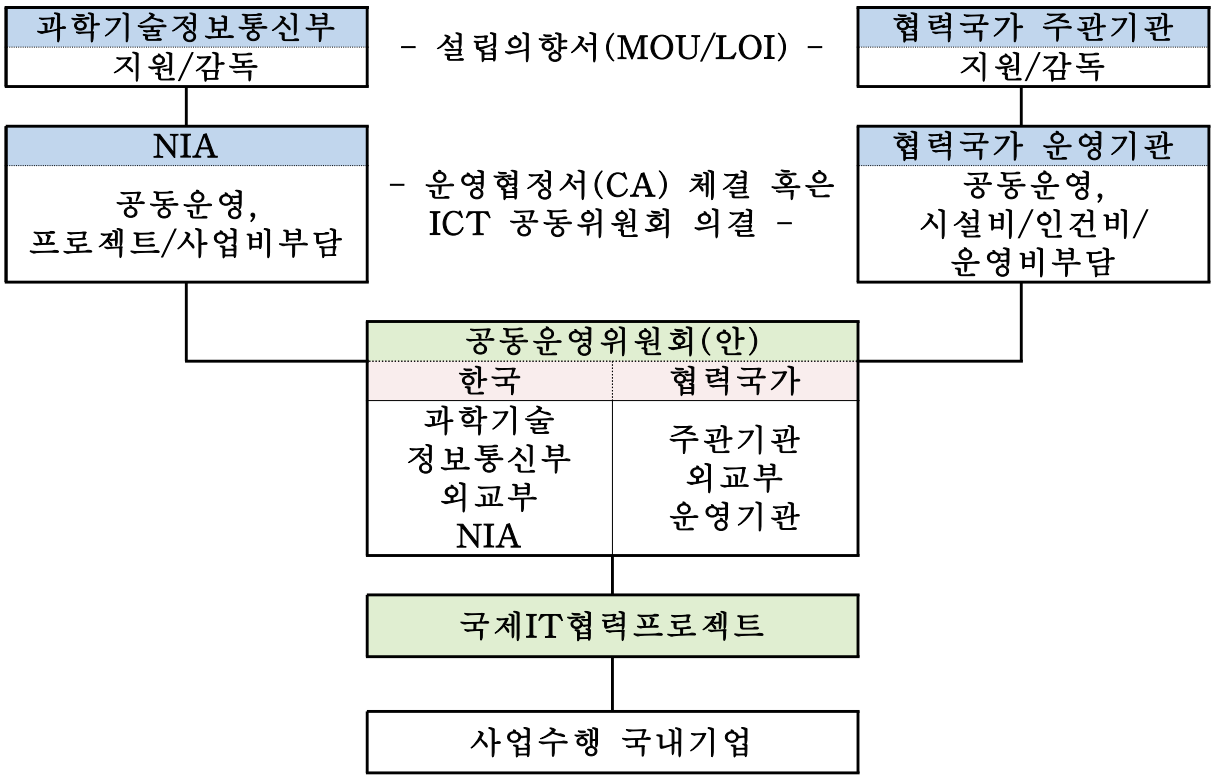
□ ODA 사업으로 분류 필요

○ 동 사업의 사업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사업기간 3년 동안 100만불 출연으로 공동협력과제 비용을 제공하고 상대방 협력국가는 유틸리티, 운영인력 등 현물을 제공하여 공통협력프로젝트, 인력교류 및 공동세미나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적인 운영 절차는 양국 정부간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합의(MoU[52], LoI[53] 등) 및 운영기관 지정 후(한국측 운영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상대국 운영기관: 정보통신 담당부서 또는 산하기관) 운영기관 간 세부운영방안을 협의하게 됨. 양국 운영기관은 세부사항 협의 완료 후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협정서(CA[54])를 체결하게 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사업의 수행 체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또한, 동 사업에서 양국 정부 및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되며, 공동운영위원회는 공동협력과제, 사업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52)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53)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54) 협정서 (Collaborative Agreement / Cooperation Agreement, CA)

○ 동 사업에서 추진된 공동협력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진행한 한-카자흐스탄 IT 협력프로젝트 사업은 AI 학습용 카자흐어 말뭉치 데이터 공동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베트남 IT 협력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베트남 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지원 및 역량강화, 베트남 근로자 한국파견 비자발급 AI 상담 시범서비스 개발, 베트남 우정통신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기술지원 등의 공동협력과제를 추진하였음.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사업의 공동협력과제 현황>

협력 국가	운영기간	주요 협력 과제
브라질	2017. 3. ~ 2019.12. (2년10개월)	· IoT 시범사업 · 5G/LTE를 활용한 스마트팜 IoT 실증환경 구축 · 5G·AI 스마트 캠퍼스 실증환경 구축 및 세미나
벨라루스	2017. 3 ~ 2019. 12. (2년10개월)	·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컨설팅 및 교육 · 정보보안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전자기록물보관시스템 구축 컨설팅 · 공공정보화시스템 표준 플랫폼 구축 및 상호운영성 프레임워크 컨설팅
카자흐스탄	2020. 3 ~ 2022. 12.	· 빅데이터 분석·활용 훈련 및 분석사례 개발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및 운영환경 마련, 빅데이터 시범 분석(에너지·도시개발)
말레이시아	2020. 3. ~ 2022. 12.	· AI 정책협업 및 스마트농업 현지 적용 모델 개발 · 말레이시아 국가 대상 스마트농업 현지모델 실증 및 시범 구현

협력 국가	운영기간	주요 협력 과제
한-카자흐스탄 IT 협력프로젝트	2023. 2. ~ 진행중	· 국가 AI 발전전략 및 빅데이터 활용 방안 컨설팅 · 정부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컨설팅 · AI 빅데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 AI 학습용 카자흐어 말뭉치 데이터 공동구축
한-베트남 IT 협력프로젝트	2023. 2. ~ 진행중	· 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지원 컨설팅 · 해외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모델개발 · 베트남 우정통신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기술지원 · 베트남 근로자 한국파견 비자발급 AI 상담 시범 서비스 개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동 사업은 공동협력과제 추진을 통해 협력국의 정보화 촉진, 한국 기업·기관의 해외진출 레퍼런스 확보 및 우리 기술의 현지 적용·확산 등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성격을 가지나, 사업 추진 시 협력국의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음.

- 외교부의 무상원조사업의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 자문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개발컨설팅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개발컨설팅, 특정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이

며, 상대방 협력국가에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ODA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외교부 무상원조사업의 유형 현황>

사업유형	세부기준
프로젝트	•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
프로그램	• 수원국의 개발계획 일반 또는 특정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
개발컨설팅	• 수원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 자문 등 기술용역 제공
연수사업	•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식·기술전수 (다만, 학위과정은 장학지원으로 분류)
장학지원	• 수원국 유학생의 학위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소속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봉사단 파견	• 파견기간, 사업 명칭, 파견 대상자와 무관하게 소정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유형의 사업
기타기술협력	•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이외의 기술협력 (국내·외 교육성 워크샵 개최 등)

자료: 외교부,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지침」

○ ODA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55]에 따르면,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55)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57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은 지양하고 유·무상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유-무상 및 무상 간 융합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여부를 명시
-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예산 요구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요구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56] 에 따라,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동 사업은 ODA 사업에 해당함에도 비 ODA 사업으로 분류된 결과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 사업을 ODA 사업으로 분류

---

5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법령상 규정과 예산지침 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프로그램[57]은 국가사회정보화 프로그램이며, 단위사업은 국제사회정보화 사업임. 동 세부사업인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의 2021~2025년도 동안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국제IT협력 프로젝트 수혜자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음.

<2021~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단위: 점,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국제IT협력 프로젝트 수혜자 만족도	목표	94.1	94.1	94.5	94.5	94.5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치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설정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5점 척도)*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실적	95.5	94.75	94.5	99.7	-		
	달성도	101.4	100.6	100.0	105.5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57)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서 정책적 독립성을 가진 일정규모의 사업을 의미함.

- ‘국제IT협력 프로젝트 수혜자 만족도’는 동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점 척도)를 하여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2024년도 목표치 산출근거는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치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동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는 2021년 101.4%, 2022년 100.6%, 2023년 100.0%, 2024년 105.5%로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지표의 경우에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인 정성 지표에 해당하여, 동 사업의 실제 사업 추진 실적,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목표 대비 실제 구축·운영 건수 등 정량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정량적 성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성과지표에 정량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ODA)(4734-305): 슈퍼컴퓨터 도입 지연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 부적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이 전제로 하는 타 사업의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가) 사업 개요

○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연구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현지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ODA 사업임. 이 사업은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재난 대응 등 과학기술 기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선진화와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액 35억 7,300만 원 중 25억 7,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0억 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3,573	3,573	-	-	3,573	2,573	-	1,000	3,551
○ SDGs를 위한 개도국 공동연구	2,323	2,323	-	-	2,323	2,323	-	-	2,551
○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	1,000	1,000	-	-	1,000	-	-	1,000	1,000
○ 적정기술 실증센터 구축·지원	250	250	-	-	250	250	-	-	-
□ 세출예산비목	3,573	3,573	-	-	3,573	2,573	-	1,000	3,551
○ 사업출연금 (350-02)	3,573	3,573	-	-	3,573	2,573	-	1,000	3,55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SDGs를 위한 개도국 공동연구 내역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23억 2,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적정기술 실증센터 구축·지원 내역사업도 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 내역사업은 예산액 10억 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슈퍼컴퓨터 도입 지연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 부적절

○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 내역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구축된 슈퍼컴퓨터 5호기의 퇴역자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에 재난대응 솔루션을 보급하는 ODA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경우 슈퍼컴퓨터 5호기를 대체하는 6호기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

과제명	수원국 (국내기관)	주요 내용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인도네시아 (KISTI)	▸사업 기간 : (변경 전) 2023. 1. 1.~ 2026. 12. 31. (변경 후) 2023. 1. 1.~ 2027. 12. 31. ▸사업 내용 : KISTI[58](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일부를 개도국에 구축, 고성능컴퓨터 인프라 활용 재난대응 시스템 등 활용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동안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기존 슈퍼컴퓨터 5호기의 퇴역 일정 또한

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불확실하여 ODA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편성한 문제점이 있음.

○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된 시점인 2023년도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의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31일 1차 입찰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된 이후, 7월 27일, 9월 14일, 10월 27일에 추가로 3차례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됨.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의 입찰 현황(2023년도)>

구분	기간	결과
1차 시스템 공고	2023. 5. 31. ~ 7. 26.	무응찰
2차 시스템 공고	2023. 7. 27. ~ 8. 8.	무응찰
3차 시스템 공고	2023. 9. 14. ~ 10. 26.	무응찰
4차 시스템 공고	2023. 10. 27. ~ 11 .7.	무응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이처럼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의 추진이 지연된 주된 원인은, 2023년을 기점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예: ChatGP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로 인해, 슈퍼컴퓨터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의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임. 그 결과,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

로는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사업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59]를 수행(2024. 3. ~ 9.)하고, 6호기의 공식서비스 개시를 2026년도 상반기로 연장하고, 이와 함께 5호기의 퇴역도 2026년도 상반기로 연장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 집행 가능성이 낮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문제점이 있음. 구체적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무응찰로 유찰되고 있었으며, 고성능 GPU 가격 또한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3년도 예산 편성 시점부터 2024년도 내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존 슈퍼컴퓨터 5호기의 퇴역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해당 내역사업의 사업기간 종료일 또한 기존의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조정되었음.

59) 2024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슈퍼컴퓨터 6호기의 사업비는 종전의 2,929억 원에서 4,483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도 2025년 2월에 낙찰되어 사업 추진이 되고 있음.

○ 또한, 2024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고, 연도 내 슈퍼컴퓨터 5호기의 퇴역을 전제로 한 동 내역사업(ODA 사업)의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불용 처리한 문제점이 있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이 전제로 하는 타 사업의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

(4) 해외IT지원센터운영(2137-303):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의 조기 지급 필요 및 기관 운영 인건비에서 수당 등 집행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침을 준수하여 3분기까지 민간 보조금의 교부가 완료되도록 하여 연례적으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재원 수당 등에 있어 사업비가 아닌 기관 운영 인건비에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해외IT지원센터운영 사업은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 · 비즈니스 컨설팅 등 ICT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중동(UAE)에 총 6개국 7개소에 해외 IT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는 사업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계획액 69억 500만 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출연되거나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해외IT지원센터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해외IT지원센터 운영	6,905	6,905	-	-	6,905	6,905	-	-	6,502
○ 현지거점활용 인프라지원	5,271	5,271	-	-	5,271	5,271	-	-	5,014
○ 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	1,634	1,634	-	-	1,634	1,634	-	-	1,488
□ 세출예산비목	6,905	6,905	-	-	6,905	6,905	-	-	6,502
○ 민간경상보조 (320-01)	2,898	2,898	-	-	2,898	2,898	-	-	2,457
○ 사업출연금 (350-02)	4,007	4,007	-	-	4,007	4,007	-	-	4,04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의 조기 지급 필요

○ 동 사업의 2022~2024년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한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마지막 교부 시점이 모두 4/4분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보조금의 교부가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2022년도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보조금[60] 4차 교부시기는 2022년 10월 27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지급 시점이 4/4분기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2~2024년도 동 사업의 보조금 및 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기관	비목	차수	금액	교부일
20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경상보조	1차	710	2022. 3. 24.
			2차	1,543	2022. 4. 28.
			3차	525	2022. 7. 28.
			4차	**309**	**2022. 10. 2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간경상보조	1차	600	2022. 3. 24.
			2차	570	2022. 4. 14.
			3차	450	2022. 7. 7.
			4차	**350**	**2022. 10. 6.**
20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경상보조	1차	630	2023. 3. 16.
			2차	416	2023. 4. 20.
			3차	416	2023. 5. 18.
			4차	416	2023. 6. 15.
			5차	210	2023. 7. 27.
			6차	210	2023. 8. 10.
			7차	210	2023. 9. 21.
			8차	**210**	**2023. 10. 19.**
			9차	**210**	**2023. 11. 30.**
			10차	**180**	**2023. 12. 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출연금	1차	630	2023. 2. 28.
			2차	330	2023. 3. 9.

60) 동 사업의 정보통신사업진흥원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비목은 202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사업출연금으로 변경됨.

연도	기관	비목	차수	금액	교부일
			3차	471	2023. 4. 6.
			4차	468	2023. 7. 13.
			5차	408	2023. 10. 5.
20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경상보조	1차	600	2024. 3. 7.
			2차	1,100	2024. 4. 25.
			3차	600	2024. 7. 25.
			4차	**598**	**2024. 10. 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출연금	1차	1,159	2024. 1. 31.
			2차	1,519	2024. 4. 11.
			3차	964	2024. 7. 4.
			4차	365	2024. 10. 10.

주: 민간경상보조 교부금 중 4/4분기에 교부된 경우는 진하게 표시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년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마지막 교부(10차) 시점이 2023년 12월 14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4차 교부 시점이 2024년 10월 17일로 연례적으로 보조금의 교부 완료 시점이 4/4분기로 나타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61]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6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95.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17.1월 개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보조금 교부의 완료가 4분기에 이루어져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에 운영 중인 해외 IT운영센터의 운영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연내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 집행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금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례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지연하는 것은 문제로 판단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침을 준수하여 3분기까지 민간보조금의 교부가 완료되도록 하여 연례적으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등에 기관 직원인 주재관 수당 및 주택비 등 편성·집행 필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62])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63])는 해외 IT운영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 정규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해당 주재원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보험가입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 2020~2024년도 동안 동 사업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재원에 대한 수당 및 보험가입비 등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동 사업에서 주재원 등의 수당 집행 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0년도 3억 1,794만 원, 2021년도 3억 4,454만 원, 2024년도 5억 481만 원 등 동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재원 관련 수당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6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63) 정보통신산업진흥원(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해외 IT운영센터 근무 주재원의 수당 및 이전비 등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기관	수당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비	보험가입비	이전비	기타	합계
2020	KOTRA	0	0	0	0	0	0	0
	NIPA	160,661	35,048	108,794	6,132	5,342	1,961	317,938
2021	KOTRA	0	0	0	0	0	0	0
	NIPA	152,297	25,632	145,234	4,399	14,907	2,071	344,540
2022	KOTRA	0	0	0	0	0	0	0
	NIPA	172,002	26,803	190,803	0	14,922	4,078	408,608
2023	KOTRA	0	0	0	0	0	0	0
	NIPA	180,042	24,906	198,981	0	0	1,710	405,639
2024	KOTRA	0	0	0	0	0	0	0
	NIPA	182,118	23,848	238,207	6,704	52,664	1,266	504,80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이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동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관 직원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및 보험가입비 등을 집행하는 것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64]에 따라 준용되는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65][66]에 따르면,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인건비로 판단하고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67]에 따르면 가족수당, 주택수당,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

---

6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6.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과의 관계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출연기관(비공공기관 포함)은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65)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p. 4.
1. 인건비
(1) 총인건비
가. 적용대상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다.
ㅇ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ㅇ 그 밖에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

66)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부터 기존에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관련 지침을 '운용지침'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음.

67)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규 직원의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 시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보험가입비 등은 동 사업의 사업비가 아닌 기관 운영 인건비에 편성·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재원의 수당 및 이전비 등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사업	수당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비	보험가입비	이전비	기타	합계
2020	기관운영 인건비	135,214	0	160,333	16,103	0	0	311,650
2021	기관운영 인건비	134,971	0	164,917	14,769	0	0	314,657
2022	기관운영 인건비	141,478	0	170,850	18,867	0	0	331,195
2023	기관운영 인건비	137,333	0	165,564	15,295	0	0	318,192
2024	기관운영 인건비	141,771	0	169,925	15,576	0	0	327,2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반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에는 지침을 준수하여 해외 IT운영센터에 파견되는 주재원의 수당 및 보험가입비 등을 동 사업이 아닌 총인건비에 포함되는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매년 집행하고 있음.

- 2024년도 기준으로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재외근무수당 1억 4,177만 원, 주택비 1억 6,993만 원, 보험가입비 1,558만 원을 합한 3억 2,727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예산운용 지침을 준수하여 해외 IT운영센터에 파견된 주재원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동 사업의 사업비가 아닌 기관 운영 인건비에서 편성·집행하여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

(5)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1232-301): 글로벌 ICT 포털(GIP[68]) 운영 사업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 중 글로벌 ICT 포털(www.globalict.kr)의 시스템 유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가) 사업 개요

○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ICT 포털(GIP)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지 전문가와의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ICT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뒷받침하려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계획액 23억 7,1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위탁되어 집행되었음.

68) www.globalict.kr

<2024년도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2,371	2,371	-	-	2,371	2,371	-	-	1,878
○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335	335	-	-	335	335	-	-	335
○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	502	502	-	-	502	502	-	-	380
○ 융합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강화	986	986	-	-	986	986	-	-	725
○ ICT 통상 대응 지원	548	548	-	-	548	548	-	-	438
□ 세출예산비목	2,371	2,371	-	-	2,371	2,371	-	-	1,878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371	2,371	-	-	2,371	2,371	-	-	-
○ 사업출연금 (350-02)	-	-	-	-	-	-	-	-	1,87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에 3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에 5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융합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강화에 9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ICT 통상 대응 지원에 5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 글로벌 정보 ICT 포털 사업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인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 사업에는 글로벌 ICT 포털(www.globalict.kr)의 시스템 유지 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ICT 포털은, 글로벌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일일·주간·월간 동향 리포트, 40여 개국 20여 품목에 대한 시장 보고서, 해외 진출 전략 가이드, 전문가 오피니언 등 다양한 해외 진출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 사업이 비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점이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69]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적용대상으로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

6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3
7. 정보화 사업
1. 적용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

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해외시장 지원 시스템인 글로벌 ICT 포털의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ICT 포털의 시스템 유지·운영 사업을 '정보화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업 분류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특히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타 부처는 해외시장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의 고도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의 유지관리 사업 및 환경부의 해외환경통합정보망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음.

<타 부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의 정보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처	정보시스템	2024 예산액	사업내용	분류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www.k-seafoodtrade.kr/)	1,280	온라인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고도화	정보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www.kr.gobizkorea.com)	792	국제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글로벌 B2B 전자 마켓 플레이스 기능을 하는 시스템 유지관리 등	
환경부	해외환경통합정보망 (www.konetic.or.kr)	485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외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해외환경통합정보망 유지관리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동 포털의 경우 정보화 사업의 절차인 유사 중복 방지, EA 관리시스템 등록 등의 정보화 사업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정보화 사업으로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 중 글로벌 ICT 포털(www.globalict.kr)의 시스템 유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비 상 안 전 기 획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5

【 일반회계 】

(1)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7035-301): 법령을 준수한 국회 예산 확정 이후에 다음연도 계약 체결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헌법과 법률상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다음연도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사업은 디지털서비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관리체계 마련 및 안전점검 수행, 실시간 관제를 통한 재난상황 대응,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개발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출연금, 일반용역비 등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액 52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2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8,200만 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 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5,282	5,282	-	-	5,282	5,200	-	82	4,144
○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위탁용역 수행	1,007	1,007	-	-	1,007	926	-	81	823
○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 기반 구축·운영	3,565	3,565	-	-	3,565	3,565	-	-	2,766
○ 통신재난관리 운영지원	30	30	-	-	30	29	-	1	24
○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00	100	-	-	100	100	-	-	100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580	580	-	-	580	580	-	-	431
□ 세출예산비목	5,282	5,282	-	-	5,282	5,200	-	82	4,144
○ 일반용역비 (210-14)	1,007	1,007	-	-	1,007	926	-	81	823
○ 사업출연금 (350-02)	3,565	3,565	-	-	3,565	3,565	-	-	2,766
○ 민간경상보조 (320-01)	580	580	-	-	580	580	-	-	431
○ 관리용역비 (210-15)	100	100	-	-	100	100	-	-	100
○ 그 외	30	30	-	-	30	29	-	1	2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에 10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 기

반 구축·운영 내역사업에 35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 지원에 5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 **법령을 준수한 국회 예산 확정 이후에 다음연도 계약 체결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서 2024년 10월 24일 '2025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 1억 원 규모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을 공고하였음.

<2025년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계약명	계약 기간	예산	계약 금액	계약 방식
2025년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2025년	100	99.9	수의

자료: 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해당 계약공고는 단독응찰로 인해 개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2월 9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2025년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업체와 계약금액 9,99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고금 관리법」 및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부합하지 않게, 2025년도 예산이 확정(2025년 12월 10일 국회 의결)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수행될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2024년 10월 24일에 계약 공고하고, 2024년 12월 9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었음.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70]에 따르면, 해당연도의 예산 집행은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할 필요성이 있으며,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정부 부처가 2025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71]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다만, 이러한 국회의 심의권에도 불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72]에 따르면, ① 임차계약, 운송

70)「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71)「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7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보관계약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중단이 불가능한 계약’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② ‘해당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해당 계약은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중단하기 어려운 계약’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2025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예산 확보 이전에 체결된 용역 계약으로서,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헌법과 법률상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다음연도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 초 원 천
연 구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36

【 일반회계 】

(1) 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R&D)(1139-437): 예산편성시 계획했던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변경에 주의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 이후 협약 체결과정에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시 계획하였던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급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R&D)”은 해외반도체 첨단팹과 국내 공공팹의 연계활용 협력으로 공동연구, 소부장 실증평가, 인턴십 및 기술인력교류 등을 통한 글로벌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협력거점 마련을 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25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소부장 실증평가”는 해외 첨단 반도체팹 설비를 활용한 국내 소부장 관련기업의 반도체 PR 등 소재·부품·장비 성능·실증평가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7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나노종합기술원에 출연하여 집행하고 있고, 나노종합기술원은 2024년도 예산액 7억 5,000만원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4년도 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R&D)	2,520	2,520	2,520	2,520	-	2,520	2,520	-	-	2,900
○소부장 실증평가	750	750	750	750	-	750	750	-	-	2,063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750	750	750	750	-	750	750	-	-	2,06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예산편성시 계획했던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변경에 주의할 필요

○ 내역사업인 “소부장 실증평가”는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을 해외 첨단 반도체팹과 연계하여 소부장 기업의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신규사업이며, 출연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이 공모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계획을 보면, “소부장 실증평가”의 경우, 10개 내외 과제에 대하여 1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총 연구기간은 12개월, 2024년도 연구기간은 과제 공모 등의 기간을 고려한 6개월임.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사업기간 및 규모>

구 분	상호 간 반도체 팹을 활용한 첨단 원천기술 공동R&D	해외 첨단 인프라 공정 및 플랫폼 기술 적용 소부장 실증평가	국내 우수대학(원) 인턴쉽, 인프라 기술인력 교류
과제 수	10개 내외	**10개 내외**	1개 내외
당해연도 연구비	200백만원 내외/년	**150백만원 내외/년**	1,540백만원/6개월
총 연구기간	3년(2+1년) 이내	**12개월**	6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4. 7. 1. ~ 2024. 12. 31.(6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당 계획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은 10개 과제에 대하여 6개월 연구기간만을 반영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73]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지원기준·단가, 사업 물량 등을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연구과제에 대한 총 연구기간 및 연구기간에 따른 예산 지원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7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24.1., p.13.

○ 그런데, 2024년도 “소부장 실증평가” 사업의 과제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총 연구기간 12개월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던 계획과 달리, 총 연구기간은 17~18개월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연구비도 2억 2,5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10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9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연구기간은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7개월이며, 전체 연구비 2억 2,500만원 중 2024년도에 1/3에 해당하는 7,500만원이 지급되었음.

- 또한, 10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2024년 11월에, 나머지 3개 과제는 12월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각각의 연구기간은 18개월이며, 전체 연구비 2억 2,500만원 중 1/3에 해당하는 7,500만원이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되었음.

<2024년도 “소부장 실증평가” 과제 협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협약일	연구 기간	전체 연구비	24년도 지급액
1	반도체 sub 10nm 미세패턴 형성을 위한 코팅 방식의 금속 클러스터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	2024.9.27.	2024.8.1.~ 2025.12.31.(17개월)	225	75
2	3D Device향 차세대 Selective Wet Etch 공정 설비 개발	2024.9.27.	2024.8.1.~ 2025.12.31.(17개월)	225	75
3	초미세패턴용 고감도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	2024.9.27.	2024.8.1.~ 2025.12.31.(17개월)	225	75

구분	과제명	협약일	연구 기간	전체 연구비	24년도 지급액
4	반도체 미세패턴 적용을 위한 극자외선리소그래피(EUV) 포토레지스트 평가	2024.9.26.	2024.8.1.~ 2025.12.31.(17개월)	225	75
5	반도체 공정 결함 광학검사 장비용 결함 표준샘플 제작	2024.11.29.	2024.10.1.~ 2026.3.31.(18개월)	225	75
6	10nm 이하 초미세 패턴 형성을 위한 EUV 하드마스크 공정 기술 개발	2024.11.27.	2024.10.1.~ 2026.3.31.(18개월)	225	75
7	EUV 초미세 나노팹 공정 기반 초고효율 3D SERS 센서 개발	2024.11.27.	2024.10.1.~ 2026.3.31.(18개월)	225	75
8	2.5D패키지 실리콘 인터포저 접합용 초미세 솔더 도전 접착제 개발 및 성능평가	2024.12.19.	2024.11.1.~ 2026.4.30.(18개월)	225	75
9	300mm Wafer to Wafeer 하이브리드 본딩 용 Plasma Treatment 설비 개발	2024.12.19.	2024.11.1.~ 2026.4.30.(18개월)	225	75
10	차세대 3D NAND 적용을 위한 isotropic dry selective removal 공정 개발	2024.12.19.	2024.11.1.~ 2026.4.30.(18개월)	225	7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와 같은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변경은 이루어진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를 거쳤더라도 사전에 각 과제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 이후 협약 체결과정에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시 계획하였던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급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원천기술 국제협력개발사업(R&D)(1139-438): 연구개발과제의 비용 분담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협약 미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비용 분담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 사업(R&D)”는 3대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68억 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반도체 R&D 협력센터”는 반도체 R&D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집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도 예산액 10억원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4년도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R&D)	6,809	6,809	6,809	6,809	-	6,809	6,809	-	-	11,586
○반도체 R&D 협력센터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800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8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연구개발과제의 비용 분담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협약 미체결

○ 동 사업 내역사업인 “반도체 R&D 협력센터”는 반도체 분야의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반도체 R&D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및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2개 과제에 대하여 각각 5억원이 편성·집행되었음.

○ 2024년 두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살펴보면, 미국과 EU로 권역을 나누어 각각 “한-미 반도체 R&D협력센터”, “한-EU 반도체 R&D 협력 센터”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었음.

- 과제 공모 결과, “한-미 반도체 R&D협력센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EU 반도체 R&D 협력 센터”는 사단법인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각각 수행하게 되었음.

<2024년도 “반도체 R&D 협력센터” 과제의 1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과제명	1단계(2024.8.1.~2027.1.31.)	
	목표	내용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사업 아이템 발굴·기획 추진 등 협력 가교 역할을 하는 **「한-미 반도체 R&D 협력 센터」 구축 및 안정적 운영**	**1. 국내와 미국 권역 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확대 및 관련 행사 기획/지원** **2. 미국 권역 내 기술·산업·정책 등 반도체 기술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대외협력 업무 지원** 3. 반도체 분야 한-미 국제협력 신규 아이템(R&D, 인력, 인프라 등) 발굴 및 기획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한-EU 반도체 R&D 협력 센터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한국과 EU 간의 반도체 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 센터 기능: 국내·외 협력 주체(정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등) 간에 관련 정보·인력 등을 제공·매개하여 반도체 R&D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기능적·공간적 협력 거점	**○ 국내와 EU 권역 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확대 및 관련 행사 기획·지원** - 산업 생태계 구축: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혁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EU 권역 내 주요국의 기술·산업·정책 등 반도체 기술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대외협력 업무 지원** - 글로벌 시장 확장: 양국 기업이 서로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과제명	1단계(2024.8.1.~2027.1.31.)	
	목표	내용
	- **센터 역할: EU(유럽연합)와 반도체 원천기술 공동개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 협력 가교 역할**	- 정책 조화: 양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규제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협력 촉진 **ㅇ 반도체 분야 한-EU 국제 협력 신규 아이템(R&D, 인력 인프라 등) 발굴 및 기획** - 기술 혁신 촉진: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여 인재 부족 문제 해결

자료: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연구개발계획서

○ 두 과제의 실제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은 5억원 중 4억 4,200만원(88.4%)가 집행되었으나,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은 5억원 중 700만원(1.3%)만 집행되었음.

-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은 2025년 6월까지도 1억 2,200만원(24.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집행부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 연구자 포럼 일정 조정 및 한-미 반도체 디지털플랫폼 구축 완료시점 변경에 따라 일부 연구개발비는 202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2024년도 “반도체 R&D 협력센터” 과제 협약 현황>

과제명	2024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실실집행액 (실실집행률)		
				24년 12월 기준	25년 6월 기준	
한-미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 운영	500	500 (100%)	500 (100%)	7 (1.3%)	122 (24.3%)	미국 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 연구자 포럼 일정 조정 및 한-미 반도체 디지털플랫폼 구축 완료시점 변경에 따라, 일부 연구개발비는 2025년(2차년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 내 집행 완료될 예정
한-EU 반도체 R&D 협력센터 구축·운영	500	500 (100%)	500 (100%)	442 (88.4%)	442 (88.4%)	현재 기준 실실집행률 88.4%

주: 집행액(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고, 실집행액(실집행률)은 출연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받은 교부액 대비 집행액이며, 실실집행액(실실집행률)은 각 과제별 과제수행기관이 지급받은 금액 대비 집행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렇게 두 과제는 각각 공모에 따라 별개의 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이 수행하는 것처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단일화하여 통합 구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1월 27일 “반도체 유관기관 교류회”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R&D 웹사이트 단일화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논의 결과 EU 센터 주도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비용에 대해서도 각각 센터에서 분담하되, 정책센터의 sub-site 구축 비용은 EU센터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결정되었음.

<반도체 유관기관 교류회 논의 내용 중 플랫폼 구축 관련 내용>

구 분	플랫폼 구축 협력 방안 논의 내용
제안 내용	**(발표 : 한-미 R&D협력센터, 한-EU R&D협력센터)** **ㅇ 글로벌 반도체 R&D 협력센터 웹사이트 단일화** - (사이트 제작 총괄) 한-EU 센터 - (구성 및 운영) 사이트 내 첫 페이지에서 미국, EU, 정책센터 sub-site로 이동하여 정보 페이지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각 거점별 sub 페이지는 센터별 별도 관리 - (비용) 한미/EU 센터 절반 부담을 기본으로 하되, sub사이트별 기능 구현 또는 개선 비용은 각자 부담
확정 내용	**ㅇ EU센터 주도로 자료 공유 및 협력 공간 마련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추진 예정** - (비용) 미/EU 센터에서 분담하되, 정책센터의 sub-site 구축 비용은 EU센터에서 부담하기로 함

주: 동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미 R&D 협력센터, 한-EU R&D 협력센터 등이 참석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74]는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

7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75]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큰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변경·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연구개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법령에 따를 때, 한-미 R&D 협력센터와 한-EU R&D 협력센터가 디지털 플랫폼을 단일화하여 구축하기로 한 것은,

①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 부담에 대해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 ② 향후 각각 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을 실시할 때에도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예산 집행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출연기관인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 변경협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변경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계획서상 목표는 ‘반도체 분야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이며, 이에 대한 연구내용으로

당해 센터는 ‘국내와 미국 권역 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과업이 있으므로 변경 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 구축하여도 연구개발 내용 본질의 변경이나 왜곡 없이 충실히 과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통합 구축은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협력하는 권역 외에도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예산사업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규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협약서 및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대해석하거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비용 분담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1159-425): 구축형 R&D사업을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연구형 R&D 사업으로 편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은 연구·산업 현장의 거대 계산,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에 핵심 연구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81억 8,3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18,183	18,183	-	-	18,183	18,183	-	-	11,194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360-04)	8,521	8,521	-	-	8,521	8,521 [8,521]	8,521	8,521 [8,521]	-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750	750	-	-	9,662	9,662 [9,662]	9,662	9,662 [9,662]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구축형R&D사업을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연구형 R&D 사업으로 편성

○ 세부사업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슈퍼컴 6호기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2024년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슈퍼컴 6호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세부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2024년에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각 184억 2,300만원, 96억 6,200만원이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집행되었고, 2024년부터 6호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으로 편성·집행되었음.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 고도화 사업 비목 현황 및 편성(안)>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고
시스템 구축	6호기 시스템	(360-04)	-	8,521	11,194	67,417	
	기반시설	(360-05)	18,423	9,662	-	-	구축 완료
최적 운영	상용SW	(360-05)	-	-	-	1,014	
합 계			18,423	18,183	11,194	68,43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76]은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구개발장비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예산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예산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하도록 구분하고 있음.

○ 이러한 구분에 따를 때 2023년, 2024년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용도로 편성된 예산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 보다는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2024년에 집행한 슈퍼컴 6호기 기반시설(수배전, 냉각 등) 구축 예산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로 편성함이 적절하나, 2022년 예산 요구 당시 착오로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만 사업추진심사의 대상이 됨.

76)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2023.5., p.391..

○ 이에 따라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비목인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와 구축형이 아닌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의 구분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1138-401):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과제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로 인한 과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은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3,042억 9,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국가전임상시험지원체계구축”는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절차인 전임상시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운영 및 영장류 시험법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9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집행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도 예산액 90억원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304,292	304,292	304,292							361,072
○국가전임상시험 지원체계구축	9,000	9,000	-	9,000	-	9,000	9,000	-	-	9,000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9,000	9,000	-	9,000	-	9,000	9,000	-	-	9,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절

○ 내역사업 “국가전임상지원체계구축사업”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운영 및 영장류 시험법 마련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교부 및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79억 3,400만원, 2023년에 116억 1,600만원, 2024년에 87억 6,5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전임상지원체계구축사업 2022~2025년 출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액	교부현액	집행액	이월액
2022년	12,200	12,200	4,267	7,934
2023년	13,300	21,234	9,633	11,616
2024년	9,000	20,616	11,337	8,765
2025년	9,000	17,765	3,523	-

주:2025년 7월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는 당초 1년차, 2년차인 2022년, 2023년에 ABL3 시설을 증축하고 증축된 공간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지연되면서, 시설 증축 예산 63억원(2022년 30억원, 2023년 33억원)과 장비비 21억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임.

- ABL3(Animal Biosafety Level 3)란 제3 위험군[77]의 병원체 또는 이를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감염성 물질을 실험동물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시설로, 생물안전장비 및 물리적 밀폐력을 보유한 연구시설을 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BL3 시설 건축이 지연된 것은 건축 전 사전 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委 심의('22.7~'23.2),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23.2~5) 등)와 설계공고가 유찰되었기 때문임.

77) 감염되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체(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 그런데, 시설증축 지연 사유 중 건축 전 사전 행정절차인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등은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1,2년차에 ABL3 시설을 증축하고, 3년차부터 증축 시설의 시설유지비로 편성하였던 예산(3.5억원)은 기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ABL3 시설을 활용하는 비용(2.7억원)을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차액 약 1억원은 전임상시험 지원에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과제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로 인한 과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1138-417): 중단과제 관리 미흡 및 과도하게 낮은 성과목표치 설정 부적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은 범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차원에서 연구개발부터 임상·인허가·제품화의 전주기를 지원하여, 글로벌 제품 개발,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572억 2,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장 진입단계 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3억 3,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집

행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도 예산액 43억 3,400만원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4년도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 개발사업(R&D)	57,226	57,226	57,226							57,226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4,334	4,334	-	4,334	-	4,334	4,334	-	-	1,900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4,334	4,334	-	4,334	-	4,334	4,334	-	-	1,9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중단 과제에 대한 관리 미흡 문제

○ 동 사업 내역사업인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에서 실시한 임상과제 중 2022년에 시작하여 2024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1개 과제가 2024년에 중단되었음.

○ 해당 과제는 “신개념 비침습 혈류역학 모니터의 미국 FDA 510(k) 인증을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으로, 2022년에 시작하면서 3개

부처(과기부, 복지부, 산업부)가 2022년에 5억 2,500만원, 2023년에 7억원, 2024년에 7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런데, 2024년 3월에 연구개발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78]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년 4월에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음.

-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 사유는 당초 계획하였던 국외 임상시험이 취소되고, 이후 대체 수행하려던 임상시험이 과도하게 지연되었으며, 기업 경영이 악화되어 인력이 부족하여, 국외 임상시험을 통한 FDA 인증 등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7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후 2024년 5월 20일에 특별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연구과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구중단에 따른 제재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동안 연구참여를 제한하기로 하였음.

- 주관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전액 반납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제4호[79] 및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2년 간 연구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나 감경되었음.

○ 해당 중단과제에 대한 출연금의 연구개발기관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집행률은 21.5%, 2023년 집행률은 22.7%로, 2024년 종료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6항은 연구개발기관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 연도별 집행액은 2022년 1억 7,900만원(21.5%), 2023년 2억 5,200만원(22.7%)임.

---

7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3개 부처는 해당 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당초의 협약대로 2024년까지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였음.

- 해당 중단과제에 대한 출연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협약서에 체결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정부지원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년에 1억 7,500만원, 2023년, 2024년에 각각 2억 3,300만원을 교부하였음.

<중단과제에 대한 출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교부금	집행액	집행률	교부금	집행액	집행률	교부금	집행액	집행률
정부지원금	과기부	175	38	21.5	233	53	22.7	233	-	-
	3개 부처	525	113	21.5	700	159	22.7	700	-	-
민자		131	28	21.3	175	40	22.7	233	-	-
합 계		656	141	21.5	875	199	22.7	933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국 2024년에 연구개발기관이 자발적으로 중단 요청을 하면서, 특별평가를 통해 해당 과제는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출연금 반환과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음.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제1호[80]는 국가연구개발사업

8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의 효율적인 관리를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1항[81]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2022년, 2023년의 연구개발기관 출연금 집행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2024년도 출연금을 교부하기보다는 해당 과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8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과도하게 낮은 성과목표치 설정 부적절

○ 동 사업 내역사업인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는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최근 성과달성도를 보면 2021년 249%, 2022년 139%, 2023년 203%, 2024년 152%임.

○ 동 성과지표의 성과 목표치를 살펴보면, 2020년에 2018년~2020년 동안 의료기기 품목인증허가 성공률의 가중평균인 25.6%의 2배인 52%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후, 매년 1.5%p씩 성과목표를 상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성과목표치는 기계적으로 전년대비 1.5%p 상향한 2021년 53.3, 2022년 55, 2023년 56.5, 2024년 58, 2025년 59.5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런데 최근 실적치를 살펴보면, 2021년 133.3, 2022년 76.2, 2023년 114.8, 2024년 88.1로, 2025년에 설정한 목표치보다 훨씬 상향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의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 (단위: %)	목표	53.5	55	56.5	58	59.5	3개년('18-'20년) 의료기기 품목인증허가 성공률의 가중평균(25.61%)의 2배인 52%를 '20년 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1.5%p 상향하여 산출	의료기기 품목신고 인증허가 성공률= 실제 제품화 과제수/제품화 대상과제 수	신고증, 인증서, 허가증, 공인시험성적서
	실적	133.3	76.2	114.8	88.1	-			
	달성도	249%	139%	203%	152%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의 목표치도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 실적이 2020년보다 월등히 높아진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재의 목표치를 초과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1640-300):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중 2가지 이상 비목을 연례적으로 동시 편성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은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과학-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을 통해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28억 6,800만원(예산액 333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94억 9,300만원) 중 562억 700만원(89.4%)을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기초과학연구원건립”은 국내 기초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614억 9,500만원(예산액 320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94억 9,300만원) 중 548억 3,400만원(89.2%)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33,375	33,375	29,493	-	62,868	56,207	6,660	1	85,078
○기초과학연구원건립	32,002	32,002	29,493	-	61,495	54,834	6,660	1	71,725
□ 세출예산비목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210	-	210	210	-	-	-
○ 실시설계비(420-02)	-	-	589	-	589	588	-	1	34
○ 공사비(420-03)	30,251	30,251	27,331	-	57,582	52,035	5,548	-	69,742
○ 감리비(420-04)	1,661	1,661	1,357	-	3,018	1,943	1,075	-	1,822
○ 사설부대비(420-05)	90	90	6	-	96	58	37	-	1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건립”은 기초과학연구원의 본원 및 UNIST 캠퍼스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원 2차 건립을 위해 1,273억 1,100만원(2020년~2025년), UNIST 캠퍼스 건립을 위해 464억 1,100만원(2022년~2027년)의 총사업비가 각각 소요될 예정임.

○ 그런데, 2023년부터 두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이월액이 294억 9,300만원, 2024년 66억 6,000만원, 2025년 5월 기준 집행잔액이 485억 1,900만원으로 연례적인 이월 및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원 2차에서 2023년에 286억 8,800만원의 이월액(예산현액 대비 80.9%)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도 66억 6,000만원(예산현액 대비 11.0%)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 종료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말 기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37억 1,500만원인데 이는 전체 총사업비 대비 26.5%에 해당함.

- UNIST 캠퍼스의 경우에도 2023년에 예산현액 18억 9,700만원 중 8억 500만원(42.4%)가 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예산편성 없이 이월금액만 집행하였으며, 2025년 5월 기준 148억 1,100만원 중 800만원만 집행된 상황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공사비 세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목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A-B)
본원 2차	127,311 ('20~'25)	기본조사 설계비	-	800	800	-	-	-	-	-	-	-	-	-
		실시 설계비	-	-	-	-	-	-	-	-	-	-	-	-
		공사비	30,928	32,381	5,050	27,331	30,251	57,582	52,034	5,548	55,731	61,279	28,645	32,634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목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A-B)
		감리비	1,584	2,154	797	1,357	1,661	3,018	1,943	1,075	1,081	2,156	1,176	980
		시설부대비	66	107	107	-	90	90	53	37	102	139	37	102
		소 계	32,578	35,442	6,754	28,688	32,002	60,690	54,030	6,660	56,914	63,574	29,858	33,716
UNIST 캠퍼스	46,411 ('22~'27)	기본조사설계비	288	641	431	210	-	210	210	-	-	-	-	-
		실시설계비	589	1,236	380	589	-	589	588	-	34	34	8	26
		공사비	-	-	-	-	-	-	-	-	14,011	14,011	-	-
		감리비	-	-	-	-	-	-	-	-	741	741	-	-
		시설부대비	6	20	14	6	-	6	6	-	25	25	-	-
		소 계	883	1,897	825	805	0	805	804	0	14,811	14,811	8	14,803
합 계			33,461	37,339	7,579	29,493	32,002	61,495	54,834	6,660	71,725	78,385	29,866	48,519

주: 2025년 5월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예산안 편성 지침」[82]은 이렇게 공사상황에 따라 연례적인 이월 및 집행부진이 나타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 계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건립" 공사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UNIST 캠퍼스는 2023년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를, 2025년에는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동시 편성하는 등 2가지 이상의 비목을 동시 편성하였음.

8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2023.5., p.2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9조 제1항[83] 단서에 따라 기재부 협의를 통해 2단계 이상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이·전용 및 이월 등 유연한 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39조제1항은 단서에서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단서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중 2가지 이상 비목을 연례적으로 동시 편성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83)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공 공 융 합
연 구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7

6788-5229

【 일반회계 】

(1)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R&D)(1139-423):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를 위한 장비 도입 계획 점검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협의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 도입 계획과 발주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의 추가적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 후 이뤄지는 실증연구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R&D)’사업은 극한소재[84]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실증 R&D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현액 8억 2,000만원을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은 8억 2,000만원을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하 “재료연”)에 전액 교부(실집행률 100.0%)하였음.

84) 초고온(2,000℃↑), 극저온(-253℃↓), 특정극한 등 극한의 환경・조건에서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로서, 우주항공, 액체수소 저장 등에 활용되는 국가전략소재를 말함

<2024회계연도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피출연기관(한국연구재단)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	820	820	820	820	-	820	820	-	-	2,000
- 연구개발건축비(360-03)	820	820	820	820	-	820	820	-	-	2,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다만, 재료연은 전년도에 이월된 27억 7,000만원 중 1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원은 재이월하였으며, '24년에 교부받은 8억 2,0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년도로 이월된 17억원 중 재이월된 14억원은 실시설계 미실시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설계·조사·측량 지연으로 '24년 예산현액 중 3억원이 추가적으로 이월되었음.

<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결산현황 (한국재료연구원) >

(단위: 백만원, %)

2023년				2024년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3,000	3,000	230	2,770	2,770	820	3,590	1,890	52.6	1,7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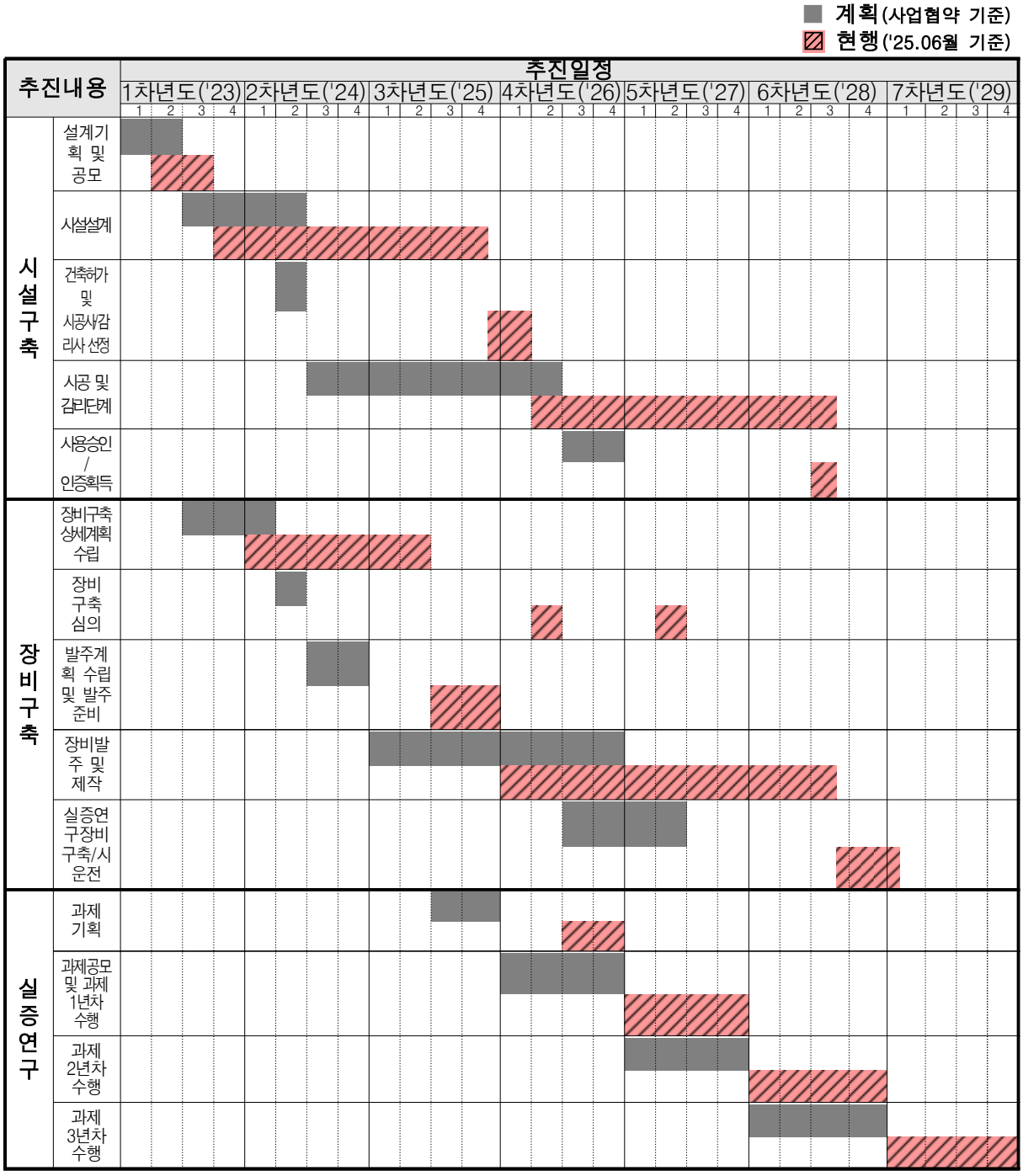
○ 총사업비가 2,737억 3,800만원인 동 사업은 '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예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6년까지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3년('26~'28년) 동안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재료연은 '23년 6월에 설계용역 계약 후 '24년 상반기 내로 설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장 선임이 지연되고 설계공고가 4개월 지연되면서 '23년 10월에 설계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졌음.

- '24년 12월 기본설계, 중간설계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는 실증연구장비 조정 심의와 총사업비 협의가 종료된 '25년 4월에 착수하였는데, 실시설계 종료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25년 말로 예상됨.

- 설계 단계에서의 사업 지연은 내부 행정절차 등의 부실한 관리에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단계별 설계적정성검토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등 사업 계획 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연도별 사업추진 상세일정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장비 도입·구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장비 도입 및 발주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정한 성과지표 중 장비 구축 공정률 목표에 따르면 '25년 1월부터 장비 구축이 진행되어야 하나, 설계 단계의 지연으로 인해 '25년 6월 말 기준 장비 도입심의와 계약공고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장비 구축 공정률 연도별 목표치 >

소요기간(개월)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계
장비 구축 (42개월)	장비구축	-	-	12	12	12	6	42
	비중(%)	-	-	28.6	28.6	28.6	14.3	100.0
	(누적)	-	-	(28.6)	(57.1)	(85.7)	(100)	(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또한, 장비 구축을 위하여 설계단계별로 장비구축 적정성검토 후 운영위원회에서 실증연구장비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연구장비[85]가 도입 제외된 바 있는데, 구축 예정 장비 선정 시 기술환경변화, 타 기관과의 장비 중복성, 이용률 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했다고 보임.

○ 후속 실증연구 착수를 위해 장비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가 적기에 도입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5) 수소분위기 피로시험기, 고하중 진동시험기 등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장비 현황과 도입 장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비 도입·발주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장비 도입심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실증연구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 협의 필요

○ 동 사업은 시설·장비 구축과 실증연구가 결합된 사업으로서 실증연구 또한 사업기간('23~'28)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건설공사 착공이 '26년 4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준공 및 장비도입 시점은 '28년 하반기로 예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지연에 따라 '27년에 R&D 과제 공모 후 곧바로 1차년도 과제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극한소재실증연구과제 추진 계획 >

과제기획	과제공모	1차년도	2차년도
'26년 하반기(예정)	'27년 상반기	2027년도	2028년도
실증 연구 시급성과 전략성, 필요성 등을 감안한 연구과제의 도출 ▶	과제 공모 및 선정 평가실시, 심의·확정 ▶	실증연구 단계별 상세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모니터링, 성과조사분석, 성과평가, 성과 확산을 추진 ▶	실증연구 단계별 상세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모니터링, 성과조사분석, 성과평가, 성과 확산을 추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당초 계획에 따르면 극한소재 기술 자립과 선도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에 3년이 필요하나, 과제 기획·공모·선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4~6개월 이상임을 고려할 때 실증연구과제에 현실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미만일 것으로 보임.

- 수정된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에 따르면 사업 지연에 따라 '27~'28년에 연구개발비 편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실효적인 실증연구 수행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로 보기는 어려움.

<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 [예타 결과 기준('22년 8월)]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고	공사비		16,320	32,630	16,320			**65,270**
	장비비				97,330	44,160		**141,490**
	시설부대경비	2,770	3,210	4,310	2,180			**12,470**
	연구개발비				**14,030**	**14,030**	**6,440**	**34,500**
	기타(운영비)	230	520	660	780	970	1,160	**4,320**
	합계	**3,000**	**20,050**	**37,600**	**130,640**	**59,170**	**7,600**	**258,0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 [현행 기준('25년 6월)]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고	공사비			300	28,529	20,592	32,948	**82,369**
	장비비				20,063	72,677	53,391	**146,131**
	시설부대경비	2,770	300	372	1,393	1,272	311	**6,418**
	연구개발비					**7,008**	**27,492**	**34,500**
	기타(운영비)	230	520	1,328	1,328	457	457	**4,320**
	합계	**3,000**	**820**	**2,000**	**51,313**	**102,006**	**114,599**	**273,73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원활한 실증연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2) 민군기술협력(R&D)(1158-442):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체 적극 활용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과 같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민군기술협력(R&D)’사업은 군사 부문(군)과 비군사 부문(민) 간 기술협력,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①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②민·군 협력으로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과 이를 위한 ③기획평가관리비로 구성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현액 19억 6,200만원 중 13억 4,600만원을 민군협력진흥원[86]에 출연(집행률 68.6%)하였고, 6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86) ‘민군협력진흥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기관으로서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의 개발과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함.

<2024회계연도 민군기술협력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민군겸용기술개발	1,308	1,308	-	1,308	1,308 (1,308)	100.0 (100.0)	-	-	1,924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308	1,308	-	1,308	1,308 (1,308)	100.0 (100.0)	-	-	1,924
○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616	616	-	616	0 (0)	0.0 (0.0)	-	616	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616	616	-	616	0 (0)	0.0 (0.0)	-	616	0
○ 기획/평가/관리	38	38	-	38	38 (36)	100.0 (94.7)	-	-	38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38	38	-	38	38 (36)	100.0 (94.7)	-	-	38
합 계	1,962	1,962	-	1,962	1,346 (1,308)	68.6 (66.7)	-	616	1,96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나) 검토의견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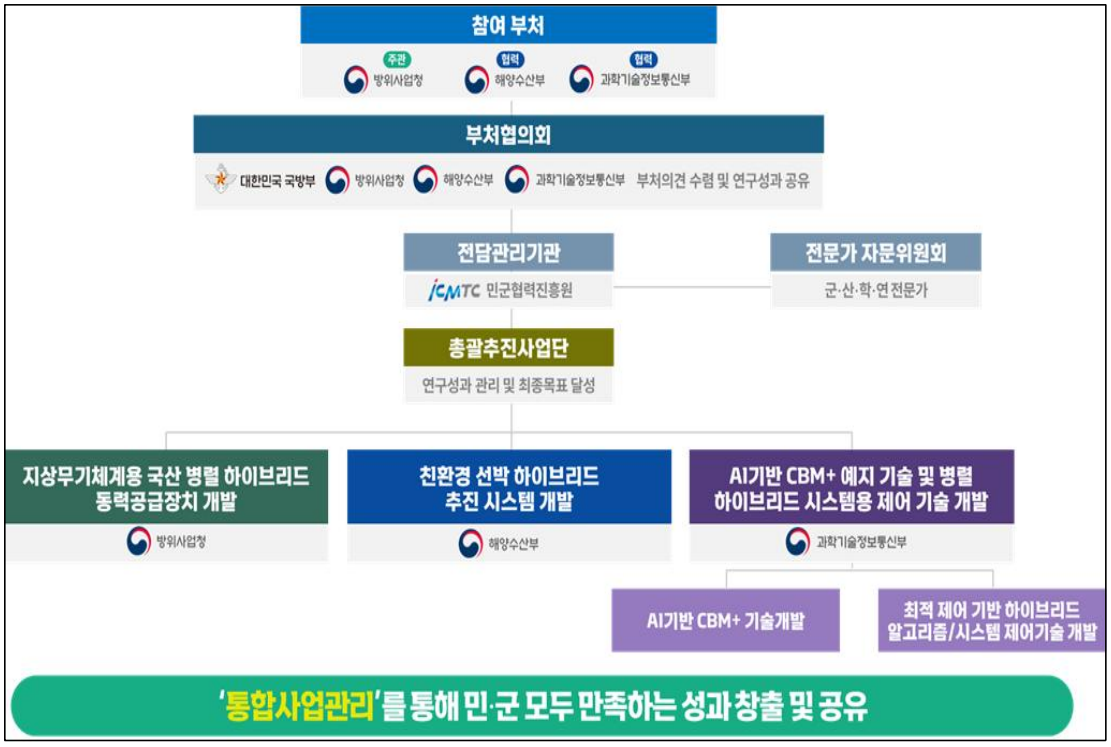
○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내역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이며,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민(民)과 군(軍)이 활용 가능한 고출력 병렬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및 고신뢰도 CBM+* 기술 개발
사업기간		’24~’29
	방위사업청	’24~’29
	해양수산부	’24~’29
	과기정통부	’24~’29
과제협약기간		’24~’29
총사업비		부처 공동 437.2억원 (국고 437.2억원)
	방위사업청	205.8억원(국고 205.8억원) * ‘22년까지 기투자액 : -
	해양수산부	132.0억원(국고 132.0억원) * ‘22년까지 기투자액 : -
	과기정통부	99.4억원(국고 99.4억원) * ‘22년까지 기투자액 : -
사업규모		
	방위사업청	1개 내역사업, 3개 과제
	해양수산부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과기정통부	1개 내역사업, 2개 과제
지원조건		출연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관리형(민군협력진흥원)
사업단		해당없음
수행기관		미정
사업특성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사업유형		기초연구( ), 응용연구(O), 개발연구(O), 연구시설·장비( ), 인력양성( ), 연구기관지원( ), 표준화·인증 등 기타( )
다부처협업유형		다부처특별위원회(O), 예(사)타( ), 다부처특별위원회外*( )

자료: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요구서

- 다부처 공동추진 R&D 예산 편성 절차를 살펴보면, ①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 다부처사업추진위원회(이하 “다부처사추위”)를 통해 ‘24년에 착수할 후보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며, ②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신규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음.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자료: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요구서

○ 각 부처에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방위사업청은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동 내역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군기술협력(R&D)”사업으로 19억 6,200만원, 해양수산부는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패키지핵심기술(R&D)” 사업의 예산 2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87]

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4년에 12개의 신규과제 착수를 계획하

- 다부처사추위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하려던 과제인 동 사업을 방위사업청 참여 없이 개별 부처 과제로 추진할 경우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24년 6월 과제를 종료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2023년도에 실시된 특정평가에서 동 사업의 협의회가 연 2회 이하로 개최되며 그마저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등[88]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음.[89]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민군기술협의회(산업부)가 심의하면서, 내역사업인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은 다부처사추위(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었는데,

- 협력 부재 등의 문제가 사전에 지적되었음에도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예산 편성 여부가 통일되지 못하여 '24년도 예산액이 불용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였으나 계속과제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과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개 과제를 우선 착수하면서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다고 함

88) 민군기술협의회는 '20~'22년 연1회, '23년 2회(서면) 개최되었음

89)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7.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나,[90] 사업조정체계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고 부처 간 협업도 저하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내역사업은 다부처 연계사업임에도 사업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진체계에서 기획재정부가 배제되어 있으며,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을 추진할 때 부처 간 칸막이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의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90) 16p,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24. 1.

□ **기획평가관리비의 취지를 고려하여 내역사업 수 및 예산에 비례하여 기획평가관리비가 집행되도록 주의 필요**

○ ‘24년 예산으로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 3,800만원 전액이 민군협력진흥원에 교부되었고 민군협력진흥원은 그 중 3,6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94.7%)하였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예산액 기준 31.3%를 차지하는 내역사업 1개가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기획평가관리비는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교부・집행되었음.

○ 내역사업 일부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평가관리비는 95%에 가까운 비율을 집행한 것은 기획평가관리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연도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내역사업 수 및 집행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기획평가관리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R&D)(1235-411): 방사광가속기 관리·운영의 거버넌스 체계 정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등 대형가속기의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속기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적 보완을 통해 국내 가속기의 장기적 운영 안정성과 국가 연구 인프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내역사업은 국가소유의 거대 공동연구시설인 포항 3,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의 최첨단 연구에 활용하여 선도형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 선진화와 산업기술의 융·복합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액은 663억 9,800만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 663억 9,800만원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위탁기관인 포항공대에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사업(R&D)	67,198	67,198	67,198	67,198	-	67,198	67,198	-	-	67,586
○ 방사광가속기공 동이용연구지원 사업	66,398	66,398	66,398	66,398	-	66,398	66,398	-	-	66,786
○가속기핵심기술개발	800	800	800	800	-	800	800	-	-	800
□ 세출예산비목	67,198	67,198	67,198	67,198	-	67,198	67,198	-	-	67,586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67,198	67,198	67,198	67,198	-	67,198	67,198	-	-	67,58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내역사업) 사업수행기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수행기관명	지원 비율 (%)	2024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포항공대 (포항가속기 연구소)	100	66,398	0	66,398	66,398	0	0	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방사광가속기 관리·운영의 거버넌스 체계 정비 필요

○ 포항방사광가속기는 1994년 포항에 3세대 시설이 준공된 이후, 2015년 4세대, 2023년 극자외선(EUV) 방사광가속기까지 구축된 국가 소유 대형 연구시설임.

<포항방사광가속기 국유재산 현황>

구 분	3세대	4세대	EUV	계
공작물	3세대 방사광가속기	4세대 방사광가속기	EUV 방사광가속기	3식
건 물	17개동 (43,038.31㎡)	9개동 (36,868.37㎡)	1개동 (2,750.78㎡)	27개동 (82,657.46㎡)
지상권*	126,800㎡	120,620㎡	3세대 부지 내	247,420㎡

* 지상권 설정 요건: 가속기 존속시까지, 포항광과대에서 무상임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유재산법」 제29조[91]에 따라 포항방사광가속기는 2017년부터 포항공대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가 국유재산 관리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5년 단위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

91)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 갱신을 통해 2027년까지 동일 기관에서 위탁 운영이 지속될 예정임[92].

- 포항방사광가속기의 연혁을 살펴보면, 「방사광가속기 개발계획('89.12.)」에 따라 관·민 공동[93]으로 3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포항공대가 소유·운영하고 정부는 운영비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구조[94]였으나,

- 사립대학인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의 소유・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발생하여 2017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고, 같은 해 공모를 통해 포항공대(부속기관인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위탁·운영을 맡게 되었음.

<대형가속기 운영체제 개편 방안 마련('17.2. 국과심 운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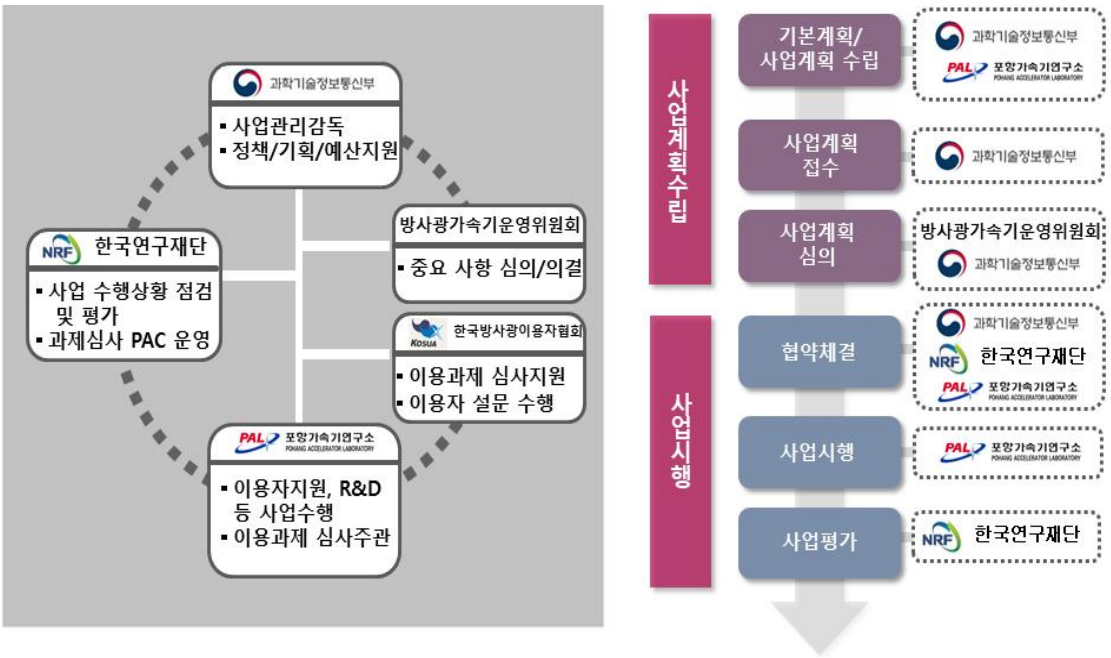
◈ (국유재산 편입, 공모/위탁) **가속기 소유권 기부채납을 통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투명성・효율성 확보
◈ (가속기운영위원회 개편)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속기 감독기능을 확대하여, 가속기 운영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
◈ (연구소장 공모/경영평가) **가속기연구소장을 공모하여 권한을 보장**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조직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92) 운영기관 공모 경과 : 공모('17.9.18.~10.23., 2개 기관 응모) → 선정평가('17.11.8.) → 우선협상(~'17.11.29.) → 운영위 심의('17.12.14.) → 선정확정('17.12.28.) → 국유재산 관리위탁('18~'22) → 관리위탁 갱신('23~'27)
93) 3세대('88. 4 - '94. 12) 구축비 : 1,500억원 ※정부 596억원, 포스코 904억원 (이자포함)
94) 포스코의 기금('96. 200억원 출연)이 고갈되면서 2013년부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함.

○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 구조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시설 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안정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동 사업은 위탁기관인 포항가속기연구소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출연금)이 한국연구재단을 거쳐 재위탁되는 우회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 현재 위탁기관인 포항가속기연구소가 방사광가속기 이용과 관련 연구에 전문성을 보유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점검·평가 기능은 제한적인 반면,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소재 분산 우려도 있음.

○ 둘째, 포항가속기연구는 국가 중요시설을 관리하며 운영비도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민간기관으로서 정기적인 국가의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예산집행, 인사관리 및 정보공개 등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포항가속기연구소는 포항공대 부설기관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권한은 포항공대에 있으나, 사실상 정부 출연금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95], 연구소장도 공모로 선정하여 과기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임.

95) 포항가속기연구소 운영예산: 2013년부터는 자체수입을 제외한 **운영비 전액을 정부예산에 의존**

(단위 : 억원)

구 분		~'94	'95~'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정부	3세대 구축운영	596	2,246	543	643	598	294	305	331	328	343	348	361	345	362	350	370	399	405	420	9,588
	4세대 구축운영	-	-	-	-	200	450	1,050	1,200	1,138	153	213	221	171	177	201	188	193	236	222	6,015
	EUV	-	-	-	-	-	-	-	-	-	-	-	-	-	115	115	60	22	23	26	361
	핵심기술개발	-	-	-	-	-	-	-	-	-	10	17	10	10	10	10	10	10	8	8	103
	핵심장치 국산화	-	-	-	-	-	-	-	-	-	-	-	-	-	-	15	57	-	-	-	72
지방비(4세대연계사업)		-	-	-	-	-		20	100	140	-	-	-	-		-	-	-	-	-	260
기타	타기관투자	-	15	-	-	-	-	-	-	-	-	-	-	-	-	-	-	-	-	-	15
	포스코	904	68	-	-	-	-	-	-	-	-	-	-	-	-	-	-	-	-	-	972
	기금전입금	-	341	45	46	38	31	-	-	-	-	-	-	-	-	-	-	-	-	-	500
	자체수입(3세대)	-	117	10	12	-	4	5	6	5.7	3.7	3.8	4.6	4.1	2.1	2.9	5.1	7.7	3.5		199
	자체수입(4세대)	-	-	-	-	-	-	-	-	-	0.3	0.0	0.3	0.4	0.3	0.5	0.2	1.0	0.2		5
계		1,500	2,787	598	701	836	779	1,360	1,537	1,472	510	582	597	531	666	694	690	633	677	767	18,090

- 한편, 최근 포항가속기연구소 직원 등의 청원[96]으로 기관의 예산집행, 인사 등에 문제가 제기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관 운영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상시 관리·감독이 제한적인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 셋째, 향후 신규 대형 방사광가속기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상황이나, 전문적으로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할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등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므로, 국가의 대형 연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책임성 있는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존재함.

- 현행 관리위탁을 하고있는 포항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위탁기간 종료 시(2027년) 특정기관 혜택논란 등으로 기관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여 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기관 변경시 운영 노하우 단절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한편, 국내 대형가속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자가속기(한국원자력연구원), 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 중입자가

96) 노동조합(민주노총 포항공대 지부) 및 포항가속기연구소 발전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청원(신입 직원 부정 채용 지시, 안전사고 미보고 및 허위 보고, 계약 조건 불이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의혹 등)에따라 과기부는 특정감사('24.10.~'25.3.) 및 재심의('25.3.~5.)를 진행하고 인사조치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가속기연구소에 통보하였음(2025.6.)

속기(서울대학교병원) 등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97]하는 한편, 포항방사광가속기는 민간대학 부설기관인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운영을 맡고 있어 가속기별로 운영기관 및 관리 체계가 상이함.

< 국내 대형가속기 운영·구축 및 시설 소유 현황 >

구 분		운영·구축 기관	구축기간	구축재원 (국비/기타)	부지 (소유자)	시설 (소유자)	지역
방사광 가속기	3세대 (원형)	포항공대* (포항가속기 연구소) * 국유재산 편입('17.9.) 후 공모로 선정	'91 ~ '94	1,500억원 (569/904)	사유지 (포항 공과대)	국유재산	포항시
	4세대 (선형)		'11 ~ '15	4,298억원 (4,038/260)			
양성자가속기		한국원자력 연구원 (양성자사업단)	'02 ~ '12	3,143억원 (1,836/1,307)	공유지 (경주시)	출연재산 (원자력 연구원)	경주시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 연구원 (중이온사업단)	'11 ~ '21	14,314억원 (14,314/-)	출연재산 (기초과학연 구원)	출연재산 (기초과학연 구원)	대전시
중입자가속기		서울대학교 병원	'10 ~ '26	2,915억원 (1,389/1,526)	법인재산 (서울대병원)	법인재산 (서울대병원)	부산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대형가속기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5. 9. 19.)되었으나, 여전히 전담 운영기관 등 거버넌스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 체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97) 기초과학연구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또한, 충북 오창에 총사업비 1조 1,643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건설 중이며, 2029년부터 본격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국가적 대형가속기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 시설을 포함한 가속기 운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1235-301>

- 총사업비 : 1조 1,643억원(국고 9,643억원, 지방비 2,000억원)
- 사업기간 : '21년~'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예산)
사업비	11,500	41,000	60,000	38,417	69,700

* 2021~2024는 결산, 2025는 예산액

- 기타 : 건축연면적 약 69,400㎡, 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미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속기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연구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연 구 성 과

혁 신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7

6788-5229

【 일반회계 】

(1) 출연연 총괄: 출연연의 승인된 한시조직에 대한 경상운영비 확보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한시조직 운영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출연연의 미승인 지역조직을 통폐합하는 한편, 적정성을 인정받은 지역조직에 대한 경상운영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한시조직 개요

○ 연구기관이 지역에 자체적으로 설립한 센터가 시설・장비 구축, 연구원 상주 등으로 점차 하나의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감사원 감사(‘22), 지역조직 법제화(‘23)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 중인 ‘사실상의 지역조직’을 ‘한시조직’으로 규정하고 ‘25년까지 운영기한을 두었음.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항우연・천문연 포함)의 107개 지역조직 중 47개 지역조직을 한시조직으로 분류하고, 운영기간 종료 전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 예를 들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근접한 위치에 현장 애로기술 해결, 실증,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수행을 위해 지역특화센터와 같은 한시조직을 설치 및 운영해오고 있음.

- 생기원의 한시조직은 당초 기관 고유임무에 연계하여 산업부의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수탁해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설치된 연구시설이었으나,

- 기업 및 지자체는 지원인력 상주 등 생기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고, 상주인력 배치 등으로 인해 해당 연구시설의 성격이 점차 조직 형태로 확장되며 사실상 지역조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한시조직으로 지정됨.

○ 한시조직은 설립 당시 운영비를 소관 부처에 요청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별도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었고, 필요한 비용은 센터 수익금, 지자체 지원비 등으로 조달해왔음.

- 각 연구기관은 경상운영비를 활용해 한시조직을 지원해왔음에도 운영비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일부 센터의 경우 소속 연구자가 청소 미화원과 시설관리 인력을 대신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 대신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기 위하여 단기적 자체수익금 확보에 치중하는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보임.

나) 검토의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적정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된 한시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미승인 조직 통폐합 등 조치 필요

○ 연구회는 작년 말 서면·대면·현장 검토를 통해 소관 연구기관의 39개 한시조직의 운영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적정' 35개(한시운영 유예 5개 포함), '부적정' 4개로 등급을 결정하였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검토 결과('24.12.)>

기관명	순번	한시조직명	등급	기관명	순번	한시조직명	등급
생기원	1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생기원	21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부적정***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적정		22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적정
	3	국가희소금속센터	적정		23	항공시스템기술센터	적정
	4	한러혁신센터	***부적정***		24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5	주조기술센터	적정		25	나노기술집적센터	적정
	6	국가산업융합센터	적정		26	모빌리티핵심부품소재센터	적정
	7	국가엔지니어링센터	적정		27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8	스마트안전리빙랩	적정		28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9	패키징기술센터	적정		29	김제뿌리기술지원센터	***부적정***
	10	스마트텍스트로닉스센터	***부적정***		30	농기계기술지원센터	적정
	11	울산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천문연	31	소백산천문대	적정
	12	3D프린팅제조공정센터	적정		32	보현산천문대	적정
	13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33	KVN울산전파천문대	적정
	14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적정		34	KVN탐라전파천문대	
	15	해양로봇센터	적정		35	KVN연세전파천문대	
	16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적정	식품연	36	강릉연구실	적정
	17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지자연	37	원주KSRS	적정
	18	대구뿌리기술지원센터	적정	항우연	38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적정
	19	건설기계기술센터	적정	재료연	39	소재혁신선도본부	적정
	20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적정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7.)

- 세부적으로는 각 센터의 정비방향을 3가지로 구분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으며,[98] 적정성을 인정받은 센터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미흡한 센터는 통폐합하는 등 '27년까지 한시조직 체계 정비를 완료하려는 계획임.

<한시조직별 조직 정비방향>

정비방향(안)		조직 수	한시조직명
정규 조직화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조직으로 운영 제안	**3**	- **(천문연)** 소백산천문대, 보현산천문대 - **(항우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기능 조정·정비	- 상위 지역조직의 하위 부서화	**21**	- **(생기원)**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 국가희소금속센터, 국가산업융합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엔지니어링센터, 패키징기술센터, 울산뿌리기술지원센터, 3D프린팅제조공정센터,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대구뿌리기술지원센터,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건설기계기술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모빌리티핵심부품소재센터,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농기계기술지원센터
	- 연구조직이 아닌, 기관의 주요 연구시설로 관리	**6**	- **(지자연)** 원주KSRS - **(천문연)** KVN전파전문대(울산,탐라,연세) - **(생기원)** 스마트안전리빙랩, 해양로봇센터
	- 운영 기한(~'27.12.)을 두고 한시적 운영 지속	**5**	- **(식품연)** 강릉연구실 - **(재료연)** 소재혁신선도본부 - **(생기원)** 주조기술센터, 항공시스템기술센터,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종료	- 운영 종료 (~'25.12.)	**4**	- **(생기원)** 한러혁신센터, 스마트텍스트로닉스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김제뿌리기술지원센터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7.)

98) ① **정규조직화**: 독립된 연구조직으로서의 지속 운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규조직화를 추진 제안
② **기능조정·정비**: 속 운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통합 운영(21개), 연구시설 전환(6개), 운영기간 연장(~27.12.) 후 재점검(5개)으로 구분 권고
③ **운영종료**: 운영 필요성 부족 판단에 따른 운영종료 권고

○ 운영적정성 검토 결과 승인된 한시조직에 대해서는 센터 본연의 기능 및 연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경상운영비 등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생기원 등 연구기관들은 승인된 한시조직의 경상운영비를 2026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상황이며, '25년 8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조정 중에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시조직 정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승인 한시조직은 정규조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한편, 정규조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관 및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 지원(2241-436): 연구동환경개선사업 건축비 실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동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비 실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 지원(R&D)’사업은 연구원 내 노후 기숙사, 연구동, 사업화 시설 등을 개선하여 차세대 미래연구 수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 215억 3,100만원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출연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출연금 중 90억 8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41.8%)하고 141억 6,5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 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과기정통부			피출연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 시설사업비	21,531	21,531	21,531	21,531	5,977	21,531	13,343	21,531	9,008	14,165	-
- 연구개발건축비 (360-03)	21,531	21,531	21,531	21,531	5,977	21,531	13,343	21,531	9,008	14,165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동 환경개선사업IV'은 사용연한이 5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판정된 L2연구동을 재건축하여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연구동 환경개선사업IV 개요>

1) 사업 배경

- 사용연한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연구동을 첨단 연구시설로 재건축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차세대 미래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로 구축

* L2연구동은 구조안전진단 D등급 판정받은 노후 연구동으로 건물안전 및 성능 약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 및 안전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9) 자료에 따른 우선순위 2위로 선정되어 재건축(S1) 필요하다 평가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2년 ~ 2028년(7년)
- (사업규모) 지하3층, 지상6층 / 연면적 21,713㎡
- (사업내용) 기존 연구동 철거 및 재건축, 우회공동구 구축
- (총사업비) 885억원(국비 797억원, 지체재원 88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동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의 예산현액 158억 2,600만원 중 23억 9,6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15.1%)하는 데에 그쳤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도별 연구동 환경개선사업IV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2	837	-	837	837	837	837	100.0	-	-
2023	4,423	-	4,423	597	4,423	597	13.5	3,826	-
2024	12,000	3,826	15,826	2,396	12,000	0	0.0	13,43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특히, 2024회계년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년도 이월액(38억 2,600만원)조차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14억 3,000만원 규모의 재이월이 발생함.

나) 검토의견

□ 실집행이 부진한 연구동 환경개선사업IV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동 내역사업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3년까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적정성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협의

를 마쳤으며, '24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적정성검토를 완료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4년 12월 전기, 통신, 소방 공사 계약을 마치고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어 '25년 4월에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884억 2,600만원에서 885억 500만원으로 변화하는 등 다음과 같이 12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자율조정 포함)이 있었음.

<연구동 환경개선사업Ⅳ의 총사업비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단계	총사업비	조정액	조정사유
최 초(2021.12.)	사업승인	88,426	-	-
1차 조정(2022.10.)	기본설계	88,425	△1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
2차 조정(2023.03.)	기본설계	88,399	△26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
3차 조정(2023.03.)	기본설계	88,391	△8	설계비 집행잔액
4차 조정(2024.03.)	기본설계	95,708	+7,317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 및 기본설계 결과 반영 등
5차 조정(2024.05.)	실시설계	95,697	△11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
6차 조정(2024.10.)	실시설계	94,936	△761	실시설계 결과 반영
7차 조정(2025.01.)	실시설계	92,593	△2,343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8차 조정(2025.03.)	실시설계	92,593	-	총사업기간 1년 연장
9차 조정(2025.04.)	실시설계	89,600	△2,993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10차 조정(2025.05.)	실시설계	88,608	△992	공사비, 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등
11차 조정(2025.06.)	실시설계	88,612	+4	자율조정한도액 내 집행
12차 조정(2025.06.)	실시설계	88,505	△107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 낙찰차액 감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자율조정 가능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3.)

○ 동 내역사업의 '24회계연도 예산액 120억원은 공사비 명목이었으나, 건설공사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착공이 순연되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당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였음.

- 공사계약 체결이 지연된 이유는 중간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조정 관련 절차가 장기화되어 후속 단계인 실시설계 및 대관 인허가 진행이 늦어진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총사업기간을 1년 연장('27년→'28년)하였음.

- '25년 6월 기준 착공신고 승인이 완료되어 착공('25.7.1.)한 상태로, 지하매설 지장물 이설을 병행하는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28년 내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연구동의 사용연한이 도과한 지 50년 이상 경과되어 연구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바, 당해 연도에 교부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는 등의 공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동 내역사업에 따른 건축공사가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설 지원(2241-437): 연구1동 증축사업과 수도권통합센터 건설사업 관련 행정절차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1동 증축 및 수도권 통합센터 건설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업체 선정,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

가) 사업 개요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설 지원(R&D)’사업은 연구원 내 노후 기숙사, 연구동, 사업화 시설 등을 개선하여 차세대 미래 연구 수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99억 2,500만원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지원연”)에 출연하였으며, 기초지원연은 출연금 중 69억 6,8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70.2%)하고 29억 5,7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설 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피출연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시설사업비	9,925	9,925	9,925	9,925	3,950	13,875	10,918	2,957	-	9,925
- 연구개발건축비(360-03)	9,925	9,925	9,925	9,925	3,950	13,875	10,918	2,957	-	9,9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 동 사업은 ‘노후시설보수’, ‘실험신뢰성 향상기반 구축’, ‘연구1동 증축사업’과 ‘수도권 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총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연구1동 증축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했으며, ‘24년에는 45억 2,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7억 8,4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61.5%)하는데에 그쳤음.

- ‘수도권 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또한 사업 착수 이후 실집행이 부진하였고, ‘24년에는 재이월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내역사업별·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연구1동 증축사업	2022	900	-	900	313	900	313	34.8	587	-
	2023	5,050	587	5,637	1,939	5,050	1,352	26.8	2,898	800
	2024	4,525	2,898	7,423	5,682	4,525	2,784	61.5	1,741	-
수도권 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2023	1,000	-	1,000	8	1,000	8	0.8	992	-
	2024	1,000	992	1,992	808	1,000	0	0.0	1,18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공사 포기로 인한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 연구1동 증축사업은 국가 현안사항 긴급대응 관련 대형연구장비를 집적화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K-선도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연구1동 증축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국가적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국가 현안사항(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연구1동 노후 건축물 개선사업(5개년)과 연계하여 국가 연구 인프라 집적화·연구 생산성 향상 도모

2) 사업 기간/위치/사업비

- 총사업기간 : '22.01~'25.12
- 위치 : 대전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3) 조감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기초지원연은 연구1동 증축을 위하여 '23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및 공사를 발주하여 '23년 8월에 착공하였으나, '24년 중 관급자재(래미콘) 수급 지연과 소방업체의 중도 공사 포기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업체의 공사 포기는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공사 채권압류 5건)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후 타절 준공과 긴급 재발주를 거쳐 '24년 12월 계약을 마쳤다고 설명하였음.

○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 포기는 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사정,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도권 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은 K-바이오 랩허브와 기초지원연의 첨단 대형 인프라 및 전문연구역량을 연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수도권 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지역조직 운영 효율화 및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 3개 지역센터를 통·폐합하여 첨단 바이오메디컬플랫폼 구축

2) 사업 기간/위치/사업비

- 총사업기간 : '23.01~'27.12
- 위치 : 인천
- 총사업비 : 45,700백만원

3) 조감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수도권 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은 '23년 5월부터 인천광역시·과기정통부·기초지원연 간 실무협약(MOU) 체결 지연[99]으로 설계공모가 8개월간 잠정중단된 바 있고,

'24년 12월에는 설계용역이 중단되며 사업이 추가 지연되었음.

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MOU 체결 지연은 수도권 통합센터 부지 제공 적용 법률 해석 과정에서 부지 매입 조항 포함 여부, 무지 무상대부기간 등과 관련하여 기초지원연,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발생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계용역 중단과 관련하여 '24년 1월 MOU 체결 후 3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하반기 중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입조항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이 늦어지며 설계용역이 약 7개월간 중단되었다고 설명하였음.

<토지 임대차 계약 및 설계용역 중단 경과>

추진업무	추진일자	세부업무내용
MOU 체결	'24.01.16.	ㅇ KBSI 수도권통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인천시-인천경자청과의 **MOU 체결 완료** - 인천시의 부지 무상대부 제공 및 건축비 50% 지원 등 포함
토지임대차 계약 협의 사항	'24.01월 ~	ㅇ **('24.09.~10.) 토지매입 조항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서(안)** 상호 검토의견 전달(KBSI⇄인천경자청) ㅇ **('24.12.) (인천시→KBSI) 인천경자청** 내부검토를 마친 **토지임대차계약서 초안(토지매입조항 포함) 공문 수신** - 인천경자청 측에서 합의된 토지임대차계약서(안)의 **일방적 수정(토지매입조항 추가 요구) 요구** ㅇ **('24.12.) (KBSI→인천시)** 인천경자청에 수도권통합센터 원활한 구축 진행을 위해 **기존 협의(23.12월)한 계약서(안)에 따른 계약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건설공사 설계용역 착수	'24.03.19. ~	**ㅇ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건설공사 설계용역 추진** - 계약금액 : 1,244백만원 - 계약기간 : 2024.03.19.~2025.03.18.
수도권통합센터 설계용역 중단	'24.12.27. ~	ㅇ 설계용역 진행 중 **토지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천경자청에 신청한 "경관 심의" 절차 취소로 **용역 중단** - 인천경자청과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후 설계용역 재개 예정

추진업무	추진일자	세부업무내용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25.07월 ~	○ **('25.01.~07.) 수도권통합센터 토지계약체결 관련 인천경자청과 실무협의 완료로 계약체결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토지 임대차계약 등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지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동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 지원(2241-439): 자원동 환경개선 사업 건축비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원동 환경개선 사업에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이 연내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 지원(R&D)’사업은 생명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및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90억 4,000만원 전액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에 출연하였음.

- 생명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37억 9,300만원 중 17억 2,8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12.5%)하고 집행잔액 120억 6,5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 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피출연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시설사업비	9,040	9,040	9,040	9,040	4,753	13,793	1,728	12,065	-	4,393
- 연구개발건축비(360-03)	9,040	9,040	9,040	9,040	4,753	13,793	1,728	12,065	-	4,39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자원동 환경개선사업'은 생명연 내 자원동의 환경개선을 통해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한 연구공간을 재조성하는 사업임.

<자원동 환경개선사업 개요>

- **총사업비** : 21,38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년~2027년(6년)
- **위치** : 대전
- **사업목적** : 자원동 환경개선을 통해 건물 수명연장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공간 재조성
- **조감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자원동 환경개선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

○ 자원동 환경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데, '24년에는 당해연도 교부액 72억 9,2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47억 5,000만원도 대부분 재이월되었음.

<자원동 환경개선사업의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2	400	-	400	3	400	3	0.8	397	-
2023	5,000	397	5,397	647	5,000	250	5.0	4,750	-
2024	7,292	4,750	12,042	38	7,292	0	0.0	12,00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동 내역사업은 총사업비가 229억 9,500만원에서 213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율조정을 포함하여 총 6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음.

<자원동 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단계	총사업비	조정액	조정사유
최 초(2021.05.)	사업구상	22,995	-	-
1차 조정(2022.07.)	사업구상	22,206	△759	관련기관 요구사항 반영 등
2차 조정(2023.07.)	기본설계	22,206	변동없음	사업기간 1년 연장
3차 조정(2024.04.)	중간설계	23,901	+1,695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
1차 자율조정(2024. 07.)	실시설계	23,704	△197	설계비 감액 자율조정
4차 조정(2024.12.)	실시설계	24,535	+831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
2차 자율조정(2025.7.)	실시설계	21,385	△3,150	공사비 낙찰차액 등 자율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중 중간설계 및 적정성검토가, 하반기 중 실시설계 및 적정성검토가 진행되는 과정 중 가건물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함.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6월 중 공사 및 감리업체 계약이 완료되어 7월 착공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22년부터 '24년까지 차년도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 특히 연중 진행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여 이월액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이 연내 집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여 예산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이월액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설 지원(2241-445): 예산 이월 및 재이월 최소화 위해 연구동 환경개선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도록 관리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비 예산의 이월 및 재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설 지원(R&D)’사업은 노후된 건축물, 설비 등에 대하여 전면 보수, 리모델링 및 별동 증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37억 7,900만원 전액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연”)에 출연하였음.

- 생기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64억 7,700만원 중 133억 3,9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50.4%)하고 집행잔액 130억 8,7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설 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피출연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시설사업비	13,779	13,779	13,779	13,779	12,698	26,477	13,390	13,087	-	9,688
- 연구개발건축비 (360-03)	13,779	13,779	13,779	13,779	12,698	26,477	13,390	13,087	-	9,68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동환경개선사업'은 설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천안 연구동의 구조 및 안전분야, 에너지 성능 분야 등 총체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21년~'25년) 총사업비 389억 2,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 예산 이월 및 재이월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2024회계연도 '연구동환경개선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을 보면 '23년으로부터 이월된 123억 8,600만원 중 102억 5,9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재이월되었고,

‘24년도 예산 106억 1,100만원 전액이 이월(집행률 0%)되어 차년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연구동환경개선사업의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과기정통부			피출연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10,611	10,611	10,611	10,611	12,386	22,997	10,259	10,611	0	0.0	12,738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의 지연이 철골공사 중 잦은 우천과 폭염 등 기상 이변과 이에 따른 장비반입 일정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며, 사업종료연도인 ‘25년 내 완공 및 사업비 전액 집행 예정이라 설명하였음.

○ 예산의 이월 및 재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00]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서, 특히 재이월은 더욱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 법령[101]을 고려할 때 가

100)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0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

급적 최소한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예산 전액이 이월된 만큼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의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월·재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 사업이 기한 내에 완료되기 위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시설 지원(R&D)(2241-402·406): 제주 지질자원 연구를 위한 제주 지역조직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조사, 지하자원 탐사, 지질재해 대응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서, 특히 지질공원·지하수 등 특화 자원을 보유하고 복합 지질 현안이 집중된 제주지역에 상주 연구조직을 신설하여 지역 맞춤형 연구 수행, 현안 해결, 연구성과 확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시설 지원' 사업은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운영비와 시설사업비(R&D)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연구운영비 예산액은 832억 9,300만원, 시설비 예산액은 105억 9,300만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운영비 15억원을 제외한 817억 9,300만원, 시설비는 전액을 교부하였음.

<2024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과기정통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83,293	83,293	81,793	81,793	3,613	85,406	83,262	2,144	1,500	96,119
○ 인건비	39,972	39,972	38,472	38,472	677	39,149	38,713	436	1,500	41,211
○ 경상경비	3,481	3,481	3,481	3,481	-	3,481	3,481	-	-	3,568
○ 주요사업비	39,840	39,840	39,840	39,840	2,936	42,776	41,068	1,708	-	51,340
□ 세출예산비목	83,293	83,293	81,793	81,793	3,613	85,406	83,262	2,144	1,500	96,119
○ 연구개발인건비 (360-01)	39,972	39,972	38,472	38,472	677	39,149	38,713	436	1,500	41,211
○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3,481	3,481	3,481	3,481	-	3,481	3,481	-	-	3,568
○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360-04)	826	826	826	826	234	1,060	995	65	-	826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9,014	39,014	39,014	39,014	2,702	41,716	40,073	1,643	-	50,51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2024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시설(R&D)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과기정통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시설지원(R&D)	10,593	10,593	10,593	10,593	4,001	14,594	11,160	3,434	-	5,504
○ 시설사업비	10,593	10,593	10,593	10,593	4,001	14,594	11,160	3,434	-	5,504
□ 세출예산비목	10,593	10,593	10,593	10,593	4,001	14,594	11,160	3,434	-	5,504
○ 연구개발건축비 (360-03)	10,593	10,593	10,593	10,593	4,001	14,594	11,160	3,434	-	5,5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와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①지질과학 연구, 지질자원 기반정보 구축·제공 및 지반·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연구개발, ②광물자원 탐사·개발 및 활용·순환 연구개발, ③지하 에너지자원 확보 연구개발, ④지진·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⑤지하수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전 연구개발, ⑥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⑦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⑧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⑨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⑩①~⑨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인증 등임.

○ 연구원의 조직은 1원장, 1부원장(6연구본부, 1지역센터), 2행정본부, 감사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은 연구직 335명, 기술직 94명, 행정직 68명, 기능직 6명, 무기직 33명 총 536명임.

□ 제주 지질자원 연구를 위한 제주 지역조직 추진 필요

○ 연구원의 조직 중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는 연구원이 최초로 세운 유일한 지역조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신생대 제3기층을 갖고 있으며 동해안 최대의 영일만과 2,000m가 넘는 심해 환경을 동시에 품고 있는 포항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질자원기술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에너지자원 개발플랜트 국산화 등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가는 중이고, 지역과의 융복합 협력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는 2025년 7월 현재 40명에 이르는 상주 인력이 배치되어 3차원 해저탐사 시스템, 플랜트 핵심부품, 지질신소재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아울러 6,862톤급 탐사선(탐해3호)와 각종 지원시설들도 같이 운용되고 있음.

○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사례와 같이 연구원은 국내 유일 지질조사·연구기관으로서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조사 노하우, 지하수 전문 연구 능력, 지질재해 예방 기술, 기후 변화 및 탄소 저감 기술 등을 지역이 당면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지역 특화 연구를 지역과의 융복합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는 ①핵심 관광 자원인 지질공원의 신규 확보[102] 및 체계적 관리 체계 적용, ②제주 지질 상황에 특화된 4차 산업 기술 연계 통합 지하수 연구 체계[103] 마련, ③최근 발생한 제주해역 규모 4.9 지진('21.12.14.)과 잠재적 산사태, 화산활동 등 제주지역 지질재해 예방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④제주의 증가하는 자연재해, 폐기물(폐배터리 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제주 특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원에 제주 지역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지역조직은 제주 신규 지질유산 발굴 및 분포지도 구축, 지하수 연구, 화산 특성 평가 및 화산 분화 감시 연구, 해저단

102) 추후 화산박물관 건립 시 핵심 역할 수행 가능
103)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연구소, 제주테크로파크의 용암해수센터, 제주연구원의 지하수연구센터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층 연구, 폐기물 저감 및 자원 순환 시스템 연구, 기후 변화 및 탄소 저감 연구 수행을 통해 자연재해 걱정 없는 제주, 폐기물 문제없는 제주, 물관리 체계를 가진 제주의 기틀 확립과 제주 지질 관광자원의 밸류업 기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제주 지역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조직설치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시범사업 우선 실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 문제는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이사회의 설치 승인까지 소요기간만 대략 4년 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임(참고 지역조직 설치절차).

- 다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13조[104]에

104)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 규정」제13조(절차 및 요건의 예외)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지역조직 설립 절차 및 요건 등을 사전에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나.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3. 지역조직 설립을 위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4.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증축,

따라 연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로서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감독관청과 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함.

<지역조직 추진절차의 조정>

순서	지역조직 추진절차		조정 여부
1	①사전협의(연구회, 과기부)		필수절차
2	②시범사업 운영계획	시범사업 운영계획 제출	조정가능
3		검토위원회 검토	
4		이사회 보고	
5		시범사업 수행 및 평가	
6	③설치·운영계획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제출	필수절차
7		검토위원회 검토	조정가능
8		이사회 보고	
9	④타당성조사		생략가능
10	⑤지역조직 설치·운영 계획 이사회 승인		필수절차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원 등 관련 부처·기관은 지역기반 제주 지질자원 분야 중장기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주지역과 협력하고,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주 지역조직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참고] 지역조직 설치절차 및 소요기간(4년 3개월)

구분	단계	절차	주관	주요내용	소요기간
적정성 검토 + 시범 사업 운영 계획	1	①외부전문가 적정성검토결과 + ②시범사업 운영계획 연구회 제출	지자연	**- 외부전문가 적정성 검토결과 제출** **-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제출**(필수 포함사항 3가지) · 수행기간 (최소 24개월) · 부지 및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존 시설 활용 · 시범사업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는 지자체 50%이상 부담	2개월
	2	시범사업 운영계획 연구회 검토	연구회	**- [1]본원 외 조직 설치 검토위원회 구성 및 검토** · 기평위, 관련부처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이후 재검토 요청사업 추진, 시급성·필요성 부족 시 차년도 이후 재검토 요청	[2개월]
	3	이사회 보고	이사회	**- [2]시범사업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연구기관에서 안건 작성)** ·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인정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	1개월
	4	시범사업 수행 및 평가	지자연	**- 시범사업 수행** - (단계평가)해당년도 사업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준용 - (최종평가)사업 종료시점에 전체 사업기간의 성과 기준 · 시범사업의 성과, 효과성, 개선사항 도출 필요	24개월 + 2개월
적정성 검토 + MOU	5	외부전문가 적정성검토	지자연	- 외부전문가(또는 전문기관 용역결과) **적정성 검토결과 제출**	3개월
	6	지자체와의 MOU	지자연	**- 지자체와의 MOU**(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명시 필요)	6개월
설치·운영 계획	7	설치·운영계획 연구회 제출	지자연	**- 설치·운영계획 및 관련 자료 제출(시범사업 완료 후)** · 지역조직 시범사업 최종평가 결과 및 의견(4단계) · 자체 적정성 검증자료(외부전문가, 전문기관 용역결과)(5단계) ·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6단계) · 해당 지역조직의 정규직 인력 운영방안	1개월
	8	설치·운영계획 검토	연구회	**- [1]본원 외 조직 설치 검토위원회 구성 및 검토**	[2개월]
	9	이사회 보고	이사회	**- [2]설치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1개월
타당성 조사	10	타당성조사 수행 및 결과통보	연구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기부 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타당성 조사 수행**	[7개월]
예산 확보·설치 승인	11	출연(연) 예산확보	지자연	- 지역조직 설립 정부예산 요구안 제출	-
	12	이사회 설치 승인	지자연	**-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이사회 승인** · 예산확보부지 MOU 등 제반활동 수행 완료 이후	1개월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4): 차세대 태양광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공급망 취약성과 예산 부족으로 경쟁력이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를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 중 주요사업비는 ①수소공급 및 활용기술 개발, ②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③고효율·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④탄소에너지 청정 활용기술 개발, ⑤연구기획 및 성과확산 인프라 운영사업, ⑥장비·시스템 구축 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액은 751억 7,100만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 737억 6,900만원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교부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718억 3,100만원(95.6%)을 실집행하였으며, 14억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과기정통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75,171	75,171	73,769	73,769	1,998	75,767	73,829	1,938	1,402	83,524
○ 인건비	36,837	36,837	35,435	35,435	319	35,754	35,513	241	1,402	37,962
○ 경상경비	3,660	3,660	3,660	3,660	-	3,660	3,660	-		3,663
○ 주요사업비	34,674	34,674	34,674	34,674	1,679	36,353	34,656	1,697		41,899
- 수소공급 및 활용기술 개발	6,832	6,832	6,832	6,832	100	6,932	6,831	101		8,474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저장 혁신기술	-	-	-	-	-	-	-	-	-	4,500
-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10,606	10,606	10,606	10,606	800	11,406	10,606	800		10,521
- 고효율·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7,053	7,053	7,053	7,053	-	7,053	6,984	69		7,953
- 탄소에너지 청정 활용기술 개발	6,177	6,177	6,177	6,177	150	6,327	6,196	131		5,987
- 연구기획 및 성과 확산 인프라 운영사업	2,506	2,506	2,506	2,506	566	3,072	2,571	501		2,964
- 장비·시스템 구축비	1,500	1,500	1,500	1,500	63	1,563	1,468	95		1,500
□ 세출예산비목	75,171	75,171	73,769	73,769	1,998	75,767	73,829	1,938	1,402	83,524
○ 연구개발인건비 (360-01)	36,837	36,837	35,435	35,435	319	35,754	35,513	241	1,402	37,962
○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3,660	3,660	3,660	3,660	-	3,660	3,660	-	-	3,663
○ 연구개발건축비 (360-03)	-	-	-	-	-	-	-	-	-	-
○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4)	1,500	1,500	1,500	1,500	63	1,563	1,468	95	-	1,500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3,174	33,174	33,174	33,174	1,616	34,790	33,188	1,602	-	40,39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태양전지, 풍력 분야 세계최고 수준 핵심기술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도시 구현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106억 6백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동 사업은 ①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②차세대 풍력기술 개발, ③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저장 혁신기술 개발, ④신재생에너지 통합 플랫폼 개발 4개의 과제로 구성되며,

- 이 중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초고효율 다중접합·다기능 태양전지 등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 2020년～2025년 총 312억 1백만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대면적 21.83%/소면적 25.6%)를 개발하고,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주요 성과를 거둔 상황임.

<연도별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내역사업 결산 현황(2020~2025)>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3,218	4,382	4,686	7,088	4,238	7,589	31,201 (42.6%)
차세대 풍력기술 개발	-	-	2,494	1,986	3,362	592	8,434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저장 혁신기술 개발	2,583	2,868	3,795	3,940	1,379	(4,500) * 별도 내역사업 분리	19,065
신재생에너지 통합 플랫폼 개발	4,542	1,796	2,160	2,363	1,627	2,070	14,558
합계	10,343	9,046	13,135	15,377	10,606	14,751	73,258

주) '20~'24 : 결산기준, '25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차세대 태양광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검토 필요

○ 태양광은 탄소중립 구현,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글로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요국들도 강력한 정책과 R&D 투자를 통해 자국 재생에너지 기술·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태양광발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2,537억 달러에서 2032년 4,364억 달러로 매년 6%이상 성장하는 거대 산업으로[105], 글로벌 신규 설치량은 2024년 592GW에서 2035년 996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106].

105) Fortune Business Insights, 2024.12.
106) Bloomberg NEF, 2014.

- 또한,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실현,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자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산업 지배력 강화를 목표로 강력한 정책[107] 및 기술개발 투자[108]를 추진 중임.

○ 이에 우리나라도 2030 NDC(Nationally Dertermined Contribution,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국가적 임무[109] 달성을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초격차 태양광 기술

107)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22), (EU)탄소중립산업법(NZIA, '24), (日)녹색전환(GX) 추진전략('23) 등

108) 주요국 태양광 투자 현황

중국	▪ 론지(LONGi), '23년 기준 R&D에만 연 2조원 가량 투자 → 탠덤 셀 연구 추진 3년 만에 광전환효율 세계 신기록(M6셀, 30.1%) 달성
미국	▪ DOE EERE(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 FY 2025 예산 중 태양광 3.18억 달러(약 4,645억원) 배정 - 태양광 비용 절감, 제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추진 예정
EU	▪ HORIZON EUROPE 프로그램('23~'24년)에서 태양광 분야에만 7,100만 유로(약 1,068억원) 할당 - 차세대 태양전지, 고효율·저비용 PV 등 유럽 밸류체인 및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일본	▪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트 - 'Green Innovation Fund' 498억엔(약 4,600억원) 투자('21 ~ '30년)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9) '23년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누적)은 23.9 GW로 2030 NDC 전환부문의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해 '38년까지 약 77.2 GW 이상의 태양광 설비 보급 필요(제11차 전기본, '25.2)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은 '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대비 4백만톤 상향 조정하여 NDC 상향안('21.10)의 국가 감축목표를 준수하면서,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부문 내 일부 조정
  :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백만톤) : (기존) 149.9 → (변경) 145.9
-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4~'33, 2024.12.)

< 재생에너지 중장기 R&D 추진개요 >

		현재	2033년 목표
태양광	태양광 시스템	· 시스템 LCOE 0.10$/kWh	· 시스템 LCOE 0.03$/kWh
	탠덤 태양전지	· (탠덤 태양전지 효율) 29.9%(1cm2), 26.1%(260cm2)	· (탠덤 태양전지 효율) 35%(≥260cm2) (탠덤 모듈 효율) 28%(≥1.6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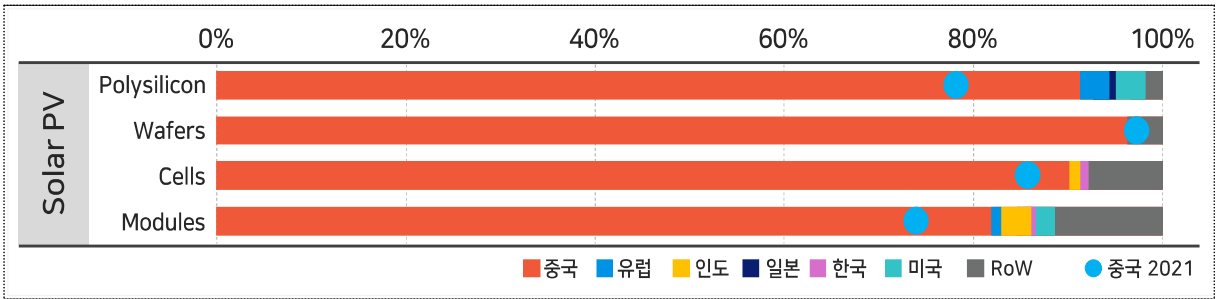
개발 목표(탠덤 셀 고효율화 35%, 2030년 등)'를 제시하였으며, 이의 조속한 달성을 위한 국가적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다만, 국내 태양광 산업은 좁은 국토로 인한 보급 한계와 산업 공급망의 특정국 독과점으로 인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

- 태양광은 국내 재생에너지 수출(2023년 2.6조원[110])의 약 50%를 차지하는 핵심 유망 산업이나, 글로벌 태양전지 및 모듈 점유율이 특정국가에 80%이상 집중되어[111]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 앞서 설명한 2038년 국내태양광 77.2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약 50GW 규모(2023년 누적 보급량의 2배 이상)의 신규 태양광 추가 보급이 필요하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태양광 기술 혁신도 필요함.

110)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산업부, '23.6)
111) <태양광 공급망의 국가별 점유율(IEA, '24)>



○ 한편, 정부는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12대 분야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라 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112]로 선정하고, 범부처 차원으로 집중 육성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12대 분야(참고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를 통해 의결(2022.10.)되었고,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시행(2023.3.21. 제정, 2023.9.22.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법령의 절차·기준[113]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선정(2023.12.)된 것으로,

---

112)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조(정의)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113) 국가전략기술 선정 : 관계부처 협의,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2대 분야는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생명과학(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주권 확보 목표・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발표하였고[114], 이를 기반으로 2025년도 전략기술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을 수립[115]하였는데,

-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R&D 예산 중 국가전략기술 투자 비중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세부 분야별 투입 현황과 증감

---

1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2024.8.26.)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심의회의 의결(2025.3.12.)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이는 다음 표와 같음.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주요 R&D 총액	292,814*	265,369	295,968
주요 R&D 총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비중 (B/A*100)	16.0%	18.6%	21.7%

반도체·디스플레이	6,401	6,567	8,133
우주·항공·해양	9,645	10,120	12,594
차세대원자력	991	1,630	2,043
첨단바이오	8,288	9,772	12,562
양자	1,080	1,252	1,957
이차전지	1,114	1,364	1,786
첨단모빌리티	5,436	5,483	5,987
사이버보안	1,653	1,904	2,120
차세대통신	2,167	2,113	3,122
인공지능	7,051	7,772	11,143
첨단로봇·제조	3,262	2,795	3,625
수소	2,678	2,335	2,569
전략기술 총계(중복제외, B)	46,827	49,434	64,295

* ‘24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 R&D에서 비R&D로 이관 된 규모(1.8조원) 제외
** ‘25년 추가경정예산(1차, 2차) 미포함(분야 구분 분석 중)

○ 반면,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사업은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간 예산도 100억원 미만(’25년 76억원)으로, 차세대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다른 에너지 분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11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하반기 중 부처·민간 수요 조사와 관련 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개편하고, 이를 반영한 범부처 기술확보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으로,

○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검토하고, 범부처 차원의 집중 투자 및 조기 상용화 연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맥킨지 기술 트렌드 전망 2025」 보고서[117]에 따르면 신기술 13개 분야[118] 중 전력 및 재생에너지 분야(스마트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차세대 원전, 태양광·풍력 등)의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307조5천억원)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

116)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에너지분야인 차세대원자력의 경우 예산 투입이 991억원('23년)→1,630억원('24년)→2,043억원('25년)임.

117) McKinsey Technology Trends Outlook 2025

118) 맥킨지 선정 글로벌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13가지 기술
1. 에이전트 AI (Agentic AI)
2.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3. 맞춤형 반도체 (Application-specific semiconductors)
4. 첨단 유무선 통신 (Advanced connectivity)
5.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Cloud and edge computing)
6. 몰입 현실 기술 (Immersive-reality technologies)
7. 첨단 보안 (Digital trust and cybersecurity)
8. 양자 기술 (Quantum technologies)
9. 미래 로봇 (Future of robotics)
10. 미래 모빌리티 (Future of mobility)
11. 미래 생명공학 (Future of bioengineering)
12. 미래 우주기술 (Future of space technologies)
13.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Future of energy and sustainability technologies)

〔참고〕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전략기술(법 제8조 관련)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1> 반도체·디스플레이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 고용량, 고속·고대역폭,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대비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②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수천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④ 전력반도체	■ 탄화규소, 질화갈륨,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변환·안정·분배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 스마트기기, 첨단모빌리티,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지·감지 기술을 융합, 물리·화학·바이오 정보를 감지·변환하는 장치·부품 기술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 고휘도·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 기존 경성(Rigid)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 접거나, 늘릴 수 있는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2> 이차전지	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現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가격경쟁력·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
	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 반·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이상 400Wh/kg 목표) 및 나트륨이온전지(220Wh/kg 목표) 등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산업적 한계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전지제조 기술
	⑪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 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안전도·수명 향상 위한 모듈-팩-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
	⑫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 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친환경 자원회수·재활용 관련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3> 첨단 모빌리티	⑬ 자율주행 시스템	■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⑭ 도심항공교통(UAM)	■ 저소음·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도심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교통관리, 이·착륙 인프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⑮ 전기·수소차	■ 고전압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연료 에너지를 동력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4> 차세대 원자력	⑯ 소형 모듈형원자로[SMR]	■ 고안전(무한냉각, 사고저항핵연료), 소형 모듈화 제조(노심부품, 소재, 혁신 제조), 유연성 운전 등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
	⑰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 액체금속, 기체,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활용하고 장주기 노심·높은 출구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운반·저장·부자·처분) 기술
<5> 첨단 바이오	⑱ 합성생물학	■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⑲ 유전자·세포 치료	■ 유전자 결함보완·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제조 관련 기술
	⑳ 감염병 백신·치료	■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
	㉑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집·생성·통합·분석하고, 개인맞춤형 진단·치료·예방·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6> 우주항공 ·해양	㉒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 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고효율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㉓ 우주 관측·센싱	■ 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인공위성 탑재체(관측·통신·항법)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기술
	㉔ 달착륙·표면탐사	■ 달착륙선·무인이동체·우주선 설계·제작, 행성간 임무궤도설계·운영을 위한 행성 연착륙·표면 임무 및 심우주탐사 기반기술
	㉕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 추력 15,000lbf 이상 고출력·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가스터빈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㉖ 해양자원 탐사	■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희토류,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탐사·채굴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7> 수소	㉗ 수전해 수소생산	■ 전기를 이용해 물(H_2O)을 분해하여 연료·전력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환원 반응)하는 기술
	㉘ 수소 저장·운송	■ 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운송하거나, 극저온 액화(–253℃)하여 저장·공급하는 기술
	㉙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 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열로 직접 전환하거나,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8> 사이버 보안	㉚ 데이터·AI 보안	■ 개인·기업의 중요데이터(개인정보, 산업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
	㉛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공급망 보안)	■ 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점탐지·추적·복구·예방기술
	㉜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
	㉝ 산업·가상융합 보안	■ 정보보안·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융합·적용하는 보안 기술
<9> 인공지능	㉞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SW/HW) 고도화	■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㉟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인지·판단·추론)	■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㊱ 산업 활용·혁신 AI	■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㊲ 안전·신뢰 AI	■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10> 차세대 통신	㊳ 5G 고도화(5G-Adv)	■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 (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
	㊴ 6G	■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
	㊵ 오픈랜(Open-RAN)	■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
	㊶ 고효율 5G·6G 통신부품	■ 5G·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
	㊷ 5G·6G 위성통신	■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
<11> 첨단로봇·제조	㊸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㊹ 로봇 자율이동	■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㊺ 고난도 자율조작	■ 유연관절·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㊻ 인간-로봇 상호작용	■ 로봇과 사람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
	㊼ 가상 제조	■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혁신 기술
<12> 양자	㊽ 양자컴퓨팅	■ 양자역학적 특성(양자얽힘 등)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성능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SW 기술
	㊾ 양자통신	■ 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
	㊿ 양자센싱	■ 고전 센싱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전·자기장, 빛, 중력 등)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4):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확보 필요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 플랫폼인 태양광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출연금·지자체 지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운영계획 및 기관 간 협약 미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가) 사업 개요

○ 태양광기업공동활용센터(이하 “태양광센터”라 함)는 태양광 양산성 검증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100MW급 파일럿 라인(시범 생산 라인)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로, 산업통상자원부(부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과 대전테크노파크·고려대·충남대(참여)가 공동으로 구축하였음.

- 동 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태양광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선정되었고, 구축 완료시점에 지자체(대전시) 공유재산(토지 및 건물)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음.

<태양광센터 구축 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20. 10. ~ 2024. 4. / 3년 7개월 ○ (사 업 비) 50,050백만원(국 24,550, 시 22,500, 연 3,000) *현물 미포함 ○ (시설 규모 등) 부지면적 9,840㎡, 건물연면적 7,865㎡ - 전기 : 7,000 kW 용량 - 폐수 : 72톤/일 용량 - 가스 : 고압가스(압축가스: 234 ㎡, 액화가스: 58,870 kg, 도시가스: 39,911 ㎡) - 기계 : 공조를 위한 보일러(2.5톤/h 증기 보일러 3대) 및 냉동기 24시간 가동 필요 - 1층 (50 MW 태양전지 제조라인 클린룸) - 3층 (100 MW 태양광 대면적 모듈 항온항습 파일럿 라인) - 주요구축장비 (태양전지 셀·모듈 제조, 신뢰성 평가, 국내 공급망 관련 장비)

○ 태양광센터는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제품의 제조 공정 및 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며, 기업요구에 맞는 공정지원, 국제적 수준의 인증 및 측정 서비스,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및 국가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태양광센터 주요기능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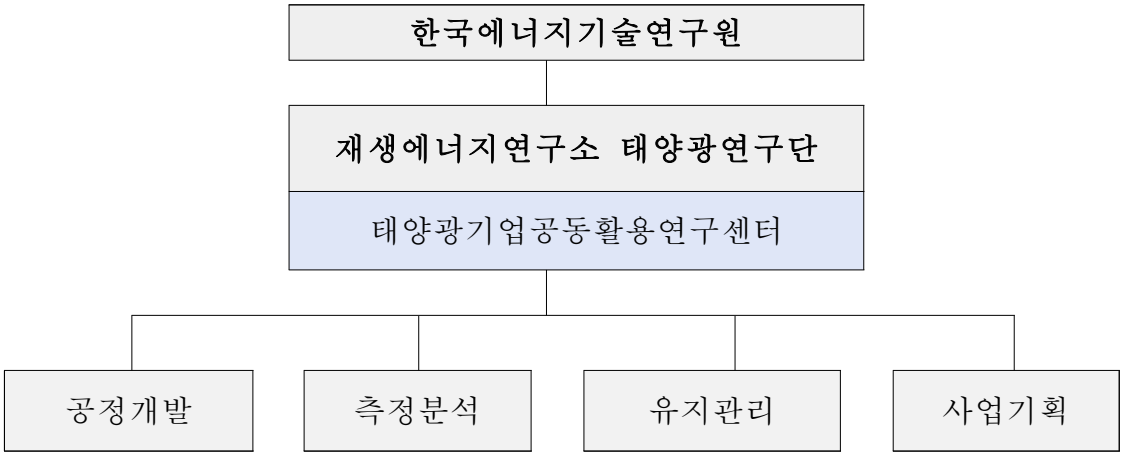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태양광기업공동활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확보 필요

○ 태양광센터 구축 첫해인 202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센터의 가동률 및 최적화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기관 자체보유재원을 활용, 기관운영비 및 적립금 약 21억원을 투입하여 태양광센터를 운영하였음.

○ 또한 현재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30여명이 태양광센터 업무 겸직 중이고, 이 중 태양광센터 시설을 주로 활용하여 연구하는 상주 인력은 15명 내외임(정규직 기준).

<태양광센터 인력 운영 현황>



- 태양광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양광센터 기능 유지를 위한 법정업무 등을 현재 인력 중에서 선임·분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음.

○ 그러나 태양광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영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센터 구축 사업 계획 또는 완료 당시 운영계획 수립 또는 운영 관련 계약이나 협약(주관기관, 지자체 등 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 및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태양광센터는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시부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119], 2024년 4월 준공 후 대전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대전시는 운영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임.

- 한편, 태양광센터 운영비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재료비를 제외하고 공정인프라의 운영비용을 산정할 때 연간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19) 센터 운영과 에너지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23.2. 대전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테크노파크)

<태양광센터 운영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액
시설・장비 관리	장비운용 인력[120]		500
	시설관리 인력[121]		500
유틸리티	공조관리	유지보수 관리	600
	공정용 가스	액화가스	800
	공공요금	전기요금	2,200
		도시가스	200
		수도 및 폐수 약품처리 등	200
합 계			5,000

○ 2025년도 태양광센터 육성 활성화 지원 예산[122]을 살펴보면, 12억 1,500만원이 반영되었지만, 최소 운영비용 중 정부출연금 계획액(20억)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고, 태양광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전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 요청하였지만, 현재 운영비 지원은 없는 상태임.

-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5년 국회 본예산 및 1차 추경에 정부출연금 미반영 금액(7억 8,500만원)의 국회 증액을 검토

120) 약 50대의 파일럿 라인 장비 정(정규직)/부 담당 관리·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15명 소요비용 산정

121) 폐수처리시설관리(1.5억),보일러/냉동기(3.5억) : 폐수처리시설은 환경전문업체와 계약 운영 중이며, 보일러/냉동기는 24시간 가동을 위한 교대인력과 관리자 포함 5인에 대한 전문용역비

* (보일러/냉동기) 전문인력 신규채용(1명) 및 연구인력(2명) 겸임, 퇴직후재고용 인력 활용 등으로 운영 중

122)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내역사업 내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과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전시와 태양광센터 안정화 자립을 위한 초기 기간 동안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

<태양광센터 운영재원 확보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계획(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요사업비	2,000	ㅇ 20억원 중 기본사업비 1,215백만원 정부출연금 예산 반영('25~) - 미반영 785백만원은 '25년 국회 본예산/'25 1차 추경 등 국회 증액 검토 요청 ➠ 예결위 검토 미반영
대전광역시 지원	1,500	ㅇ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ㅇ 운영비 지원 요청 - 토지와 건물이 대전시 소유로 무상사용 허가('24.12)를 받았으나, 현재 운영비 지원은 없음 - 센터 안정화 자립을 위한 초기 기간 동안의 지자체 지원 가능성 지속 협의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 등 활용	1,500	ㅇ 산업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센터 활용 수입(1,300) ㅇ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경비 절감(200) 등 - 증류수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를 냉각탑과 보일러에 재활용하여 상수도 요금 절감 - 산업부 연구개발 성과물로 100 kW 태양광 설비 구축, 연간 150MWh 전력생산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태양광센터는 국내 태양광 산업·기술의 공급망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제품의 제조 공정 및 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 플랫폼으로, 효율적인 집중 투자지원을 위한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해당 시설을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재정당국 및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태양광센터 운영 관련 기관 간 운영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4632-402):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또는 적정성 재검토 실시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타 기준 규모를 초과하게 된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성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사업은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제공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며, 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02억 8,500만원 전액을 집행(집행률 100.0%)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은 없으며, 집행액 중 195억 8,500만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였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출연금 중 186억 9,9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95.5%)하고, 3억 4,1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으며, 5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특구 기반시설 구축	700	700	-	-	700	700 (700)	-	-	9,792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00	700	-	-	700	700 (700)	-	-	9,792
○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18,485	18,485	-	-	18,485	18,485 (17,640)	-	-	19,192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15,151	15,151	-	-	15,151	15,151 (14,698	-	-	15,558
- 사업출연금 (350-02)	3,334	3,334	-	-	3,334	3,334 (2,942)	-	-	3,634
○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운영	1,100	1,100	-	-	1,100	1,100 (1,059)	-	-	1,620
- 사업출연금 (350-02)	1,100	1,100	-	-	1,100	1,100 (1,059)	-	-	1,620
합 계	20,285	20,285	-	-	20,285	20,285 (19,399)	-	-	30,6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18년부터 진행 중인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건립사업과 '21년부터 진행 중인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으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990억 2,400만원, 국비 지원규모는 339억 9,600만원에 달함.

-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이하 "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AI기반 가상실험실,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협업공간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691억 8,600만원(국비 227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창업협업공간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98억 3,800만원(국비 122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사업명	사업 개요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치/사업기간)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2-2번지 / '18~'28(11년) ○ (사업규모) 부지 71,607㎡, 철거 및 신축 17,730㎡(지하1층~6층) ○ (사 업 비) 691.86억원(국비 227.38, 시비 464.5) ○ (사업내용) R&D랩, 기업지원,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시설 등 조성 □ 추진경과 ○ ('21. 2.) 사업예정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21.4.) ○ ('20.10.)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LIMAC / ~'21.11.) ○ ('21.12.)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행안부 / ~'22.3.) ○ ('22.10.) 건축계획 변경 ○ ('23. 6.)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4.12.)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 ('25. 6.) 총사업비 기간 2년 연장(기재부 / '18~'26 →'18~'28) ※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 행정기간 소요 반영한 사업기간 2년 연장 □ 향후계획 ○ ('25. 8.)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25.11.) 실시설계 완료 ○ ('26. 5.) 공사착수 ○ ('28.12.) 건축공사 준공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치/사업기간) ETRI 내 / '21~'27(7년) ○ (사업규모) 신축 / 연면적 8,782㎡(지하1층~지상5층) ○ (사 업 비) 298.38억원(국비 122.58, 시비 166.93, 기타 8.87) ○ (사업내용) ICT 기술사업화 거점, 전시홍보관, 교류·소통 공간 등

사업명	사업 개요
	□ 추진경과 ○ ('21. 3.) 타당성 기획연구용역 및 건설사업 기획조사용역(~'21.11.) ○ ('21.12.)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행안부 / ~'22.3.) ○ ('22.11.)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3. 6.) 총사업비 기간 1년 연장(기재부 / '21~'24 → '21~'25) ※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한 1년 연장 ○ ('24. 4.) 총사업비 기간 1년 연장(기재부 / '21~'25 → '21~'26) ※ 조달청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기간 소요 반영한 1년 연장 ○ ('24. 9.)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4.12.)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및 감리 계약 ○ ('25. 4.) 건축공사 착공 ○ ('25. 6.) 총사업비 기간 1년 연장(기재부 / '21~'26 → '21~'27) ※ 공사 및 감리기간 반영하여 1년 연장 □ 향후계획 ○ ('27. 1.) 건축공사 준공 및 운영 개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모가 증가한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실시 필요

○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에 육박하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도 3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123]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123)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에 속한 공사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중이므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내역사업 전체를 단위로 보아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이며,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내역사업'을 그 대상으로 함.[124)]

---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12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52조(타당성재조사) ② 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 세부사업이 아니라 내역사업을 단위로 보더라도 사업 규모가 예타 기준[125]을 초과하므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동 내역사업에서 '18년 융합혁신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을 당시에는 예타 기준에 미달하여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1년 마중물 플라자 건립이 추가되며 동 내역사업 규모가 예타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음.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5)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미 래 인 재
정 책 국　소 관

문　　의　　처

6788-5236

【 일반회계 】

(1) 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402): 시정명령 건수가 많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및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가 미흡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02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세부사업은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내역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은 연구자의 생명보호 및 연구개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72억 7,8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다른 내역사업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확대·지원을 통한 기관 자율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 및 기초·첨단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0억 1,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	10,288	10,288	-	-	10,288	10,288	-	-	10,896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	7,278	7,278	-	-	7,278	7,278 [7,278]	-	-	7,826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	3,010	3,010	-	-	3,010	3,010 [3,010]	-	-	3,0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시정명령 건수가 많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세부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126]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6조[127]에 따른 과태료가 가해질 수 있음.

---

1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8.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이러한 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시정명령이 2022년 492건, 2023년 252건, 2024년 281건으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과태료, 시정명령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대학	4	231	2	87	3	77
연구기관	-	55	1	55	-	31
기업(연)	63	206	-	110	4	173
합계	67	492	3	252	7	28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의 사유를 살펴보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흡이 2022년 147건, 2023년 149건, 2024년 120건으로 많았고, 2024년에는 처음 시행된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미준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음.

---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1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경위 및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사유>

(단위: 건)

구분	시정명령 사유	'22년	'23년	'24년
1	(제33조제1항제1호)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미준수	-	-	129
2	(제33조제1항제2호) 연구안전정보시스템 자료 미제출 등	-	-	-
3	(제33조제1항제3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미준수	63	12	19
4	(제33조제1항제4호) 안전점검(일상점검 포함)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흡	147	149	120
5	(제33조제1항제5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미흡	43	11	3
6	(제33조제1항제6호)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미흡	58	22	10
7	(제33조제1항제7호) 사고 등 발생 시 연구실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미흡	-	-	-
8	(제33조제1항제8호) 현장검사 협조 미흡 또는 검사 결과 위험 발생 우려	181	58	-
	합 계	492	252	281

주: "1"은 2024년부터 시행되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로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가 낮은 신규·소규모 기업연 등에서 법정 의무 위반사항 발생하고 있고, 현장 컨설팅('23~)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수는 지속 증가하고, 특히 기업연의 경우 신설·폐지가 빈번해 컨설팅 대상 기관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신입생, 신규 재직자 등 기관 구성원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법령 미인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안전점검[128] 실시 결과 연구실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129]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가 미흡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2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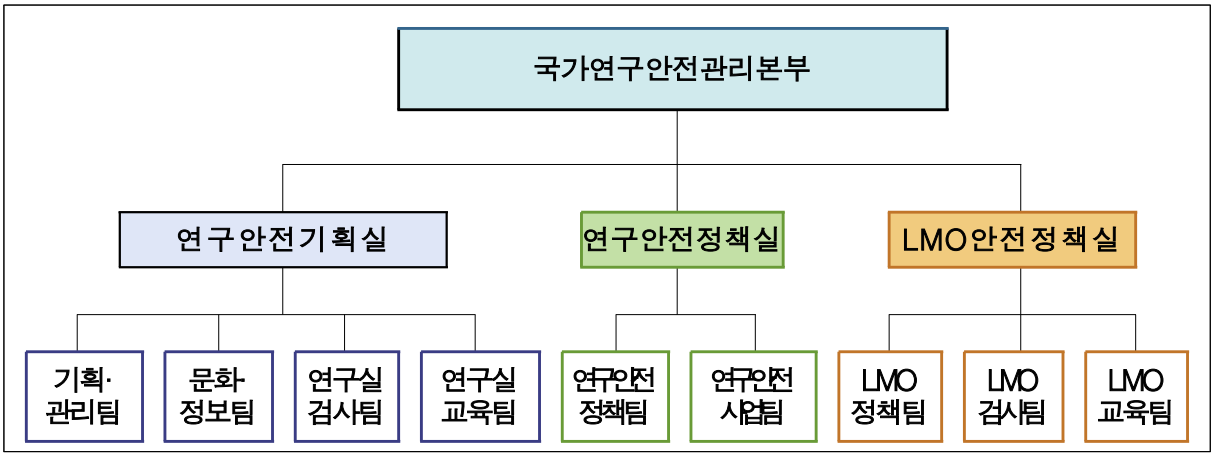
○ 세부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은 내역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과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을 수행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내역사업들에 대한 출연금을 한국연구재단에 지급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은 다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 생명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그런데, 내역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은 생명과학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될 수 있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있고, 동 조직은 1부, 3실, 9팀으로 이루어지며, 총 인원은 2025년 7월 기준 54명임.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사업수행 체계 및 조직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연구현장안전관리, 안전관리 법·제도 기반 구축,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	사업 내용
연구현장 안전관리	• 연구실·LMO 현장 지도·점검, 사고조사·관리 및 재발방지 강화 •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환경개선지원, 전담조직 구축 지원,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
안전관리 법·제도 기반 구축	• 법령 및 지침정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안전관리 기준개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운영 지원 • 연구실·LMO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법정 신고·승인 업무수행 등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 관리자, 책임자, 종사자 교육 및 분야별 교재개발, 전문 강사양성 등 • 연구실안전주간, 대국민공모전 등 홍보 및 문화확산 활동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당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연구실안전환경에 대한 관심이 바이오안전성평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임.

- 관련 연혁을 살펴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 생명(연) 내 사업조직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를 신설하여 2015년부터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그런데, 연구실안전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안전치안점검회의(6.5.) 및 국무회의(7.5.)에서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속한 검토를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형태(공공기관 등)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법적 근거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01):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지정으로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가 추가되어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동 사업의 예산 및 집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액 59억 8,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울산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내역사업 “Challenge 융합관 건립”은 울산 동남권 지역의 첨단기술 스타트업 지속배출 및 청년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창업 필수 융합교육과 실질적 보육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Challenge 융합관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45억 8,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실집행액은 5억 100만원(10.9%)임.

<2024년도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5,984	5,984	-	-	5,984	5,984	-	-	10,484
○Challenge 융합관 건립	4,584	4,584	-	-	4,584	4,584 [501]	-	-	9,08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 내역사업 “Challenge 융합관 건립”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23년~2027년간 융합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77억 6,400만원임.

○ 동 사업은 2024년 예산 81억 3,500만원 중 5억 100만원(10.9%)만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해당 집행액도 설계비에 해당하여 2024년에 공사비는 집행하지 못하였음.

<Challenge 융합관 건립 사업 총사업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설계비	2,384	581 [581]	1,803 [501]	-	-	-
공사비	42,205	-	5,908 [0]	12,662	21,103	2,532
감리비	3,029	-	424 [0]	909	1,515	181
시설부대비	146	-	-	-	-	146
합계	47,764	581 [581]	8,135 [501]	13,571	22,618	2,859

주: [ ]는 실집행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렇게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동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인데 2023년 12월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관련 절차가 2025년 3월에 마무리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체 예산 배정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3년 12월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지정되어, 2024년 2월에 중간설계를 완료한 후 조달청 적정성 검토 절차 추가(2024년 8월 완료)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 일정(2025년 3월 완료)이 추가되면서 공사 일정이 순연되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4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5년 7월부터 적정성 검토를 한 후 202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

○ 이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4년 공사비 예산의 일부를 2025년 12월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집행 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지정으로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가 추가되어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동 사업의 예산 및 집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25): 수시배정으로 인한 집행부진 시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수시배정으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시배정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및 집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사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61억 1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내역사업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은 반도체 융합 센서 제작을 위한 기업 전용 실험시설 확충을 통해 반도체 센서 스타트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신산업 창출 및 지역혁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45억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실집행액은 21억 9,800만원(15.2%)임.

<2024년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16,101	16,101	-	-	16,101	16,101	-	16,101	14,150
○ 산학연D-센서 실험시설증축사업	14,501	14,501	-	-	14,501	14,501 [2,198]	-	-	11,28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수시배정으로 인한 집행부진 시정 필요

○ 내역사업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23년~2025년간 실험시설을 증축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9억 8,300만원임.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에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시배정사업을 지정되었고(2022년 12월), 2023년 예산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2024년 예산도 145억 100만원 중 21억 9,800만원(15.2%)만 실집행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당시 기획재정부는 사업비가 높은 수준의 공사비 단가가 적용(5백만원/㎡)되었는데, 유사 공종

공사비의 평균 단가(3백만원/㎡) 수준을 적용하여 공사비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결과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총사업비는 변경하지 않도록하면서, 2023년 12월에 수시배정이 해제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 “Challenge 융합관 건립”과 유사하게 2025년 2월부터 중간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총사업비를 재산출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4년 예산을 2025년 12월에 일부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수시배정으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시배정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및 집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1831-40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어린이 과학시설공간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은 전국적으로 고른 과학문화 체험기회의 제공을 위해 과학관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전문과학관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등 지역 과학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15억 4,900만원(예산액 149억 5,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5억 9,000만원) 중 197억 9,600만원(91.9%)를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생활 밀접공간에 어린이 전용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5억원 중 3억원이 실집행되었음.

<2024년도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	14,959	14,959	6,590	-	21,549	19,796	1,187	566	22,682
○ 어린이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	500	500	-	-	500	500 [300]	-	-	500
□ 세출예산비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0	500	-	-	500	500 [300]	-	-	5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형 과학체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매년 1개소당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에 강원특별자치시 영월군이 선정되었고, 2023년, 2024년 각각 5억원, 총 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이 중 8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2억원임.

○ 2020년부터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9억 6,600만원, 2023년에 4억 5,700만원, 2024년에 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현액	집행액 (C)			
2020	(선정)시흥시, 삼척시, 충주시, 순창군, 울산중구	2,500	2,500	2,500	2,500	-	2,500	251	2,500	251	2,249	-	10.0
2021	(2년차) 시흥시, 삼척시, 충주시, 순창군, 울산중구 (선정) 광명시, 구미시, 해남군, 남원시, 태안군	5,000	5,000	5,000	5,000	2,249	7,249	4,654	5,000	2,405	2,595	-	48.1
2022	(2년차) 광명시, 구미시, 해남군, 남원시, 태안군 (선정) 고령군, 성주군, 담양군, 장흥군, 홍성군	5,000	5,000	3,750	3,750	2,595	6,345	5,379	3,750	2,784	-	966	55.7
2023	(2년차) 고령군, 성주군, 담양군, 장흥군 (선정) 영월군	3,500	3,500	2,500	2,500	-	2,500	2,043	2,500	2,043	-	457	58.4
2024	(2년차) 영월군	500	500	500	500	-	500	300	500	300	-	200	60.0
2025	(선정) 밀양시	500	500	250	250	-	250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러한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2024년 영월군의 최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영월군 자체 평가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설계단가 급감 등으로 예산 대비 실집행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콘텐츠의 단순화 발생, 어린이 과학관 건물 내 일부 미활용 유휴공간 발생” 등이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평가되었음.

○ 이러한 자체 평가 결과 및 동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 부족한 어린이 과학시설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업 목적을 감안한다면, 주어진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과학시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어린이 과학시설공간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성 과 평 가
정 책 국
소 관

문 의 처

6788-5227

【 일반회계 】

(1)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R&D) (1037-401):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 관련 지침 미준수 및 나눔장비이전사업 집행 부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심의위 및 운영규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과 운영규정이 미비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준지침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유휴·저활용 장비 양수기관 측면에서 장비 이전·설치비용 지원 신청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R&D)'사업은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17억 8,800만원 전액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 출연하였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그 중 106억 7,1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90.5%)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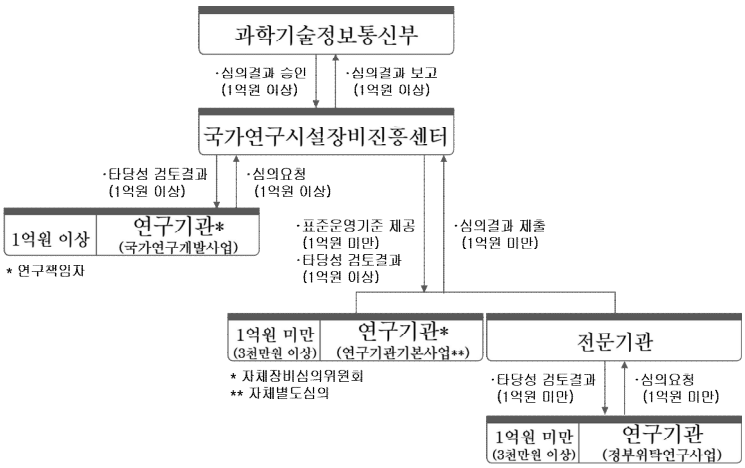
사업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연구장비 도입심의 지원	1,245	1,245	-	-	1,245	1,245 (1,245)	-	-	1,345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245	1,245	-	-	1,245	1,245 (1,245)	-	-	1,345
○ 대형연구시설 사업관리(PM) 운영지원	981	981	-	-	981	981 (921)	-	-	1,128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981	981	-	-	981	981 (921)	-	-	1,128
○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체계 운영	2,892	2,892	-	-	2,892	2,892 (2,892)	-	-	3,692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2,892	2,892	-	-	2,892	2,892 (2,892)	-	-	3,692
○ 연구시설장비 활용촉진	5,830	5,830	-	-	5,830	5,830 (5,003)	-	-	4,381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5,830	5,830	-	-	5,830	5,830 (5,003)	-	-	4,381
○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운영지원	840	840	-	-	840	840 (610)	-	-	858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840	840	-	-	840	840 (610)	-	-	858
합 계	11,788	11,788	-	-	11,788	11,788 (10,671)	-	-	11,4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연구장비 도입심의 지원'사업은 정부 R&D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사업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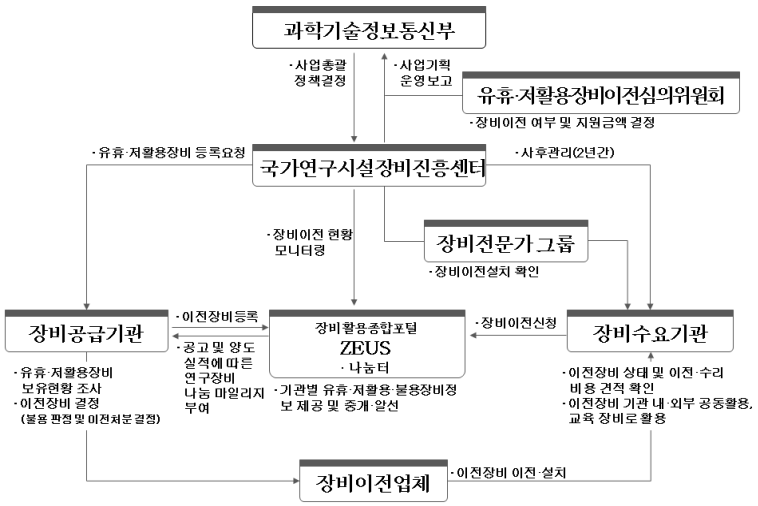
'연구시설장비 활용 촉진'사업은 연구시설장비 전문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을 지원하며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임.

<연구장비 도입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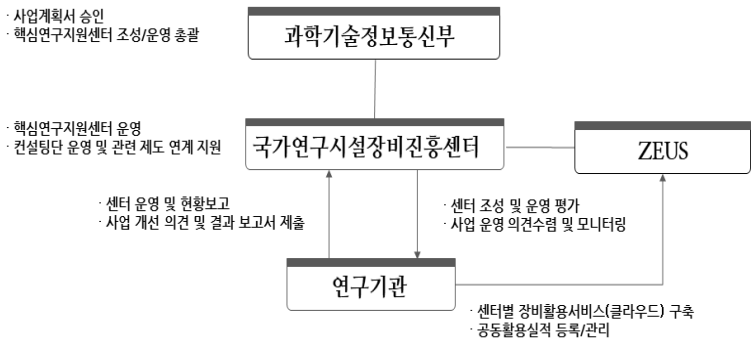


<연구시설장비 활용 촉진 체계>

[유류·저활용장비이전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촉진사업]



나) 검토의견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운영규정 미비 연구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등 조치 필요

○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13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도입 심의를 거쳐야 함.

- ①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에 대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131]

---

130)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3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제18조(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타 법령 또는 행정규칙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연구시설장비(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정부위탁연구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심의하고,[132]

③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각 연구기관별로 구성한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심의위")가 심의하여야 함.[133]

○ 한편, '24년 국가연구시설장비 부처합동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481개 기관 중 39개 기관은 자체심의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심의위를 구성한 442개 기관 중 15개 기관은 별도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표준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각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심의

---

132)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2.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13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2. 연구기관기본사업을 통해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3. 연구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제조・구매/임차/개발)

위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결정하여야 하는바,[134] 모든 연구기관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바탕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장비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심의위를 구성·운영해야 함.

- 또한 표준지침 제7조제2항[135]은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심의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각 연구기관별로 자체심의위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규정을 토대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조속히 자체심의위 및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4)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1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 개선조치, 재배치 및 기관 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35)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체심의위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기관 현황>

(단위: 개, %)

기관 유형	전체 기관 (A)	자체심의위 구성 기관 (B)		운영규정 마련 기관 (C)	
			비율 (B/A)		비율 (C/A)
국·공립(연)	38	34	89.5	33	86.8
정부출연(연)	24	24	100.0	24	100.0
지자체출연(연)	56	52	92.9	53	94.6
대학	207	194	93.7	189	91.3
기타공공기관	67	56	81.2	53	76.8
기타	87	82	94.3	75	86.2
합계	**481**	**442**	**91.9**	**427**	**88.8**

자료: 47-50p, 「2024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심의위 및 운영규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과 운영규정이 미비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준지침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나눔장비이전사업 사업공고 지연을 방지하고 양수기관의 지원금 신청 증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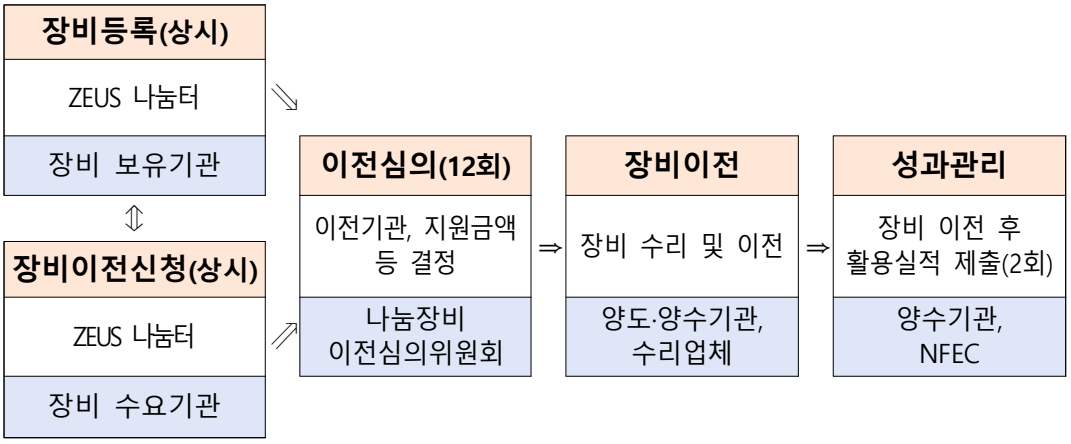
○ 동 사업의 '연구시설장비 활용 촉진'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나눔장비이전지원'사업은 활용성이 저하된 장비(나눔장비)

를 필요로 하는 기관·연구자에게 이전 및 재배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을 통해 유휴 또는 저활용 연구장비[136]를 보유한 기관과 해당 연구장비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연구장비 양수기관에 필요한 사전점검, 수리 및 이전·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 연구장비를 'ZEUS 나눔터'에 등록하여 수요자에게 무상이전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기관에는 실적(공고기간, 장비상태, 취득금액, 경쟁률)에 따라 '나눔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보유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하고 있음.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지원 추진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136) '유휴 연구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연구장비이며, '저활용 연구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연구장비임

○ 최근 3년간 나눔장비이전지원사업을 통해 이전된 연구장비는 증가하는 추세[137]이나,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20억 2,500만원 중 11억 9,800만원만 집행(집행률 59.2%)되며,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의 과제공고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의 협약체결이 2월 말에 이루어지며 2개월분의 지원금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집행 부진 사유로 설명하였음.

- '24년의 경우 2월 말에 나눔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가 이루어졌으며,[138] '25년의 경우에도 3월에 공고[139]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공고 지연은 행정절차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으로, 과제 협약 시기와 관계 없이 1월 중 나눔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공고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으로 충분히 공백기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임.

○ 나눔장비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결과 파악되는 유휴·저활용장비를 나눔장비로 등록하도록 선제적으로 권고하

137) ('22) 483점 → ('23) 565점 → ('24) 615점
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4-0178호 (2024. 2. 23.)
1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5-0281호 (2025. 3. 7.)

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3년도 장비이전 565건 중 지원금 신청이 167건(29.6%)이었으나, '24년도에는 장비이전 615건 중 지원금 신청이 152건(24.7%)으로 연구장비 양수기관의 지원금 신청 건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장비 양수기관에 대하여 장비이전지원을 받은 후 2년간 ZEUS를 통해 활용실적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가 요구되는바, 사후관리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 등의 장비이전지원 신청이 감소한 것도 집행 부진 사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눔마일리지 적립 기준과 유효기간을 상향[140]하는 등 나눔장비이전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나눔마일리지 제도의 수혜대상은 나눔장비 보유기관(공급자)에 한정되므로 수요자인 양수기관의 장비 이전 신청을 직접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유휴·저활용 장비 양수기관 측면에서 장비 이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40) 마일리지 적립 기준 2배 상향 및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 2년 연장(3년→5년)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R&D) (1039-401): 위원 제척사유 확대와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 단축방안 마련을 통한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의 제척 사유를 제재처분평가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거나 소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처분대상자인 연구자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R&D)’사업은 부처별 R&D 제재처분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재처분의 공정성·전문성 및 범부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억 8,100만원 전액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출연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출연금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397	397	-	-	397	397 (397)	-	-	435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397	397	-	-	397	397 (397)	-	-	435
○ 제재제도 개선방안 연구	84	84	-	-	84	84 (84)	-	-	6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84	84	-	-	84	84 (84)	-	-	60
합 계	481	481	-	-	481	481 (481)	-	-	49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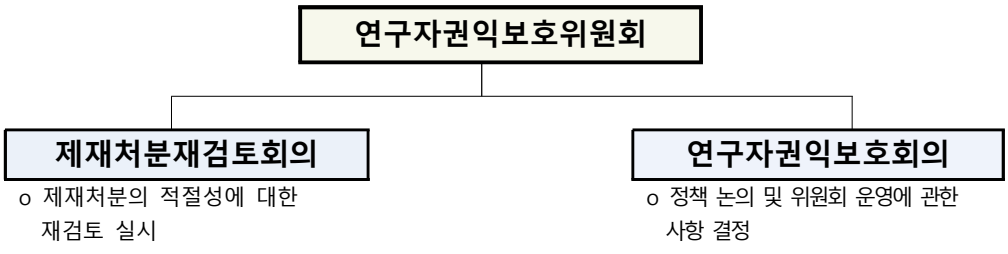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4항[141]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①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회의'와 ②연구자 등에 부과된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로 구분됨.

1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 그 중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각 부처의 제재처분(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재처분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해당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 심의하여 그 결과를 소관 부처에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제척 사유가 제재처분평가단에 준하여 규정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구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와 그 위임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음.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142] 그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민간위원								정부위원	합계
	과학기술분야			법률·회계 등 분야						
	교수	연구원	소계	법률	회계	산업계	지재권	소계		
1기('21.2.~'23.2.)	39	10	49	11	13	11	8	43	4	96
2기('23.3.~'25.3.)	32	14	46	16	14	6	10	46	5	97
3기('25.4.~현재)	23	12	35	25	17	7	8	57	5	9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재처분 재검토 안건이 정해진 이후, 제척사유 유무, 심의일 참석가능 여부, 기술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분야별 위원을 고르게 포함[143]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안건을 심의하고 있음.

○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규정되어 있음.

1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43) 과학기술 3인, 법률 2인, 회계 1인, 지식재산권 1인 (총 7인)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144]에 따라 최초의 제재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평가단")의 제척 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음.

<제재처분평가단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척 사유>

제재처분평가단 (시행령 제60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시행령 제61조제8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음	○ 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1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평가단을 비교해보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는 평가단과 달리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그 밖에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최초의 제재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단과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권고안을 제시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제척사유를 평가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의 제척사유를 제재처분평가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제재처분대상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제재처분 재검토는 과도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 상당한 수의 제재처분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검토를 통해 심의되고 있음.

<제재처분재검토를 통한 제재처분 감경 현황>

(단위: 건, %)

구 분	재검토 심의 건수 (A)	제재처분 감경 건수 (B)	비율 (B/A)
1기('21.2.~'23.2.)	557	231	41.5
2기('23.3.~'25.3.)	780	108	13.8
3기('25.4.~현재)	138	23	16.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한편,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제재처분대상자의 이의신청 후 제재처분을 다시 결정하기까지 30일의 기한이 규정되어 있으나,[145]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조차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가 도입된 '21년 이후 재검토 평균 소요기간과 재검토 요청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

<제재처분재검토 요청 및 처리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재검토 요청 건수 (건)	274	311	363	394
재검토 평균 기간 (일)	50.8	76.5	92.3	14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

14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제재처분을 감경하는 취지의 권고안이 의결되더라도 개별 부처에서 제재처분평가단을 다시 구성하여 제재처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연구자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 단축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거나, 소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처분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처분대상자인 연구자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 가 과 학 기 술
자 문 회 의
사 무 지 원 단
소 관

문 의 처

6788-5227

【 일반회계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1033-402):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수의계약 체결을 최소화하며, 정책연구과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가) 사업 개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 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무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6억 1,900만원 중 22억 1,600만원을 집행(집행률 84.6%)하고, 1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지원단 운영비	2,588	2,588	31	-	-	2,619	2,216	155	248	3,460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상용임금 (110-03)	106	106	-	-	-	106	92	-	14	109
- 일반수용비 (210-01)	298.3	298.3	-	△0.3	-	298	228	-	70	318.4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32	332	-	-	-	332	323	-	9	339
- 특근매식비 (210-05)	10	10	-	-	-	10	3.6	-	6.4	10
- 임차료 (210-07)	717	717	-	-	-	717	701	-	16	749
- 유류비 (210-08)	2	2	-	0.3	-	2.3	2.1	-	0.2	2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5	-	-	-	5	0	-	5	-
- 일반용역비 (210-14)	80	80	-	-	-	80	30.5	-	49.5	100
- 관리용역비 (210-15)	20	20	-	-	-	20	20	-	0	20
- 기타운영비 (210-16)	16	16	-	-	-	16	14	-	2	16
- 국내여비 (220-01)	27.1	27.1	-	△13.2	-	13.9	13.9	-	0	27
- 국외여비 (220-02)	32.4	32.4	-	13.2	-	45.6	45.6	-	0	64
- 사업추진비 (240-01)	23	23	-	-	-	23	9	-	14	23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5	55	-	-	-	55	51	-	4	55
- 직책수행경비 (250-02)	24	24	-	-	-	24	24	-	0	24
- 정책연구비 (260-02)	800	800	31	-	-	831	629	155	47	800
- 고용부담금 (320-09)	21	21	-	-	-	21	9.3	-	11.7	21
- 자산취득비 (430-01)	20	20	-	-	-	20	20	-	0	20
- 실시설계비 (420-02)	-	-	-	-	-	-	-	-	-	32
- 공사비 (420-03)	-	-	-	-	-	-	-	-	-	7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나) 검토의견

□ 정책연구과제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및 이월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

○ 동 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이월액 전액(1억 5,500만원)은 정책연구비(260-02목)에서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정책연구비 예산현액 8억 3,100만원 중 6억 2,900만원을 집행(집행률 75.7%)하였고 1억 5,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비 집행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며, 예산이 이월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470	470	96	566	395	69.8
2022	470	470	110	580	436	75.2
2023	470	470	123	593	543	91.6
2024	800	800	31	831	629	75.7
2025	800	800	155	955	0	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21년 이후 정책연구과제 계약 및 수행 기간을 보면 19개 과제 모두 해당 연도 내에 정책연구과제가 종료되지 않아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였음.

-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 및 정책연구비 집행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체결이 매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문회의 지원단에서는 매년 새롭게 위촉되는 자문위원 활동기간[146]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이 하반기로 집중된다는 입장임.

연도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과제 완료여부	완료시기
2021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의제 발굴	‘21.7.15 ~ ‘22.2.10	완료	‘22.2.10.
	2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계획 조사 분석	‘21.9.6 ~ ‘22.2.2	완료	‘22.2.2.
	3	플라스틱 폐기물 자원순환 공공 R&D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21.8.20 ~ ‘22.1.16	완료	‘22.1.16
	4	과학기술기반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제 발굴 조사•연구	‘21.8.9 ~ ‘22.1.5	완료	‘22.1.5
	5	2021년도 과학기술 국정과제 등 이행 지원방안 연구	‘21.10.19 ~ ‘22.5.17	완료	‘22.5.17
	6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주요산업의 ESG 이슈와 대응방안	‘21.11.30 ~ ‘22.2.27	완료	‘22.2.27

146) 문재인정부 4기 자문위원: ‘21. 8. 6.~22. 8. 5.
윤석열정부 1기 자문위원: ‘22. 10. 28.~23. 10. 27.
윤석열정부 2기 자문위원: ‘23. 11. 27.~‘24. 11. 26.

2022	7	대전환의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자문 방향 연구	'22.6.16 ~ '23.3.12	완료	'23.3.12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후속 관리 연구	'22.7.13 ~ '23.1.9	완료	'23.1.9
	9	민관협력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자문지원 방안 연구	'22.9.7 ~ '23.3.4	완료	'23.3.4
	10	박사후연구원의 경력단계별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수요 발굴	'22.9.13 ~ '23.2.9	완료	'23.2.9
	11	지역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선 방안 연구	'22.8.24 ~ '23.1.22	완료	'23.1.22
2023	12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 자문기구와 협력방안 연구	'23.11.27 ~ '24.5.24	완료	'24.5.24
	13	과학기술 R&D 행정조직의 정책(수립 및 집행)역량 제고 방안 연구	'23.12.5 ~ '24.5.31	완료	'24.5.31
2024	14	과학기술 자문지원을 위한 정책·기술 모니터닝 및 분석 체계 구축 연구	'24.8.26 ~ '25.8.20	추진중	-
	15	R&D 혁신 시스템·전략 동향 분석 및 핵심이슈 도출 연구	'24.8.26 ~ '25.8.20	추진중	-
	16	바이오 기술분야 글로벌 현황, 정보조사·분석 연구	'24.8.26 ~ '25.8.20	추진중	-
	17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시스템 혁신 방안 연구	'24.12.26 ~ '25.10.21	추진중	-
	18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혁신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4.12.26 ~ '25.10.21	추진중	-
	19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공인프라로의 전환방안 연구	'24.12.26 ~ '25.10.21	추진중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147]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동 사업

14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과 같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한 예산집행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48]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앞당기는 등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수의계약 비중 과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구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

148) 9p,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24. 1.

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149]

○ 동 사업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계약 11건 중 10건에 대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1인 입찰 등의 사유로 그 중 9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150]과 제27조제1항 및 제3항[151]에 따른 것임.

---

1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1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1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024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기관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계약 내역					계약유형	수의계약 사유
	계약명	발주금액 (제안 요청서 기준)	낙찰액 (계약 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1	국방 분야에서의 첨단 과학기술 활용방안 연구	49.8	49.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3-24.10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2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 태계 조성방안 연구	50	45.4	(사)한국정책학회	24.5-24.11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3	민간시장 중심 기술사업화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50	45.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5-24.11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4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참여 촉진방안 연구	50	50	㈜티비앤에이	24.5-24.10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5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 체계 발전 방안 연구	50	45	(사)한국정책학회	24.6-24.11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6	과학기술 자문지원을 위한 정책·기술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구축 연구	100	1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8-25.8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7	R&D 혁신 시스템·전략 동향 분석 및 핵심 이슈 도출 연구	80	72.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4.8-25.8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8	바이오 기술분야 글로벌 현황, 정보조사·분석 연구	100	1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4.8-25.8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9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시스템 혁신 방안 연구	80	72.7	(사)한국정책학회	24.12-25.10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0	전략적 경쟁시대 국가혁신체계(NIS) 주체별 변화방향 연구	100	9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12-25.10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1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공인프라로의 전환방안 연구	90	8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12-25.10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3.)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여야 하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152]

- 동 사업의 경우 정책연구과제의 대부분(81.8%)이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다수(72.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를 경우 경쟁입찰,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지연되어 앞서 서술한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및 회계연도 불일치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예산 집행지침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수의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법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152) 188p,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24. 1.

지 식 재 산
전 략 기 획 단
소 관

문 의 처

6788-5227

【 일반회계 】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7034-301): 연례적으로 과소편성되는 국내여비 예산규모 현실화 및 연차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중인 국내여비 예산 규모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 추진 등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사업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총 5개 전문위원회[153]로 구성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38억 5,200만원 중 34억 4,000만원을 집행(집행률 89.3%)하고, 1억 9,400만원을 차년도 이월했으며, 2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153)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2024회계연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216	3,216	636	-	3,852	3,440	194	218	3,196
- 상용임금(110-03)	283	283	-	15	298	298	-	-	292
- 일반수용비 (210-01)	296	296	-	△15	281	203	-	77	296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	5	-	-	5	2	-	3	5
- 특근매식비 (210-05)	25	25	-	-	25	19	-	6	25
- 임차료(210-07)	103	103	-	-	103	63	-	40	103
- 유류비(210-08)	3	3	-	-	3	-	-	3	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	4	-	-	4	3	-	1	4
- 복리후생비 (210-12)	9	9	-	-	9	6	-	3	9
- 일반용역비 (210-14)	750	750	44	-	794	794	-	-	785
- 관리용역비 (210-15)	45	45	-	-	45	33	-	12	45
- 기타운영비 (210-16)	20	20	-	-	20	11	-	9	20
- 국내여비 (220-01)	**16**	**16**	**-**	**24**	**40**	**39**	**-**	**1**	**16**
- 국외업무여비 (220-02)	**37**	**37**	**-**	**△24**	**13**	**7**	**-**	**6**	**37**
- 사업추진비 (240-01)	28	28	-	△4	24	18	-	6	28
- 관서업무비 (240-02)	12	12	-	4	16	16	-	-	12
- 직책수행경비 (250-02)	52	52	-	-	52	32	-	20	52
- 정책연구비 (260-02)	913	913	336	-	1,249	1,041	194	15	91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45	545	256	-	801	792	-	9	483
- 고용부담금	60	60	-	-	60	55	-	5	57

기능별·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320-09)									
- 자산취득비 (430-01)	10	10	-	-	10	10	-	-	1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나) 검토의견

□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세목조정 방지를 위하여 국내여비 예산 편성 규모 현실화 필요

○ 2024년 동 사업의 이·전용 등 세부내역을 보면 국외업무여비(220-02목) 예산 3,700만원 중 2,4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목)으로 전용(세목조정)하였음.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4.9.2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20-02	1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20-01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따른 회의, 행사 등 소요를 고려한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
세목조정 '24.10.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40-01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40-02	제7기 지재위 출범 이후 지식재산 현안 관련 입법부, 사법부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업무협의 소요 다수 발생에 따른 관서업무비 부족분 확보

이·전용 '24.11.0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10-01	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110-03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상용임금 부족분 전용
세목조정 '24.12.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20-02	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20-01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이후 회의 증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회의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소속 직원의 출장 소요를 국내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19년 이후 매년 국내여비 예산이 부족하여 세목조정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있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관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예산편성액	29	28	27	18.5	17.6	17	16.2	15.9
세목조정	0	0	7	14.3	12.4	18	29.6	24
예산현액(A)	29	28	34	32.8	30	35	45.8	39.9
집행액(B)	21	14	33.5	32.7	30	35	42.7	38.7
집행률(B/A)	72.4	50.0	98.5	100.0	100.0	100.0	93.0	9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①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 이후 매년 2,700만원~3,000만원 수준에서 편성되던 국내여비 예산이 '20년 이후 급감하였고, ②'19년 청사의 세종 이전으로 서울로의 근무지外 출장 소요가 증가하며 국내여비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고 함.

- '25년도 국내여비 예산 또한 1,600만원으로 편성된바, 예년과 같이 회의를 운영할 경우 예산 부족 및 세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매년 국내여비 예산소요 수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목조정을 거쳐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음.

- 「국가재정법」은 제45조[154]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같은 법 제46조[155] 및 제47조[156]에 따라 예외적

---

15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5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으로 예산의 이·전용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연평균 근무지외 출장여비 및 국내여비 지출 현황 등[157]을 바탕으로 연례적인 전용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소편성되는 국내여비 예산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법령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매년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하는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15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156)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157) 최근 3년('22~'24년) 동안의 연평균 근무지外 출장여비 지출규모는 3,790만원이며, 국내여비 지출금액은 3,880만원임.

158) **「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실적, 지식재산 관련 동향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매년 정책연구비를 배정하고,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거쳐 선정된 기관을 통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관련 계약 체결내역을 보면 최근 연차보고서 작성연구는 항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159]이 수행하고 있음.

<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용역 계약현황>

용역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계약상대방
	시작	종료		
2017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18/1/30	2018/3/31	19.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19/1/17	2019/3/22	19.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20/1/20	2020/3/19	19.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21/1/18	2021/3/19	19.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22/1/3	2022/3/31	2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23/1/4	2023/3/31	2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24/1/8	2024/3/31	2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2024/9/27	2025/5/25	17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24년의 경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정안건 수립방안 연구용역과 함께 계약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159)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정기적으로 작성되는 것임에도 매번 계약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차보고서 작성연구용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160]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동향 등을 분석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할만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의계약에 부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임.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시행령에 따른 금액기준(2천만원)은 2015년 이후 고정된 상태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 금액이 상승하지 못하는 문제도 예상됨.

---

1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 작성 업무를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대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식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 보 통 신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디지털역량강화교육(1945-301):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 증액 등 개선책 마련 필요

○ 디지털배움터 예산 축소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교육인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거점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취약계층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사업구조 재설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배움터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강사의 지속 고용 등 강사 및 서포터즈 고용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356억 8,500만원이고, 사업시행주체(광역자치단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집행액은 338억 7,000만원(94.9%)임.

<2024년도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세부사업명	35,685	35,685	-	-	35,685	35,685 [33,870]	-	-	32,085
○디지털역량함양 지원	35,685	35,685	-	-	35,685	35,685 [33,870]	-	-	32,085
□ 세출예산비목	35,685	35,685	-	-	35,685	35,685 [33,870]	-	-	32,085
○ 자치단체경상 (330-01)	560	560	-	-	560	560 [560]	-	-	560
○ 사업출연금 (350-02)	35,125	35,125	-	-	35,125	35,125 [33,310]	-	-	31.5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동 사업은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이 279억 3,600만원으로 전체 세부사업 예산의 88.6%를 차지하고 있음.

-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까지 디지털 기기의 활용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임.

나) 검토의견

□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 증액 등 개선책 마련 필요

○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2023년도까지 일반회계의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의 내역사업이었으나 2024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고, 사업의 예산은 2023년도 698억 4,00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279억 3,600만원으로 60%가 감액되었음.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 비교>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세부사업명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1945-501) * 일반회계	디지털역량강화교육(1945-3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	69,840백만원	27,936백만원
산출내역	1,000개소 × 9.7백만원 × 9개월 x 80% = 69,840백만원	36개소 × 970백만원 × 80% = 27,936백만원
예산상 배움터 수	1,000개소	36개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전국 약 1,000개소 내외의 배움터를 운영하였지만, 2024년도에 사업을 개편하면서 전국 36개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였음.

○ 그러나 2024년도에 예산을 감액하면서 기존에 약 1,000개 내외로 운영하던 디지털배움터를 36개 거점센터 위주로 축소한 결과, 교육인원수가 대폭 감소하였음.

- 2023년도에는 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1,011개의 디지털 배움터에서 99만 6,000명이 교육을 받았던 반면, 2024년도에는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및 찾아가는 교육(3,748장소)으로 54만 5,000명이 교육을 받았음.

<디지털배움터 주요 성과>

(단위: 개, 만명, 2025. 6. 15. 기준)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교육인원	42.8	65.6	79.3	99.6	54.5	13.6
배움터 수	1,076	1,033	911	1,011	36 ※파견교육: 3,748	3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광역지자체별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수, 파견교육 장소수 및 교육인원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파견교육을 통해 교육을 제공한 교육장 수는 증가하였으나 교육인원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거점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광역지자체(경남)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디지털배움터 현황>

(단위: 개, 2024. 12. 31. 기준)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파견교육 장소수
서울	152	144	123	137	4	267
부산	109	109	95	110	2	249
대구	26	32	33	37	2	173
인천	31	40	35	39	2	67
광주	32	32	27	30	2	159
대전	33	38	32	36	2	114
울산	20	20	18	20	1	179
세종	15	12	11	12	1	47
경기	133	125	119	137	6	346
강원	77	56	46	46	1	281
충북	50	50	45	50	2	250
충남	52	52	46	51	1	281
전북	62	58	52	58	2	180
전남	85	90	75	80	3	238
경북	102	85	75	80	3	412
경남	68	57	44	48	-	379
제주	29	33	35	40	2	126
합계	**1,076**	**1,033**	**911**	**1,011**	**36**	**3,74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역지자체별 교육인원 현황>

(단위: 천명, 2024. 12. 31. 기준)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서울	63.1	84.3	90.1	116.0	38
부산	50.7	63.1	68.7	107.5	71.7
대구	8.5	21.8	32.3	43.0	30.4
인천	22.9	34.8	28.8	30.5	21.7
광주	7.1	13.7	28.3	30.6	17.9
대전	18.6	26.4	29.7	43.0	11.8
울산	10.7	16.8	15.2	21.1	20.8
세종	4.1	6.8	8.6	12.5	10.6
경기	59	67.1	78.9	110.7	53.2
강원	23.3	34.7	31.3	33.2	20.3
충북	17.6	38.7	44.0	57.5	27
충남	15.6	27.3	54.1	67.1	32.1
전북	15.7	46.5	57.7	62.3	36.7
전남	39.1	63.8	86.1	105.5	45.3
경북	33.8	52.9	73.6	73.0	49.7
경남	32.3	43.3	37.5	47.7	39.3
제주	6.1	14.2	27.8	35.2	19.1
합계	**428.2**	**656.2**	**792.7**	**996.4**	**545.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2025년 3월 발표된 디지털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23년 대비 0.6%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77.5%에 불과한바, 디지털배움터 예산 축소와 거점센터 위주의 사업운영이 디지털격차 해소를 더디게 만들 우려가 제기됨[161].

<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접 근	93.7	94.4	96.0	96.5	96.5
역 량	60.3	63.8	64.5	65.1	65.6
활 용	74.8	77.6	78.0	79.0	80.0
종 합	**72.7**	**75.4**	**76.2**	**76.9**	**77.5**

주: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자료: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3.

○ 따라서 취약계층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 증액, 사업구조 재설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됨.

□ **디지털배움터 강사 및 서포터즈 고용 관련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배움터의 교육 강사 및 서포터즈는 매년 정기모집과 수시모집 방식을 병행하여 단기 계약(1년)으로 채용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도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이 감액되면서 강사 및 서포터즈의 채용 인원수도 5,005명('23년)에서 2,326명('24년)으로 크게 감소한바 상당수가 재고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배움터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강사의 지속고용 등 강사 및 서포터즈 고용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2033-300): 사업관리 강화 및 수행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특회계의 성격상 동 사업에 대한 관리의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례적인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동 사업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스마트 서비스의 보급·확산과 신규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개의 내역사업이 있음.

-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사업은 농어촌 생활 전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사업이고,

-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내 스마트 인프라구축을 통해 ICT 기반 노인복지 선도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출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3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전국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 995억 1,900만원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광역시·도는 이 중 898억 5,600만원을 실집행(90.3%)하였음.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9,519	99,519	-	-	99,519	99,519 [89,856]	-	-	112,980
○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73,239	73,239	-	-	73,239	73,239 [63,576]	-	-	88,406
○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26,280	26,280	-	-	26,280	26,280 [26,280]	-	-	24,574
□ 세출예산비목	99,519	99,519	-	-	99,519	99,519 [89,856]	-	-	112,98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99,519	99,519	-	-	99,519	99,519 [89,856]	-	-	112,9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보조금 실집행률 부진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동 사업의 사업 수행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개 광역시·도[162]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거나 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교부하여 기초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집행하는 방식임.

○ 그런데 20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이후 동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기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 실적이 다소 낮고 이월액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25. 6. 30. 기준)

연도	예산액	지자체 기준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C)	불용액 (A-B-C)
2023	63,241	-	63,241	47,305	74.8	12,999	2,937
2024	99,519	12,999	112,518	75,212	66.8	34,530	2,777
2025	112,980	34,530	147,510	8,458	5.7	-	-

주: 집행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162)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세종과 제주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 구체적으로 2024년도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한 현황 및 재교부받은 기초지자체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집행실적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2024년도 광역시·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25. 6. 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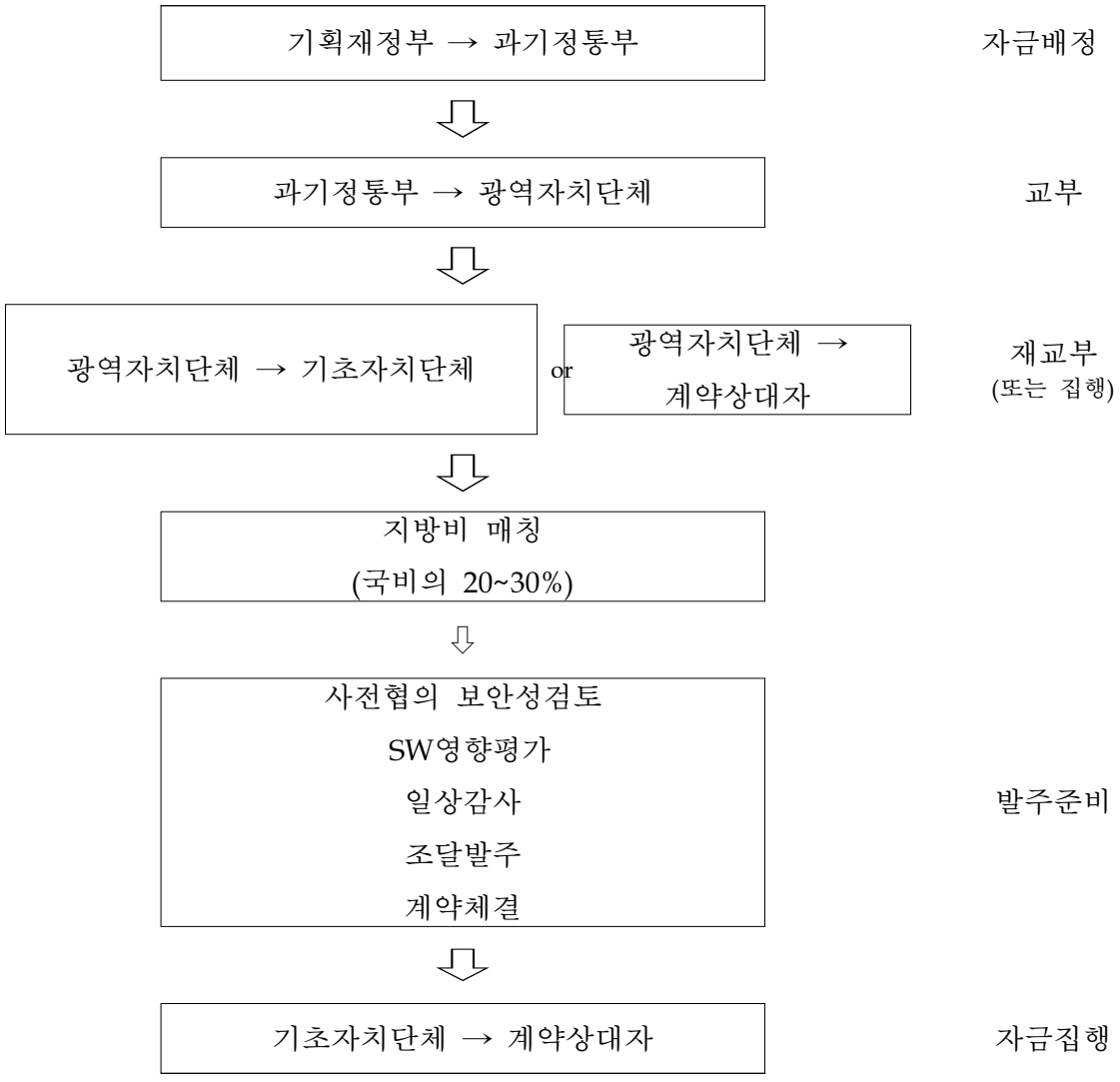
시도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서울	3,618	-	3,618	2,763	76	673
경기	8,723	1,511	10,234	9,338	91	488
인천	19,985	5,349	25,334	12,348	49	12,017
강원	5,272	545	5,817	5,233	90	561
대전	3,312	823	4,135	2,280	55	1,720
충북	2,497	-	2,497	2,125	85	322
충남	9,266	1,766	11,032	5,164	47	5,821
광주	3,184	-	3,184	1,278	40	1,753
전북	6,466	-	6,466	1,773	27	4,693
전남	3,701	418	4,119	3,344	81	472
대구	3,120	428	3,548	3,086	87	427
경북	4,262	531	4,793	2,576	54	2,112
부산	14,881	1,316	16,197	12,679	78	3,471
울산	1,000	312	1,312	1,143	87	-
경남	10,232	-	10,232	10,082	99	-
합계	**99,519**	**12,999**	**112,518**	**75,212**	**67**	**34,530**

주: 집행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자금 재교부 및 지방비 매칭 절차와 SW사업 사전협의, 일상감사 등 사전 행정절차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월액이 있었다는 설명임.

<자금 교부 회계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러나 2023년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첫 번째 해임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도 및 2025년 6월 현재에도 실집행은 여전히 부진하고, 동 사업의 예산은 3년 연속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따라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획[163]하고 추진하는 지특회계의 성격상 동 사업에 대한 관리의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례적인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방식 점검 등 사업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2023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계정)로 변경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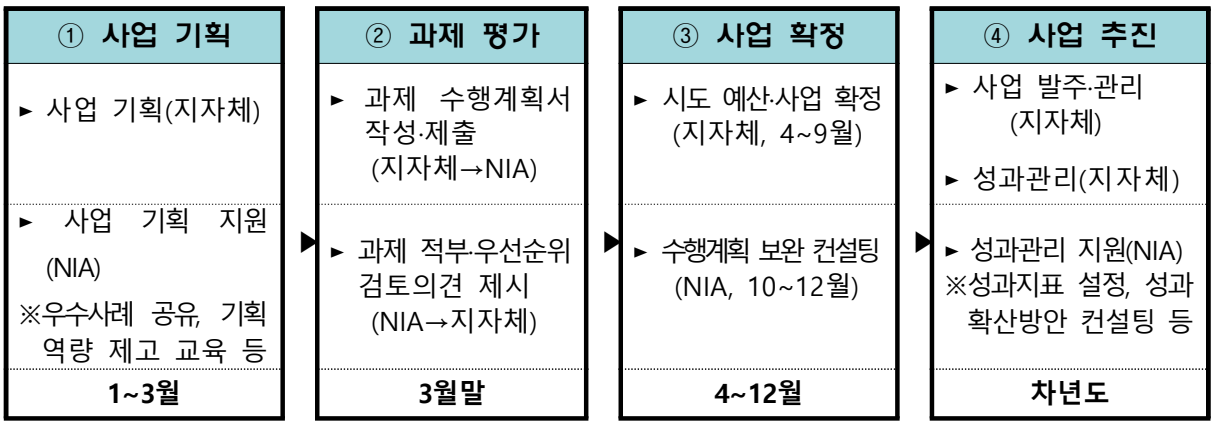
○ 지특회계의 특성상 예산 편성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격성·우선순위 평가 내용이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절차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계정 예산 편성 일정
- ~2월 : 광역시·도가 사업을 기획하고 그 수요를 과기정통부로 제출
- 3월 : 과기정통부는 세부 과제에 대해 심사하고 검토결과를 광역시·도로 회신
- ~4월 : 광역시·도는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과기정통부로 예산신청
- ~5월 : 과기정통부는 기재부로 예산요구
- 6~9월 초 : 기재부는 지특 자율계정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여 정부예산(안) 확정
- 12월 : 국회 예산(안) 확정

○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19년 이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해온 기관으로서 지특회계(자율계정)로 변경된 이후에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사업 추진 절차>



○ 다만, 지특회계(자율계정)에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집행 점검 및 사업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도별 예산	4,000	8,000	6,000	10,000	63,241	99,519	112,980
사업관리비	326	586	708	1,110	500	-	-
회계	정진기금	정진기금	정진기금	정진기금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22년도까지는 NIA에 100% 출연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 예산이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되지 않았고 다른 사업의 내내역사업에 편성(5억원)[164]되었음.

○ 그 후 2024년에는 이러한 예산조차 편성되지 못한채[165]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IA가 2024년도 사업관리비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음에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 사업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여전히 사업 컨설팅, 과제 기획서 심사,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현재의 이러한 사업관리는 사업관리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집행 부진 문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동 사업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64) “국가디지털 전환 촉진” 세부사업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내역사업 內 하나의 내내역사업인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이 예산을 스마트빌리지 사업 관리에 집행하였음.

165) 2024년도 예산의 경우 국가 디지털 전환 촉진(1943-506)사업이 폐지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601-359)로 통합조정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촉진” 내내역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음.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디지털융합촉진과
소 관

문 의 처

6788-5230

【 일반회계 】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601-359):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의 과제 및 사업수행자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속한 과제 발굴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액 190억원이 전액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19,000	19,000	19,000	19,000	-	19,000	18,392	392	216	17,000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14,000	14,000	14,000	14,000	-	14,000	13,565	383	52	12,000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	5,000	5,000	5,000	5,000	-	5,000	4,827	9	164	5,000
□ 세출예산비목	19,000	19,000	19,000	19,000	-	19,000	18,392	392	216	17,000
○ 사업출연금 (350-02)	19,000	19,000	19,000	19,000	-	19,000	18,392	392	216	17,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과제를 추진하고(내내역사업 '국민체감형 민간 혁신 프로젝트'),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등이 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임(내내역사업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 동 내역사업에서는 2024년도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체감형 민간 혁신 프로젝트 5개 과제 및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함.

○ 동 내역사업 과제는 단년도 과제로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당초 2024년 5~6월 중 과제별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중간보고회 개최 및 추진 현황 점검을 거쳐 12월 최종 보고회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음.

○ 그런데 동 사업 과제별 공모 및 사업수행자 선정 일시를 보면, 모든 과제가 2024년 하반기 이후 공모 및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수행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8월에 2024 회계연도 사업이 최종 종료[166]될 예정임.

<동 사업 과제별 공모 및 사업수행자 선정 일시>

과제명	공모기간	사업자 선정
개인의료정보공유체계 구축	'24.11.14~12.11	'24.12.20
DPP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24.10.10~11.1	'24.12.9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24.11.12~12.4	'24.12.24
에너지분야 통합검침 실증	'24.9.12~10.8	'24.11.1
교통약자 이동지원 미드플랫폼 구축 및 실증	'24.9.12~10.8	'24.11.1
산업재해 부담 작업 예방플랫폼 구축	'24.8.8~8.30	'24.9.25
생성형 AI 기반의 고위험 고립 위기 청(소)년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24.8.13~9.3	'24.9.25
만성 폐질환 재택의료 서비스를 위한 휴대용 AI 다중 진단 의료 시스템 구축	'24.8.14~9.3	'24.10.2
경북도 지능형 농촌 모빌리티 안전 모니터링 및 민원 대응 체계 구축	'24.8.9~9.4	'24.9.30
실시간 유동인구 기반 산불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24.9.13~10.11	'24.10.2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166)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해결 프로젝트 5개 과제는 2025년 3월에 종료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제 선정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과제 발굴 수요 조사 등을 거쳐 4월 중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세부 과제별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 검토, 조달 발주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은 단년도 과제 지원을 통해 단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속한 과제 발굴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2601-403)·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2601-405): 사업출연금 예산을 이용한 사업수행기관 경상비 지출 행위 재발 방지 필요

○ 동 사업들의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 사업출연금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사비용을 지급하였는바, 동 기관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산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은 지역(광주, 대구, 대전)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AI 융합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액 110억원이 전액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은 지역 의료기기 제조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액 50억원이 전액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11,000	11,000	11,000	11,000	-	11,000	10,917	-	83	9,900
○ 광주 AI 의료 생태계 구축	7,000	7,000	7,000	7,000	-	7,000	6,959	-	41	6,300
○ 대구 AI 의료 생태계 구축	2,000	2,000	2,000	2,000	-	2,000	1,972	-	28	1,800
○ AI 의료지원 플랫폼 구축	2,000	2,000	2,000	2,000	-	2,000	1,986	-	14	1,800
□ 세출예산비목	11,000	11,000	11,000	11,000	-	11,000	10,917	-	83	9,900
○ 사업출연금 (350-02)	11,000	11,000	11,000	11,000	-	11,000	10,917	-	83	9,9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2024년도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5,000	5,000	5,000	5,000	-	5,000	4,988	-	12	5,000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I기반 뇌발달 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지원	5,000	5,000	5,000	5,000	-	5,000	4,988	-	12	5,000
□ 세출예산비목	5,000	5,000	5,000	5,000	-	5,000	4,988	-	12	5,000
○사업출연금 (350-02)	5,000	5,000	5,000	5,000	-	5,000	4,988	-	12	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출연금 예산을 이용한 사업수행기관 경상비 지출 행위 재발 방지 필요**

○ 위의 두 사업은 모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의 의료 AI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출연금(350-02)이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 예산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비용 약 3,000만원을 지출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사비용 지출현황>

사업명	용역계약명	계약금액(원)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 및 원외사무소 사무가구 등 이사용역	14,938,000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외사무소 파티션 등 사무집기 이전설치 용역	16,555,000
	계	31,493,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헬스 사업추진단이 2024년 3월 AI융합본부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본부 간 시너지 창출 및 원외사무소 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외사무소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원 이전에 필요한 이사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출연기관의 이사비용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2037-301)'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사비용은 해당 사업 경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임.

<2024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지원	38,429	38,429	38,429	38,429	-	38,429	37,272	-	1,157	37,401
○ 인건비	27,421	27,421	27,421	27,421	-	27,421	26,663	-	758	28,227
○ 경상비	**5,955**	**5,955**	**5,955**	**5,955**	**-**	**5,955**	**5,665**	**-**	**290**	**6,128**
○ 사업비	5,053	5,053	5,053	5,053	-	5,053	4,944	-	109	3,046
□ 세출예산비목	38,429	38,429	38,429	38,429	-	38,429	37,272	-	1,157	37,401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33,376	33,376	33,376	33,376	-	33,376	32,328	-	1,048	34,355
○ 사업출연금 (350-02)	5,053	5,053	5,053	5,053	-	5,053	4,944	-	109	3,04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향후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

(3)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2601-303):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적기 추진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제2기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제2기 위원을 위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 절차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사업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정책 수립, 데이터 관련 신규 제도 시행 및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 동 사업 2024회계연도 계획액 36억 3,900만원 중 1억 6,400만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내내역사업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지원)이며, 나머지 34억 7,500만원은 출연·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임.

<2024년도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사업 결산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 부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데이터활용확산 정책지원	164	164	68	-	232	82	-	150	-*
○국가데이터정책지원	164	164	68	-	232	82	-	150	-
□ 세출예산비목	164	164	68	-	232	82	-	150	-
○ 일반수용비 (210-01)	158	158	-	-	158	10	-	148	-
○ 일반용역비 (210-01)	-	-	68	-	68	68	-	-	-
○ 사업추진비 (240-01)	6	6	-	-	6	4	-	2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2025회계연도부터 내역사업 '국가데이터정책지원'은 타 세부사업(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 2604-301)으로 이관

<2024년도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사업 결산현황(출연·보조·민간위탁 부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데이터활용확산 정책지원	3,475	3,475	3,475	3,475	-	3,475	3,288	-	187	2,615
○ 국가데이터정책 지원	625	625	625	625	-	625	560	-	65	-*
○ 데이터 활용·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	2,500	2,500	2,500	2,500	-	2,500	2,402	-	98	1,965
○ 데이터 산업제도 기반 활성화	350	350	350	350	-	350	326	-	24	650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세출예산비목	3,475	3,475	3,475	3,475	-	3,475	3,288	-	187	2,615
○ 사업출연금 (350-02)	625	625	625	625	-	625	560	-	65	-*
○ 민간경상보조 (320-01)	2,500	2,500	2,500	2,500	-	2,500	2,402	-	98	1,965
○ 민간위탁 (320-02)	350	350	350	350	-	350	326	-	24	6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2025회계연도부터 내역사업 '국가데이터정책지원'은 타 세부사업(데이터경제인프라구축, 2604-301)으로 이관

나) 검토의견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적기 추진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인 '국가데이터 정책지원'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 이 중 내내역사업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지원'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임[167].

○ 이에 따라 2022년 9월 제1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30인(정부위원 15인 및 민간위원 15인)이 구성·위촉되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2년 9월 14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임.

○ 그런데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위원 위촉이나 기존 위원에 대한 연임 절차 없이 제2기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

167)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별다른 근거 없이 제1기 위원들이 후임 위원 위촉시까지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일부 입법례[168]에서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말 정치적 상황 변동 등으로 제2기 위원 위촉이 어려웠다고 설명함.

○ 그러나 제1기 위원의 임기가 2024년 9월에 만료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위원 위촉은 정치적 상황 변동 이전에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024년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이후로는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분과위원회별로 한 차례 서면회의를 개최한 데 그치고 있어, 제1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6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임기)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제76조(위원의 임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024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회의명	일시	참석 위원 수	주요 내용
본회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24.8.7.~8.26.(서면)	29인	▶「2024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안)」(관계부처 합동) 심의·의결
분과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보호·활용 분과회의	'24.5.17. 10:30~12:30	분과위원 6인	▶'24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및 '25년도 신규사업 기획방향 등 검토·논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기반 분과회의	'24.5.17. 14:00~16:00	분과위원 4인	▶'24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및 '25년도 신규사업 기획방향 등 검토·논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유통·거래 분과회의	'24.5.21. 10:30~12:30	분과위원 5인	▶'24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및 '25년도 신규사업 기획방향 등 검토·논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회의	'24.5.23. 15:00~17:00	분과위원 5인	▶'24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및 '25년도 신규사업 기획방향 등 검토·논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총괄 분과회의	'24.5.27. 15:00~17:00	분과위원 4인	▶'24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및 '25년도 신규사업 기획방향 등 검토·논의 ▶분과별 추진사항 점검 및 의견수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총괄 분과회의	'24.12.5.~12.11.(서면)	분과위원 3인	▶데이터 정책 필요 분야 의견조사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전략(안) 논의 등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회의	'24.12.5.~12.11.(서면)	분과위원 5인	▶데이터 정책 필요 분야 의견조사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전략(안) 논의 등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유통·거래 분과회의	'24.12.5.~12.11.(서면)	분과위원 6인	▶데이터 정책 필요 분야 의견조사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전략(안) 논의 등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기반 분과회의	'24.12.5.~12.11.(서면)	분과위원 5인	▶데이터 정책 필요 분야 의견조사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전략(안) 논의 등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보호·활용 분과회의	'24.12.5.~12.11.(서면)	분과위원 6인	▶데이터 정책 필요 분야 의견조사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전략(안) 논의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속히 제2기 위원을 위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 절차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정 실적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국가데이터 정책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및 관련 홈페이지 운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액은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169], 2023년 10월 신규 설치되어 조정위원 28인을 위촉하였음.

○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1년간 회의 개최 횟수는 전체회의 3회(서면 2회, 대면 1회), 조정회의 1회로 4회에 그쳤으며, 조정 접수 건수는 3건, 그 중 조정 성립 건수는 1건에 불과하였음.

---

169)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2024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일시	참석 위원 수	주요 내용
전체회의	'24.3.4. (서면)	24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안)」 심의·의결
	'24.3.5.	21인	▸「'24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논의
	'24.12.17 ~12.23. (서면)	15인	▸「'24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논의
조정회의	'24.5.24.	조정부 위원 3인	▸「데이터 분쟁조정 조정부회의」 심의·의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관련 분쟁조정 영역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위원회 출범 초기로 타 조정위원회 대비 조정 실적이 저조하나, 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소 프 트 웨 어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8

【 일반회계 】

(1)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2233-339): 사업의 조기종료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설계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

○ 동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면서 사업이 조기종료되었고 연구개발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정산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관리도 부실하였음. ○ 사업의 조기종료는 성과없는 매몰비용의 발생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설계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가) 사업 개요

○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우주산업 분야에 국내 SW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력 강화를 위해 우주산업에 특화된 SW 핵심기술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종료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 5억 8,700만원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출연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	587	587	587	587	-	587	587	-	-	-
○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	587	587	587	587	-	587	587	-	-	-
□ 세출예산비목	587	587	587	587	-	587	587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587	587	587	587	-	587	587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의 조기종료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설계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우주산업특화SW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위성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발사체 설계 시뮬레이션 SW 및 다기종 위성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2023년도부터 추진되었음.

- 당초 계획에 따른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고, 총사업비는 117억 3,300만원임.

○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액이 전년대비 75.5% 감소한 5억 8,700만원이 편성된 후, 2025년도에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동 사업은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의 축소·변경, 연구개발비 총액 감소,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과제별 변경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범용 우주발사체 임무설계 및 성능해석 통합 SW개발		초소형 위성의 운용 지원을 위한 지상 SW플랫폼 기술개발	
	계획	최종	계획	최종
연구개발 목표	-발사체 임무설계·성능해석을 위한 통합SW 개발 -단·형상 설계, 고급 임무설계 기능 등을 포함하는 범용 SW 개발 -개발SW는 외산SW와 벤치마킹, 민간기업 보유 시험·발사 데이터를 통한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성 검증 -민간기업의 실제 채택 가능성 제고	-발사체 임무설계·성능해석을 위한 통합SW 개발 -개발SW는 외산SW와 벤치마킹을 통해 신뢰성 검증	-지상국 송·수신 프로토콜 범용 인터페이스 개발 -환경 모니터링 및 고장탐지 기술 개발 -ARD(Analysis Ready Data) 자동생성 기술 개발 -지상국 및 인프라 개술 개발	-지상국 송·수신 프로토콜 범용 인터페이스 개발 -지상국 및 인프라 개술 개발
연구 개발비	**총 6,000** -1년차('23): 1,200 -2년차('24): 1,600 -3년차('25): 1,600 -4년차('26): 1,600	**총 1,500** -1년차('23): 1,200 -2년차('24): 300	**총 5,733** -1년차('23): 1,200 -2년차('24): 1,333 -3년차('25): 1,600 -4년차('26): 1,600	**총 1,487** -1년차('23): 1,200 -2년차('24): 287
연구개발 기간	2023~2026년	2023~2024년	2023~2026년	2023~2024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동 사업은 두 개의 연구과제 모두 2025년 8월 기준 연구개발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170]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동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면서 사업이 조기종료되었고, 연구개발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정산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관리도 부실하였음.

○ 또한 사업의 조기종료는 성과없는 매몰비용의 발생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설계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170)「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진흥기금 】

(2)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2232-325):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사업을 개편하면서 성과지표는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지표가 없는 내역사업이 존재하거나, 1차적 산출물에 해당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가) 사업 개요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은 비전공자(또는 일반인)부터 대학생, 재직자까지 초·중급 실무인재를 대상으로 산업계 현장 수요 기반의 실전적 교육을 통해 창의·혁신적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DX), 인공지능 일상화(AX) 등 산업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인재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 818억 5,800만원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 중 815억 1,000만원(99.6%)을 실집행하였음.

<2024년도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81,858	81,858	81,858	81,858	-	81,858	81,510	-	348	50,752
○ 대학·기업 협력형 SW아카데미	16,051	16,051	16,051	16,051	-	16,051	16,050	-	1	12,842
○ 채용연계형 SW전문인재양성	10,883	10,883	10,883	10,883	-	10,883	10,816	-	67	9,282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19,309	19,309	19,309	19,309	-	19,309	19,228	-	81	5,059
○ SW마에스트로	9,700	9,700	9,700	9,700	-	9,700	9,696	-	4	7,760
○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10,200	10,200	10,200	10,200	-	10,200	10,068	-	132	6,780
○ SW역량검정	2,500	2,500	2,500	2,500	-	2,500	2,497	-	3	2,000
○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12,225	12,225	12,225	12,225	-	12,225	12,173	-	52	6,237
○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990	990	990	990	-	990	982	-	8	792
□ 세출예산비목	81,858	81,858	81,858	81,858	-	81,858	81,510	-	348	50,752
○ 사업출연금(350-02)	81,858	81,858	81,858	81,858	-	81,858	81,510	-	348	50,75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은 인재양성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대상과 목적에 따라 사업을 재구성하면서 다수의 기존 사업 등을 통합하여 2024년도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171], 동

사업에는 8개의 내역사업이 있고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21~'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5.2	85.2	85.2	85.5	85.7	최근 3개년 ('21년 ~'23년) 목표치 평균값 85.2점 대비 상향 설정	∑(내역사업별 교육생 만족도 평균(100점 만점) × 내역사업별 예산) / 전체 사업예산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보고서
	실적	89.2	86.0	88.3	89.9	-			
	달성도	104.7	100.9	103.6	105.1	-			
산업재직자AI 역량강화 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	목표	2,400	5,600	5,040	3,050	1,980	8개산업x200명, 바우처 28개사×10명, 디지털전환 전문가 100명	각 산업분야별 교육 이수자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2,931	6,268	5,841	3,830	-			
	달성도	122.1	111.9	115.9	125.6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사업을 개편하면서 성과지표는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지표가 없는 내역사업이 존재하거나, 1차적 산출물에 해당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지표가 없는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성과지표 "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의 측정산식은 "∑(내역사업별 교육생 만족도 평균(100점 만점) × 내역사업별 예산) /

171) 참고자료 참조

전체 사업예산”으로 2024년도 실적인 89.9점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동 지표는 8개의 내역사업 중 5개의 내역사업(총 사업예산의 68.7%)에 대해 성과를 산출하였음.

<2024년도 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 실적 산출내역>

내역사업명	교육생 만족도(A)	사업 예산(B)	전체예산대비 가중치(C)	만족도 (A×C)
대학·기업협력형SW아카데미	91.60	16,051	28.54%	26.14
이노베이션아카데미	86.70	19,309	34.33%	29.76
SW마에스트로	90.87	9,700	17.24%	15.67
산업재직자AI역량강화	92.02	10,200	18.13%	16.69
AI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인재	92.50	990	1.76%	1.63
계		**56,250**	**100%**	**89.8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음.

- ‘채용연계형 SW전문인재 양성’ 사업은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중·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108억 8,300만원임.

- ‘SW역량검정’ 사업은 SW전공 대학생 및 SW개발 종사자 등

의 실무역량 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25억 원임.

-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은 청년 및 석·박사과정생, 재직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메타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122억 2,500만원임.

○ 이처럼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의 개편 후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성과평가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가 없는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및 인력의 단순 투입을 통해 달성되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성과지표 “산업재직자AI역량강화 교육 이수자 수”는 내역사업 중 ’산업재직자AI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임.

- ’산업재직자AI역량강화‘ 사업은 산업계 재직자에게 수요맞춤 AI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산업에 AI도입·확산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대상 전사 교육 및 검증 일괄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은 102억원임.

○ 그런데 “교육 이수자 수”는 예산 및 인력의 단순 투입을 통해 달성가능한 1차적 산출물에 해당하는 지표로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산출·영향지표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자료: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개편 전후 비교

<table>
<tr><th>2023년(개편 전)</th><th>2024년(개편 후)</th></tr>
<tr><td>[정진]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SW마에스트로
- SW역량검정</td><td rowspan="6">[정진]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① 대학·기업 협력형 SW아카데미
(舊 SW전문인재양성)
② 채용연계형 SW전문인재양성
(舊 기업멤버십SW캠프)
③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④ SW마에스트로
⑤ 산업재직자AI역량강화
(舊 산업전문인력AI역량강화)
⑥ SW역량검정
⑦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⑧ AI·디지털기반 미디어융합인재(신규)</td></tr>
<tr><td>[정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td></tr>
<tr><td>[일반]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td></tr>
<tr><td>[일반] 기업멤버십SW캠프</td></tr>
<tr><td>[일반] SW전문인재양성</td></tr>
<tr><td>[방발]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소프트웨어인재키움사업(2232-327):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가) 사업 개요

○ ‘소프트웨어인재키움’ 사업은 산업계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실무인력[172]을 대상으로 AI·SW 고등·특화 집중교육을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역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양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음.

- 세부내용으로는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인력수요 현황, 인재역량 수준 등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지역 SW교육환경 분석을 통한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 후보지를 발굴하고, 직업계·특성화 고등학생에 현업에 빠르게 적응할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단계별·연차별 인재양성 전략 수립 및 세부 실행계획을 도출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 3억원을 정보통신산업

172) AI·SW분야 진로를 선택하는 직업계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직업반) 재학・졸업생 등

진흥원에 출연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 중 1억 5,800만원(52.6%)을 실집행하였음.

<2024년도 소프트웨어인재키움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소프트웨어인재키움	300	300	198	198	-	198	158	-	142	-
○ 소프트웨어인재키움	300	300	198	198	-	198	158	-	142	-
□ 세출예산비목	300	300	198	198	-	198	158	-	142	-
○ 사업출연금(350-02)	300	300	198	198	-	198	158	-	142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 소프트웨어인재키움 사업은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SW인재키움센터 건립의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되었고, 세부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도 소프트웨어인재키움 사업 집행내역>

산출내역	집행내역	실집행률
300백만원 - SW인재키움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신규)300백만원×1식=300백만원	158백만원 - SW인재키움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42백만원 - 조달수수쵸 및 사업관리 등: 16백만원	52.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동 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률은 52.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던 중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동 사업의 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 SW인재키움센터 구축·운영 기본계획, 커리큘럼, 운영모델에 대한 연구용역만 수행하고, 지역선정 후 집행할 센터의 건립 구상(선정평가, 센터설계) 등에 대한 용역은 추진이 보류되었기 때문임.

- 당초 계획에 따른 동 사업의 개요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프트웨어인재키움 사업 설명자료>

구분	내용	비고
사업기간	- 2024~2029년	
사업예산	- 12,300백만원 ※ 지방비 5,000백만원 별도	
사업내용	- 2024년 · SW인재키움센터 건립 기본계호기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2025~2029년: · SW인재키움센터 구축 및 SW·AI 고등특화교육 운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6.

○ 이는 신규사업 추진이 사업시행 초기에 중단된 사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정 보 통 신
산 업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5

【 일반회계 】

(1)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2132-328): 다부처 공동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체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공동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의체의 역할 강화, 사전 협의 절차의 체계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계층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어,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기반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 4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임.

○ 2024회계연도 예산액 30억 원이 전액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3,000	3,000	-	-	3,000	3,000	-	-	3,459
○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3,000	3,000	-	-	3,000	3,000	-	-	3,459
□ 세출예산비목	3,000	3,000	-	-	3,000	3,000	-	-	3,459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000	3,000	-	-	3,000	3,000	-	-	3,45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다부처 공동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체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부처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에 탑재되는 AI, SW 등 디지털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동형 병원 SW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체 등 HW 개발을 담당하는 등 각 부처 간에 협업하여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특정한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함.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부처별 사업내용>

부처	사업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에 탑재되는 AI, SW 등 디지털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이동형 병원 SW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체 등 HW 개발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산업부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통합 실증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연의료 플랫폼 탑재 의료기기의 인허가 등 규제 대응 통합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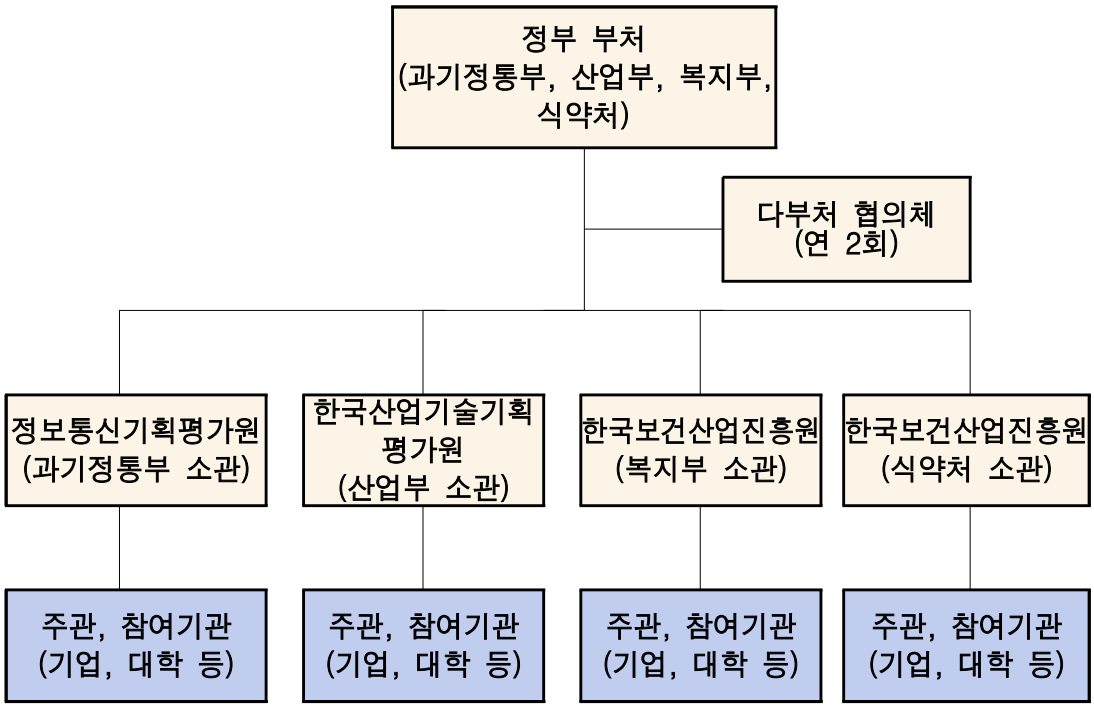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의 사업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각 부처는 해당 부처 소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173]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

17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약, 사업관리 및 사후평가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처간 협업을 위해서 연 2회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관리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사업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부처 간 공동으로 사업단이나 사업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사업 기획 및 과제 선정이 각 부처 및 전담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단이나 사업추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2022년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연 2회 연구개발 추진목표와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각 전담기관은 사업기획 및 과제선정에 있어 별도의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사업공고, 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각 부처의 다수의 전담기관이 공통인 사업관리규정이 2025년 5월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이 되었으나, 해당 규정 제9조[174]에 따르면, 특허 등록 및 연구개발 결과물 연계 등 성과관리의 내용 공유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공동 규정에 따른

174)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성과관리) 특허 등록 및 연구개발 결과물 연계 등 성과관리를 위해 주무부처, 전문기관은 다부처 협의체 또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사업관리가 명시되지 않아, 각 전담기관의 개별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가 수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다부처 공동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각 부처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동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공동규정 제6조[175]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관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임.

○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 간에 예산만 단순히 배분·조정하고, 각 부처가 사업기획, 관리 및 평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시너지 효과 달성이라는 다부처 공동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공동사업의 취지를 반영

175)「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주무부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
4. 연구개발과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과제의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무부처의 장은 대행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하여,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의체의 역할 강화, 사전 협의 절차의 체계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2132-353):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의 2024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별 선정된 주관·참여기관의 연내 연구가능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향후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신규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의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현안 대응을 목표로 추진되는 2024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임. 동 사업은 국내 기업, 대학 등이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176])을 통해 연구개발출연금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기준 443.2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176) 정보통신기획평가원(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 2024회계연도 편성된 예산액 29억 3,000만 원이 전액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2,930	2,930	-	-	2,930	2,930	-	-	6,460
○디지털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	2,430	2,430	-	-	2,430	2,430	-	-	5,460
○디지털융합기술 국제공동연구	500	500	-	-	500	500	-	-	1,000
□ 세출예산비목	2,930	2,930	-	-	2,930	2,930	-	-	6,46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2,930	2,930	-	-	2,930	2,930	-	-	6,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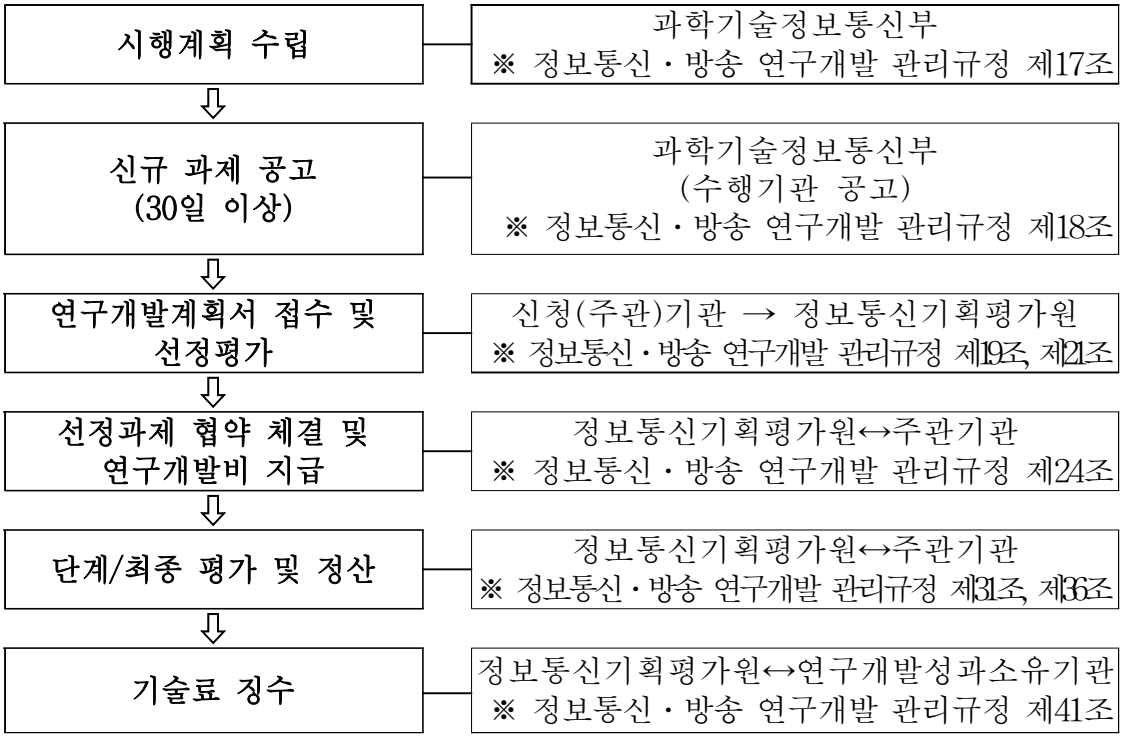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의 조속한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사업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과제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전문기관과 주관·참여기관과의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의 절차가 필요함.

<2024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추진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동 사업은 과제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공고를 통하여 연구과제별 주관·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분야·국가별 7차례(2차례 재공고 포함)나 별도 공고를 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공고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

- 동 사업의 1차 사업공고는 '한-미공군과학연구소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원 공고에서 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재공고로

‘인공지능 융합·활용 국제공동연구’가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미 국제공동연구’가 8월 17일까지 이루어지는 등 일부 과제 착수가 계획 대비 지연된 경우도 있어,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참여기관 공모에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연구과제 사업공고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과제특징	대상국가	지원 분야	공고기간	과제규모	
					전체 (3년)	2024년 (1차년도)
1차	한-미공군 과학연구소 국제공동연구	미국	양자정보 통신	2024. 1. 10. ~ 2. 13.	750	125
2차	한-EU (정보통신총국)	EU	5G·6G	2024. 2. 5. ~ 4. 15.	3,000	500
	한-스페인 (산업기술개발원) 국제공동연구	스페인	AI	2024. 2. 5. ~ 4. 15.	900	150
(재공고)	인공지능 융합·활용 국제공동연구	EU	AI	2024. 8. 6. ~ 9. 4.	900	150
3차	한-미 국립과학재단 국제공동연구	미국	저전력 AI 반도체	2024. 2. 21. ~ 4. 29.	900	150
(재공고)	한-미 국제공동연구	미국	저전력 AI 반도체	2024. 7. 18. ~ 8. 19.	900	150
4차	국제공동연구	핀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핀란드: 5G, 6G 미국, 캐나다, 일본: AI 영국: 메타버스	2024. 4. 5. ~ 6. 4.	7,380	1,230
5차	한-싱가포르 (AI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	싱가포르	AI	2024. 4. 12. ~ 6. 12.	1,500	25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이처럼 사업공고 등 연구개발 사업추진절차가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약체결이 예산상 계획과 달리 이루어지면서 주관·참여기관에서의 연구개발비의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부족한 문제점이 나타났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을 2개의 내역사업인 디지털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및 디지털융합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모두 하반기 6개월 동안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4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예산 편성 현황>

(단위: 개, 개월, 백만 원)

내역사업명	세부 내역			2024 예산
	과제수	연구 기간	과제당 연구개발비	
디지털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10	6	486	2,430
디지털융합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2	6	500	5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그러나 2024년 추진된 동 사업의 주관·참여기관과의 12개 연구과제 협약체결이 모두 예산상 계획인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과제의 주관·참여기관의 연내 연구가능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연구과제 협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과제명(국문)	과제협약일	2024 연구비
양자얽힘 밀리미터파 광자 검출 양자 센서	2024. 7. 16.	125
양자 광소자 기반 프로그램이 가능한 광그래프 상태 생성 연구	2024. 7. 16.	125
개인 다중속성 분석을 통한 사람 연속식별 AI 기술 개발	2024. 7. 17.	400
딥러닝 기반 자율이동로봇 이동 제어 기술 한-일 국제공동연구	2024. 8. 30.	250
통신과 센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2024. 10. 24	230
미디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Media Coding for Machine 선도기술 개발	2024. 9. 6.	250
인공지능 기반 도시 냉각 기술 개발	2024. 9. 2.	250
도메인 특화 자동 가치 연계 평가를 통한 AI 모델 신뢰성 향상	2024. 9. 3.	250
6GARROW: 6G Ai-native 통합 RAN-Core 네트워크	2024. 8. 20.	500
정확하고 안전한 멀티모달, 다언어 지원 맞춤형 AI 튜터	2024. 8. 27.	250
Si/IGZO 모놀리식 3D 집적 기반 다기능 AI 가속기 구현	2024. 10. 24.	150
생체전자 의학을 이용한 말초신경 인터페이스를 위한 AI 기반 이식형 실시간 신경 디코드 및 포워드 디바이스	2024.10.25.	15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특히, 2024년 10월 24일에 주관·참여기관과의 연구개발 과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Si/IGZO 모놀리식 3D 집적 기반 다기능 AI 가속기 구현' 연구과제 등의 경우에는 2024년 연내 연구

가능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거의 연내에 추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상대국의 예산 상황 및 공동공고 일정 등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각 협력국의 상황에 따라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게 되어 국가별 순차적인 공고 일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음[177].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의 2024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별로 선정된 주관·참여기관의 연내 연구가능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향후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신규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

1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차 공고 시 양국 선정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선정 불발되어 시행계획 조정 후, 재공고(일반형으로 전환) 및 과제를 선발하였으며, 3차 공고 시 최종 접수기관이 없어 시행계획 조정 후, 재공고(일반형으로 전환) 및 과제를 선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2차 한-스페인 공고 추진 및 양국 개별 평가 결과 한국과 스페인 측의 선정희망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선발을 취소하였고, 한-EU 과제로 변경(국가범위확대)하여 재공고 추진 및 과제선발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3)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2137-310): 중장기적인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의 출연금 교부 근거 마련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DNA 융합·제품 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의 출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내역사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중복 지원받았던 경우가 있었으며, PMF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AI 분야 등 미래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우수 SW, ICT솔루션, 플랫폼 등 융합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 및 레퍼런스를 확보하거나, 우수 융합 제품 서비스 현지화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업 간 조인트벤처[178](Joint Venture, JV) 파트너십 형성 및 조인트벤처 관련 사업을 추진·운영·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78) 조인트벤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협력하여 특정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형태를 의미함.

○ 2024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77억 6,300만 원이 전액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	7,763	7,763	0	0	7,763	7,763	0	0	17,263
○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3,178	3,178	0	0	3,178	3,178	0	0	3,178
○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1,585	1,585	0	0	1,585	1,585	0	0	1,085
○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3,000	3,000	0	0	3,000	3,000	0	0	3,000
□ 세출예산비목	7,763	7,763	0	0	7,763	7,763	0	0	17,263
○ 사업출연금 (350-02)	7,763	7,763	0	0	7,763	7,763	0	0	17,26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세부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DNA[179]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내역사업에 31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내역사업에 15억 8,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내역사업에 30억 원이 집행되었음.

179) D(Data).N(Network).A(AI)

나) 검토의견

□ 중장기적인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의 출연금 교부 근거 필요

○ 법적으로 출연금 근거가 없는 기관인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 사실상 출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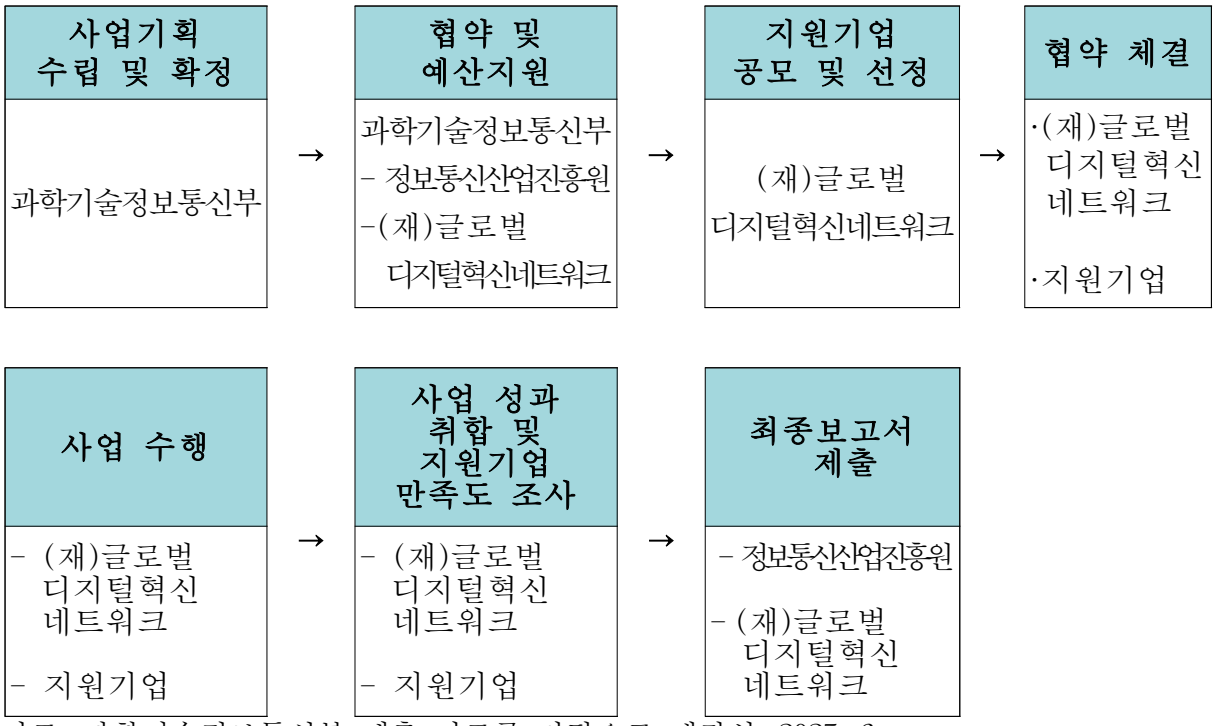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DNA 융합·제품 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은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 보유 국내 기업의 현지 안착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형성, 후속 사업 기회 발굴에 적합한 조인트벤처(JV, Joint Venture)형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DNA 융합·제품 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사업시행체계를 살펴보면, 사업의 기획 및 계획 수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며, 예산 확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180])은 다시 사업시행기관인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 출연금을 재교부함. 다음으로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181])에서 사업공고, 지원기업 선정 등 실제 사업 운영을

180) 정보통신산업진흥원(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담당하고 있는 재위탁 체계(과기정통부→NIPA→GDIN→지원기업)로 구성되어 있음.

<DNA 융합·제품 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사업시행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DNA 융합·제품 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사업시행체계에서 전담기관·위탁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탁기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중간 점검 등 사업운영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인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사업공고, 지원기업 선정, 협약 체결, 사후 성과 분석 등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181)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lobal Digital Innovation Network, GDIN)

<전담기관과 위탁기관의 사업내용 비교>

구분	역할	사업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사업운영 점검 ◯ 현장평가 ◯ 회계검사 등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위탁기관	◯ 사업공고 ◯ 지원기업 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 협약체결 ◯ 사업 성과 취합 ◯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이처럼 동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지 않고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교부된 사업출연금이 2024년도[182]에는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 그대로 재교부되어 수행기관 모집 및 사업 운영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경우,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는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 사업출연금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집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182)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2024년도까지는 별도의 사업관리비용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3,000만 원의 사업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어, 2025년도에는 정부 교부 사업출연금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 재교부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12조[183]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명문상 법률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의 사업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사실상 전담기관 성격의 업무 수행의 대부분을 위탁기관인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우회적으로 출연금이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 교부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183)「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 법적 근거 비교>

구분	조항	법적 근거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제1항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없음	없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DNA 융합·제품 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의 출연금 법적 근거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에 사업출연금이 우회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중복 지원 방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은 연관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ICT 융합기술 기반의 우수 SW, ICT 솔루션, 플랫폼 등을 패키지화하여 실증·적용 레

퍼런스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국내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솔루션 현지화, 해외 진출을 위한 기능 고도화,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법적 근거 내용
현지화 지원	○ 해외 진출용 플랫폼·솔루션 사업화 지원 - 해외시장 진출 목적의 융합서비스 플랫폼·솔루션의 현지화 개발비용, 홍보 마케팅 등 현지 사업화 비용 등
해외시범서비스 구축지원	○ 개발 플랫폼·솔루션의 해외 시범 서비스 구축·운영 지원 - 해외 현지 시범 서비스 구축, 기술실증(PoC) 등을 위한 인력활용, 현지 시장 조사 비용 등

자료: 2024년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 안내서, 2024. 2.

- 2024년 기준으로 총 4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컨소시엄당 최대 6억 원 이내 한도로 지원하였음.

○ 동 내역사업에서 2021~2024년도[184] 지속(매년) 지원받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와 ㈜▲▲▲▲는 4개년도 동안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84) 동 내역사업은 2021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음.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지속 지원 기업 현황(2021~2024)>

(단위: 회)

기업명	기업규모	지원횟수	지원연도
㈜○○○	중소기업	4	2021, 2022, 2023, 2024
㈜▲▲▲▲	중소기업	4	2021, 2022, 2023, 2024

주: 중복 지원 기업은 주관, 참여 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 8.

-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동일 기업에 대해 여러 연도에 걸쳐 중복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타 부처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 사업 공고문에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의 해외 진출 사업의 중복 지원 금지 내용 예시>

부처	사업명	중복 지원 금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지원 제외 대상 ● 동 지원사업 3년차(회) 참가기업 (최대 3회 까지 참여 가능)
	해외 지사화사업	- 신청 제외 대상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신청 제외 대상 ● 직전 5개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 원 이상인 기업

자료: 각 부처 해외진출 사업공고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당 지원사업에는 최대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지사화사업'에서는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서는 직전 5개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 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부처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서 특정 기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사업공고부터 주관기관 1회, 참여기관 1회로 참여 제한함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내역사업에서 기존 지원 사례에서 특정 기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양한 기업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음.

□ **수요가 부족한 PMF 프로그램 지원항목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은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수 융합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간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JV)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해당 JV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 현지 JV 추진계획을 보유하고 있거나, JV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기술 분야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이며, 해외 JV 추진을 하고자 하는 신규 지원트랙과 해외 현지 JV를 완료한 후 운영 중인 후속 지원트랙으로 구분됨.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신규 지원트랙	- 해외 JV 추진을 희망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기업(JV에 20%~90% 지분 출자 계획을 보유한 신청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함)
후속 지원트랙	- 2021~2023년 동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 JV 설립을 완료, 현재 사업 운영 중인 기업으로 향후 사업 확장과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해외 JV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사업공고일 기준 국내 참여기업이 조인트벤처에 최소 20% 이상의 지분 유지 필요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년『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 4.

○ 동 내역사업에서 JV 설립 이전에 지원받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현지 JV 추진·운영에 필요한 단계적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분야 전문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① 경영컨설팅,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현지 시장 검증(Product-Market Fit, PMF)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② PMF 프로그램, JV 설립 및 운영 과정 내 소요되는 국외 출장비를 지원하는 ③ 국외여비 지원으로 구분됨.

- 동 내역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별 한도액(1억 원) 내에서 지원 사업내용을 선택할 수 있음.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내용
경영컨설팅	- 해외 현지 JV 추진·운영에 필요한 단계적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분야 전문 경영컨설팅 제공
PMF[185] 프로그램	- 해외 현지 JV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현지 시장 검증(Product-Market Fit, PMF) 프로그램 지원
국외여비 지원	- JV 설립 및 운영 과정 내 소요되는 국외여비 지원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년『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 4.

○ 동 내역사업의 지원내용 중 PMF(Product-Market Fit)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항목과 실제 지원기업의 수요 간에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PMF 프로그램을 선택한 지원기업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5기업이 선택하였지만, 2023년에는 선택을 한 기업이 없었으며, 2024년에도 3기업 만이 선택하여, 2021~2024년도 동안 전체 지원기업 74기업 중 9개 기업이 선택하여 PMF 프로그램 선택 비율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85) PMF(Product-Market Fit, 시장검증)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선택>

연도	지원기업이 선택한 지원내용			전체 지원기업 (B)	PMF 선택 비율 (A/B)
	경영컨설팅	PMF 프로그램 (A)	국외여비		
2021	17	5	3	22	22.7
2022	18	1	8	18	5.6
2023	15	0	11	19	0.0
2024	13	3	9	15	20.0
합계	63	9	31	74	1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PMF 프로그램은 해외 합작법인(JV)을 설립한 기업의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지원 내용에 해당함. 동 내역사업의 정책 목표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있어, PMF 프로그램은 지원 기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시장 검증을 통해 제품 및 전략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PMF 프로그램을 동 내역사업의 선택 지원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동 내역사업에서 PMF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타 지원항목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아,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MF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부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 대다수가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 고객 검증 등이 필요한 일부 기업만 PMF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동 내역사업에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현지 조인트벤처(JV) 설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JV의 생존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설립 이전 단계부터 제품의 시장 적합성(PMF: Product-Market Fit)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외 JV 설립 이전 단계부터 PMF 프로그램의 전략적 중요성이 지원 기업들에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지원내용 중 해외 JV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PMF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므로 인식 변화, 프로그램 운영 방식 변경, 품질 검토 등을 통해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없고 불명확한 지원 제한 규정의 변경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공모안내서 등을 통해서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요·공급기업을 모집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사업공고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불명확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업수행 능력, 부정당한 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명확한 요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동 내역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공고한 2024~2025년 공모안내서를 살펴보면,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기업의 요건으로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자본 전액 잠식',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사업 지원 제한 요건으로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에 지원이 제한되는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음.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 제한 요건>

2024년	2025년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3)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2.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1~'23) 이내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4. 최근 3년('22~'24) 이내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심각한 범죄 등을 일으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상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

생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의 지원을 제한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 제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확히 어떤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지원 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지원자에게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동 내역사업 사업공고문에서 제재조치 등과 관련하여 준용[186]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등)[187]에도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한 내용은 없어, 해당 지원 제한 요건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근거가 없는 내용임.

---

186) '2024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바우처 S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4. 5. 22.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187) '2024년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Solution 바우처 지원과제」 모집공고', 2024. 5. 22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을 준용하여 수행·관리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공고문의 자격 요건 제한 내용 중 관계 법령과 규정 등에 근거가 없으며,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지원 자격 제한이 가능한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를 객관적이며 명확한 내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AI반도체 실증지원(2063-311):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내역사업을 고용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상 요구되는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국산 AI반도체(서버용·엣지용)에 다양한 AI서비스를 적용하여, 비공개 기능·성능 테스트 및 AI반도체 실증을 통한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하거나, 국내 중소·중견 AI반도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AI반도체 기술 및 인력난 극복을 위한 국내·외 고급 인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액 188억 1,3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AI반도체 실증지원	18,813	18,813	-	-	18,813	18,813	-	-	24,370
○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8,813	8,813	-	-	8,813	8,813	-	-	9,370
○ AI반도체 Farm 구축 및 실증	7,000	7,000	-	-	7,000	7,000	-	-	6,000
○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3,000	3,000	-	-	3,000	3,000	-	-	-
○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	-	-	-	-	-	-	-	9,000
□ 세출예산비목	18,813	18,813	-	-	18,813	18,813	-	-	24,370
○사업출연금 (350-02)	18,813	18,813	-	-	18,813	18,813	-	-	24,3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세부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내역사업에 88억 1,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AI반도체 Farm 구축 및 실증 내역사업에 70억 원이 집행되었고,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내역사업에 30억 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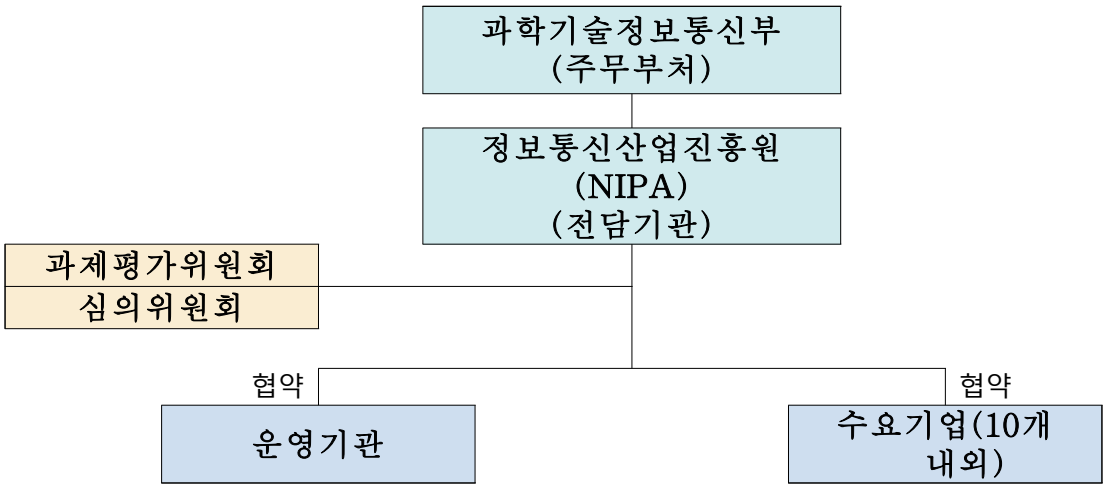
○ 동 사업 중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내역사업[188]은 국내

188)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내역사업의 별도 세부 사업화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따라 기존의 타 내역사업 성격과의 상이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별도 세부사업(AI반도체 지원플랫폼)으로 분리함.

중소·중견 AI반도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AI반도체 기술 및 인력난 극복을 위한 국내·외 우수한 인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AI반도체 기술인재 선발대회 운영 및 평가 플랫폼 구축, 기술인재 채용연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2024년 기준으로 동 내역사업의 운영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선정하여 수요기업 모집·선발지원, 국내·외 AI반도체 인재 발굴, 기술인재 선발대회 평가 플랫폼 구축 및 제공, 수요기업-기술인재 채용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4년도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내역사업 추진체계>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사업 운영기관 공모안내서, 2024. 4.

○ 동 내역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포함되어, 일자리 예산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18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세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190] 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

189)「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190)「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p. 58.
❹ 고용서비스
○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 대상 취업·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직업·진로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도 포함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사업인 고용서비스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에서 수요기업-기술인재 간의 채용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인재의 취업 요건(취업 희망 분야, 학·경력 등), 수요기업의 채용 조건(채용 규모, 인건비 지원 규모 파악 등)을 확인하고, 각종 취업 관련 컨설팅 및 채용연계 전문 상담가 지원, 인건비 지원 관련 법률·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임.

○ 따라서, 동 내역사업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AI반도체 업체와 구직이 필요한 AI반도체 관련 대학·대학원 등에 있는 우수인력의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AI반도체 업계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임.

<수요기업-기술인재 채용연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수요기업-기술인재 채용연계 지원	○ (채용 매칭 지원) 수요기업, 기술인재의 니즈에 맞는 채용 매칭 지원 - 기술인재의 취업 요건(취업 희망 분야, 학·경력 등), 수요기업의 채용 조건(채용 규모, 인건비 지원 규모 파악 등) 확인 - 각종 취업 관련 컨설팅 및 채용연계 전문 상담가 지원, 인건비 지원 관련 법률·행정 컨설팅 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5. 6.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과 유사하게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의 성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재활용확산지원’ 사업을 고용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인재활용확산지원’ 사업에는 국내 산·학·연의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동 내역사업과 유사하게 취업 알선, 구직 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 성격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인재활용확산지원 사업 내용>

구분	지원 내용
혁신성장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	신진 박사급 연구인재의 첨단기술 혁신역량 제고 및 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산-학 협력 기반 박사급 인재 연구단 지원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국내 산학연의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친한(親韓)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양성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 및 취업 지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학연계 인력양성	과학벨트 기능지구 대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미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연결과 기업 혁신성장 동시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91]에 따라, 신규·내용변경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사업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추진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사업관련

191)「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70.

□ **신규·내용변경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사업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추진 방지**

* (대상사업) 신규 사업, 목적·대상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사업
(절차) ① 각 부처는 사업추진계획·예산요구서 등을 고용부에 제출,
② 고용부는 예산안 제출 전에 검토결과를 각부처·기재부에 송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사업관련 정보*를 반드시 적시에 입력하여 관리**

* 참여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참여시작일 등), 사업설명서, 수행기관 등

정보를 반드시 적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일반 사업과 다른 예산 편성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내역사업을 고용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상 요구되는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5)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2603-310): 예산상 명확하게 편성 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사업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을 예산상 명확하게 편성하고,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사업은 온·오프라인 전시관 운영 및 혁신기술 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한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의 홍보 및 전시를 운영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바이어 수출 상담 매칭 지원으로 해외진출·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모집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액 12억 5,0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스마트서비스 창출기반확충	1,250	1,250	-	-	1,250	1,250	-	-	500
○ 스마트서비스 창출기반확충	1,250	1,250	-	-	1,250	1,250	-	-	500
□ 세출예산비목	1,250	1,250	-	-	1,250	1,250	-	-	500
○사업출연금 (350-02)	1,250	1,250	-	-	1,250	1,250	-	-	5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예산상 명확하게 편성 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사업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출연금 교부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지원, 홍보,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위탁하여 운영할 기관을 2024년도 모집하였음.

○ 2024년 사업공고에는 위탁기관의 사업 내용으로 2023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센터 운영은 2024년도 예산 산출내역 등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에도 집행과정에서 추진된 면이 있음.

<스마트서비스 창출기반확충 운영 위탁공고 연도별 내용 비교>

구분	2023년	2024년
전시관	○(온라인 전시관 개발·운영) JAVA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 환경 개편 및 챗봇, 관리자 페이지 등 시스템 고도화, 신규 전시 부스 구축 등서비스 호환성 확대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확대) 신규 전시 부스 구축 및 전시관 3D 구현 고도화
수출 상담회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오프라인), 화상상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바이어 매칭,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및 수출 성과창출 확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오프라인), 화상상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바이어 매칭,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및 수출 성과 창출 확대 ○(해외 오프라인 상담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해외에서 운영되는 오프라인 상담회 연계 부대 행사(네트워킹, 포럼 등) 운영
홍보	○(국내·외 홍보 기획 및 운영) ICTWOW 참여기업 혁신기술 및 성공사례, 수출상담 행사 등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홍보 집중	○(국내·외 홍보 기획 및 운영) ICTWOW 참여기업 혁신기술 및 성공사례, 수출상담 행사 등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홍보 집중
디지털 수출지원 센터 운영	**<해당 내용 없음>**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수출 사업 관련 로드맵 작성, 디지털수출지원센터 Q&A 대응 및 질의응답 내용 정리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서비스 창출기반확충 운영 위탁공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 6.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도 사업 공고에서도 온라인 전시관 개발·운영,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외 홍보 기획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그러나 2024년도에는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운영 외에도 수출사업 관련 로드맵 작성, Q&A 대응, 질의응답 내용 정리 등을 포함한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음. 이는 당초 예산 계획상 명확하게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보임.

○ 또한, 2023년도 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에는 부스지원 개수 및 단가의 변동이 있으며, 2023년도에 존재하였던 스마트서비스 산업육성 지원 내역사업이 종료된 점을 제외하고, 디지털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산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편성의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우수 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회 부스를 131개 지원하는 예산 10억 5,000만 원과 해외바이어 40명에 대한 상담회를 개

최하는 예산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명확하게 없음.

<2023~2024년도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예산 세부내역			
	내역	개, 명	지원단가	예산액
2023	국내 우수 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부스지원 125개	7,957	982
	해외바이어 상담회 개최	40명	5	200
	스마트서비스 산업육성 지원	1회	100	100
	소 계			1,282
2024	국내 우수 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부스지원 131개	8.01	1,050
	해외바이어 상담회 개최	40명	5	200
	소 계			1,2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22년도에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2137-310)' 사업에서 별도 용역인 '2022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용역'으로 추진된 바 있음.

- 2022년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용역에서는 디지털수출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해외진출 로드맵 현행화, 수출헬프데스크 운영, 민관합동 TF 안건조사 등으로 명시하여, 2024년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수출 사업 관련 로드맵 작성 등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내용의 비교>

(단위: 백만 원)

연도	용역명	사업내용	계약 금액
2022년	2022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용역	· 해외진출 로드맵 현행화(1회) · 수출헬프데스크 운영(1건) · 민관합동 TF 안건 조사(2회) · SW 공급망 대응방안 가이드(2건) · SW·ICT 통상 이슈 교육행사 개최(2회)	115
2024년	스마트서비스 창출기반확충 운영 위탁공고 (디지털수출지원센터 내용만)	· 수출 사업 관련 로드맵 작성, · 디지털수출지원센터 Q&A 대응 · 질의응답 내용 정리 등	위탁공고 포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년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용역', 2022. 3.

- 따라서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과거 용역 등을 통해 별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산출내역 등에 명시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해당 내용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더 실효적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수출지원센터는 물리적 공간 개념이 아닌 수출기업 Q&A 대응 및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에는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

에서 수출지원센터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을 사업에서 공모하였으나, 2024년에는 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서 위탁운영기관이 일괄 수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을 효율화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을 예산상 명확하게 편성하고,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설계)(2603-314): 연구개발 수행에 팹리스[192] 기업 등 참여 확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내 팹리스 기업이 연구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PIM[193]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설계) 사업은 PIM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프로세서·로직과 메모리(DRAM 등)를 융합한 PIM 반도체 개발 및 성능검증용 칩 제작을 지원하는 PIM 설계기술 사업과 시스템 아키텍처 및 SW, 인터페이스 및 인력양성 등 PIM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PIM 혁신기반기술 사업으로 구분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92) 팹리스(Fabless)는 "Fabrication(제조)" + "less(없다)"의 합성어임.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직접 제조 공장은 보유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함.
193) Processing in memory :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

○ 2024회계연도 예산액 277억 6,7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설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설계)	27,767	27,767	-	-	27,767	27,767	-	-	41,458
○ PIM 설계기술	19,968	19,968	-	-	19,968	19,968	-	-	33,526
○ PIM 혁신기반기술	6,732	6,732	-	-	6,732	6,732	-	-	6,732
○사업단 운영비	1,067	1,067	-	-	1,067	1,067	-	-	1,200
□ 세출예산비목	27,767	27,767	-	-	27,767	27,767	-	-	41,458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27,767	27,767	-	-	27,767	27,767	-	-	41,45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연구개발 수행에 팹리스 기업 등 참여 확대 필요

○ 동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팹리스 기업의 참여와 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 연구개발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서에 따르면,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팹리스 기업의 참여와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연구성과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됨.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서에 따른 기업 참여 필요>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나. 정책 제언	○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참여 방안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할 필요 - 향후 동 사업 성과 활용의 **Key는 대기업에 있으므로, 기업 비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민간과 학계·연구계 간의 연구성과 공유·활용방안이 구체화될 필요**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서	사업추진전략	○ (추진전략) ① 초고성능·초저전력 PIM 반도체 설계기술 및 성능 극대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원천 기술 확보 **②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팹리스·대학·출연연 간 협력 강화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PIM 산업생태계 구축**

자료: 예비타당성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2020년도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 성과 활용의 핵심은 대기업에 있으므로 기업 비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민간과 학계·연구계 간의 성과 공유·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국가연구개발전략계획서에서 동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전략을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팹리스·대학·출연연 간 협력 강화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PIM 산업생태계 구축이라고 명시하여, 동 연구개발에 있어 팹리스 기업의 참여와 대기업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계, 출연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중소기업만이 참여하고 있어, 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연구개발의 신규 연구과제 주관기관 현황을 연도별[194]로 살펴보면, 2022년도 전체 14개 신규 과제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담당한 경우는 2개에 불과하며,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신규 연구과제가 모두 대학에서 주관기관으로 수행되어, 전체 신규 연구과제 22개 중 기업이 주관한 과제는 2개에 불과하여 참여율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22년에 동일 기업이 2개의 연구과제를 주관기관으로 추진하여 사실상 1개의 기업만이 동 연구개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194) 동 연구개발은 2022년도부터 추진되었음.

<연도별 신규 연구과제의 주관기관 현황>

(단위: 개, %)

연도	전체 (A)	주관기관 성격				기업비율 (B/A)
		대학	출연연	기타	기업 (B)	
2022	14	10	2	0	2	14.2
2023	5	5	0	0	0	0.0
2024	3	3	0	0	0	0.0
합 계	22	18	2	0	2	9.0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신규 연구과제의 참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0개의 참여기관 중 대학 52개, 출연연 5개, 기타(연구원, 협회 등) 2개, 기업은 11개로 전체 대비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신규 연구과제의 참여기관 현황>

(단위: 개, %)

연도	전체 (A)	참여기관 성격				기업비율 (B/A)
		대학	출연연	기타	기업 (B)	
2022	45	34	4	1	6	13.3
2023	14	9	1	0	4	28.5
2024	11	9	0	1	1	9.1
합 계	70	52	5	2	11	15.7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동 연구개발 사업은 국내 팹리스 기업의 주관 또는 참여가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서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과 목표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내 팹리스 기업이 연구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2603-306): 성인지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선정 부적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 사업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어려운 과제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 사업은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기업[195])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반도체 조기 상용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4년도 종료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액 30억 원이 전액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195) 팹리스(Fabless) 기업은 반도체 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제조) 시설(fabrication plant, 줄여서 "fab")을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있음.

<2024년도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3,000	3,000	-	-	3,000	3,000	-	-	-
○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3,000	3,000	-	-	3,000	3,000	-	-	-
□ 세출예산비목	3,000	3,000	-	-	3,000	3,000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000	3,000	-	-	3,000	3,000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성인지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선정 부적정

○ 동 사업은 과제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문제점이 있음.

- 「국가재정법」 제26조[196]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

196)「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동 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분야이 혁신적인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업, 연구소 등을 공모로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형 연구개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업·연구소 등을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기업 등)이 수행한 내용을 관리하게 되는 절차로 사업수행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주로 법인이나 연구소 등 기관이 수행하며, 그 연구개발 결과에 있어서도 양성평등과 같은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럼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2023년부터 2024년

까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성 평등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실적 등을 보고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 사업의 성 평등 효과 분석을 위해 매년 보고한 성 평등 목표는 '종료과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 인력 위촉 비율 상향'이었으나, 이는 연구개발의 핵심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성 평등 목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성인지 결산서 상 3개년도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24년	평가위원회 여성인력 위촉 비율(백분율)	7.1	13.2	달성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 사업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어려운 과제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소재부품 장비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

(8)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2137-301):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의 과제 재기획시 사업화 성격 강화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사업」 중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사업을 재기획할 때, 사업화 중심으로 편성하고 연구개발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여 사업화 성과가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3D 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은 3D 프린팅의 활용 및 확산 지원,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액 163억 2,3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16,323	16,323	-	-	16,323	16,323	-	-	8,459
○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7,171	7,171	-	-	7,171	7,171	-	-	6,700
○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	808	808	-	-	808	808	-	-	808
○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8,344	8,344	-	-	8,344	8,344	-	-	951
□ 세출예산비목	16,323	16,323	-	-	16,323	16,323	-	-	8,459
○ 사업출연금 (350-02)	16,323	16,323	-	-	16,323	16,323	-	-	8,45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에 71억 7,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에 8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에 83억 4,400만 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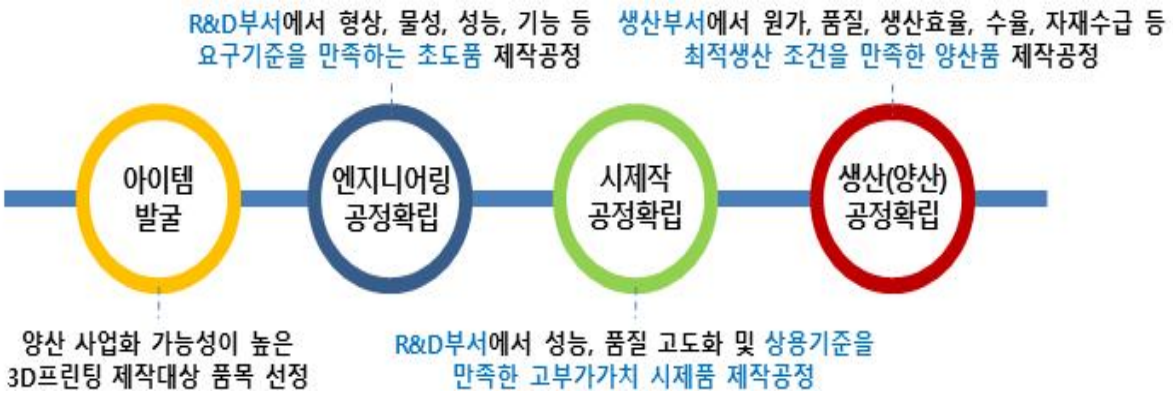
□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의 과제 재기획시 사업화 성격 강화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인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사업에는 3D프

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2024년도 예산 5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사업은 사업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개발(R&D)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재기획 시 사업화 중심의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화에 중심을 둔 사업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교부된 사업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은 3D프린팅 제작대상 부품이 적용되는 제조기업 최종제품의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전문 3D프린팅 출력기업(주관)과 제조기업(참여)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기간(3년) 이내 양산공정 개발완료 및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사업내용>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년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2024. 3.

○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혁신이 가능한 부품제작을 위한 양산공정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템 발굴, 초도품 제작공정,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사업에서 사업을 지원받는 주관 및 참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공정별 과업범위를 살펴보면, 시제작 공정에서 성능·효율 개선 및 상품성 고도화가 가능한 공정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에서도 생산성 고도화가 가능한 최적 생산(양산) 공정기술의 확보가 목표임.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97]에 따르면,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 자료나 경험 획득이 주목적인 실증플랜트,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이나 새로운 표준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197)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8

구분	산업활동에 포함	연구개발에 포함
개량연구개발	- 단순 제품결함 색출,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	-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증설 등	- 새로운 표준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변화
실증플랜트	-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전환	-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획득이 주목적

위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활동이 아닌 연구개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의 공정별 과업범위>

공정	지원내용
엔지니어링 공정	- 물성·표면조도·공차·두께 등 기술 요구기준을 만족하는 소재·빌드조건·후공정 기술개발 및 공정데이터 DB화
시제작 공정	- 구조해석·유동해석을 통한 부품 재설계 및 DfAM으로 성능·효율 개선 및 상품성 고도화가 가능한 공정기술 확보
생산 공정	- 공정 개선, 수율 개선, 비용·리드타임 절감 등 채산성 확보 및 생산성 고도화가 가능한 최적생산(양산) 공정기술 확보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년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2024. 3.

-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 공정에서도 소재·빌드조건·후공정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제작 공정도 상품성 고도화가 가능한 공정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화 추진의 사업임에도 연구개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사업화 성격의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연구개발 사업과의 사업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 연구개발 사업으로 3D 프린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동 사업을 3D 프린팅 사업화 중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연구개발 부분은 3D 프린팅 관련된 타 연구개발 사업이나 신규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서 실시하고, 동 사업의 경우 사업출연금의 목적에 맞게 실용화·사업화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3D프린팅 기술활용 상용화 건수', '3D프린팅 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 '3D프린팅 우수 레퍼런스 발굴·확산 건수'로 구성되어,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화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의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3D프린팅 기술활용 상용화 건수 (단위: 건)	목표	14	15	15	16	14
	실적	15	15	16	17	-
	달성도	107	100	107	106	-
3D프린팅 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신규	80	84
	실적	-	-	-	91.4	-
	달성도	-	-	-	114	-
3D프린팅 우수 레퍼런스 발굴·확산 건수 (단위 : 건)	목표	-	-	-	신규	5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해당 과제 재기획 시 연구개발의 성격은 낮추고 정부 지원은 양산(상용화), 납품 등 매출액 창출을 위한 확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사업」 중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사업을 재기획할 때, 사업화 중심으로 편성하고 연구개발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여 사업화 성과가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정 목적 사업출연금이 아닌 경상비의 별도 내역 사업 편성 등을 통한 기관운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집행 필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부설기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유지 관리를 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NIP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49억 2,300만 원에 외부 용역업체와 체결하였음.

<NIP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NIP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023. 1. 1. ~ 2024. 12. 31	4,923

자료: 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의 'NIP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경영관리(예산, 회계, 인사, 급여, 자산, 구매계약), 경영전략, e감사, 성과관리, 전자결재, 전자문서관리, 메일, SMS, 전산지원요청시스템 등의 업무지원 시스템과 사업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용역은 기관 운영과 연관된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유지관리 용역에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현황
업무지원 시스템	EKP 포탈, 경영관리(예산, 회계, 인사, 급여, 자산, 구매계약), 경영전략, e감사, 성과관리, 전자결재, 전자문서관리, 메일, SMS, 전산지원요청시스템 등
사업관리 시스템	사업관리, 평가관리 등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사업지원 시스템	누리꿈 BMS(Business Management System) 누리꿈 대관 관리시스템

자료: NIP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준용[198]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199]에 따르면, 기관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기본경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기본경비[200]에는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용역은 매년 정보통신산업진흥

198)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06)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출연기관(비공공기관 포함)은 ‘본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 p. 13
(1) 경상경비
가. 적용대상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기본경비”를 준용**한다.

20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17)
□ 업무전산화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 PC 등 소규모 전산장비 구입비
○ 전산운영요원 특근매식비
○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 전산 전문교육 여비 및 지도점검 여비

원의 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이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관 운영에 관련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도 경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특히, 동 사업은 3D 프린팅의 활용 및 확산 지원,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보급·사업화에 관련된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해당 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 용역의 경비 일부를 동 사업의 사업출연금으로 집행하여, 사업출연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의 출연금을 활용하여, 2022년 300만 원, 2023년 6,600만 원, 2024년 5,5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교부된 3D 프린팅 진흥이라는 특정 목적의 동 사업 사업출연금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있음.

<동 사업에서 NIP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비용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용역	2022년	2023년	2024년
NIP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3	66	55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의 특정 목적 사업출연금을 기관 운영 목적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집행하기보다는, 해당 경비를 기관 운영 관련 사업비나 경상비에 별도[201]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2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지원(2037-301)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경상비나 사업비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

(9)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7602-304):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이 동일한 과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일치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성과평가와 정산 등에 있어 내외부 견제 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의 성과평가와 정산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은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을 통해 ICT 산업의 생산성·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게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계획액 57억 1,7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5,717	5,717	-	-	5,717	5,717	-	-	6,317
○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5,717	5,717	-	-	5,717	5,717	-	-	6,317
□ 세출예산비목	5,717	5,717	-	-	5,717	5,717	-	-	6,317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5,717	5,717	-	-	5,717	5,717	-	-	6,31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연구개발 사업인 동 사업의 사업수행절차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202]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협약체결, 과제수행 관리, 평가,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에 대한 평가, 관리, 정산

2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동 사업의 경우에도 중간추진실적 검토 등 수행관리, 실적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IC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사업수행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계획 통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각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 각 주관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협약체결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각 주관기관
⇩	
과제수행	· 각 주관기관
⇩	
중간추진실적 검토 등 수행관리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각 주관기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각 주관기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나) 검토의견

□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이 동일한 과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 동 사업의 연구과제 중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은 전문기관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해당 기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정산 등 사후 관리 업무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연구 수행 기관과 관리 기관이 동일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개선할 측면이 있음.

-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연구과제는 2022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단년도 연구과제이며, 2022년도에는 28억 3,100만 원, 2023년도에는 26억 4,800만 원, 2024년도에는 26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개년도 간의 총 연구비는 81억 2,700만 원임.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연구과제명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비
2022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831
2023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648
2024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648
합 계				8,127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해당 연구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담당하고 있어,

성과평가와 정산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와 정산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특히,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과제 정산에 따라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연구과제의 중단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기관의 평가와 정산 등의 업무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일치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성과평가와 정산 등에 있어 내외부 견제 시스템 및 모디터링 체계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의 성과평가와 정산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0)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2033-310): 물품 구매 계약의 조속한 체결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도 말에 물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 사업은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표준 적합성 검증, 실 환경 성능 검증 및 국제공인 인증 시험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험 장비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 계획액 19억 6,500만 원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도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ICT융합자율 주행기반구축	1,965	1,965	-	-	1,965	1,965	-	-	1,572
○ ICT융합자율 주행기반구축	1,965	1,965	-	-	1,965	1,965	-	-	1,572
□ 세출예산비목	1,965	1,965	-	-	1,965	1,965	-	-	1,572
○ 민간경상보조 (320-01)	1,965	1,965	-	-	1,965	1,965	-	-	1,5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물품 구매 계약의 조속한 체결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 교부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교부된 금액을 활용해 국제표준적합성 시험환경 구축, 국제표준 상호운용성 시험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물품을 구매하고 실증환경 성능 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험 도로 등을 임차하고 있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동 사업 관련 물품구매가 4/4분기에 완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연도와 물품

이 실제 사용되는 연도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사용될 물품을 전년도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예산 집행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4/4분기 물품구매 등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표준적합성 시험환경 구축에 필요한 물품구매(시험장비 구매)는 2024년 10월 22일에 완료되었으며, 국제표준 상호운용성 시험환경 구축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매도 2024년 10월 25일에 구매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수의 물품구매 등이 4/4분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여짐.

○ 2024년도 예산이 4/4분기에 집행되어 물품 등이 구매·임차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연도내 사용 기간은 연말에 불과하며 대부분 다음연도에 사용되어, 실제 해당연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사용될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국가재정법」 제3조[203]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3)「국가재정법」 제3조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024년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4/4분기 물품구매 등 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계약기간	계약종류	계약금액
국제표준적합성 시험환경 구축	2024. 8. 23. ~ 2024. 10. 22.	물품구매 (시험장비 구매)	568
	2024. 11. 1. ~ 2024. 12. 27.	물품구매 (개발지원 시험용 FPGA 보드 구매)	29
국제표준 상호운용성 시험환경 구축	2024. 8. 26. ~ 2024. 10. 25.	물품구매 (시험장비 구매)	318
	2024. 9. 9. ~ 2024. 10. 7.	물품구매 (시험용 제어 PC 구매)	19
실증환경 성능 기반 구축	2024. 8. 26. ~ 2024. 10. 25.	물품구매 (시험장비 구매)	60
	2024. 11. 12. ~ 2024. 11. 21.	시험 도로 임차	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이처럼 동 사업의 물품 구매가 4/4분기에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물품의 계약 공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임.

- 2024년도 체결된 국제표준적합성 시험환경 구축의 물품구매 계약인 '5G-V2N 및 5G-NR-V2X 하이브리드 서비스 적합성 시험시스템 구축' 계약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 공고가 2024년 6월 27일에 시작되어 실제 개찰이 2024년 8월 7일에 이루어지는 등 계약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G-V2N 및 5G-NR-V2X 하이브리드 서비스 적합성 시험시스템 구축 현황>

절차	시작일시	종료일시
공고게시	2024. 6. 27.	-
입찰참가자격등록	-	2024. 8. 6.
입찰보증서접수	-	2024. 8. 6.
입찰서 및 제안서제출	2024. 8. 5.	2024. 8. 7
개찰	2024. 8. 7.	-
계약기간	2024. 8. 23.	2024. 10. 22

자료: 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구매 및 조달 절차의 조달청 단계에서 계약 공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 계약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FPGA 보드 구매 등)는 하반기에 발생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도 말에 물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2137-311): 지침을 위반한 자산의 미등록 및 정산보고서상 자산 누락 부적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HPC이노베이션허브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기금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되거나 정산보고서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 사업은 정보보호 산·학·연 협업을 통한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 및 창업 지원, ICT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테스트베드 구축, 고성능컴퓨팅 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 산업 간 융합 기반 콘텐츠 실증 인프라 및 메타버스 기업 지원, AI반도체 설계 SW 환경 구축을 통한 중소 팹리스 공동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계획액 100억 6,900만 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출연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글로벌ICT혁신 클러스터조성	10,069	10,069	-	-	10,069	10,069	-	-	8,836
○ 정보보호클러스터	2.067	2,067	-	-	2.067	2,067	-	-	1,934
○ HPC이노베이션 허브	2,592	2,592	-	-	2,592	2,592	-	-	2,235
○ ICT문화융합센터	3,811	3,811	-	-	3,811	3,811	-	-	3,568
○ AI반도체클러스터	1,599	1,599	-	-	1,599	1,599	-	-	1,099
□ 세출예산비목	10,069	10,069	-	-	10,069	10,069	-	-	8,836
○ 사업출연금 (350-02)	10,069	10,069	-	-	10,069	10,069	-	-	8,83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지침을 위반한 자산의 미등록 및 정산보고서상 자산 누락 부적정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HPC[204]이노베이션허브 내역사업은 ICT 신기술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고성능컴퓨팅 제품 품질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내역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25억 9,2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4)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복잡한 계산, 과학기술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처리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 또는 병렬 컴퓨팅 시스템 등을 의미함.

○ 동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기금사업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을 미등록하고, 정산보고서상에서도 누락하여 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음.

○ 2024년도 동 내역사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사업관리시스템 취득 자산 등록 현황(2025. 6. 11. 기준)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2일에 4,350만 원으로 취득한 'HPC 클러스터 네트워크 장비'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시스템 취득 자산 등록 현황>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집행기관	집행 일자	집행내역	집행 금액	취득자산 등록여부
글로벌ICT혁신 클러스터조성 (HPC이노베이션 허브)	한국정보 통신기술 협회	2024. 12. 2.	HPC 클러스터 네트워크 장비 구매	43.5	미등록 (2025. 6. 11.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제1항[205]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

205)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자산의 범위 및 처분) **① 수행기관은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취득자산의 내역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백만 원 미만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별표 1]에 정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사무용물품과 S/W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기금으로 구입한 자산 중 보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용도를 폐지하고 즉시 이를 처분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진하는 수행기관은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취득자산의 내역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24년 12월에 기금사업비로 취득한 4,350만 원 상당의 네트워크 장비를 2025년 6월 11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6개월 이상 미등록 상태로 해당 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정산보고서(2025. 2. 7. 제출)에도 해당 자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어, 기금 관리 규정 및 정산보고 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2조제3호[206]와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207]

---

③ 취득가액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의 장이 처분하고 사후에 이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6)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2조(부속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
3. 제32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7)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정산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사업비로 구입한 자산 등을 명시하여 정산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주무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산보고서(2025. 2. 7. 제출) 상 자산 누락 현황>

Ⅲ. 2024년 사업비(기금 또는 회계)으로 구입한 자산 (보고대상이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자산명칭	구입단가	수량(면적)	구입금액	구입일자
[해당사항 없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발췌함, 2025. 6.

- 그러나, 해당 정산보고서에서 2024년 사업비(기금 또는 회계)로 구입한 자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제출하여, HPC 클러스터 네트워크 장비 자산의 구입을 누락하였으며, 주무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도 2025년 6월 11일까지 시정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최초 정산보고서에는 네트워크 장비 취득내역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25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의 연락으로 주무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시정을 요구(2025. 6. 11.)하였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사업관리시스템에 해당일에 장비 취득 내역 등록, 익일에 수정된 정산보고서를 등록하였고 이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보고(2025. 6. 16.)하였다고 설명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HPC이노베이션허브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기금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되거나 정산보고서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2) ICT연구개발전담기관인건비(7176-104): 경상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 수당 등 편성·집행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지침상 인건비 규정 등을 준수하여 해외 파견 직원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경상비나 사업비가 아닌 동 사업의 인건비에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정확한 공시를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연구개발전담기관인건비 사업은 ICT 연구개발(R&D)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기금사업을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208]에 따른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게 인건비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액 129억 4,9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었고, 이 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128억 7,600만 원이 실집행되고, 7,300만 원이 불용되었음.

---

20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2024년도 ICT연구개발전담기관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당초	변경								
□ ICT연구개발 전담기관인건비	12,949	12,949	12,949	-	12,949	-	12,949	12,876	73	13,430
○ ICT연구개발 전담기관인건비	12,949	12,949	12,949	-	12,949	-	12,949	12,876	73	13,430
□ 세출예산비목	12,949	12,949	12,949	-	12,949	-	12,949	12,876	73	13,430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12,949	12,949	12,949	-	12,949	-	12,949	12,876	73	13,4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경상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 수당 등 편성·집행 필요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인건비 성격에 해당하는 해외 파견 직원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인건비가 아닌 경상비에 편성·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20~2024년도 동안 해외 파견 직원의 연도별 수당 등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2명의 해외 파견 직원의 재외근무수당을 경상비에서 약 6,000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주택비용은 경상비에서 7,354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외 파견 직원의 연도별 수당 등 집행 현황(2020~2024)>

(단위: 명, 천 원)

연도	재원	인원	수당						
			재외근무수당(체재비)	가족수당	주택비	보험가입비	이전비	기타	합계
2020	인건비	-	-	-	-	-	-	-	-
	경상비	2	63,492	3,644	69,307	4,247	8,900	69,851	219,441
2021	인건비	-	-	-	-	-	-	-	-
	경상비	3	63,923	12,209	72,140	6,647	12,491	91,958	259,368
2022	인건비	-	-	-	-	-	-	-	-
	경상비	2	114,500	12,803	139,635	13,179	24,873	67,204	372,194
2023	인건비	-	-	-	-	-	-	-	-
	경상비	2	43,913	-	44,564	3,181	-	-	91,658
2024	인건비	-	-	-	-	-	-	-	-
	경상비	1	59,916	-	73,453	2,932	-	-	136,301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또한,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경상비에서 2020년도 364만 원, 2021년도 1,221만 원, 2022년도 1,28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연례적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동 사업이 아닌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해외 파견직원 관련된 재외근무수당 등을 집행하고 있음.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준수할 필요가 있는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209]에 따르면,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인건비로 판단하고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210]에 따르면 가족수당, 주택수당,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규 직원의 해외 파견 시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비는 인건비에서 편성·집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209)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p. 4.

1. 인건비
(1) 총인건비
가. 적용대상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다.
○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 그 밖에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

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이처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인건비 성격의 여러 수당 등을 경상비에서 편성·집행함에 따라, 예산상 해당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실제 집행 금액에 비해 과소 편성되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상 인건비 규모가 과소 공시되었음.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 및 제14조[211]에 따르면, 인건비 규모에 대해서 과소 공시한 기관의 경우 관련자 인사조치, 기관주의,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등 사후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지침상 인건비 규정 등을 준수하여 해외 파견 직원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경상비가 아닌 동 사업의 인건비에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정확한 공시를 할 필요가 있음.

---

211)「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3)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7176-204): 규정을 준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기술능력평가 항목에서 수행실적을 제외하는 등 규정을 준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통합공시 기준을 준수하여 통근버스 관련 비용을 누락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 사업은 ICT 연구개발(R&D) 기획,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 분야 전담기관으로 ICT 연구개발 분야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관장 및 공무직 임금과 경상경비, 정보화 경비를 기관운영출연금 등으로 집행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계획액 73억 5,6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었고, 이 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73억 4,600만 원

이 실집행되었고, 1,000만 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	7,356	7,356	7,356	7,356	-	7,356	7,346	-	10	8,406
○ 경상운영비	5,359	5,359	5,359	5,359	-	5,359	5,349	-	10	6,409
○ 정보화경비	1,997	1,997	1,997	1,997	-	1,997	1,997	-	-	1,997
□ 세출예산비목	7,356	7,356	7,356	7,356	-	7,356	7,346	-	10	8,406
○ 상용임금 (110-03)	1,868	1,868	1,868	1,868	-	1,868	1,868	-	-	1,925
○ 일용임금 (110-04)	10	10	10	10	-	10	6	-	4	10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5,478	5,478	5,478	5,478	-	5,478	5,472	-	6	6.47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규정을 준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필요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의 정보화 사업비를 활용하여 2024년 12월 18일 '2025년 전문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9,900만 원으로 추진하였음.

<2025년 전문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계약명	공고일	계약방법 (입찰방식)	계약금액
2025년 전문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약	2024. 11. 13.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99

자료: 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이하의 협상계약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에서 수행실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해당 계약에서는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212]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준을 명시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도 준용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

21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1항[213]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며, 제안서 평가시 기술능력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의 나)[214]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1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21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동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계약금액 9,900만 원)인 계약에 해당함. 2024회계연도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제1호가목[215]에 따라, 해당 용역 계약의 금액은 적용되는 고시금액(2억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규모 계약에 해당함.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한 실적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해당 계약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 항목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럼에도, 동 계약 제안요청서의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량평가 항목 중 계약 대상이 되는 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을 포함시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에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계약을 공고하고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 공사: 83억 원

<제안요청서 상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정량 (10점)	경영상태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5
	수행실적		**o 최근 3년 이내 정보보호 컨설팅 실적**	**5**
정성 (80점)	조직 및 인력 (10점)	조직구성	o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참여인력	o 핵심 참여 인력(PM) 업무수행 능력 o 참여 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o 정보보안 컨설팅 분야 수행 규모 및 경험	5
	전략 및 방법론 (17점)	사업이해도	o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7
		추진전략	o 추진전략 타당성 및 적정성, 창의성	5
		사업수행 방법론	o 사업수행 절차 타당성 o 적용 도구와 기법 적정성	5
	과업수행 방안 (25점)	외부 평가 대응	o 외부 평가 대응 관련 평가 결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제시	7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	o 4종 훈련 계획 및 실시 방안의 적절성	5
		취약점 진단	o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보호대책 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현황분석	o 법령·제도 현황 등의 환경 분석, 정보시스템 등의 현황 분석 방법을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평가	3
		중장기 계획 적정성	o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보안 강화 계획의 구체성	5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방법론	o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 방법론 적정성	5
		일정 계획	o 사업수행 추진 일정 o 보고 및 검토계획	5
		산출물 관리	o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o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 여부	5
	프로젝트 지원 (12점)	품질보증	o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o 품질보증인력 적정성	5
		기밀보안	o 기밀보안 체계 적정성 o 기밀보안 대책 확신성 o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 o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과 적절성	5
		비상대책	o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방안 등) o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2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점)	안전·재난 관리	o 제안사의 안전·보건을 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1
계				90

자료: '2025년 전문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약' 제안요청서, 2024. 11.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수행실적을 제외하고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따른 통근버스비 관련 복리후생비 계상 필요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216]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함.

- 해당 공공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의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 및 제14조[217]에 따라, 관련자 인사조치, 기관주의, 불성실 공시기관

---

216)「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217)「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지정 등 사후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 공공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과 기관운영비 등을 통하여 복리후생포인트 지급 등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복리후생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직원 대상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근버스 관련 비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타 복리후생비에 공시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어, 통합공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출퇴근에 필요한 통근버스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통근버스 임차비용은 2022년 8,900만 원, 2023년 2억 7,500만 원, 2024년 1억 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통근버스 임차비용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통근버스 임차비용	89	275	108	472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5.

○ 통합공시 기준을 해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218]에 따르면, 통근버스비, 통행료 실비지원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219]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사용처에 따라 13개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은 보육비,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기타로 구분되어 있음.

- 통근버스비의 경우에는 앞의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218)「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 급여명세서에 포함되는 급여 성격의 교통보조비도 제외하되 **통근버스비, 통행료 실비지원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

219)「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5 사용처에 따라 「13개 항목」으로 분류
* 보육비,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기타

○ 연도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비급여성 복리후생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기념품비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지만,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시도 하고 있지 않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도별 복리후생비 공시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보육비	-	-	-	-	-
	학자금	-	-	-	-	-
	주택자금	-	-	-	-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58,800	62,800	83,700	85,000	83,250
	생활안정자금	-	-	-	-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	-	-
	선택적 복지제도	-	-	-	-	-
	기념품비	143,300	146,400	152,100	152,200	151,100
	행사지원비	-	-	-	-	-
	경로효친비	-	-	-	-	-
	문화여가비	-	-	-	-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	-	-
	기타	-	-	-	-	-
	소계(B)	202,100	209,200	235,800	237,200	234,35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 5.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복리후생비로 공시될 필요가 있는 직원 대상 통근버스 관련 비용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원 대상 통근버스 관련 비용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공시 대상에서 누락하여 복리후생비를 과소 계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7602-303):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시 정확한 규모 행사 예산의 편성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개소식 행사 집행 시 다른 연구개발 과제의 예산과 혼용하여 집행하는 방식보다는,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 행사 규모에 상응하는 소요 비용을 정확히 산정·계상한 후, 이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ICT R&D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기획평가관리비를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 기획평가관리비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예측, 기술수요조사 등의 기획비나 과제 공모·선정평가 등 평가비 및 기술이전·성과추적 등 성과관리비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동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평가 및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계획액 141억 4,7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었고, 이 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141억 200만 원이 실집행되었고, 4,500만 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	14,147	14,147	14,147	14,147	-	14,147	14,102	45	-	14,607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	14,147	14,147	14,147	14,147	-	14,147	14,102	45	-	14,607
□ 세출예산비목	14,147	14,147	14,147	14,147	-	14,147	14,102	45	-	14,607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14,147	14,147	14,147	14,147	-	14,147	14,102	45	-	14,60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시 정확한 규모 행사 예산의 편성 필요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220])은 동 사업 예산과 일반회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2231-323)'의 연구과제 '글로벌 AI프론티어랩 구축·운영 및 세계수준의 AI 국제공동연구(2024년

220)정보통신기획평가원(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예산: 22억 6,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2024년 9월 24일 실시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에 필요한 행사를 지원하는 용역인 ‘글로벌AI프론티어랩 개소식 행사지원 용역’을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에 추진하였음.

-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 중에서 동 사업에서 6,000만 원,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2231-323)’ 사업에서 1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음.

<글로벌AI프론티어랩 개소식 행사지원 용역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계약명	일시	사업명	집행 금액
글로벌AI 프론티어랩 개소식 행사지원 용역	2024. 9. 19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	11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정진)	60
합 계			17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동 계약은 한·미 공동 인공지능 연구진 구성, 연구과제 기획 등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국제공동연구 시스템으로서 미국 뉴욕에 출범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 AI 프론티어랩, Global AI Frontier Lab)의 개소식 행사를 지원하는 용역임.

○ 해당 행사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집행됨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비 편성 시 계획된 예산액과 달리 행사 사업비가 확대되어 국회 예산 심의 당시의 편성 금액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목표와 내용>

연구목표	글로벌 AI 공동연구를 위한 R&D 혁신거점 구축 및 글로벌 생태계 강화
연구내용	o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 -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공간 및 레이아웃 협의 -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 지원** -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안정화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및 IITP 인력 파견 - 뉴욕대와 국제공동연구 요구사항 도출 등 o 국내 연구개발기관 선정 -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공고 및 선정평가 -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뉴욕대간 상세계획서 작성 - IITP-뉴욕대-국내연구개발기관 계약(협약) 체결 -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공동연구 추진점검 - 국제 컨퍼런스 등 현지 AI 전문가와의 기술교류회 개최 - 글로벌 AI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및 성과공유 등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2231-323)’의 연구과제 ‘글로벌AI프론티어랩 구축·운영 및 세계수준의 AI 국제공동연구’의 연구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

소식 지원이 연구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해당 개소식은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2231-323) 사업에서 추진되는 행사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행사 규모의 확대에 따라 해당 개소식 지원 비용을 동 사업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 사업'을 포함하여 집행하여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된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행사 예산의 편성·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면이 있었음.

○ 또한, 국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헌법재판소의 'AACC 사업 예산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집행 필요 등'에서 하나의 사업을 여러 세부사업 예산과목으로 혼용하여 편성·집행한 사례에 대해 성과측정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요구[221]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개소식 행사 집행 시 다른 연구개발 과제의 예산과 혼용하여 집행하는 방식보다는,

221)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관련 사업 예산은 '본부기본경비'와 '국제교류' 2개의 세부사업에 분할되어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측정과 차기 예산에의 환류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프로그램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프로그램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AACC 관련 예산을 국제교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집행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 행사 규모에 상응하는 소요 비용을 정확히 산정·계상한 후, 이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

(15) 가산금(58-581): 가산금 세입 편성 및 미수납금 방지 방안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의 수입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가산금의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수납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미수납액 수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가산금(58-581) 세목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7항[22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223] 등에 따른 상품

---

222)「방송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22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미납부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관련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부과되고 있는 추가적인 납부 금액인 가산금을 수납하고 있는 수입임.

○ 가산금의 2024년도 수입계획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목명	2024						2025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 납액	계획액
가산금	-	-	-	128	7	121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가산금 세입 편성 및 미수납금 방지 방안 필요

○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은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입에 편성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함.

○ 첫째,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은 매년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금액인 징수결정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입에서 누락되어 있어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음.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 연도별 수납 현황(2021~2024)>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변경						
2021	-	-	-	76	11	14.5	65	-
2022	-	-	-	73	7	9.6	66	-
2023	-	-	-	70	4	5.7	66	-
2024	-	-	-	128	7	5.5	121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은 2021년 7,600만 원, 2022년 7,300만 원, 2023년 7,000만 원, 2024년 1억 2,800만

원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 계획액은 편성되지 아니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17조[224]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225]에 규정된 전대차관, 수입대체경비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제1항제6호[226]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2호[227]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과징금

224)「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25)「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6)「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산금 수입은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령상 기금의 재원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수입 계획액이 편성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둘째, 동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021년도 징수결정액 7,6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1,100만 원으로 수납률이 14.5%에 불과하며, 2024년도도 징수결정액 1억 2,800만 원 대비 70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5.5%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인 수납률이 2021년 14.5%, 2022년 9.6%, 2023년 5.7%, 2024년 5.5%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가산금 수입액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보조금 등을 용도외 부정수급한 자들의 재력부족 등으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27)「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 기업의 경우 재력부족을 이유로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한 금액에 부과된 과징금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 2021년도에 4차례에 걸쳐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재력부족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 미수납 현황>

(단위: 천 원)

징수결정 일시	법적근거	사유	징수 결정액	징수대상	미수납사유
2021. 4.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4항	용도외 사용	888	●●●●●●●	재력부족
2021. 2.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4항	부정수급	2,093	◍◍◍◍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2021. 2. 23.			2,093		
2021. 3. 24.			2,093		
2021. 4. 16.			2,093		
2021. 5. 17.			2,093		
2021. 4.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4항	용도외 사용	10,848	◆◆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2021. 5. 10.			10,848		
2021. 5. 24.			10,848		
2021. 6. 22.			10,848		
2021. 7. 22.			10,848		
2024. 12. 1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분담금 미납	54,842	◇ ◇ ◇ ◇	현금보유량 부족 (2025. 2. 28. 납부)
합 계			120,435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2024회계연도 기준 가산금 미수납액인 1억 2,100만 원을 전부

재력부족, 거소불명 및 현금보유량 부족[228] 등으로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산금에서 미수납된 부분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229]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유보하는 '불납결손'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가산금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의 수입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가산금의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수납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미수납액 수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28) 현금보유량 부족을 이유로 2024회계연도 미수납하였던 ◇◇◇◇ 기업은 2025년 2월 28일에 가산금 납부를 완료하였음

229)「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16) ICT창의기업육성(1139-303): 해외 진출 사업의 특정 기업 중복 지원 지양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서 특정 기업의 중복 지원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여, 다양한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 추진 시 예산과 실제 지원단가의 차이가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음.

가) 사업 개요

○ ICT창의기업육성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ICT 분야 혁신기술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 ICT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특허 등 전문컨설팅, 해외 투자유치 등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유망 ICT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ICT 기술·경영 창업 멘토링, 성장 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화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여 ICT 혁신기술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 출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산액 142억 2,200만 원이 전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ICT창의기업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ICT창의기업육성	14,222	14,222	-	-	14,222	14,222	-	-	9,104
○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5,663	5,663	-	-	5,663	5,663	-	-	3,286
○ 혁신기술기반 벤처성장지원	7,491	7,491	-	-	7,491	7,491	-	-	5,079
○ ICT 벤처·투자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1,068	1,068	-	-	1,068	1,068	-	-	739
□ 세출예산비목	14,222	14,222	-	-	14,222	14,222	-	-	9,104
○ 사업출연금 (350-02)	14,222	14,222	-	-	14,222	14,222	-	-	9,1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해외 진출 사업의 특정 기업 중복 지원 지양 필요

○ 동 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주요시장 등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주요시장 투자설명회 및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에서 특정 기업의 중복 지원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 기업에 중복하여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2회 지원된 기업이 8개, 3회 지원된 기업이 10개, 4회 지원된 기업이 7개, 5회 이상 지원된 기업이 5개로 나타나고 있음

<특정 기업에 중복하여 지원한 현황(2020~2024)>

(단위: 개)

지원횟수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2020~2024	8	10	7	5	37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세부적으로 ○○○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에서 10번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교육(에듀테크) 분야로 지원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에듀테크, 모빌리티 테크, AI 분야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부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 혜택의 형평성 실현과 특정 기업의 지원이 과다하게 중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원 현황(2020~2024)>

연도	기업명	기업규모	분야
2020	○○○	중소기업	에듀테크
	○○○	중소기업	에듀테크
2023	○○○	중소기업	에듀테크
	○○○	중소기업	에듀테크
	○○○	중소기업	에듀테크
	○○○	중소기업	에듀테크
2024	○○○	중소기업	에듀테크
	○○○	중소기업	모빌리티 테크
	○○○	중소기업	안전 IoT
	○○○	중소기업	AI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서 특정 기업의 중복 지원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여, 다양한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사업의 연례적 예산과 실제 지원 단가의 차이 부적정

○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사업은 해외진출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역량 확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사업출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

○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과 실제의 지원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추계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 2021~2024년도까지의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예산상 1개 기업 당 지원단가는 4,9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시 지원단가는 2,330만 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도 예산상 1개 기업당 지원단가는 3,26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시 1개 기업당 지원된 평균 금액은 2,560만 원으로 연례적으로 예산과 실제의 1개 기업당 지원단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2020~2024)>

(단위: 개, 백만 원)

연도	계획			지원		
	기업수	평균 지원 단가	예산액	기업수	평균 지원 단가	집행액
2021	20	49	980	42	23.3	980
2022	20	49	980	43	22.7	980
2023	26	32.6	847.6	48	17.6	847.6
2024	26	32.6	847.6	33	25.6	847.6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진출 스타트업 집중캠프 사업이 예산과 실제 집행시 1개 기업당 지원되는 평균 지원단가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한 점이 있었으며, 향후 유사 사업예산 편성시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17) 기금관리비(7276-200): 기본경비 성격의 국외업무여비 이관·조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서 기금 관리 목적보다 기본경비 성격이 강한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등을 집행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나 임차비 등의 유지관리비 등이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기금관리비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운용·관리 업무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기금사업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금사업의 사업비 지급, 수행관리, 정산 등 제반 과제 관리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업무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는 사업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30]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230)「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집행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계획액 15억 6,000만 원 중 15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5,100만 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기금관리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기금관리비	1,560	1,560	-	-	1,560	1,509	-	51	1,334
○ 기금관리비	1,560	1,560	-	-	1,560	1,509	-	51	1,334
□ 세출예산비목	1,560	1,560	-	-	1,560	1,509	-	51	1,334
○ 일반수용비 (210-01)	59	59	-	-	59	35	-	24	50
○ 국외업무여비 (220-02)	33	33	-	-	33	8	-	25	33
○ 사업추진비 (240-01)	11	11	-	-	11	10	-	1	11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10	-	-	10	9	-	1	1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447	1,447	-	-	1,447	1,447	-	-	1,2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기본경비 성격의 국외업무여비 등 이관·조정 필요

○ 동 사업에서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등이 편성·집행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국외업무여비 등은 실질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경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가 아닌 기본경비 항목으로 이관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일반수용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에서 집행하는 소모성 물품비인 전산기기 소모성 물품비, 인쇄비 등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국외업무여비도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성이 부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직원들의 국외 출장 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음.

- 2024년도 동 사업 일반수용비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관리 기관이 아닌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

책관)에서 약 1,11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에서 약 2,350만 원을 전산기기 등 소모성물품비, 인쇄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집행 내용
일반수용비 (210-01)	11.1	23.5	전산기기 등 소모성물품비, 인쇄비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2024년도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220-02)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싱가포르, 호치민, 도쿄 IT 지원센터 방문 및 점검하는 국외 출장을 수행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사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위하여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영화기금이나 영화분담금의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사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임.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기금 관리 부서인 혁신기획담당관이 아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법무담당관 소속 의안·정책

관리팀장이 국외 출장을 수행하고 있어,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기관의 기본경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임.

<2024년도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220-02)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일자	출장 인원	출장 내용	2024 집행액
과기정통부	2024. 12. 1. ~12. 5. (6일)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사무관 외 1명	○ 해외 IT 지원센터 출장 - 싱가포르 IT 지원센터 방문 및 점검 - 호치민 IT 지원센터 방문 및 점검 - 도쿄 IT 지원센터 방문 및 점검	8.0
방통위	2024. 6. 10. ~6. 15. (6일)	방통위 의안·정책 관리팀장 외 7명	○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사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체코 영화기금 관리 및 운영 현황 - 독일 영화분담금 현황 등	39.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경우 기금관리기관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 이외에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등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관리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기금관리기관)	사업명(사업코드)	2024년도 예산		
		부처 직접경비	위탁· 출연금 등	합계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기금관리비 (7276-200)	113	1,447	1,560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리비 (7576-200)	-	608	608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운영비 (7176-203)	-	641	64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23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232] (R&D) (7601-302)	-	4,496	4,4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부처의 기본경비 성격이 강한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을 기본경비 사업으로 이관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231)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음.

232) 한국연구재단이 원자력기금 기금관리기관이며,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금에서 받고 있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한 다음연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 필요

○ 동 사업의 기금관리비를 활용하여 다음연도 기금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나 임차비 등의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집행된 다음연도 기금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을 통해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PMS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과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약 8,170만 원 집행되었으며, 2024년도의 경우에도 2025년도 2월부터 5월까지의 PIMS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 약 1,490만 원과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PIMS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약 6,450만 원을 합한 7,94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연도 기금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집행내역	유지관리 기간	집행 금액
2022	사업관리시스템(PMS) 클라우드 서비스(임차)	2023. 1. ~ 5.	17.0
	2021년 기금사업관리시스템 운영지원(2차연도)	2023. 1. ~ 5.	64.7
	소 계		81.7
2023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2024. 1. ~ 4.	17.7
	기금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금	2024. 1. ~ 4.	64.5
	소 계		82.2
2024	PIMS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2025. 2. ~ 5.	14.9
	PIMS 운영 및 유지관리	2025. 1. ~ 4.	64.5
	소 계		79.4
합 계			243.3

자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2022년도부터 2024년도 3개년도 동안 해당 연도 예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집행한 금액은 약 2억 4,3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국가재정법」 제3조[233]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233)「국가재정법」 제3조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집행될 필요가 있는 정보시스템 유지 관련 비용은 2025년에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동 사업의 해당 연도 예산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금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나 임차비 등의 유지관리비 등이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정 보 보 호 네 트
워 크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30

【 일반회계 】

(1)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의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과 관련하여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하여 고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리, 정보보호 제도 운영,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액 259억 8,500만원이 전액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보통신 기반 보호 강화	25,985	25,985	25,985	25,985	-	25,985	25,566	-	419	19,490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 보호체계 강화	2,635	2,635	2,635	2,635	-	2,635	2,619	-	16	1,777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신규 지정 및 안식제고	228	228	228	228	-	228	225	-	3	228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2,136	2,136	2,136	2,136	-	2,136	2,116	-	20	1,495
○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8,880	8,880	8,880	8,880	-	8,880	8,740	-	140	5,716
○ AI기반 보안 기술 보유 유망 기업 집중육성	6,873	6,873	6,873	6,873	-	6,873	6,688	-	185	4,311
○ 정보보호 체계 정비 및 수준제고	703	703	703	703	-	703	672	-	31	491
○ 지역 거점 정보 보호 클러스터	3,900	3,900	3,900	3,900	-	3,900	3,900	-	-	5,030
○ 아파트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630	630	630	630	-	630	606	-	24	442
□ 세출예산비목	25,985	25,985	25,985	25,985	-	25,985	25,566	-	419	19,490
○ 사업출연금 (350-02)	25,985	25,985	25,985	25,985	-	25,985	25,566	-	419	19,49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제47조[234]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한 종합적 관리체계(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235])가 적정한지 인증하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2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내내역사업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ISMS 인증체계 개발’은 가상자산사업자 특화 ISMS 구축 컨설팅, 특별점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인증 관련 사업을 일반적인 ISMS 인증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236].

---

234)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35)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236)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 그런데 ISMS 인증제도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에 ISMS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함[237].

- 이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을 새롭게 운영하려는 자는 ISMS 운영 실적이 없어 현행 제도상 ISMS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그 결과 가상자산사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만 실제 서비스 운영 전 임시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조건부의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취득하도록 함[238].

---

237)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38) **제1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제18조제1항제2호의 인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예비인증: 가상자산사업자 중 본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한 자가 실제 서비스 운영 전 임시적으로

○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비인증이 아닌 ISM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고시에서 정하는 예비인증을 본인증과 동일한 것으로 볼 근거 또한 부족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단순 고시 개정을 통해 예비인증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특정금융정보법상 ISMS 인증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령에 비해 고시가 해석 및 적용상 우위에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SMS 예비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이하 "시험운영"이라 한다)하여 받는 인증으로서 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부 인증

2. 본인증 : 예비인증을 취득한 자로서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예비인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취득할 것(다만, 본인증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는 예비인증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 관리 철저 필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고시는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239].

○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예비인증 및 신고 경과를 보면 고시에 따른 신고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이 별다른 조치 없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남.

---

239) **제1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제18조제1항제2호의 인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예비인증: 가상자산사업자 중 본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한 자가 실제 서비스 운영 전 임시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이하 "시험운영"이라 한다)하여 받는 인증으로서 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부 인증
2. 본인증 : 예비인증을 취득한 자로서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예비인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취득할 것(다만, 본인증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는 예비인증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A 사업자 ISMS 예비인증 및 가상자산사업 신고 경과>

ISMS 예비인증 취득일시	가상자산사업 신고 접수일시	가상자산사업 신고 수리일시	ISMS 본인증 취득일시
2023.6.21.	2024.1.4.	2025.1.17.	- (심사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현행 고시에서 가상자산사업 신고 접수 및 ISMS 본인증 취득을 일정 기한 내에 하도록 한 것은, 현재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ISMS 예비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교적 완화된 제도인 예비인증을 본인증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하여 고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

(2)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2032-310): 실수요 위주 장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디바이스 판교FAB의 구축 장비별로 가동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요가 적은 장비를 처분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실수요 위주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사업은 지능형 IoT 적용확산, 제품·서비스 개발 인프라 제공, 시장진출 지원 등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계획액 137억 5,300만원이 전액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13,753	13,753	13,753	13,753	-	13,753	13,652	-	101	8,796
○ IoT 융합선도	6,100	6,100	6,100	6,100	-	6,100	6,039	-	61	3,200
○ IoT 인프라 조성·보급	6,971	6,971	6,971	6,971	-	6,971	6,961	-	10	5,091
○ IoT 시장진출 지원	682	682	682	682	-	682	652	-	30	505
□ 세출예산비목	13,753	13,753	13,753	13,753	-	13,753	13,652	-	101	8,796
○ 사업출연금 (350-02)	13,753	13,753	13,753	13,753	-	13,753	13,652	-	101	8,7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실수요 위주 장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인 'IoT 인프라 조성·보급'은 IoT 기술지원센터, IoT 테스트필드, ICT 디바이스 판교FAB 등 IoT 산업 관련 인프라를 조성·지원하려는 것임.

○ 이 중 ICT디바이스 판교FAB은 예비창업자·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디바이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4회계연도에 계획액 11억 8,500만원이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 그런데 동 시설에 구축된 지원장비들의 가동률을 보면, 장비별로 가동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ICT디바이스 판교 FAB 구축 장비 가동률>

구분	장비명	가동률(%)
3D스캐너	smartSCAN-HER5	43.9
3D프린터	ProX800	393.0
	EP-A650	87.5
	Objet500	45.7
	ProX500	149.8
	900mc	101.4
	Projet660	8.1
	MasterEV	12.1
레이저커터	ILS12.75	14.4
CNC조각기	Smart-3530	2.7
진공주형기	5/04V NYLON	125.1

※ 3D프린터 가동률(%) : $\frac{(\text{실제가동시간} + \text{보조가동시간})}{(\text{가동}3D\text{프린터대수} \times 8hr \times \text{총운영일})} \times 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특히 3D프린터의 경우 장비별로도 가동률 차이(8.1%~393.0%)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비 구축 시 실수요를 충분히 예측·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기업의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장비가 구축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장비가 설치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가 적은 장비를 처분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실수요 위주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 신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5

【 방송통신발전기금 】

(1)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2431-407):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보화 사업 포함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시스템과 같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절차와 법령 준수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점검, 기술 개발 지원, 협력 체계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를 악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시 가입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번호변작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 내역사업과 번호변작 신고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등 강화 지원 내역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법정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액 13억 9,000만 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1,390	1,390	-	-	1,390	1,390	-	-	1,390
○ 번호변작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	436	436	-	-	436	436	-	-	436
○ 번호변작 신고센터 구축·운영	635	635	-	-	635	635	-	-	635
○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강화	319	319	-	-	319	319	-	-	319
□ 세출예산비목	1,390	1,390	-	-	1,390	1,390	-	-	1,39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216	216	-	-	216	216	-	-	216
○ 사업출연금(350-02)	855	855	-	-	855	855	-	-	855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19	319	-	-	319	319	-	-	31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번호변작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 내역사업에 4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번호변작 신고센터 구축·운영 내역사업에 6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등 강화 지원 내역사업에 3억 1,900만 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보화 사업 포함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민간위탁으로 교부하였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계약을 계약기간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4일까지 계약금액 2억 200만 원으로 추진하였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2024. 9. 6. ~ 2024. 12. 14.	2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해당 계약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시스템 개발의 사업범위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신분증 사진 및 텍스트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협회 자체의 사진 특징점 추출 서버와 연동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사진진위확인 시스템 개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사업범위>

구분	사업내용
사진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 (이동통신사 연계)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사진 및 텍스트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진 특징점 추출 서버 연계) 이동통신사에서 전달받은 신분증 사진을 협회 자체 사진특징점 추출 서버와 연계하여 특징점 추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진특징점 추출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PI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신분증 사진 특징점 및 텍스트 진위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연계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기운영 인프라 활용 및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개선	- (인터페이스 개선) 이동통신사와 KAIT 연계 구간 인터페이스(TEXT 진위확인) 개선 및 관련 DB(oracle) 수정 - (업무사용자홈페이지) 사진진위확인 연계 테스트 페이지, 조회이력, 통계관리, 대시보드 페이지 등 업무홈페이지 개선 - (배치프로그램) 통계 생성, 진위확인 로그 저장 등 프로그램 개선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시스템 개발 및 업무사용자 홈페이지 개선 이후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 보완

자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 7.

○ 다음으로, 해당 사업은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간 연계 구간의 인터페이스(TEXT 진위확인) 개선, 관련 데이터베이스(Oracle) 수정, 그리고 업무 사용자 홈페이지

개선 등의 기운영 인프라를 활용한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개선 등 정보시스템 개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추진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에 해당됨에도 예산상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40]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적용대상으로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판단됨.

---

24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3
7. 정보화 사업
1. 적용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

○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고도화 및 개선을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이행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 예산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또한, 해당 사업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예산 편성 절차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음.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41]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의 경우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를 하는 등의 일반사업과 다른 절차가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24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241)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6 ~ 47.
□ 중앙관서는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예산 요구시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등록된 전산 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관련자료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 담당관은 다음 유형의 사업의 경우 기관 내부의 예산 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
○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 보존시설·장비설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사업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 중앙행정기관의 온나라 시스템 관련사업: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
24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정보화 사업 등의 실행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시스템과 같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절차와 법령 준수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431-302):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시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은 전기통신번호관리, 통신회계 검증조사 및 방송통신 허가 심사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번호 관리체계 운영 사업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추진하고 있으며,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또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 조성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출연사업 형태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액 17억 6,600만 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766	1,766	176	-	1,942	1,739	-	203	2,452
○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309	309	-	-	309	306	-	3	309
○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586	586	176	-	762	737	-	25	586
○ 통신사업 허가심사 지원	126	126	-	-	126	65	-	61	126
○ 기타	745	745	-	-	745	631	-	114	1,431
□ 세출예산비목	1,766	1,766	176	-	1,942	1,739	-	203	2,452
○ 일반연구비 (260-01)	586	586	176	-	762	737	-	25	586
○ 사업출연금 (350-02)	335	225	-	-	335	335	-	-	335
○ 기타	845	845	-	-	845	667	-	178	1,53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내역사업에 3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내역사업에 7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통신사업 허가심사 지원 내역사업에 6,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그 외 내역사업에서 6억 3,100만 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통신산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은 통신사업(기간통신)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 회의 지원, 심사장소 임차 및 간담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액 1억 3,200만 원 중 5,5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1.7%에 불과하며, 2024년에도 예산액 1억 2,570만 원 중에서 6,54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2.0%로 낮은 수준임.

<통신산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조정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2020	132	-	-	132	55	77	41.7
2021	132	-	-	132	81	51	61.4
2022	126	-	-	126	41.2	84.8	32.7
2023	125.9	-	-	125.9	68.7	57.2	54.6
2024	125.7	-	-	125.7	65.4	60.3	52.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동 내역사업은 2020~2024년도 총 5개년도 동안 집행률이 모두 70% 이내로 낮은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동 내역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통신사업 인·허가 심사가 사업자의 수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시 예상했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

<통신사업 인허가심사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통신사업 인·허가 신청 수요는 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동 내역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시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 송 진 흥
정 책 관
소 관

문 의 처

6788-5228

【 방송통신발전기금 】

(1)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1131-308):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의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 등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의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펀드 조성규모 달성도, 투자 실적 등의 산출·결과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미디어 제작을 위하여 투자의 제한이 없는 민간 중심의 콘텐츠·미디어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350억원이 집행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에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음.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세부사업명	35,000	35,000	-	-	35,000	35,000	-	-	5,000
○콘텐츠전략펀드출자	35,000	35,000	-	-	35,000	35,000	-	-	5,000
□ 세출예산비목	35,000	35,000	-	-	35,000	35,000	-	-	5,000
○ 일 반 출 자 금 (460-01)	35,000	35,000	-	-	35,000	35,000	-	-	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의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

○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의 내역사업인 ‘콘텐츠전략펀드출자’ 사업은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동 사업은 5년간(2024~2028년) 1조원대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음.

- 2024년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35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450억원 등 정부 재정 800억원에 정책금융기관·민간 재원 1,200억원을 포함한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는 이 모펀드에 민간자금 4,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6,000억원의 펀드 조성을 계획하였음.

<콘텐츠전략펀드출자 사업의 연도별 펀드 조성 계획안('24~'28년)>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소계
모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	**50**	**50**	**50**	**50**	**550**
	문화체육관광부	450	150	150	100	100	950
	정책금융·민간	1,200	200	200	150	150	1,900
	소 계	**2,000**	**400**	**400**	**300**	**300**	**3,400**
자펀드	모펀드	2,000	400	400	300	300	3,400
	민간자금	4,000	800	800	600	600	6,800
	합 계	**6,000**	**1,200**	**1,200**	**900**	**900**	**10,2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2025년 7월 현재 2024년도 펀드(1호) 조성액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되어 펀드조성액 규모가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2024년도 펀드조성액 변경 현황>

(단위: 억원)

모펀드		기타 민간	합계
정부	정책금융 민간		
800	1,200	4,000	6,000

➔

모펀드		기타 민간		합계
정부	정책금융 민간	산업은행	민간	
800	600	200	2,400	4,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1호의 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모펀드는 2025년 3월이 되어서야 결성이 완료되었고[243] 자펀드는 현재 모집(2,400억원) 중[244]으로 결성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임.

<1호의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 현황>

구 분			운용사명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시기
모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4.4월	'24.11월~'25.3월
자펀드	블라인드 펀드	IP확보	에이티유파트너스	'25.4월	'25.10월(예정)
			미시간벤처캐피탈		
			펜처인베스트	'25.6월	'25.12월(예정)
		기술심화	에스비자산운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프로젝트 펀드		수시 접수·선정 (투자대상 프로젝트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5.9~12월(예정)

주: '25.7월 기준, 프로젝트 펀드 중 1개 운용사 선정, '25년 하반기 중 추가 선정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3) 모펀드의 경우 2024년 10월 출자·운용기관 MOU를 통해 정책금융·민간의 모펀드 조성 참여가 확정된 후, 2024년 11월에 재정 모펀드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민간기업의 이사회 출자승인,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비재정(민간) 모펀드가 결성되었음.

244) '25.7월말 507억원 모집, '25.10월까지 누적 980억원, '25.12월까지 누적 2,400억원 모집이 목표임.

○ 즉 동 사업은 당초 1조원대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추진 첫해부터 펀드 조성규모를 축소·변경하였고, 2024년도에 완료되었어야 할 1호는 현재까지 펀드 조성이 진행 중임.

- 자펀드 조성 후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 사업의 집행절차[245]를 감안할 때 실제 투자는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2025년 펀드(2호)도 현재까지 모펀드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펀드도 결성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펀드의 모집규모, 민간투자 위축상황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조성규모를 2025년 1월에 확정(총 4,000억원)하였고, 사업의 추진이 순연되었다는 설명임.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의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금융 콘텐츠 기업 등	→ (출자)	모펀드 (운용사)	→ (출자)	자펀드 조성	→ (투자)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 (최종수혜자)

□ 산출·결과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 ‘콘텐츠전략펀드출자’ 사업의 성과지표는 “콘텐츠미디어 모펀드 조성실적” 및 “주목적 투자분야 의무비율”인데, 이 중 모펀드 조성실적은 모펀드를 조성하기만 하면 그 규모 및 결성 시기와 상관없이 달성되는 지표임.

○ 즉 2024년도 펀드는 당초 계획(목표)과 달리 모펀드 조성규모를 축소(2,000억원→1,400억원)하였고, 모펀도 결성 시기도 2025년 3월에 완료되었음에도 성과 달성도는 100%임.

<’21～’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콘텐츠미디어 모펀드 조성실적(%)	목표	‘24년 신규			1	1	국내 콘텐츠·미디어 기업에 대한 전략지원	모펀드 조성실적/ 모펀드 조성목표 x 100%	콘텐츠미디어 모펀드 조성실적
	실적				1	-			
	달성도				100 %	-			
주목적 투자분야 의무비율 (단위: 률)	목표	‘24년 신규			-	12.5	자펀드 평균투자기간(4년)을 고려하여 설정	전략펀드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평균	전략펀드 투자 현황통계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실적				-	-			
	달성도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펀드 조성규모 달성도, 투자 실적 등의 산출·결과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전 파 정 책 국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중 앙 전 파 관 리 소
소 관

문 의 처

6788-5235

【 일반회계 】

(1)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2535-309): 자기적합확인 적용 기자재 대상 사후관리 강화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기적합확인 도입에 따라 시험검사·현장조사 비율을 높이는 등 대상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품 사후관리시험 등’ 사업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246]이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도록 제품 시험 및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 기기 유통을 방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기기 국내반입을 차단하려는 사업임.

○ 국립전파연구원은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7,200만원 중 6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46)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2024년도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841	841	-	-	841	825	-	16	841
○제품 사후관리 시험 등	673	673	-	△1	672	662	-	10	673
□ 세출예산비목	841	841	-	-	841	825	-	16	841
○제품 사후관리 시험 등	673	673	-	△1	672	662	-	10	673
- 일반수용비 (210-01)	179	179	-	-	179	179	-	-	179
- 재료비 (210-11)	180	180	-	-	180	180	-	-	180
- 일반용역비 (210-14)	292	292	-	-	292	282	-	10	292
- 국내여비 (220-01)	22	22	-	△1	21	21	-	-	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자기적합확인 적용 기자재 대상 사후관리 강화 검토 필요

○ ‘제품 사후관리 시험 등’ 사업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 중 약 10%를 표본 추출하여 시험검사·현장조사·서류검토 방식의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최근 3년간의 사후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적합성평가 제품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건, 2025.6.30. 기준)

구 분	적합성평가 건수	사후관리 건수				실시율 (%)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시험검사	현장조사	서류검토	합계		
2022년	51,038	944	537	3,540	5,021	9.8	307 (6.1%)
2023년	50,843	959	545	3,740	5,244	10.3	312 (5.9%)
2024년	54,565	993	564	3,800	5,357	9.8	348 (6.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한편, 적합성평가 제도는 대상 기기가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 중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전자파가 약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청자가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공개하는 것만으로 행정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1월 23일 전파법 개정[247]으로 2024년 7월 24일부터 도입되었음.

○ 자기적합확인은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사후규제로 전자파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적합인증 및 적합

247)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 ⑫ (생 략)

등록 대비 적절한 사후관리의 실시가 보다 중요함.

○ 2022년 이후 현재까지의 적합성평가 유형별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자기적합확인 도입 전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 자기시험 적합등록의 사후관리 실시율('22년 22.1%, '23년 21.2%, '24년 상반기 30.3%) 대비 자기적합확인의 사후관리 실시율은 도입 첫해인 24년 하반기 18.0%로 소폭 하락했으나, 25년 상반기는 37.9%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자기적합확인 부적합률의 경우 24년 하반기는 0.3%로 2022년 이후 자기시험 적합등록의 부적합률보다 낮았으나, 25년 상반기는 3.5%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24년 하반기 사후관리는 372건 모두 서류검토로 실시되었고, 반면 25년 상반기의 경우 900건의 서류검토와 더불어 7건의 시험검사와 1건의 현장조사 등 총 908건이 실시되었음.

- 이러한 사후관리 유형 차이가 부적합률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이 되었을 수 있음.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유형별 부적합 발생 현황을 보면 시험검사의 평균 부적합률은 17.8%, 현장조사의 평균 부적합률은 20.7%인 것에 비해 서류검토의 부적합률은 1% 가량으로 편차가 컸음.

<2022년~2025년 적합성평가 유형별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건, 2025.6.30. 기준)

구 분		적합성평가 건수[248]	사후관리 건수				실시율 (%)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시험검사	현장조사	서류검토	합계		
2022	적합인증	1,405	141	78	-	219	15.6	10 (4.6%)
	적합등록 (지정기관)	39,868	787	441	1,420	2,648	6.6	278 (10.5%)
	적합등록 (자기시험)	9,765	16	18	2,120	2,154	22.1	19 (0.9%)
2023	적합인증	1,233	94	93	-	187	15.2	17 (9.1%)
	적합등록 (지정기관)	39,556	726	393	1,808	2,927	7.4	216 (7.4%)
	적합등록 (자기시험)	10,054	139	59	1,932	2,130	21.2	79 (3.7%)
2024 1.~6.	적합인증	544	45	32	189	266	48.9	60 (22.6%)
	적합등록 (지정기관)	20,038	482	163	-	645	3.2	73 (11.3%)
	적합등록 (자기시험)	6,977	80	28	2,005	2,113	30.3	41 (1.9%)
2024 7.~12.	적합인증	600	34	5	-	39	6.5	9 (23.1%)
	적합등록	24,335	352	336	1,234	1,922	7.9	164 (8.5%)
	자기적합 확인	2,069	-	-	372	372	18.0	1 (0.3%)
2025 1.~6.	적합인증	451	35	1	-	36	8.0	2 (5.6%)
	적합등록	24,417	419	256	900	1,575	6.5	90 (5.7%)
	자기적합 확인	2,398	7	1	900	908	37.9	32 (3.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248) 적합성평가 건수에 잠정인증은 미포함 (2024년 상반기 2건)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유형별 부적합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시험검사			현장조사			서류검토		
	시험검사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	현장조사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	서류검토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
2022년	944	171	18.1	537	128	23.8	3,540	8	0.2
2023년	959	186	19.4	545	95	17.4	3,740	31	0.8
2024년	993	160	16.1	564	118	20.9	3,800	70	1.8
합계	**2,896**	**517**	**17.8**	**1,646**	**341**	**20.7**	**11,080**	**109**	**1.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한 목적은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기자재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나,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불법·불량 기기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것 또한 주요한 정책목표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기적합확인 도입에 따라 시험검사, 현장조사 비율을 높이는 등 대상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

(2)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구축(정보화)(2532-302): 실증 사업의 실질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일부 내역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 과제의 매출유발 효과, 사업화 진척 등 실질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한 종합적인 효과성 측정 성과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실증 사업의 실질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은 다양한 무선 ICT 서비스의 확산과 이에 따라 증가하는 비면허 등 주파수 수요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및 관련 규제 완화,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관련 서비스 실증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액 36억 700만원 중 35억 2,860만원을 실집행(97.8%)하였음.

○ 그 중 내역사업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은 비면허 주파수 공급·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조기형성 및 대국민 혁신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유망 전파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액 17억원은 전액 민간경상보조목으로 편성되어 한국전파진흥협회에 교부되었고, 이 중 16억 3,330만원을 실집행(96.1%)하였음.

<2024년도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구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 구축	3,607	3,607	3,607	3,607	-	3,607	3528.6	-	78.4	3,097
○ 산업생활 주파수 생태계 조성	1,062	1,062	1,062	1,062	-	1,062	1052.7	-	9.3	868
○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기반구축	845	845	845	845	-	845	842.6	-	2.4	829
○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 기술 실증	1,700	1,700	1,700	1,700	-	1,700	1633.3	-	66.7	1,400
□ 세출예산비목	3,607	3,607	3,607	3,607	-	3,607	3528.6	-	78.4	3,097
○ 민간경상보조 (320-01)	1,700	1,700	1,700	1,700	-	1,700	1633.3	-	66.7	1,4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907	1,907	1,907	1,907	-	1,907	1895.3	-	11.7	1,69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의 실질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보완 필요

○ 내역사업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서비스의 제품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담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과제 공모를 거쳐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 4건, 고위험·도전형 서비스 실증 1건 등 5건의 과제 실증에 14억 1,300만원을 지원함.

<2024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세부 지원내역>

사업수행자	실증 과제명	지원예산	실증 기간
에스아이티 테크놀로지 컨소시엄	광대역 IoT 주파수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스마트가로등 제어시스템 개발 및 실증	245백만원	24년 4월~ 24년 12월
라임 씨에스아이	거점산지유통센터 대상의 UWB 정밀측위 활용 지게차 사각지대 및 유해가스 검출 안전 관리시스템 실증	249백만원	24년 4월~ 24년 12월
콕스랩 컨소시엄	저전력 장거리 무선 기반 AI 스틸샷 카메라를 활용한 폐광산배수 모니터링 서비스	249백만원	24년 4월~ 24년 12월
지오플랜 컨소시엄	초광대역(UWB)과 5G연계 기반 제조현장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트윈 실증 및 기술검증	421백만원	24년 4월~ 24년 12월
울산정보 산업진흥원 컨소시엄	비면허 주파수 활용 ICT융합 스마트 안전 서비스 실증	249백만원	24년 3월~ 24년 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7.

○ 동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건수’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서비스 만족도’ 등 2건이 있고, 최근 4년간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21～’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건수 (단위:건)	목표	8	8	7	5	4	사업예산에 따라 기술·서비스의 실증 가능 최대 건수로 설정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건수	결과보고서
	실적	8	8	7	5	-			
	달성도	100%	100%	100%	100%	-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서비스 만족도 (단위:점)	목표	신규	신규	75	79	83	리커트 5점 척도 ‘만족’ 이상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상향	실증 사업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93.2	91.6	-			
	달성도	신규	신규	124%	116%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6.

○ 그런데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먼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건수’ 성과지표는 기술 실증의 완료 여부만 측정할 뿐이어서, 실증 과제의 확산 및 활용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사업예산의 감소에 따라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서비스 만족도’ 성과지표는 2023년도부터 신규 성과지표로 채택되었고, 사업 효과성 측정을 강화하는 성과지표로 보이나, 실적 대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역시 사업성과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 과제의 매출유발 효과, 사업화 진척 등 실질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한 종합적인 효과성 측정 성과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실증 사업의 실질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 정 사 업 본 부

소 관

문 의 처

6788-5235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공통 】

(1)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편성 필요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우정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탁사업자와 위탁사업의 내용이 고시되어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가 아닌 관리용역비(210-15)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24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2024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집배업무위탁 등 13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24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비(320-02)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세부사업 (0000-000)	내역사업	수탁자('24년)	'24년 사업비 (예산)	사업 내용
우특	통상우편사업 (5131-302)	전자우편위탁제작 수수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7,531	전자우편 제작
우특	우표문화사업 (5131-303)	우표문화활성화 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990	우표박물관·한국우표포털 운영, 우표전시회 개최
우특	우편사업운영 (5131-305)	우체국콜센터 등 위탁사업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573	우편고객만족센터 운영 및 우편사업 상시 연구업무
우특	우체국소포사업 (5131-321)	우체국쇼핑 위탁사업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9,880	우체국쇼핑 위탁운영 수수료
우특	우편발착 (5132-311)	민간위탁사업비	우체국물류지원단	28,187	수도권 소포구분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센터 4개소* 위탁 운영 * 동서울물, 안양물,부평물, 서서울물('24.2월말 기능정지)
우특	국내우편운송 (5132-313)	국내운송료	우체국물류지원단	207,383	국내우편물 운송
우특	집배업무위탁 (5133-315)	집배업무위탁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245,781	소포배달위탁
우특	국제우편운영 (5134-331)	국제우편 업무위탁	한국우편사업진흥원	992	국제우편 행방조사실 운영
우특	별정및취급국 운영(5142-407)	우편취급국 운영	우편취급국	64,732	우편취급국 수수료
예특	예금사업운영 (5231-361)	사회공헌활동	우체국공익재단	2,979	공적금융역활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활동
예특	금융사업위탁 (5231-365)	금융개발원 금융업무위탁	우체국금융개발원	12,267	우체국금융업무 전문분야 및 콜센터 위탁
보특	보험사업운영 (5331-381)	보험사업 내실화	㈜테에스에이상해손해사정	2,129	우체국보험 계약적부조사 위탁(방문조사)
			㈜효성아이티엑스		우체국보험 계약적부조사 위탁(전화조사)
			㈜메타엠		우체국보험계약적부조사 (해피콜)
보특	보험사업위탁 (5331-383)	전문인력 수수료	우체국금융개발원	37,440	우체국금융개발원 위탁수수료 집행
		상담인력 수수료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할 필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위탁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250]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

○ 그리고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251]는 과학기술

250)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5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13호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16.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우정사업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사업의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위와 같은 위탁 법령에 따라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등 일부 사업의 위탁을 위한 고시[252]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우정사업본부는 법령에 따라 위탁한 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을 고시한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253]하고 있으나, 금융사업위탁·국제우편운송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법인 지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320-02)가 아닌 관리용역비(210-15) 등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나.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다.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라.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252)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에 관한 고시」 등 4개 고시 (세부내용은 하단 참조)

253)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계상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81)

<지정 민간위탁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 외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세부사업 (0000-000)	내역사업	예산과목	'24년 예산	수탁자('24년)
우특	국제우편운송 (5134-332)	항공운송료	210-16 (기타운영비)	78,862	우체국물류지원단
우특	우편업무 정보화 (5135-500)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쇼핑 위탁운영비	210-15 (관리용역비)	2,565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특	우체국시설유지관리 (5142-409)	청사관리용역비	210-15 (관리용역비)	74,663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예특	금융사업위탁 (5231-365)	금융창구경비위탁	210-15 (관리용역비)	40,332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보특	보험사업운영 (5331-381)	보험 기획조사	210-14 (일반용역비)	127	우체국금융개발원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해당 사업들의 경우 각각 현재 편성되어 있는 비목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업무에 대하여 특정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고시를 우선해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임.

만약, 업무의 특성상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면 관련 규정 및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세부내용>

1.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2호)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2. 위탁업무
가.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
나. 우편물의 분류·발송·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
다.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
라. 제3자물류(3PL)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

2.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44호)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위탁업무
가. 국내·외 우편관련 시장의 조사·분석
1) 우정사업 빅데이터 등 통계 분석 및 그 부대사업
2) 그 밖에 우편 관련 시장의 조사·분석 업무
나. 우편상품의 개발 및 그 부대사업
다. 우표류 제작 및 그 부대사업
라.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마. 우편물의 전자적 형태의 처리와 그 부대업무
바.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1) 우체국쇼핑(PostShopping)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2) 온라인우편시스템 개발·유지관리 및 그 부대업무
3) 그 밖에 우편망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운영
사. 우편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아.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운영 등

3.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6호)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2. 위탁업무

가.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업무

나.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청사, 금융창구, 안내, 주차관리 등)업무

다.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자산관리, 임대, 임차 등) 및 컨설팅 업무

라. 우정사업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마. 기타 위 각호 및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련 부대업무 등

4.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 - 12호)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2. 위탁업무

가.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

나.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다.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라.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마.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

바. 우체국금융 고객(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 지원

사. 우체국금융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

아.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

자.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

차. 그 밖에 가호부터 자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 우편사업특별회계 】

(2) 특별회계전입금(91-912) : 특별회계전입금 세입예산 및 회계 간 전출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우정사업 3개의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인데, 특별회계 간 전입·전출 예산과 결산 실적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확한 세입·세출추계는 특별회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전입금 세입예산 및 회계 간 전출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특별회계전입금(91-912)은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선지출하는 인건비, 공통경비 등 원가분담분과 우편사업특별회계 결손보전 등 경비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각각 전출받아 수납하는 세입과목으로, 2024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28.2%에 해당하는 주요 세입원의 하나임.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5,326억이나 징수결정액은 1조 1,561억이고, 이를 전액 수납하여 수납률은 75.4%였음.

<2024년도 특별회계전입금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예산액
특별회계전입금	1,532,668	1,156,100	1,156,100	-	-	75.4	1,611,617
우편사업특별회계	5,439,617	4,856,246	4,828,592	27	27,628	88.8	5,378,351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나) 검토의견

□ 특별회계전입금 세입예산 및 회계 간 전출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이라 한다)의 최근 4년간 세입결산 결과,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의 차액인 수납차가 2021년 700억원에서 2024년 6,11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수납차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우특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

(단위: 억원)

구 분	세입예산(A)	수납액(B)	수납차(B-A)
2021년	45,372	44,672	△700
2022년	46,449	45,663	△786
2023년	54,244	48,584	△5,660
2024년	54,396	48,286	△6,110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2023~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수납차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납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과목은 특별회계전입금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별회계전입금의 2023~2024년 수납차는 2021년 1,194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각각 4,135억원, 3,766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3년 특별회계전입금의 세입예산은 1조 4,707억원이었으나 그 중 1조 572억원만 실제 수납되어 수납률은 71.9%, 수납차는 4,135억원(전체 세입예산 수납차의 73%) 발생했음.

- 2024년의 경우 세입예산 1조 5,327억원 중 1조 1,561억원이 실제 수납되어 수납률은 75.4%, 수납차는 3,766억원(전체 세입예산 수납차의 61.6%)이 발생했음.

<최근 4년간 특별회계전입금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

(단위: 억원, %)

구 분	세입예산(A)	수납액(B)	수납차(B-A)	수납률(B/A)
2021년	11,308	10,114	△1,194	89.4
2022년	11,951	9,468	△2,483	79.2
2023년	14,707	10,572	△4,135	71.9
2024년	15,327	11,561	△3,766	75.4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한편, 우정사업의 3개 특별회계는 인건비, 우체국브랜드 사용료 등 회계 간 공통비용 및 자산사용료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 회계 간 원가분담율에 우특 전년도 결손보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입·전출금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우특의 특별회계전입금 세입 추계가 부정확한 것과 연계되어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전출금 예산 대비 결산 또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예·보특→우특 전출·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세입	(우특) 특별회계 전입금	1,195,082	946,800	79.2	1,470,657	1,057,200	71.9	1,532,668	1,156,100	75.4
세출 254)	(예특) 우특전출	718,114	498,600	69.4	979,380	642,400	65.6	1,026,653	708,300	69.0
	(보특) 우특전출	476,968	448,200	94.0	491,277	414,800	84.4	506,015	447,800	88.5
	계	1,195,082	946,800	79.2	1,470,657	1,057,200	71.9	1,532,668	1,156,100	75.4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이와 같이 전출·입 예산 추계에 지속적으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통상 우편요금 인상·2022년 선거(대선, 지선)우편 매출 발생으로 우특이

254) 예특: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전출(8011-800)
보특: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전출(8011-801)

흑자 달성하였고, 2023년 우편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우특 적자 방어 노력으로 예상(△3,000억원) 대비 실제 순손실(△1,177억원)이 감소함에 따른 우특 결손보전 차이와,

2024년도 공통경비 배분 기준 변경으로 인한 전출·입 규모 변동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의 우특 당기손익 및 결손보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우특에 2400억 가량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매년 1,300억 원 이내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손보전 예상치를 다소 높게 계상한 측면이 있어 보임.

<우특/예특 당기손익 및 예특 결손보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당기순손익	우특	△2,428	△352	△1,297	△316	△1,253	+983	+1,198	△1,177	△1,242
	예특	+1,502	+2,059	+1,649	+2,393	+3,133	+15,755	△166	+1,435	+1,837
예특 결손보전[255]		507	1,002	352	1,297	316	1,253	-	-	1,177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25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특의 결손은 예특에서만 보전하고 있음.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 또한 3개 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우정사업 공통비용의 경우 매년 크게 변동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없고, 분담률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미리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결산 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듯 하나 그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우정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자체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부정확한 세입·세출추계는 특별회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회계 간 업무 분담률의 면밀한 산정과 결손보전 규모 추정을 위한 추계오차 분석 및 분담금 산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811-881)·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집행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 추계 필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의 편성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이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그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수납차에도 영향을 끼쳐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811-881)'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256]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257]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위해 세입 대비 세출 재원(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을 충당한 후 여유 재원을 편성하는 사업임.

---

25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7)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현액 9,207억 7,500만원 중 3,300억원이 집행되었고, 5,907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920,775	920,775	-	-	920,775	330,000	-	590,775	920,775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920,775	920,775	-	-	920,775	330,000	-	590,775	920,775
□ 세출예산비목	920,775	920,775	-	-	920,775	330,000	-	590,775	920,775
○ 기 금 예 탁 금 (480-03)	920,775	920,775	-	-	920,775	330,000	-	590,775	920,775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은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원금에 대한 이자를 재원으로 하는 세입으로,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 243억원 중 140억원이 징수결정·수납되었음.

<2024년도 기금예탁이자수입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예산액
기금예탁이자수입	24,303	14,023	14,023	-	-	57.7	31,273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집행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 추계 필요

○ 확보된 현금 내에서 지출하는 우정사업 회계의 특성으로 세입의 감소 및 세출의 증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실제 지출 재원 부족을 초래함.

-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액이 일치해야 하므로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등 세출 편성 후 세입과의 차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계상하는데, 편성예산과 실집행액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8811-881) 관련하여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결과의 차이에 대한 국회의 지적[258]은 꾸준히 제기되었음.

○ 동 사업의 과거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2019년: 0%, 2020년 11.1%)하였고, 그 이후 2021년 88.7%, 2022년 81%로 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집행률이 저조해졌음(2023년: 45.6%, 2024년: 35.8%).

---

25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적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추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및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예탁금 및 우정사업 수익 적정 추계 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집행가능성 없는 예탁금 편성 부적정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763,179	763,179	△81,137	682,042	-	-	-	682,042
2020	301,145	360,394	△8,500	351,894	40,000	11.1	11.4	311,894
2021	202,957	202,957	-	202,957	180,000	88.7	88.7	22,957
2022	364,898	370,482	-	370,482	300,000	81.0	81.0	70,482
2023	942,893	942,893	-	942,893	430,000	45.6	45.6	512,893
2024	920,775	920,775		920,775	330,000	35.8	35.8	590,775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7.

○ 특히 예산 편성액과 실제 예탁액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엔 2,029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29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2024년엔 9,20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그 중 5,907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처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집행이 부진해짐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재원인 기금예탁이자 수입 또한 예산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연도별 기금예탁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집행률 (수납률)(B/A)
2019	25,152	25,152	947	11.9
2020	17,595	17,595	-	-
2021	10,177	10,177	394	3.9
2022	9,894	9,894	2,956	29.9
2023	25,008	25,008	13,319	53.3
2024	24,303	24,303	14,023	57.7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7.

○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예산 편성 시점(n-1년 5월)에 다음 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가능액을 예측하여 편성하나, 실제 예탁금액은 해당 연도 말의 세입·세출 수지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특히 최근 세입예산에서 큰 수납차가 발생했던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

(단위: 억원)

구 분	세입예산(A)	수납액(B)	수납차(B-A)
2021년	45,372	44,672	△700
2022년	46,449	45,663	△786
2023년	54,244	48,584	△5,660
2024년	54,396	48,286	△6,110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세입과 세출예산을 일치시키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예탁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에 영향을 끼쳐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례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예측치의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탁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집행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2027년 연금자산 고갈과 지속적인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별정우체국 연금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 예산 편성 등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1982년 도입되어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공적연금 제도이며, 기여율 및 급여의 종류 등 운영방식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2024년 12월 말 기준 별정우체국연금 총적립기금은 1,075억원이며, 연금 수급자 2,677명 / 재직자 3,258명으로 부양률은 82.1%임.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적립기금 현황>

적립기금 ('24년 12월말)	가입자 현황('24년 12월말)			부양률(B/A)
	재직자(A)	연금수급자(B)	합 계	
1,075억원	3,258명	2,677명	5,935명	82.1%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공무원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비교>

구분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근거법(도입연도)	공무원연금법(1960)	별정우체국법(1982)
적용대상	국가·지방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기여율	국가 9%, 공무원 9%	피지정인(국가) 9%, 직원 9%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비공무상장해연금, 퇴직수당	퇴직급여, 유족급여, 비업무상장해연금, 퇴직수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별정우체국은 1961년 국가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우체국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설치되었으며, 1966년 최대 843국까지 늘었다가 2024년 12월말 기준 685국으로 감소하였음.

<연도별 별정우체국 수 변동 현황>

연도	'61년	'62년	'66년	'10년	'15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국수	8	138	843	762	750	720	712	704	697	685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별정우체국 직원수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도입된 1982년 3,934명에서 1999년 5,013명까지 증가하였으나, 내·외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별정우체국 관서 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2024년 12월말 기준 3,258명이 재직하고 있음.

<별정우체국 재직자 및 수급자 변동 추이>

구 분	'82년	'90년	'00년	'15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재직자(명)	3,934	4,792	4,913	3,747	3,425	3,336	3,319	3,302	**3,258**
수급자(명)	-	-	248	1,545	2,157	2,321	2,447	2,576	**2,677**
부양률(%)	-	-	5.05	41.2	62.9	69.6	73.7	78.0	**82.1**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별정우체국연금은 2024년 12월말 기준 2,677명의 수급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직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가 맞물리며 부양률[259]이 82.1%에 이르는 등 타 연금 대비 높은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공무원연금 53.4%, 사학연금 38.1%, 군인연금 59.1%, 국민연금 32.5%).

259) 부양률= 연금수급자 수/연금가입자(재직자) 수

<각 직역연금 및 국민연금과 비교>

('24. 12. 31. 기준)

구 분	별정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가입인원	**3,258명**	1,292,545명	323,542명	180,963명	21,984,003명
연금수급자	**2,677명**	692,573명	123,274명	106,984명	7,155,257명
부양률	**82.1%**	53.4%	38.1%	59.1%	32.5%
재직/수급자수	**1.2명**	1.9명	2.6명	1.7명	3.1명
정부지원('24년)	-	약 7.5조원	-	약 2.2조원	-
자산고갈시기 (예정)	**2027년**	국가지원 (2001년~)	2049년	국가지원 (1973년~)	2055년
평균 연금월액	**217만원**	274만원	302만원	비공개	20년 이상 109만원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 직원 및 국가의 부담금 및 적립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퇴직·유족연금,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적자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대(2020년 52억 원 손실 → 2024년 343억 원 손실)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담금(기여금)	45,764	43,920	41,677	42,904	40,966
운용수익	15,159	19,861	9,610	9,102	8,816
수입계(A)	**60,923**	**63,781**	**51,287**	**52,006**	**49,782**
급여지출	60,705	63,753	67,884	76,246	78,306
운영경비	5,437	6,178	5,911	6,171	5,770
지출계(B)	**66,142**	**69,931**	**73,795**	**82,417**	**84,076**
당기순손익(A-B)	**△5,219**	**△6,150**	**△22,508**	**△30,411**	**△34,294**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별정우체국연금은 외부 환경 변화[260]와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실시 영향으로 별정우체국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재직자는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는 증가(연금 도입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있어 연금 수급구조가 매우 불균형적임.

○ 시대적·환경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별정우체국 운영 국 수 및 재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추세 하에서는 부담금 수입 대비 급여 지출액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어 별정우체국 연금재정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260) 24년 말 기준 별정우체국 685국 중 읍·면 지역에 648국(94.6%)이 집중되어 우편 물량·지역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연금자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261]

- 2025년부터 연금지급 자금 부족으로 보유 자산(투자자산,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2027년
연금수지(A)	△262	△333	△373	△453	△501	△579
사업수지(B)	37	29	30	29	5	1
재정수지 (C=A+B)	△225	△304	△343	△424	△496	△578
자산규모	1,695	1,443[262]	1,050	626	130	-

주1) 연금수지 : 부담금 수입 - 퇴직자의 퇴직급여금
주2) 사업수지 : 연금자산 운용수익금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그간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2016년 공무원연금을 준용한 연금개혁[263]을 실시하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차원의 긴축 운영과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연금의

261) 「별정연금 재정추계 검증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5.) 결과에 따르면, 2029년에 연금자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해당 연구 이후 고갈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임

262) 2023년도 자산규모(1,443억원)에는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2022년도 자산규모에 2023년도 재정수지를 반영한 금액(1,391억원)과 차이가 존재함

263) 부담률 2%p 상향(7%→9%), 지급률 0.2%p 하향(1.9%→1.7%)

구조적·환경적 문제로 자산 고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연금 자산 고갈에 따른 연금지급 자금 부족에 대응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부동산 유동화 추진을 통한 자산효율화 노력, 운영경비 절감 및 조직·인력 혁신, 대부 축소 등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과 같은 자구노력[264] 등을 통해 2025년 기준 604억원의 운용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별정우체국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며, 2027년부터는 보유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도 연금 적자 충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부터 우편사업 특별회계에 책임준비금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64)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자구노력 세부내역

① 건물 매각(연금관리단 본사)을 통한 유동성 확보: 523억원

< 건물 매각 예상 금액(백만원) >

매각가(A)	장부가액 ('24.12.)(B)	매각차익	제반비용(C)				현금유입액 (A-B-C)
			제비용	법인세 등	보증금	합계	
87,000	**24,000**	**63,000**	**636**	6,807	3,284	10,727	**52,273**

* '25. 7월 현재 매각 진행 중으로 최종 매각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운영경비 절감 및 조직·인력 혁신: 41억원

- 인건비 감축 편성(△10명): '24년 대비 약 6억원 절감
- 자산매각에 따른 조직·인력 축소 : 25명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약 35억원 절감

③ 대부 축소 등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 :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던 대부사업을 '24. 2분기부터 중지(연 약 40억원 원금상환액 확보)

- 하지만「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3[265]에서는 국가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 편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266]과 달리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별정우체국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체국예금·보험의 유휴재원 활용 등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65) **「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266) **「공무원연금법」**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5) 일부 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 문제 개선 필요

○ 특정 사업 및 세목에서 반복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일부 항목에서는 이·전용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용액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우편사업특별회계 손익계정에서 국제우편배달취급비 부족(182억원), 공공요금 부족(69억원), 국제우편 운송료 부족(19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270억원을 이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이용 감액		금액	이용 증액		이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세부사업명	세목	
인건비 (7202-100)	보수	1,918	국제우편운송 (5134-332)	기타운영비	국제우편 운송료 부족
인건비 (7202-100)	보수	18,200	국제우편배달 취급비 (5134-333)	기타운영비	국가간정산 확정채무액 증가 및 고중량 특송 물량 증가 등에 따른 배달취급비 부족
인건비 (7202-100)	보수	6,870	우체국시설 유지관리 (5142-409)	공공요금및 제세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또한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물류센터 소포구분 위탁수수료 부족(66억원),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65억원), 전자우편제작수수료 부족(48억원)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221억원을 전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감액		금액	전용 증액		전용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세부사업명	세목	
비공무원인건비	상용임금	6,500	비공무원인건비	고용부담금	공무직 퇴직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
비공무원인건비	상용임금	1,120	별정 및 취급국 운영	상용임금	별정국 직원 호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상용임금 부족
비공무원인건비	일용임금	2,700	별정 및 취급국 운영	고용부담금	별정국 직원 퇴직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
인건비	보수	35	소속기관총액 기본경비	고용부담금	실무수습 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
우표문화사업	일반수용비	100	통상우편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전자우편제작수수료 부족
우표문화사업	재료비	400	통상우편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전자우편제작수수료 부족
우편사업운영	일반수용비	1,000	통상우편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전자우편제작수수료 부족
집배업무위탁	민간위탁 사업비	3,300	통상우편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전자우편제작수수료 부족
집배업무위탁	민간위탁 사업비	6,656	우편발착	민간위탁 사업비	물류센터 소포구분 위탁수수료 부족
비공무원인건비	상용임금	320	별정 및 취급국 운영	상용임금	별정국직원 인건비 부족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2024회계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용감액 세부사업은 1개, 이용증액 세부사업은 3개로 이용액은 총 269억 8,800만원이었고, 전용감액 세부사업 5개, 전용증액 세부사업 5개로 전용액은 총 221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개)

회계연도	이용감액 세부사업수	이용증액 세부사업수	이용액 합 계	전용감액 세부사업수	전용증액 세부사업수	전용액 합 계	아전용증액 세부사업수
2021	1	2	48,390	10	7	33,820	9
2022	1	3	49,894	18	10	33,619	13
2023	1	4	37,016	10	7	34,539	11
2024	1	3	26,988	5	5	22,131	8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나) 검토의견

□ 일부 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연례적인 이·전용 과다로 국회의 지적[267]을 받아왔으나 최근 4년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전용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이·전용액은 총 822억 1,000만원이고 세출예산(4조 5,372억) 대비 이·전용 비율은 1.8%였으나, 2024회계연도는 이·전용액

267)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용 부적정' 등

총 491억 1,900만원, 세출예산(5조 4,396억) 대비 이·전용 비율 0.9%로 이·전용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전용 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세출예산 (A)	이용액 (B)	전용액 (C)	이·전용액 (D=B+C)	이·전용 비율 (D/A)
2021	4,537,203	48,390	33,820	82,210	1.8
2022	4,644,868	49,894	33,619	83,513	1.8
2023	5,424,404	37,016	34,539	71,555	1.3
2024	5,439,617	26,988	22,131	49,119	0.9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그러나, 이·전용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일 사업의 동일 세목에서 연례적으로 이·전용 증감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음.

○ 최근 3년 연속으로 이·전용 증액된 세목은 '국제우편운송' 사업 내 기타운영비(210-06), '국제우편배달취급비' 사업 내 기타운영비(210-16), '비공무원인건비' 사업 내 고용부담금(320-09), '우편발착' 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320-02) 등 4개 항목이 있었음.

○ 항목별 증액사유를 보면 항공운송료 부족, EMS프리미엄 발송물량 증가에 따른 배달취급비 부족, 퇴직자 고용부담금 부족, 소포구분 위탁수수료 부족 등 3년간 거의 동일한 사유로 증액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 연속 이·전용 증액된 사업 및 세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목	이·전용 증액			증액사유
		2022	2023	2024	
국제우편운송 (5134-332)	기타운영비 (210-06)	31,068	15,275	1,918	항공운송료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송료 부족
국제우편배달 취급비 (5134-333)	기타운영비 (210-06)	6,519	12,988	18,200	EMS프리미엄 발송 물량 증가 등에 따른 부족분 발생
비공무원 인건비 (5130-305)	고용부담금 (320-09)	2,500	4,200	6,500	비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
우편발착 (5132-31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626	9,599	6,656	소포구분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부족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한편, 최근 3년 연속으로 이·전용 감액된 세목을 살펴보면, 2024 회계연도 이·전용 감액 규모는 인건비-보수(△270억원), 비공무원 인건비-상용임금 및 일용임금(△103억원), 우표문화사업-일반수용비(△1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연속 이·전용 감액된 사업 및 세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목	이·전용 감액		
		2022	2023	2024
인건비 (7202-100)	보수 (110-01)	49,894	37,027	26,988
비공무원인건비 (5130-305)	상용임금 (110-03)	11,100	15,422	7,620
	일용임금 (110-04)	1,900	4,362	2,700
우표문화사업 (5131-303)	일반수용비 (210-01)	85	63	100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우정사업의 특별회계는「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항[268]에 따라,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전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 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회계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강화되어 있으나,

○ 그럼에도 특정 사업 및 세목에서 반복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이·전용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항목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예산편성시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세부사업·세목별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6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